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68-14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2022. 11.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11. 30.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삶의질학회

연구책임자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김대훈 (스탯코리아 대표)

연구보조원

이시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연구보고서는 연구자의 견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본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하고 (주)한국리서치에서 수행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1. 본 보고서는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조사의 결과이며,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보고서의 통계자료(그래프, 통계표 등)에 기재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항목별 합이나,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의수준: $p^* < 0.1$, $p^{**} < 0.05$, $p^{***} < 0.01$
4. 본 보고서의 일부 특성별 통계량(성, 연령, 지역 등)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주의를 요합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임을 밝혀야 합니다.

목 차

I.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과 목적	3
2. 조사내용 및 방법	8
II.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15
1. 표본 설계	17
2. 가중값 작성	25
III. 조사결과 분석	29
1. 인권 인식	31
1)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31
2) 한국 인권상황의 전반적 평가	35
3)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67
2. 인권침해와 차별	74
1)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	74
2) 차별의 심각성과 차별상황 및 취약집단에 대한 인식	98
3) 인권침해의 경험	104
4) 차별의 경험	113
5) 인권침해, 차별의 가해자와 대응	124
6)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의 결과	130
3. 인권 관련 의견	140
1) 주요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140

2)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152
3)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인식	157
4)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160
5)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65
6) 혐오표현의 경험 및 대응	176
7) 인권 의식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189
4. 인권 교육 및 개선	196
1) 인권에 대한 인지와 교육	196
2)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207
3)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해소	220
5. 코로나19와 인권	240
1) 코로나19가 인권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인식	240
2)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241
3)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242
 IV. 결과 요약 및 정책 함의와 과제	 245
1. 요약 및 결론	247
1) 인권의식	247
2) 인권 침해와 차별	248
3) 인권 관련 의견	250
4) 인권 교육	252
5) 코로나19와 인권	254
2.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255
1) 인권 의식 및 인권 교육	255

2)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한 예방적 교육, 사후적 보호와 회복 지원	256
3) 인권 취약집단에 대한 체계적 파악과 정책 방안 제시	258
4) 새로운 분야에서의 인권문제 인식 제고 및 공론화 추동	259
5) 인권의식실태조사의 활용 및 향후 발전방향	260

참고문헌	263
-------------------	------------

부록

부록 1. 주요 항목별 상대 표준오차

부록 2. 통계결과표

부록 3. 「인권의식실태조사」 조사표

표 목 차

〈표 1-1〉 조사내용 및 항목 (2021년-2022년 비교)	8
〈표 1-2〉 주요 용어 정리	12
〈표 1-3〉 응답자 특성	14
〈표 2-1〉 모집단 및 표본추출	17
〈표 2-2〉 시/도별 모집단 현황	18
〈표 2-3〉 층화 변수	19
〈표 2-4〉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현황	20
〈표 2-5〉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21
〈표 2-6〉 7개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22
〈표 2-7〉 세부 층별 표본배분 결과	23
〈표 2-8〉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28
〈표 3-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32
〈표 3-2〉 헌법 내 인권보호 명시 인지 정도	34
〈표 3-3〉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36
〈표 3-4〉 본인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	38
〈표 3-5〉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우리 사회 전반	40
〈표 3-6〉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사회적 약자/소수자	42
〈표 3-7〉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여성	44
〈표 3-8〉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아동 청소년	45
〈표 3-9〉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노인	46
〈표 3-10〉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장애인	47
〈표 3-11〉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49
〈표 3-12〉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51
〈표 3-13〉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52
〈표 3-14〉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53

〈표 3-15〉 인권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56
〈표 3-16〉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에 대한 동의	57
〈표 3-17〉 인권에 의해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59
〈표 3-18〉 공익에 따른 기본적 권리 제한에 대한 동의	60
〈표 3-19〉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62
〈표 3-20〉 인권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의견(1순위 선택)	66
〈표 3-21〉 인권의식 관련 종속변수 설계 내역	68
〈표 3-22〉 인권의식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69
〈표 3-23〉 인권거리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0
〈표 3-24〉 인권책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1
〈표 3-25〉 인권의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2
〈표 3-26〉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신체 자유	75
〈표 3-27〉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사상과 양심 자유	77
〈표 3-28〉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종교의 자유	78
〈표 3-29〉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의견제사와 표현의 자유	79
〈표 3-30〉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집회 결사의 자유	80
〈표 3-31〉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82
〈표 3-32〉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공공행정,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83
〈표 3-33〉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84
〈표 3-34〉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85
〈표 3-35〉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주거권	88
〈표 3-36〉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사회보장권	89
〈표 3-37〉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90
〈표 3-38〉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노동권	91
〈표 3-39〉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건강권	92
〈표 3-40〉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교육권	94
〈표 3-41〉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안전권	95
〈표 3-42〉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환경권	96

〈표 3-43〉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문화권	97
〈표 3-44〉 한국사회의 인권 침해 정도	99
〈표 3-45〉 한국사회의 차별 심각 정도	101
〈표 3-46〉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여부와 권리별 침해 경험	105
〈표 3-4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경험 여부 및 권리별 침해 경험	107
〈표 3-48〉 권리 유형별 침해 경험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 결과	109
〈표 3-49〉 권리침해 경험자의 침해 권리 건수에 대한 음이항 회귀모형 추정 결과	110
〈표 3-50〉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와 불이익	111
〈표 3-51〉 차별 경험 여부	114
〈표 3-52〉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1)	117
〈표 3-53〉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2)	118
〈표 3-54〉 차별 경험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 결과	119
〈표 3-55〉 차별 경험의 건수에 대한 음이항 회귀모형 추정 결과	120
〈표 3-56〉 차별 사유별 경험 유무 비율	121
〈표 3-57〉 차별에 따른 피해와 불이익	123
〈표 3-58〉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의 영향에 대한 다변량 회귀모형 추정 결과	131
〈표 3-59〉 삶의 만족도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건수,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회귀모형 추정 결과	132
〈표 3-60〉 삶의 만족도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과 대응에 대한 회귀모형 추정 결과	134
〈표 3-61〉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의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에 대한 순서형 회귀모형 추정 결과	135
〈표 3-62〉 인권침해/차별 심각도 평가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경험의 순서형 로짓 모형 추정 결과	136
〈표 3-63〉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의 순서형 로짓 회귀모형 추정 결과	137
〈표 3-64〉 인권 관련 규범/대응 인지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한 순서형 로짓모형 추정 결과	138
〈표 3-65〉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의견	142
〈표 3-66〉 사형제도 폐지 + 대체 형벌 도입에 대한 의견	143
〈표 3-67〉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의견	144
〈표 3-68〉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찰 찬반 비율	145
〈표 3-69〉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의견	146
〈표 3-70〉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견	147

〈표 3-71〉 한국에서의 난민 인정에 대한 의견	149
〈표 3-72〉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	150
〈표 3-73〉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	151
〈표 3-7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 확인 여부	153
〈표 3-75〉 신상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불안	154
〈표 3-76〉 공공장소의 CCTV 설치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견	155
〈표 3-77〉 금융, 건강 등 관련 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견	157
〈표 3-78〉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식	158
〈표 3-79〉 기후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인식	159
〈표 3-80〉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	161
〈표 3-81〉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163
〈표 3-82〉 학교 정규수업에서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배경 요인별 비교	165
〈표 3-83〉 선출직 정치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167
〈표 3-84〉 선출직 정치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리감	168
〈표 3-85〉 선출직 정치인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169
〈표 3-86〉 선출직 정치인 결혼이주민에 대한 거리감	171
〈표 3-87〉 선출직 정치인 노인에 대한 거리감	172
〈표 3-88〉 선출직 정치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173
〈표 3-89〉 선출직 정치인 청년에 대한 거리감	174
〈표 3-90〉 선출직 정치인 여성에 대한 거리감	176
〈표 3-91〉 혐오표현 노출 경험	178
〈표 3-92〉 혐오표현 접촉 경로	180
〈표 3-93〉 혐오표현의 주요 대상자 인식	182
〈표 3-94〉 혐오표현의 주요 대상자 인식의 소수자 지인의 유무별 차이	183
〈표 3-95〉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184
〈표 3-96〉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지	186
〈표 3-97〉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찬성율	188
〈표 3-98〉 인권 의식의 구성 요소와 측정	190

〈표 3-99〉 독립변수의 측정	191
〈표 3-100〉 인권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92
〈표 3-101〉 인권 헌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93
〈표 3-102〉 인권 지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94
〈표 3-103〉 인권 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95
〈표 3-104〉 인권 존중의 의무와 규범에 대한 인지 수준	197
〈표 3-105〉 인권 침해와 차별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수준	199
〈표 3-106〉 인권교육 경험 여부	201
〈표 3-107〉 인권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202
〈표 3-108〉 인권 교육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	204
〈표 3-109〉 인권교육 방식에 대한 응답	207
〈표 3-110〉 인권 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수준	209
〈표 3-111〉 인권교육 효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10
〈표 3-112〉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211
〈표 3-113〉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12
〈표 3-114〉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	214
〈표 3-115〉 사급한 인권 교육의 주제	218
〈표 3-116〉 조연과 상담 경험 여부	222
〈표 3-117〉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 여부	223
〈표 3-118〉 소수자/약자를 위한 기부 경험 여부	225
〈표 3-119〉 인권단체 회원가입/활동 경험 여부	226
〈표 3-120〉 인권 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 여부	227
〈표 3-121〉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참여 경험	229
〈표 3-122〉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의 인권 캠페인, 집회 참여 경험 여부	230
〈표 3-123〉 인권 참여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231
〈표 3-124〉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 선택)	233
〈표 3-125〉 인권 보호,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236
〈표 3-126〉 인권 침해나 차별 발생시의 대응 수준에 대한 의견	237

〈표 3-127〉 인권 및 차별 해결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집단	239
〈표 3-128〉 코로나19가 인권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240
〈표 3-129〉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241
〈표 3-130〉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243

그림 목 차

[그림 3-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31
[그림 3-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33
[그림 3-3]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35
[그림 3-4]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37
[그림 3-5]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	39
[그림 3-6]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43
[그림 3-7]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	50
[그림 3-8]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55
[그림 3-9] 인권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의견(1+2순위)	65
[그림 3-10] 시민적, 정치적 권리별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의 변화	74
[그림 3-11]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추이	87
[그림 3-12]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	99
[그림 3-13] 한국 사회의 차별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추이	100
[그림 3-14] 인권침해와 차별의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교차 분석	102
[그림 3-15]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응답 추이	102
[그림 3-16] 인권침해와 차별 발생이 쉬운 상황 응답 추이	103
[그림 3-17] 시민,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의 추이	104
[그림 3-18]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별 침해 경험의 비율 추이	106
[그림 3-19]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	111
[그림 3-20] 차별 경험 비율의 추이	113
[그림 3-21] 차별 경험 응답자의 평균 차별 사유수의 연도별 추이	115
[그림 3-22]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추이	116
[그림 3-23]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	122
[그림 3-24]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와의 관계	124
[그림 3-25]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의 성별, 연령대 비율	125

[그림 3-26] 인권침해 및 차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응답 교차분석 결과	125
[그림 3-27] 인권침해 및 차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별 응답 교차분석 결과	126
[그림 3-28]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	127
[그림 3-29]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	127
[그림 3-30]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의 결과 응답	128
[그림 3-31] 민간기관 도움 요청 연도별 추이	129
[그림 3-32] 민간기관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	129
[그림 3-33]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시 아무 대응하지 않은 이유의 연도별 추이	130
[그림 3-34]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비교	141
[그림 3-35] 정보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비교	152
[그림 3-36] 아동·청소년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160
[그림 3-37] 연령층별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동의율 비교	162
[그림 3-38] 연령층별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찬성률 비교	164
[그림 3-39] 선출직 정치인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시계열 추이	166
[그림 3-40] 혐오표현의 노출 경험 시계열 추이	177
[그림 3-41]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 시계열 추이	179
[그림 3-42] 혐오표현의 대상 시계열 추이	181
[그림 3-43] 혐오표현 노출시 대응의 변화	184
[그림 3-44] 혐오표현의 심각성	185
[그림 3-45]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187
[그림 3-46]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196
[그림 3-47] 인권 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198
[그림 3-48] 인권교육 경험 추이	200
[그림 3-49]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추이(중복응답)	203
[그림 3-50] 경험한 인권교육 방식 추이	206
[그림 3-51] 인권교육 도움 정도	208
[그림 3-52] 인권교육의 필요성	210
[그림 3-53]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 추이	213

[그림 3-54]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정치성향과 세대)	216
[그림 3-55]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추이	217
[그림 3-56]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주제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정치성향과 세대)	219
[그림 3-57] 인권 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추이	221
[그림 3-58]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2순위)	232
[그림 3-59] 인권 보호 증진 방법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세대와 정치성향)	234
[그림 3-60]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평가	235
[그림 3-61]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238

연구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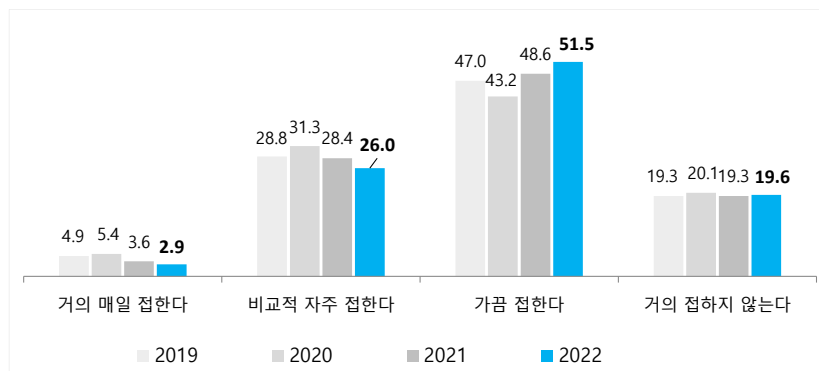
I 인권 의식

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 인권 용어 접촉의 감소와 인권상황이 정체되었다는 인식의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2020년 이후 '인권' 용어를 '자주 접한다'는 빈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36.7% → 28.9%), 가끔 접한다는 빈도는 지속 증가(43.2% → 51.5%).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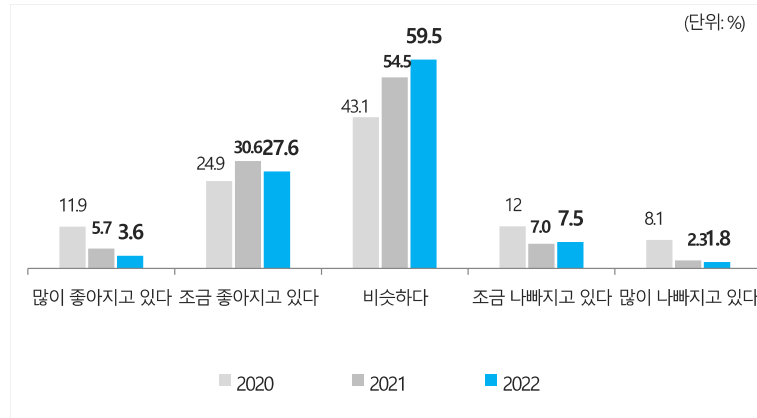
(단위: %)



2)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 인권 상황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의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응답에 비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지속 증가했으며, 이는 2020년 비해 16.4%p 가량 증가(43.1% → 59.5%)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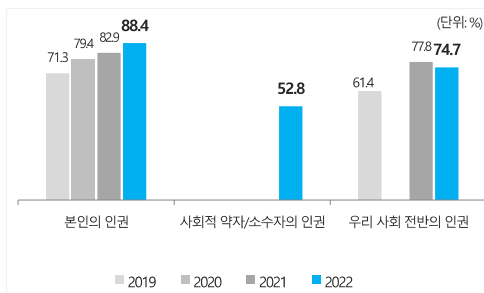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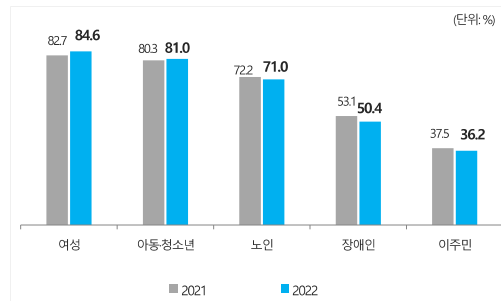
3)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

- 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의견은 2019년 이후 지속 증가하나(71.3%→88.4%),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은 2021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77.8%→74.7%).
-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은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존중받는다'고 응답(52.8%).
- 2021년에 이어 이주민은 가장 인권을 존중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인식(36.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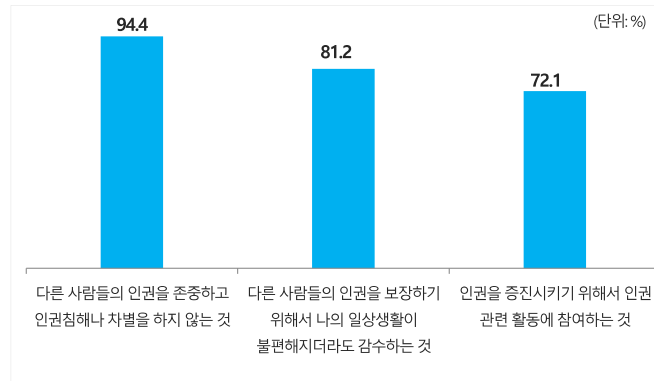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4)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에 대한 인식

-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인권적 주체로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질문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94.4%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항목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응답.
- 이어서 ‘타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불편을 감수’, ‘인권 관련 활동 참여’를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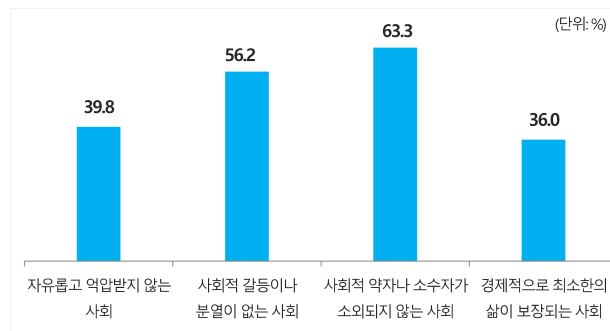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



5) 인권 보호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

- 인권 상황의 개선을 소외계층의 감소와 연결하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권 보호하고 존중할 때 나타날 우리 사회의 변화에 관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음(63.3%).
- 그 다음으로 ‘사회적 갈등, 분열이 없는 사회’,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의 보장되는 사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남.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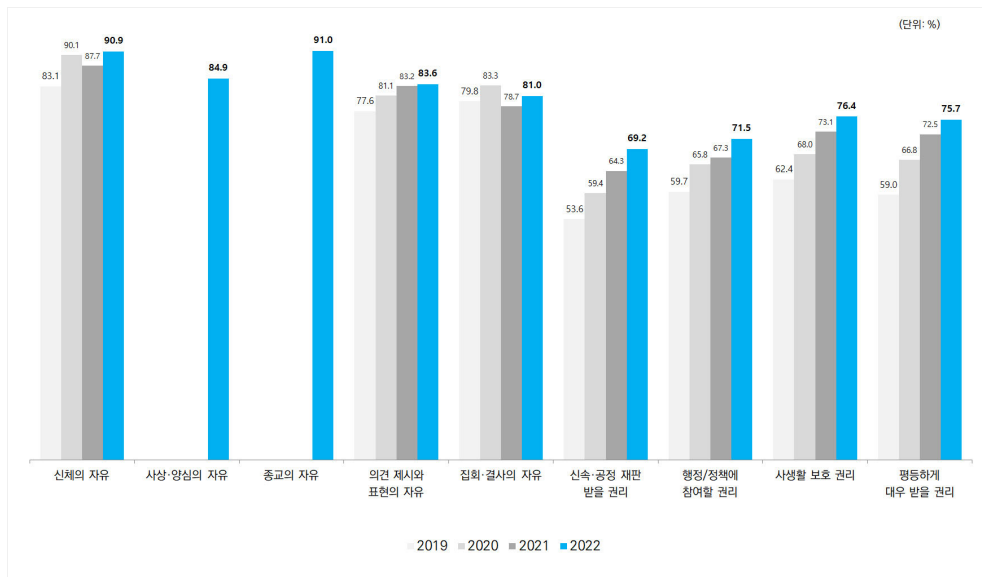


II 인권침해와 차별

1) 한국 사회에서 인권 내용별 존중 정도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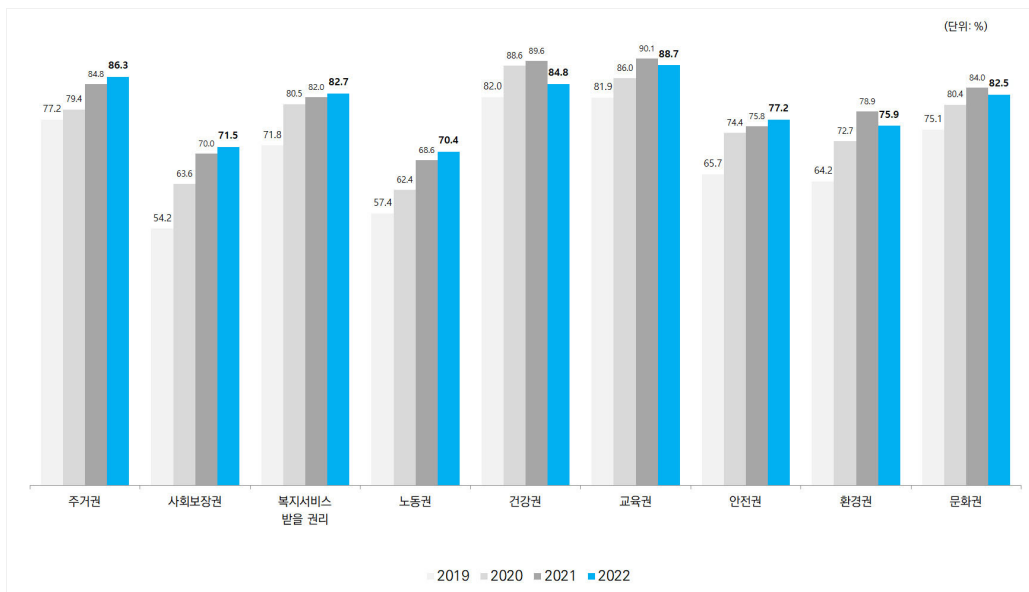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중 한국 사회에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은 종교의 자유(91.0%), 신체의 자유(90.9%), 사상, 양심의 자유(84.9%),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83.6%)가 높음.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69.2%)와 행정, 정책에 참여할 권리(71.5%)임.
-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존중받는다는 응답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2021년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감소한 권리는 없었음. 특히 2019년 대비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16.7%p),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5.6%p),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14.0%p), 행정, 정책에 참여할 권리(11.8%p)임.

시민적, 정치적 권리별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의 변화



-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들 중 한국 사회에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권(88.7%), 주거권(86.3%), 건강권(84.8%),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82.7%), 문화권(82.5%)임.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은 노동권(70.4%), 사회보장권(71.5%)임.
-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긍정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2019년에 비해 가장 큰 개선을 보이는 것은 사회보장권(17.3%p), 노동권(13%p), 안전권(11.5%p),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10.9%p) 등인 반면 2021년에 비해 긍정 비율이 낮아진 권리는 건강권(-4.8%p), 환경권(-3%p), 문화권(-1.5%p), 교육권(-1.4%p)임.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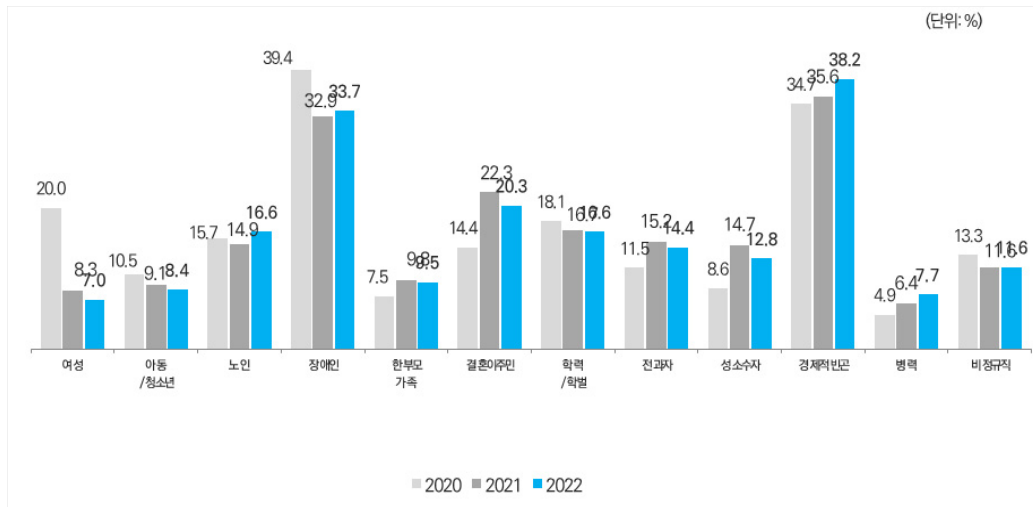


-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34.8%)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65.2%)보다 낮음.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37.6%)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62.4%)보다 낮음.
-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 모두 2021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2020년을 제외하면 2019년 이후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2. 인권 침해, 차별 취약 집단과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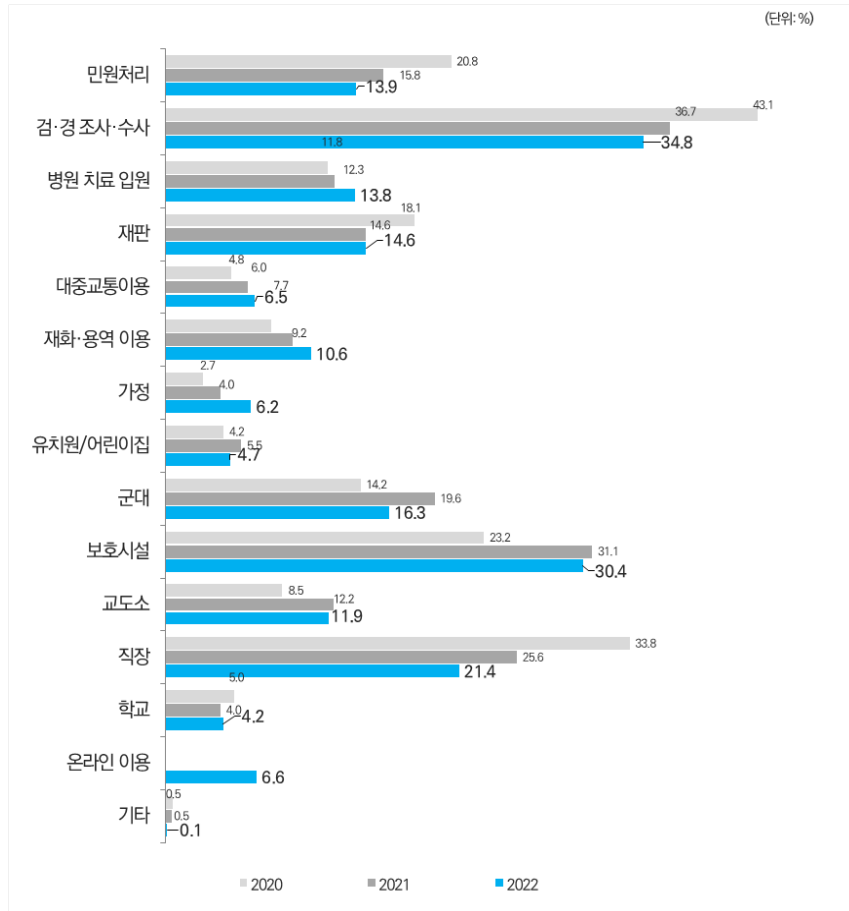
- 다중 선택을 허용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집단은 경제적 빈곤층(38.2%), 장애인(33.7%), 결혼이주민(20.3%)의 순임. 2021년과 취약집단의 순위는 마찬가지임.
- 2020년에 비해 취약집단 응답 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제적 빈곤층, 이주민, 전과자와 성소수자이며, 낮아진 것은 여성, 장애인, 노인, 학력과 학별이 낮은 사람, 비정규직임.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응답 추이



- 다중 선택을 허용한 결과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와 수사(34.8%). 보호시설(30.4%), 직장(21.4%)의 순임.
- 2021년에 비해 병원 치료 입원, 대중교통 이용, 재화 용역 이용, 가정의 선택 비율이 높아진 반면, 검찰 경찰 조사나 수사, 유치원 어린이집, 군대, 보호시설, 직장은 선택 비율이 낮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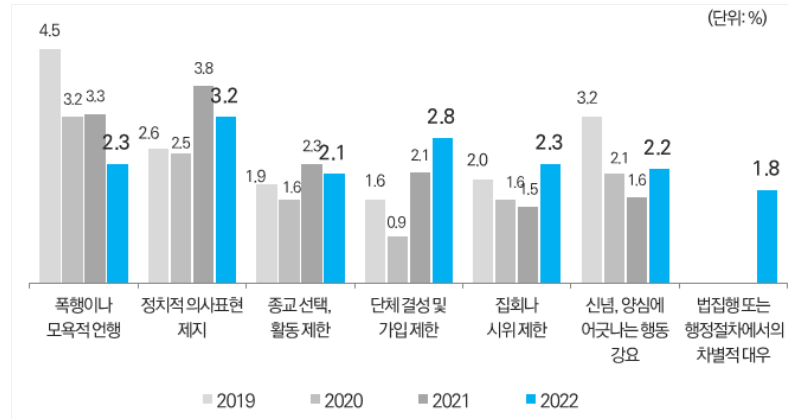
인권침해와 차별 발생이 쉬운 상황 응답 추이



3. 인권침해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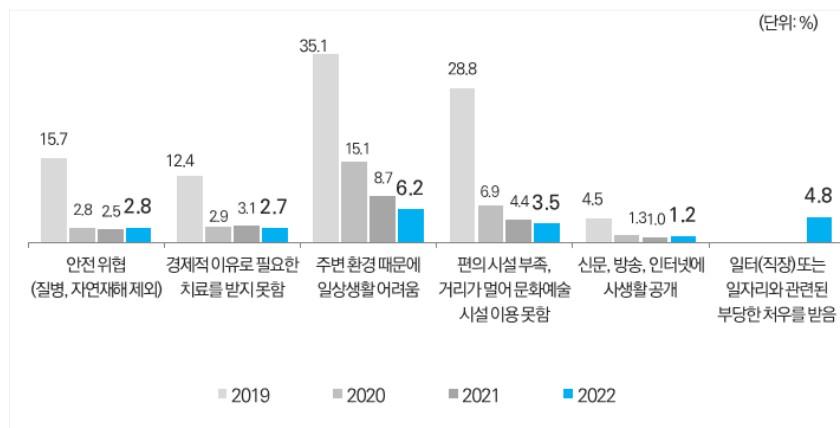
-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4%가 채 안 되는 낮은 비율을 보임.
- 가장 침해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 (3.2%)이지만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2019년 가장 높은 응답 비율(4.5%)을 보인 폭행, 모욕적 언행은 절반 가까이 줄었음(2.3%).
- 집회나 시위의 제한(2.3%),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2.2%), 단체결성 및 가입 제한(2.8%) 모두 2021년에 비해 응답이 늘었음.

시민,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의 추이



-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비해 응답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임.
- 환경권 침해 경험 비율(6.2%)이 가장 높지만 2021년에 비해 줄었음. 다음으로 침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일터(직장)나 일자리 관련 부당한 처우(4.8%)임.
- 2020, 2021년에 비해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임.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별 침해 경험의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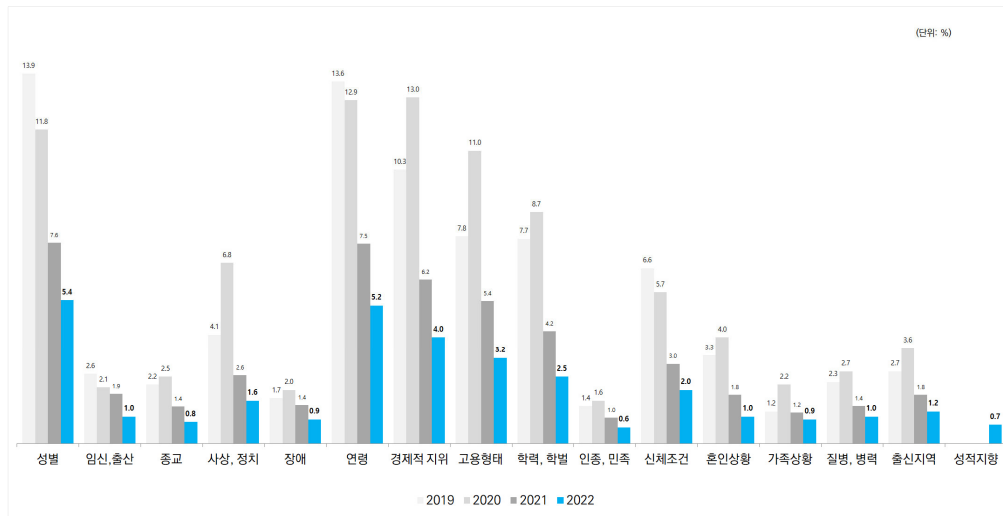


-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와 불이익으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정신적, 감정적 피해(48%)임. 다음은 피해나 불이익이 없다(34.9%)임. 정신적, 감정적 피해 비율은 2020년 이후 감소하는 반면, 피해가 없다는 비율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임.

4. 차별의 경험

- 지난 1년간 어떤 이유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이며, 이는 2019년(28.2%), 2020년(29.5%), 2021년(19.6%)에 비해 줄어 들었음. 차별 사유의 평균 개수도 2019년 이후 줄어서 2022년 2.2개임.
-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남녀 차별(5.4%)이며, 다음은 연령 차별(5.2%),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4.0%)의 순임.
- 전반적으로 2020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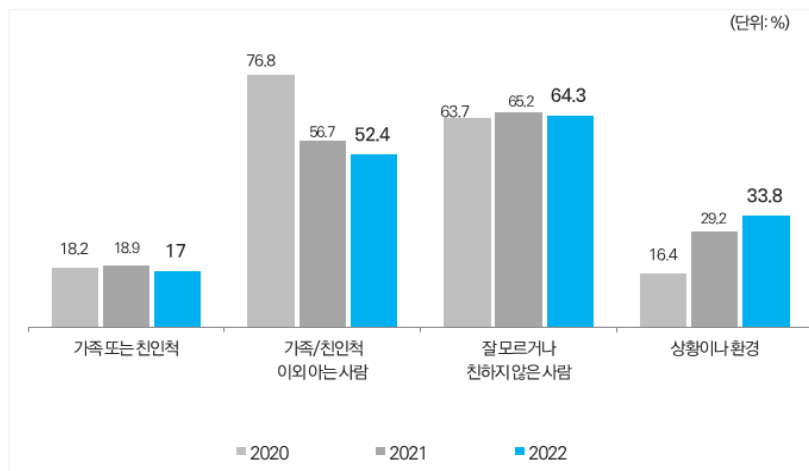
- 차별의 유형 면에서는 남녀 차별과 연령 차별 모두 일자리 관련 차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장애에 따른 차별의 경우 따돌림과 배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 높게 나타남.
- 사상, 정치,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에서는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높게 나타남.

- 차별 경험자 69.6%가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며 이것은 2021년(72.6%)에 비해 줄었음. 다음은 재산, 금전상 손해(11.1%), 명예 실추(7.5%), 신체적 상해(2.8%) 순임. 별다른 피해나 불이익이 없었다는 응답은 20.2%로 2021년과 비슷함.

5. 인권 침해, 차별의 가해자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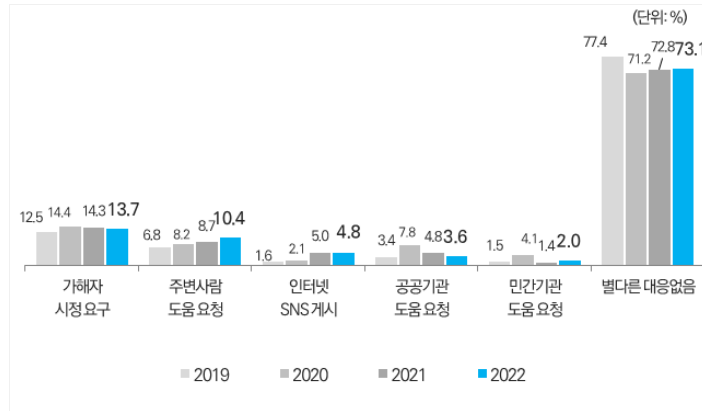
-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자 중 가해자와의 관계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응답(64.3%)이 가장 많고 다음이 가족,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52.4%)임.
-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자가 응답한 가해자의 성별, 연령대별 비율에서는 남성(50.9%)이 여성(25.4%)의 두 배이며, 연령대는 50대(28.8%), 40대(18.2%), 60대 이상(17.9%)의 순임.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와의 관계



-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응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73.1%)는 응답이 가장 많음. 다음은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13.7%),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10.4%),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4.8%), 공공기관 도움 요청(3.6%), 민간 기관 도움 요청(2.0%)의 순임.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



- 인권침해, 차별 경험 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이유로는 문제가 심각해진다(27.8%)가 가장 높고, 다음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25.8%),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서(19.3%) 순임.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021년에 비해 크게 늘었음.

6. 인권침해와 차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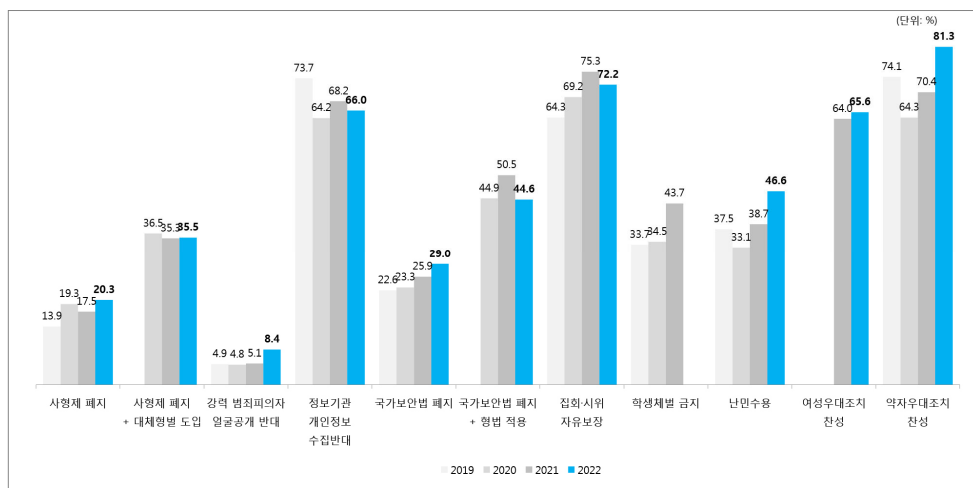
- 인권침해와 차별의 경험은 모두 피해자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다변량 분석 결과 나타남. 인권침해의 경우 피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삶의 만족도 하락에 차이를 보임. 차별의 경우 차별 사유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크게 낮아짐.
- 인권침해와 차별을 경험할 경우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시정 요구를 한 경우 삶의 만족도 하락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권침해와 차별의 경험은 개인과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면, 인권 존중의 중요성이나 인권의 중요성, 타인의 인권 존중의 의무와 규범 혹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을 인지하는 등 인권의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III 인권 관련 의견

1)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한 의견

-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과 태도에 따라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추진이 수월해질 수 있으므로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
-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난민 수용’은 인권에 친화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형제 폐지’,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도입’,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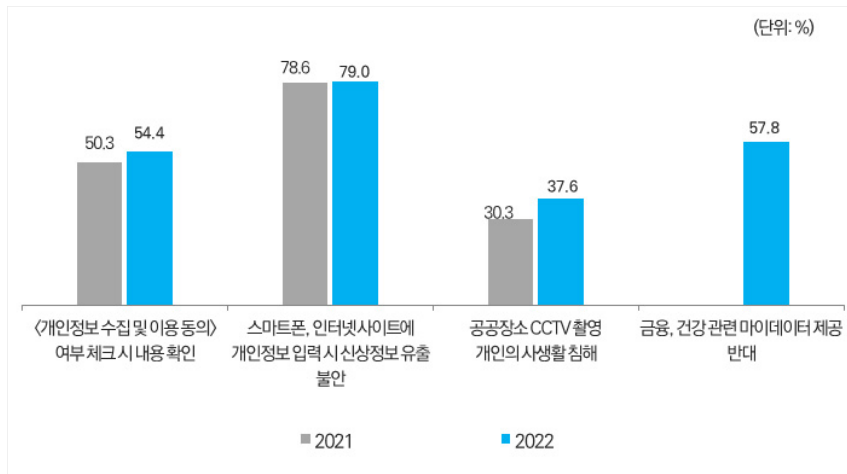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시위·집회의 자유 보장’,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반대’ 항목은 인권에 친화적인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사형제 폐지’, ‘강력범죄 얼굴 공개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여전히 30% 이하로 낮은 편임.
- 2021년과 비교해서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보인 항목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10.9%p), ‘난민 수용’ (+7.9%p)이며,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 (+3.3%p), ‘국가보안법 폐지’(+3.1%p), ‘사형제 폐지’

(+2.8%p)에 대한 의견은 소폭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2021년보다 인권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보인 항목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반대’ (-2.2%p), ‘시위.집회의 자유 보장’ (-3.1%p)으로 나타났다.

2)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약간 강화되었는데, 특히 공공장소의 CCTV에 대한 경각심이 2021년 30.3%에서 2022년 37.6%로 7.3%p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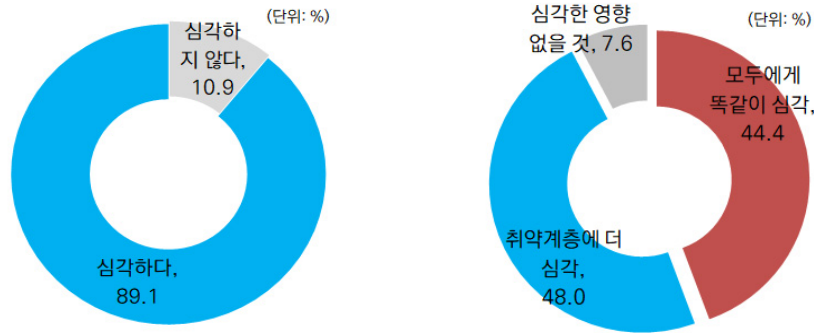
정보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비교



-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 유출 우려로 ‘불안하다’(매우+다소)는 응답은 79.0%로 상당히 높음.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체크할 때 내용을 ‘확인한다’(매우+대체로)는 경우는 54.4%로 나타나서, 불안감이 높지만 개인정보 제공할 때 내용을 확인하는 비율은 떨어짐.
- 개인의 은행 계좌, 신용카드 등의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하에 여러 곳에 흩어진 금융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마이데이터에 대해 ‘찬성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42.2%, ‘반대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57.8%로 찬성하는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직은 데이터 활용의 편리성보다 개인정보 유출 또는 악용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

3)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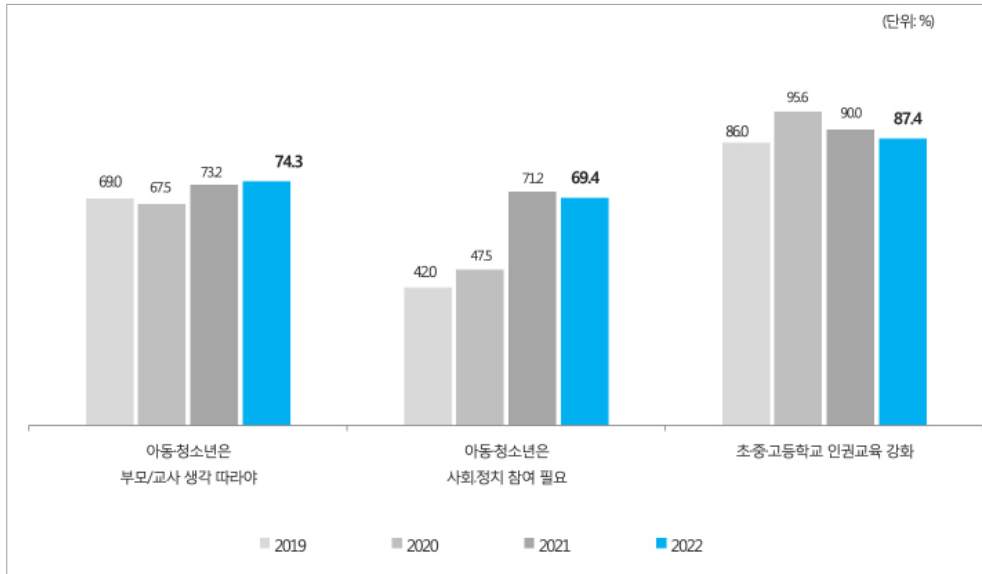
-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다’(매우+다소)고 보는 의견은 8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또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44.4%,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다’는 의견은 48.0%를 차지하고 있음.



4)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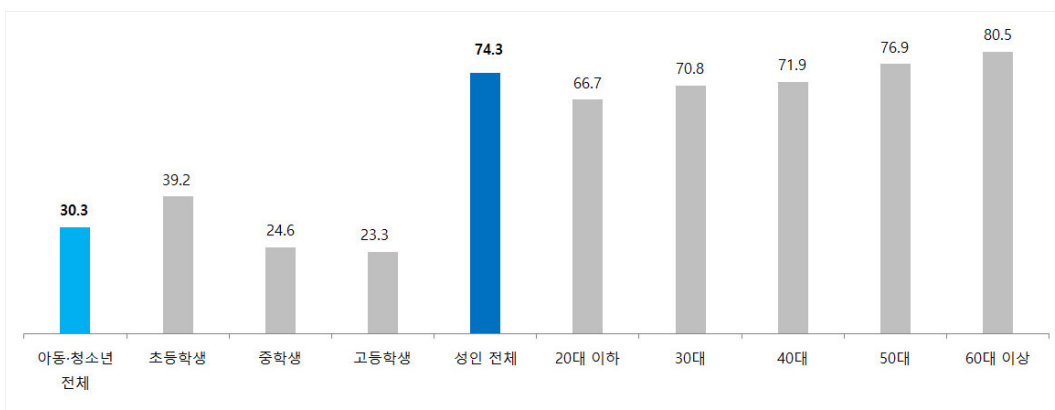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변화가 가장 큰 항목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 필요’ 항목으로 2019년 42.0%, 2020년 47.5%에서 2021년 71.2%, 2022년 69.4%로 2020년 이후 약 20%p 증가하였음. 또한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은 2019년 69.0%, 2020년 67.5%였으나, 2021년 73.2%, 2022년 74.3%로 아동·청소년을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반면 ‘학교 인권교육 강화’는 2020년 95.6%, 2021년 90.0%, 2022년 87.4%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주체성에 대한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의사결정 주체성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매우+다소)는 비율이 30.3%로 나타나, 일반국민의 동의 비율(74.3%)의 절반 이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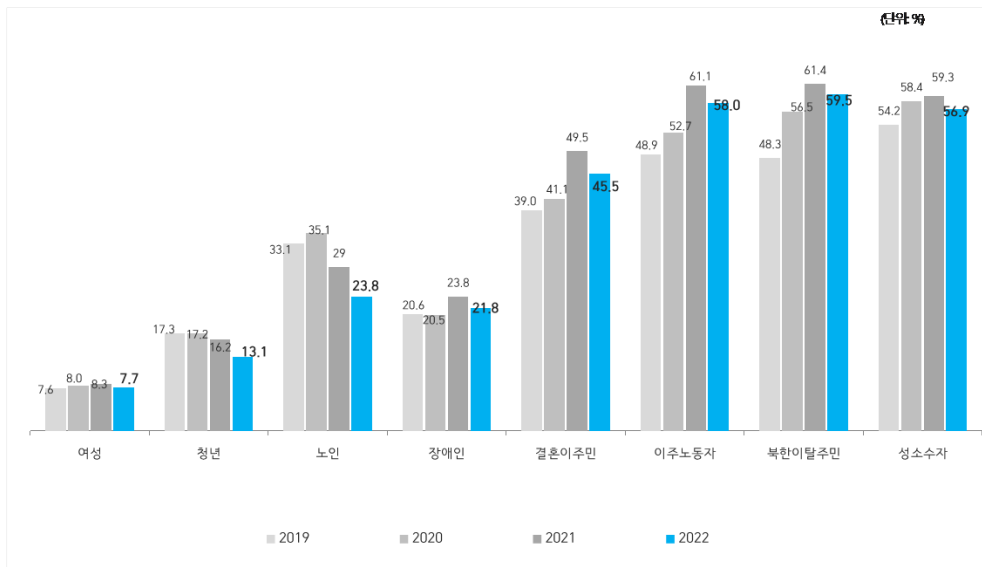
연령층별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동의율 비교



5)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다양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매우+다소)고 응답한 약자/소수자 집단은 북한 이탈주민(59.5%), 이주노동자(58.0%), 성소수자(56.9%), 결혼이주민(45.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여성(7.7%)과 청년(13.1%)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음.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장애인(21.8%)과 노인(23.8%)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은 21~23% 수준임.
- 2019~2021년 사이에는 여성, 청년, 노인을 제외하고 약자/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2년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약간 줄어 들었음.

선출직 정치인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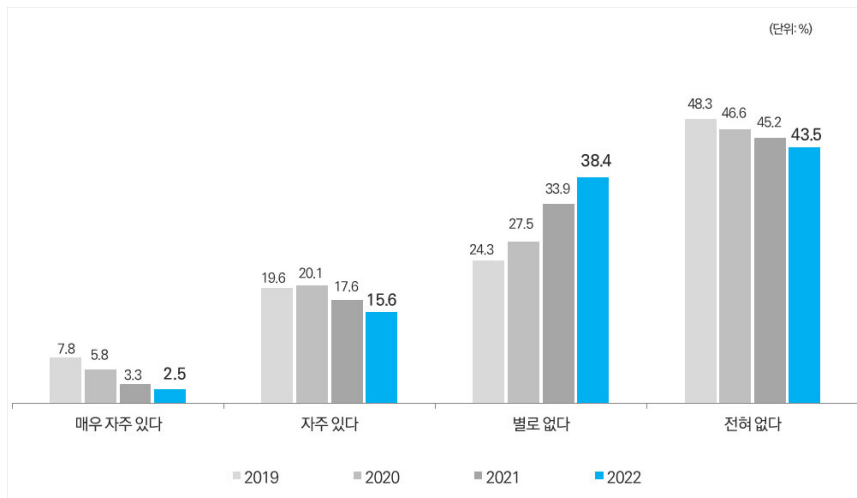
6) 혐오표현의 경험 및 대응

-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매우 자주+자주+별로)는 응답은 56.5%를 차지하는 반면 응답자의 43.5%는 혐오표현에 노출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음.
-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019년 48.3%, 2020년

46.6%, 2021년 45.2%에서 2022년 43.5%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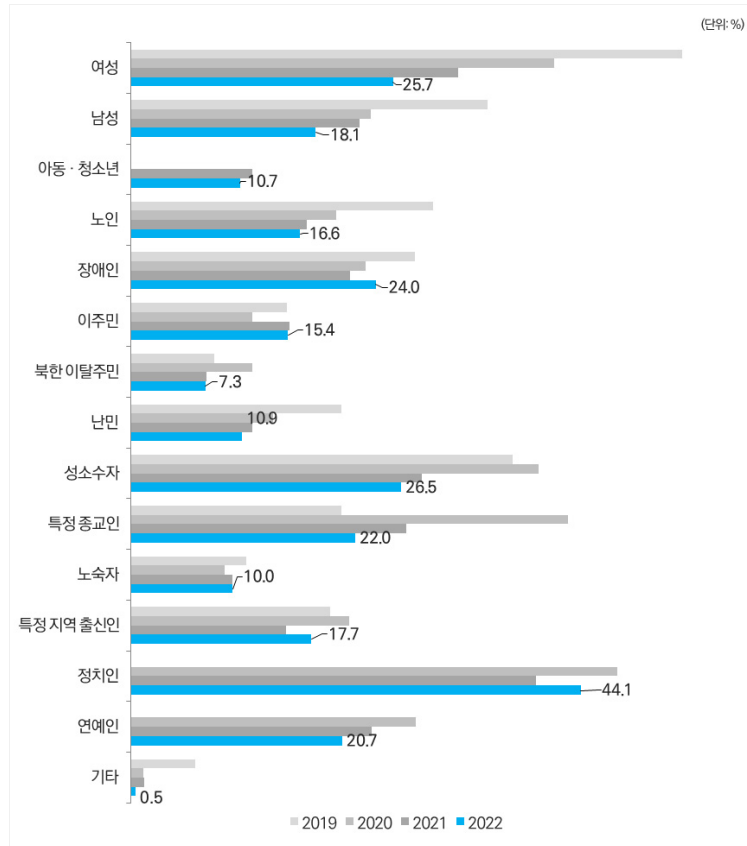
- ‘매우 자주 있다’는 응답도 역시 2019년 7.8%, 2020년 5.8%, 2021년 3.3%, 2022년 2.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자주 있다’는 응답은 2019년 19.6%에서 2020년 20.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17.6%, 2022년 15.6%로 근소하게 감소하였음.

혐오표현의 노출 경험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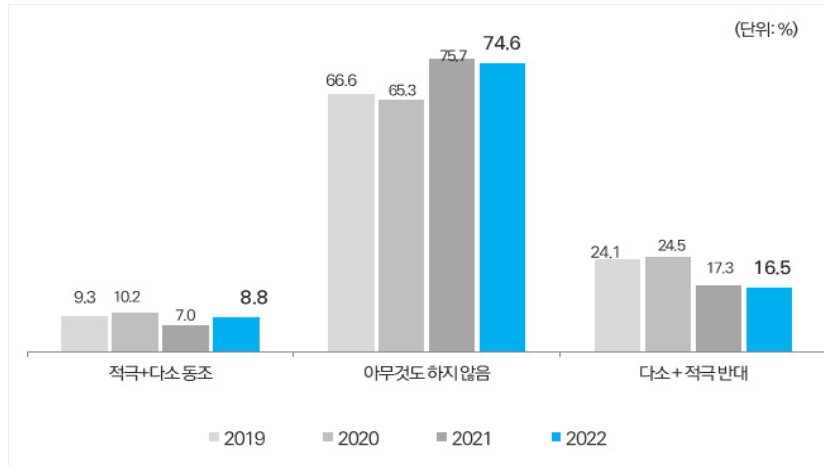
- 다양한 집단이 혐오표현 대상이 되는데, 정치인(44.1%), 성소수자(26.5%), 여성(25.7%), 장애인(24.0%), 특정 종교인(22.0%), 연예인(20.7%), 남성(18.1%), 특정 지역 출신인(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주민(15.4%), 난민(10.9%), 아동청소년(10.7%), 노숙자(10.0%), 북한이탈주민(7.3%)에 대한 혐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2021년 대비 혐오표현의 대상자로서 여성, 남성, 특정 종교인, 연예인 등은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장애인, 특정 지역 출신인, 정치인 등은 오히려 혐오표현이 증가하였음.

혐오표현의 대상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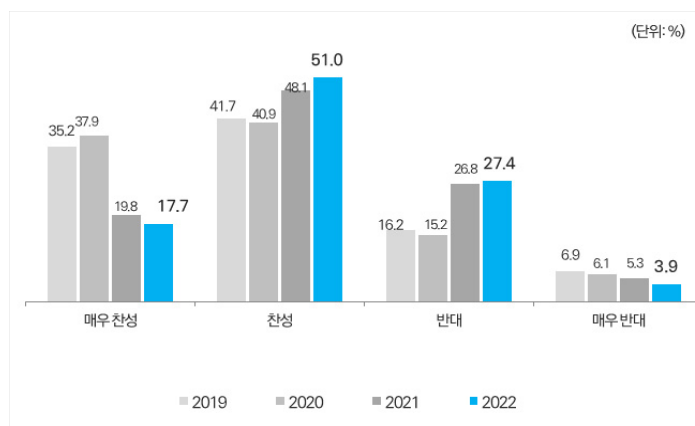
- 혐오표현 경험자의 대응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74.6%로 가장 많고, ‘반대의견 및 시정요구’는 16.5%, ‘동조’하는 경우도 8.8%에 달함.
-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대응은 2020년 65.3%에서 2021년 75.7%로 10.4%p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74.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반면 ‘반대의견 및 시정요구’는 2020년 24.5%, 2021년 17.3%, 2022년 16.5%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동조’는 2020년 10.2%에서 2021년 7.0%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8.8%로 1.8%p 증가하였음.

혐오표현 노출시 대응의 변화



- 혐오표현이 ‘심각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49.5%인 반면 ‘심각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의견은 50.5%로 나타나서 두 의견이 비슷한 수준임.
- 그런데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은 68.7%로, 반대하는 비율 31.3%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020년 78.8%에서 2021년 67.9%로 감소한 이후 2022년 68.7%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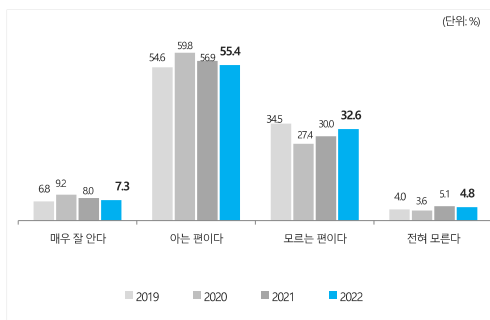


IV 인권 교육

1) 인권 존중의 방법과 인권 침해시의 대처 방안에 대한 인식 정도

- 2022년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동시에 인권 침해시 대처 방안을 모른다고 응답도 응답자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2020년 이후 감소(69%→62.7%)함에 비해, ‘모른다’는 응답은 증가(31%→37.4%) 추세.
- 또한 2019년에 비하여 인권 침해 시의 ‘대처법을 안다’는 응답이 늘었으나 (40.6%→46.5%), 여전히 ‘모른다’의 응답 비중은 절반 이상(59.5%→53.6%)으로 나타남.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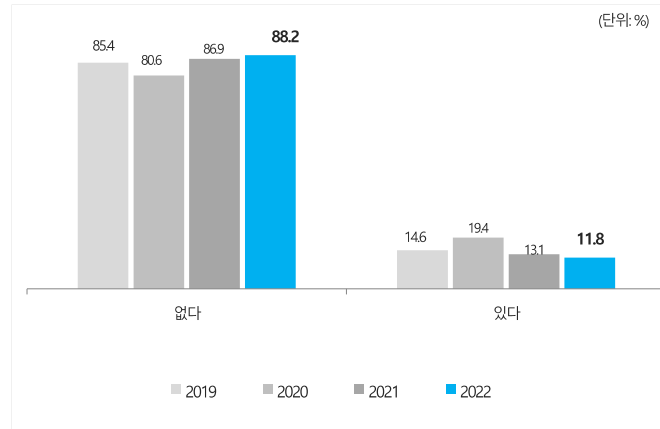
인권 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2) 인권 교육 경험

- 최근 1년 이내의 인권 교육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80.6%→88.2%)이다. 80% 이상의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인권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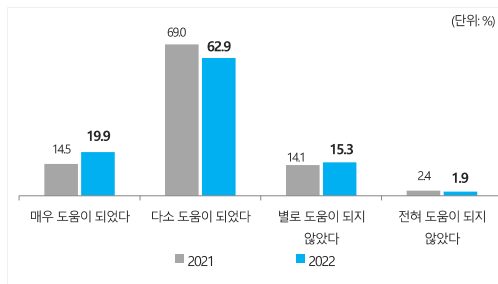
인권교육 경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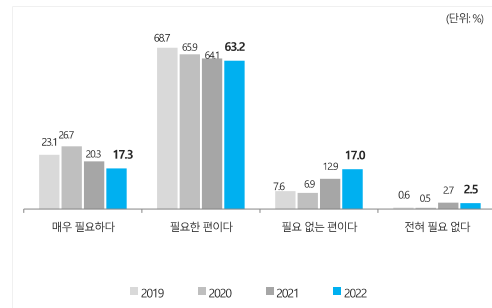
3) 인권 교육의 도움 정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인권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80%이상으로 나타나지만(83.5%, 82.8%),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에도(91.8%→80.5%), ‘필요없다’는 응답도 증가하는 추세(8.2%→19.5%).

인권교육 도움 정도



인권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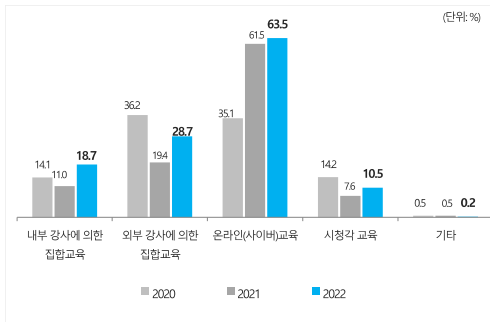
4) 인권 교육 방식과 인권 교육 기관

- 2020년 이후 온라인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었고, 주로 민간 기업 중심으로 확대된 경향을 확인함.
-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인권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 ‘민간기업’을 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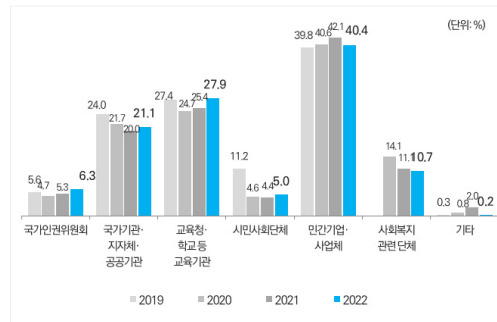
아(40.4%), 인권 교육에서 민간 기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이어서 ‘교육청, 학교’, ‘국가기관’, ‘사회복지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기타’ 순으로 나타남.

경험한 인권교육 방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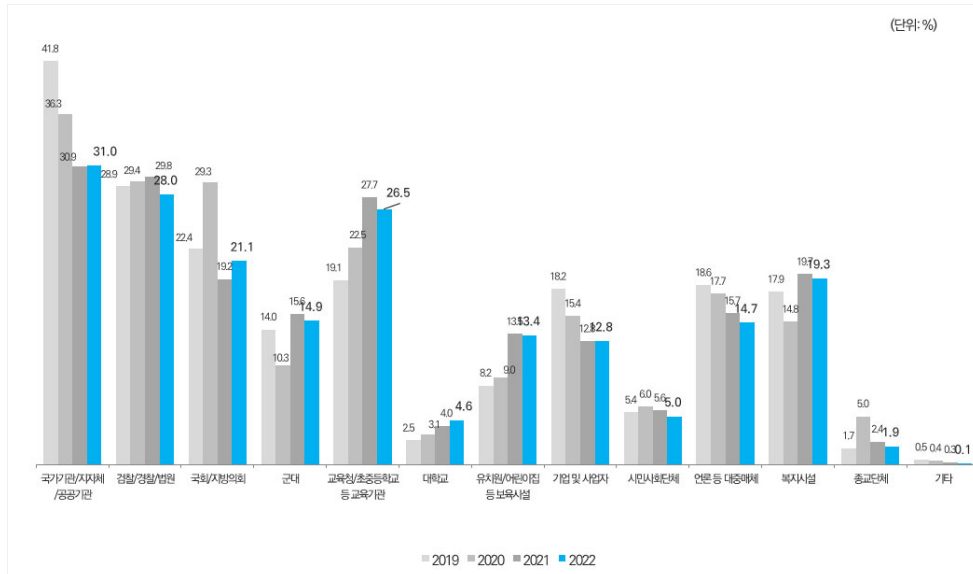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추이(중복응답)



5)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검찰/경찰/법원은 인권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2019년 조사 이후부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2019년 이후 그 비중이 10%p 이상 감소함(국가기관 등은 41.8%→31%).
- 군대는 2020년 조사에서 14%에서 10.3%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2022년 14.9%로 증가하였으며,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은 2019년 19.1%에서 2022년 26.5%로 증가하여, 2019년 대비 증가 폭이 큰 기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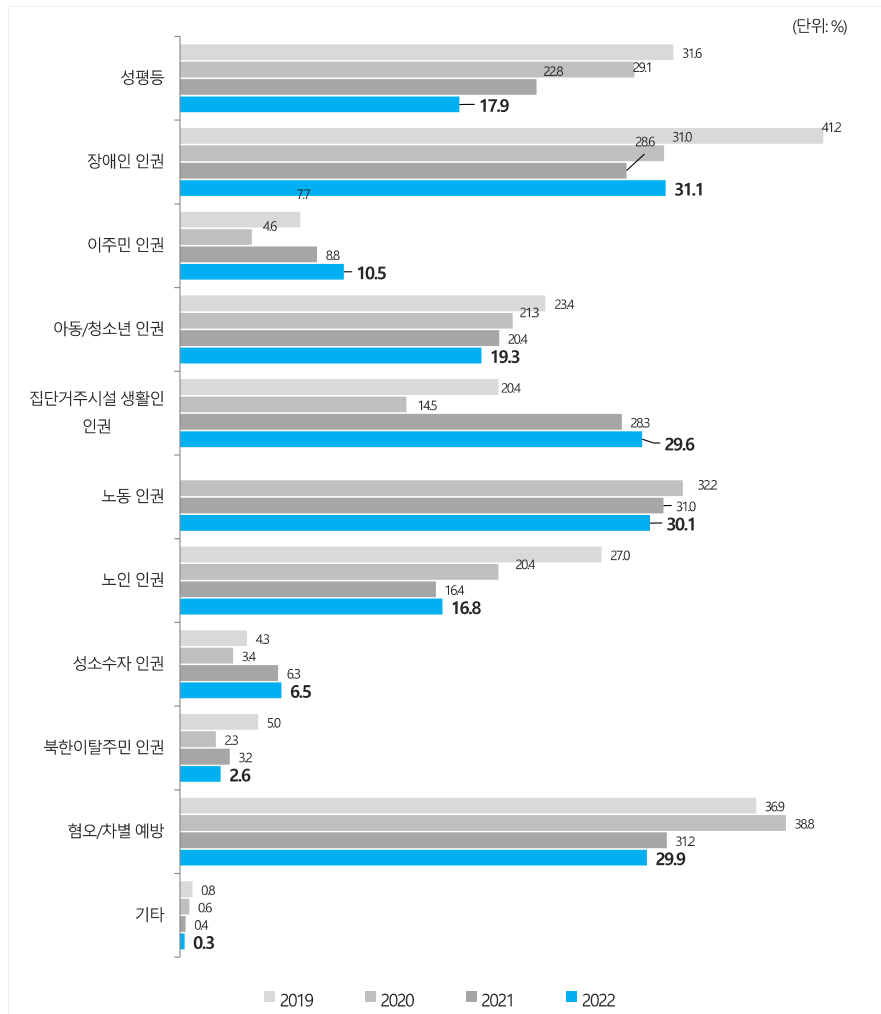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 추이



6) 인권 교육이 시급히 필요한 주제

- 2022년 조사 결과, 시급한 인권 교육 필요 주제는 인권교육이 필요한 주제는 장애인(31.1%), 노동(30.1%), 혐오/차별예방(29.9%) 등의 순임.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성평등(31.6%→17.9%)과 혐오차별(36.9%→29.9%), 노인인권(27%→16.8%)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감소.
- 그리고 이주민(4.6%→10.5%), 집단거주 시설(20.4%→29.6%)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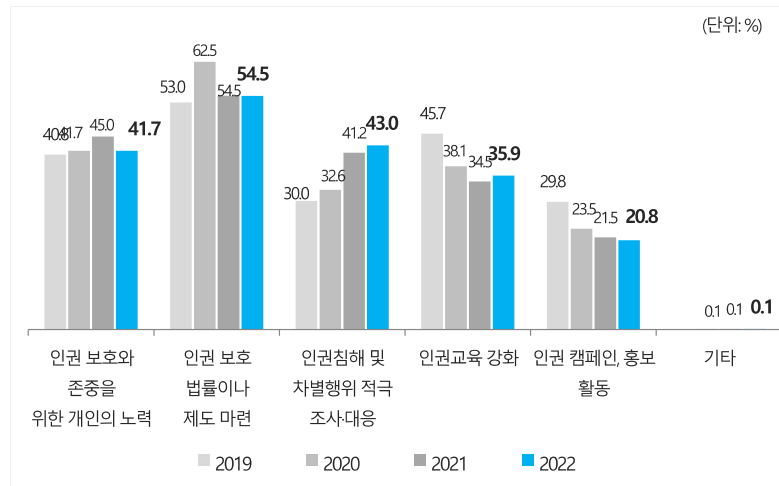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추이



7) 효과적인 인권보호와 차별해소 방법

- 인권 교육과 홍보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 관련 법률 마련을 효과적 이라고 인식하는 경향.
- 응답자는 효과적인 인권보호, 차별해소 방법으로 인권보호 법률, 제도마련 (54.5%), 인권 침해 행위 적극 조사(43%), 인권 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 (41.7%) 등의 순으로 응답.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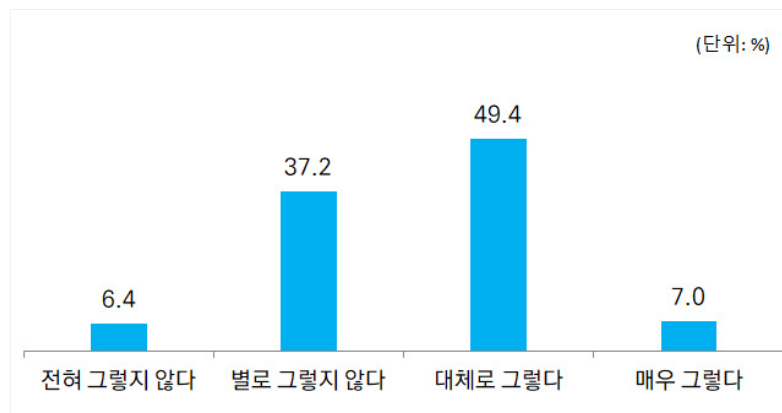


V 코로나19와 인권

1) 코로나19가 인권에 끼친 영향 인식

-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인권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매우+대체로)는 의견은 56.4%이고 ‘영향을 주지 않았다’(전혀+별로)는 의견은 43.6%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권에 ‘매우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은 7.0%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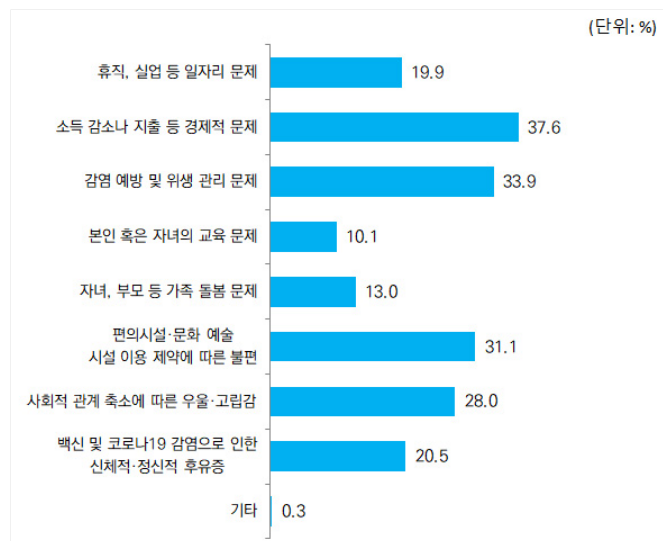
인권 상황에 대한 코로나 19의 영향 여부



2)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문제(37.6%) >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33.9%) >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 (31.1%) > 사회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28.0%) > 백신/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20.5%) > 휴직, 실업 등 일자리(19.9%)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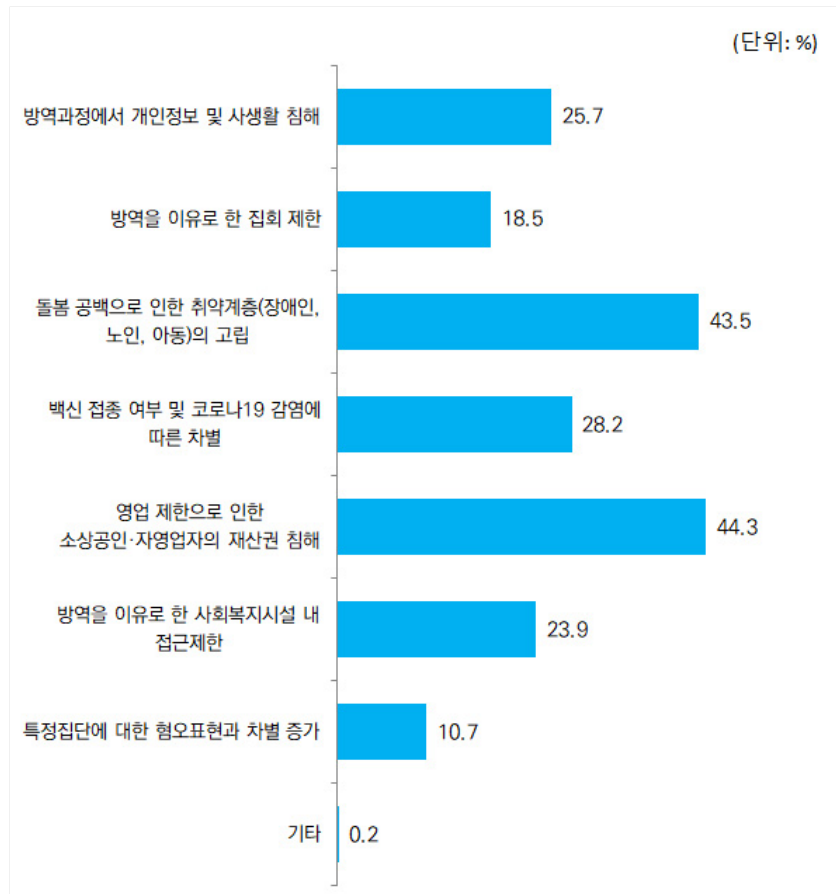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3)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

- 코로나19 동안에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44.3%) >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43.5%) >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25.7%) > 방역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 제한(23.9%) >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18.5%) >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10.7%)의 순으로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 목적
2. 조사 내용 및 방법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 목적

1) 조사목적과 법적 근거

본 조사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인권교육 및 인권 증진방안을 조사하여 「국가인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한 승인통계이며, 본 조사의 승인번호는 일반 조사통계 승인번호 제129001호이다.

2) 조사연혁, 주기 및 시기

본 조사는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로 최초 실시되었으며,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제4차 조사는 「인권의식실태조사」로 이름을 바꾸어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조사 주기는 1년이다.

조사 시점은 2020년에는 8월부터, 2021년에는 조사 시점을 앞당겨 7월 16일에 시작하였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악화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던 반면, 2022년에는 7월 1일에 시작해서 9월 16일에 종료되었다.

3) 조사기관

본 조사의 주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이며, 조사를 시행한 기관은 (주)한국리서치이다. 2019년과 2020년에는 통계청 통계대행과에서 조사를 수행했으며, 2021년 민간 조사기관으로 조사가 넘어간 이후 올해가 두 번째 조사이다.

4) 선행연구 검토

어느 사회의 인권이 직면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권실태와 인권의식의 사회적 토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쏘힐(Thornhill, 2013)은 인권 연구와 성찰적 사회학의 접목을 통해 인권을 규범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인권을 사회를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인권을 사회적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분석수준으로 세 가지 수준을 제시한다. 첫째, 행위자(agency) 수준은 NGO 등 인권과 관련되었거나, 인권 개념을 둘러싼 갈등에 포함된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의미-이론적(semantic-theoretical) 수준은 상징적 기제로서 인권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역사적 구축/재구축 과정을 연구이다. 셋째, 법적 담론과 정당화(legal discourse and legitimation) 수준에서는 법적 담론 내에서 인권이 구성되는 방식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인권이 제도 내에서 정당화되는 과정을 연구한다(Thornhill, 2013: 27-28).

따라서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권에 대해 갖는 의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의 개념 자체가 개인을 모태로 형성되었으며, 인권의 핵심에 개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Donnelly, 2003). 또한 일련의 인권 제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개인의 인권의식이 중요하다. 인권의식이 높고 인권에 호의적이며 인권 개선과 증진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개인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인권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권의식은 인권의 주관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개인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인권 문제로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문용린 외, 2002). 이것을 인권감수성 또는 인권민감성이라고 하는데, 인권이 얼마나 보호받고 보장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작업에 비해서 인권의 주관적 측면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그리 많지 않다.

1990년대에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갤럽조사(Gallup International Millennium Survey) 등에서 인권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지만, 개인의 인권의식이나 여론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뿐만 아니라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인권의 강조점이 달랐고 이는 각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동독과 서독은 사회체제의 성격이 달라서 동독의 국민들은 사회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반면 서독의 국민들은 자유권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Stellmacher, Sommer, and Brahler, 2005). 러시아나 동유럽의 인권조사도 사회권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인권조사는 외교정책의 고려 속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다루다 보니 자유권 및 차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9·11 테러, 이라크전 등 군사분쟁이 확산되고 안보 위협이 커진 2000년 이후부터 인권과 안보 충돌에 대한 우려로 테러, 고문, 구금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본의 인권조사는 ‘인권옹호에 대한 세론조사’가 대표적이며, 자유권 중심의 관심이 더욱 심한 경향을 보인다. 공동체와 책임에 대한 강조, 인권존중과 권리의 주장이 타인에 폐를 끼치는지 여부를 묻는 것도 일본적 특수성을 보여준다(정진성 외, 2010).

한국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인권조사를 찾을 수 없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으로 인권운동이 제도화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해서 인권의식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제공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하에 2005년 최초로 ‘국민인권의식조사’가 실시되었고,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 대처법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인의 인권의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부터였고, 인권지식, 인권평가,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쟁점, 인권행동 등의 다양한 영역이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는 2011년 조사 내용을 계승하여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다. 이러한 흐름의 영향으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2022년부터 ‘인권의식실태조사’로 바뀜)가 승인통계로 자리 잡고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 대상으로 학자, 국회의원, 공무원, 청소년, 대학생,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조사는 다수가 있지만, 인권민감성, 인권태도, 인권지식 등 인권의 일부 측면만을 다루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권의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인권의식은 개인이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인지, 정서, 행동의 3요소로 태도가 구성된다고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에 대한 태도는 인지, 정서, 행동의 3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김자영(2011)은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의 3요소를 토대로 8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즉 3개 요소가 모두 높은 수호자형에서 모두 낮은 무관심형이 있고, 이 둘 사이에 관망형, 원칙형, 무감각형, 온정형, 맹목형, 무기력형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인권의식의 의미와 차원이 훨씬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을 4가지 차원, 즉 시민적 억압(civilian constraint), 프라이버시(privacy), 평등(equality), 사회적 안전성(social security)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과 관련된 요인은 다르다고 하는 연구도 있고(Diaz-Veizades, Widaman, Little, and Gibbs, 1995), 인권 개념을 인권 지지(endorsement), 인권 헌신(commitment), 인권 제한(restriction)의 3차원으로 구분하면

서 많은 요인이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McFarland and Mathews, 2005). 인권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총망라한 논문(Koo, Cheong and Ramirez, 2015)에서는 인권을 지식, 평가, 경험, 민감성, 지지, 헌신, 행동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경험적인 인권연구는 결국 ‘누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가?’, ‘개인들 간에 인권에 대한 인식, 태도, 경험, 행동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한 차이를 낳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인권에 있어서 인지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고 도덕성 발달과 연관시킬 경우 인권의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그 외에 교육, 자율성, 자아존중감 등이 인권의식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Getz, 1985, 이승미, 1999). 서구에서는 인권과 인권 원칙의 등장에 집합적 고통, 사회적 고통 등에 대한 역사적 기억 등 공감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Levy and Sznajder, 2004; Hunt, 2009; Humphrey, 2017). 이러한 공감적 특성 등 인권과 정서 요인을 감안할 경우 공감력이 높은 여성이 인권의식이 더 높다고 기대할 수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도 여성의 인권의식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분석되었다(Diaz-Veizades, Widaman, Little, and Gibbs, 1995; 류지현·허창영, 2008). 이와 유사하게 인권에 대한 민감성은 인권 의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Ju, Lee and Kim, 2013). 정치적 성향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보수주의 성향에 비해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옹호한다고 알려졌고, 정치적 보수주의, 자민족중심주의, 편견이 강하면 소수자 인권을 제한하는 경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Jost et al., 2003; Crowson, 2004).

또한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인권규범과 제도의 팽창이 개인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세계화를 통해 국제민간단체로 대표되는 세계시민사회의 영역도 확산되는데, 세계시민의식은 타인에 대하여 개방적인 의식과 태도를 갖게 하므로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인권에 헌신적일수록 글로벌주의 성향이 강하며 국제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McFarland and Mathews, 2005). 따라서 해외 거주 경험과 함께 세계시민의식은 개인의 인권의식을 가르는 주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Koo and Ramirez, 2009; Koo,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인권감수성, 세계시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인권이 결국 사회적 산물이라면, 인권의 내용을 새로이 구성하고, 인권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권 교육의 실천 방안으로 사회정책, 공교육, 인간해방 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으로서의 인권의 사회학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한다(Woodiwiss,

2005). 인권교육은 대부분 학교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도덕성의 발달이라는 직접적인 학습 효과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식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인권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인 중요성을 차지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인권 교육은 가치와 인식, 책무성 등의 차원을 통해 인권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의도 존재한다(Tibbitts, 2002).

한편 인권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어지면서 개인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인권감수성을 예측하는 모형을 도출해 볼 수 있다(구정우·남윤창·황태희, 2018). 인권감수성은 개인이 사회화과정에서 체득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에서 인권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달려있다. 인권감수성을 예측하고 타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과 항목

2022년의 「인권의식실태조사」는 2021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거친 후, 데이터의 분석적 가치, 해석의 타당도, 결과의 활용도, 새로운 항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을 일부 삭제, 수정, 추가하였다. 또한 응답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방식을 수정하였다. 그 외의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하여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 1-1〉 조사내용 및 항목 (2021년-2022년 비교)

조사 부문	조사항목	2021	2022
인권인식	① 평소 '인권' 용어를 어느 정도 접하는가?	○	○
	②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된 것을 알고 있는가?	○	○
	③ 1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어떤가?	○	○
	④ 다음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가	○	○
	1 본인의 인권	○	○
	2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	◎
	3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인권	○	○
	⑤ 평소에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	×
	⑥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
	1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차별을 하지 않는 것	--	◎
	2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	◎
	3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	◎
	⑦ 인권과 관련된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
	1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
	2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	◎
	3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	◎
	4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	◎
	5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	◎
	⑧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	×
	⑨ 인권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1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	×
	2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	×

○ 동일하게 유지, ◎ 새롭게 추가, △ 부분적 수정, × 문항 삭제

조사 부문	조사항목	2021	2022
인권 침해 및 차별	① 인권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 ○	△ △
	(신체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권 리, 공공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 게 대우받을 권리)	○	○
	(주거권, 사회보장권,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② 우리나라에서 누가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가?	○	○
	③ 인권 침해/차별을 받기 쉬운 상황은 무엇인가?	○	○
	④ 전반적으로 인권 침해가 어느 정도인가?	○	○
	⑤ 과거 1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	○
	⑥ 과거 1년간 인권 침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
	⑦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는가?	○	○
	⑧ 전반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인가?	○	○
	⑨-1 과거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 장애, 연령,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 학력이나 학벌, 인종/피부색/출신국가/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 및 병력, 출신지역	○	○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	◎
	⑨-2 어떤 유형의 차별을 받았는가? 신체적/언어적, 고용(일자리) 관련, 사회적 차별(따돌림이나 배제), 재화/용역(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	○
	⑩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는가?	○	○
	⑪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
	⑪-1 누가 인권 침해/차별을 가했는가?	○	○
	⑪-1-1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차별을 가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는 무엇인가?	○	○
	⑪-2 인권 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	○
	⑪-2-1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어디인가?	○	○
	⑪-2-2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	○
	⑪-3-1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는 무엇인가?	○	○
	⑪-3-2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	○
	⑪-4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조사 부문	조사항목	2021	2022
인권 관련 의견	① 상반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형제도 폐지 여부,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	○	○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 공개)	○	○
	(국가정보기관의 통신 감찰)	○	○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등 다른 법률 적용)	○	○
	(시위 집회의 자유)	○	○
	(학생 체벌)	○	×
	(난민 수용)	○	○
	(성평등 위해 여성 적극적 우대조치)	○	○
	(사회적 약자 적극적 우대조치)	○	○
	②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	◎
	② -1) 기후변화가 심각해진다면 개인 삶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
	③ 정보인권 관련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④ 개인의 금융, 건강 정보를 가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⑤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⑥ 가족, 이웃, 친구 중에 인권 취약계층의 사람이 있는가?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	○	○
	⑦ 인권 취약계층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
	⑧ 지난 1년간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는가?	○	○
	⑧-1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는 무엇인가?	○	○
	⑧-2 혐오표현의 대상은 누구인가?	○	○
	⑧-3 혐오표현을 접할 때 어떻게 했는가?	○	○
	⑨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
	⑩ 혐오표현을 법적 규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

I. 조사개요

조사 부문	조사항목	2020	2021
인권교육 및 개선	① 인권존중/차별하지 않기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을 얼마나 아는가?	○	○
	②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을 얼마나 아는가?	○	○
	③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았는가?	○	○
	③-1 어디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는가?	○	○
	③-2 인권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	○	○
	③-3 인권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	○
	④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	○
	⑤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대상은 어디인가?	○	○
	⑥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은 무엇인가?	○	○
	⑦ 지난 1년간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에 참여했는가?	○	○
	⑧ 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은 무엇인가?	○	○
코로나19 와 인권	⑨ 인권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	○	○
	⑩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	○
	① 코로나19가 국내 인권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	◎
사회적 가치	②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2개 응답)	--	◎
	③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2개 응답)	--	◎
	① 향후 10년간 국가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경제성장, 국가 안보, 참여와 권리 보장, 환경 및 생태계 보호)	○	○
	②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	--	◎
	③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	○

본 조사에서 조사된 항목과 관련된 주요한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표 1-2〉 주요 용어 정리

용어	내용
인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권 침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
차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소수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편견을 조장하거나 멸시·모욕 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말함. 대표적인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여성혐오표현), 된장녀(여성혐오표현), 한남충(남성혐오표현), 맘충(자녀가 있는 여성혐오표현), 틈딱(노인혐오표현) 등을 들 수 있음
사상의 자유	어떤 관점이나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는 자유
양심의 자유	외부의 억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
의견제시와 표현의 자유	사람 내부의 정신을 외부로 공표하는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외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처리 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권 중 빈곤해결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권 중 소득보장	인간으로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중 활동지원	장애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안전권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성소수자	자신의 신체와 다른 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성적 매력과 애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함.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대표적인 성소수자임

용어	내용
결혼이주민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외국인들. 이렇게 가족이 형성되면 다문화가족이라고도 함
이주노동자	외국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
난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국가를 벗어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최근에는 전쟁, 테러, 국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른 국가로 피해가는 사람들도 난민에 포함됨
보호시설 중 보육원	부모, 친지 등의 양육자가 없거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공적인 양육자가 되어주는 시설
보호시설 중 요양원	치매,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집안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보호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공기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함 (정부 기관, 공기업, 학교 등)
민간기관	정부와 관련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기업, 병원, 시민사회단체,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음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중전 국군기무사령부) 등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시위	다른 말로 데모라고 하며,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집회	일반적으로 옥외집회를 말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
난민 신청	난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서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적극적 우대조치	성별 또는 경제적 신분간 격차와 차별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특혜를 주는 정책을 말함

2) 조사개요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전국에 걸친 표본 추출을 통해 얻은 표본 가구의 만 18세 이상 국민이며, 최종적으로 조사된 표본은 9,043가구의 16,148명이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7월 1일에서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였다.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조사로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치조사와 웹-모바일 방식의 조사가 병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결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표 1-3〉 응답자 특성

구분	명	%
성별	16,148	100.0
남자	7,473	46.3
여자	8,675	53.7
연령	16,148	100.0
20대	1,966	12.2
30대	2,138	13.2
40대	2,849	17.6
50대	3,199	19.8
60대 이상	5,996	37.1
지역	16,148	100.0
도 시(동 부)	12,342	76.4
농어촌(읍면부)	3,806	23.6
학력	16,148	100.0
중졸 이하	3,741	23.2
고졸	5,938	36.8
대졸	6,118	37.9
대학원 이상	351	2.2
직업	16,148	100.0
관리자/전문가/관련 종사자	1,200	7.4
사무직	2,300	14.2
서비스/판매직	3,361	20.8
생산/기술직	13,50	8.4
농림어업 관련 종사자	1,063	6.6
단순노무직	813	5.0
기타	29	0.2
무직	6,032	37.4

주 : 사례수는 최중가중치를 통하여 보정된 가중치 적용 결과(weighted analysis)이며, 백분율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II.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1. 표본 설계
2. 가중값 작성

II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1 표본 설계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표본 추출은 다단계 확률비례계통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략적 내용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모집단 및 표본추출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①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② 표본추출틀 : 2020년 통계청 등록센서스 조사구 리스트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① 표본규모 - 전국 9,000가구(표본가구 내 약 15,640명의 가구원) - 900개 조사구 추출 - 조사구 당 목표가구 10가구(조사구 당 25가구 추가 추출) ②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pm 1.6\%$ (설계효과 3.85 적용)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① 층화 : 시/도(17개 권역), 동부/읍면부,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 - 분류지표 : 65세 이상 인구 비율, 1인가구 비율 ② 표본 배분 - 시/도 : 가구 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 - 시도, 동부/읍면부, 조사구특성(일반/아파트) : 비례배분 ③ 표본추출단위 - 1차(psu) : 조사구 → 확률비례계통추출 - 2차(ssu) : 조사구 내 가구(조사구당 10가구) → 계통추출 - 최종조사단위 : 표본가구 내 적격가구원 전수조사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모집단의 정의는 목표 모집단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이며, 조사 모집단은 조사가 곤란한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이었다. 2021년까지 모집단 하한 연령은 19세였으나 2022년부터 18세로 바뀌었다. 시/도별 모집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2〉 시/도별 모집단 현황

(단위: 개, 가구, 명)

시도	조사구(2020년 기준)		가구(2020년 기준)		인구(2020년 기준)	
	조사구 수	열%	가구 수	열%	19세 이상 인구	열%
전국	383,723	100.0%	20,926,710	100.0%	42,591,122	100.0%
서울	71,443	18.6%	3,982,290	19.0%	8,044,392	18.9%
부산	26,371	6.9%	1,405,037	6.7%	2,860,973	6.7%
대구	17,017	4.4%	985,816	4.7%	2,025,243	4.8%
인천	20,418	5.3%	1,147,200	5.5%	2,411,493	5.7%
광주	10,517	2.7%	599,217	2.9%	1,208,196	2.8%
대전	10,888	2.8%	631,208	3.0%	1,239,631	2.9%
울산	8,346	2.2%	444,087	2.1%	923,118	2.2%
세종	2,545	0.7%	139,106	0.7%	265,871	0.6%
경기	91,939	24.0%	5,098,431	24.4%	10,793,007	25.3%
강원	12,760	3.3%	661,039	3.2%	1,288,818	3.0%
충북	12,696	3.3%	678,922	3.2%	1,338,163	3.1%
충남	16,797	4.4%	892,222	4.3%	1,747,650	4.1%
전북	14,230	3.7%	755,575	3.6%	1,500,128	3.5%
전남	14,551	3.8%	761,518	3.6%	1,487,021	3.5%
경북	22,028	5.7%	1,131,819	5.4%	2,208,835	5.2%
경남	25,863	6.7%	1,350,155	6.5%	2,719,005	6.4%
제주	5,314	1.4%	263,068	1.3%	529,578	1.2%

출처: 2020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추출틀은 앞서 조사모집단 규정인 2020년 등록센서스(통계청)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 시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 리스트를 활용하였다. 표본 추출에서는 17개 시도별로 최종 데이터의 비교분석 결과에서 일정 수준의 통계적 신뢰성을 갖도록 표본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본설계에서 1차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가구 및 가구원이 다. 1차추출단위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는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구들을 묶어 구성되며 대개 60~70여 가구로 이루어지며, 표본설계에서 층화는 1차추출단위인 조사구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층화는 행정구역 구분, 동부 및 읍면부 구분,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을 고려하였다.

- 1차 층화 : 8개 특광역시와 9개 도
-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 3차 층화 : 주택유형(아파트/일반)

〈표 2-3〉 층화 변수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3차 층화	총수
특광역시	특광역시 : 8개	없음	조사구 특성 (아파트, 일반)	16
도 지역	도 : 9개	- 동부, 읍면부	조사구 특성 (아파트, 일반)	36

본 조사의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4〉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현황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국	172,917	138,290	21,908	48,759	383,723
서울	30,564	40,879	-	-	71,443
부산	15,240	11,131	-	-	26,371
대구	9,934	7,083	-	-	17,017
인천	11,132	9,286	-	-	20,418
광주	6,985	3,532	-	-	10,517
대전	5,951	4,937	-	-	10,888
울산	5,163	3,183	-	-	8,346
세종	1,911	634	-	-	2,545
경기	45,417	30,345	6,426	9,751	91,939
강원	4,333	2,861	1,559	4,007	12,760
충북	4,179	2,797	2,042	3,678	12,696
충남	4,575	2,809	3,172	6,241	16,797
전북	5,970	3,680	762	3,818	14,230
전남	3,856	2,107	2,037	6,551	14,551
경북	6,196	4,669	3,088	8,075	22,028
경남	10,016	6,026	3,703	6,118	25,863
제주	1,495	2,331	134	1,354	5,314

표본의 크기는 생산되는 통계의 목표표본오차 크기와 주어진 예산 및 조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본 조사의 목표 표본 크기는 전국 9,000가구 내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약 15,640명을 조사하는 것이다. 202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응답자 수는 1.74명이다¹⁾.

아래 표는 2021년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설계효과 현황이

1)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가구당 평균 만 19세 이상 가구원 수는 2.05명이지만, 가구내 응답률이 100%보다 낮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응답자 수가 1.7명이 되었음

다. 이 조사의 설계효과 값²⁾은 약 3.58~6.11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본 조사의 목표 허용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6\%$ (설계효과 3.85을 적용한 결과임)이다.

〈표 2-5〉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조사항목	2021년도 조사 결과		
	추정값	95% 오차의 한계	설계효과
1년 전과 비교한 인권상황(q5)	36.3%	1.4%	4.13
본인의 인권 존중 비율(q6)	82.9%	1.1%	3.58
전반적인 인권 침해 여부(q10)	41.8%	1.7%	5.44
전반적인 차별 여부(q14)	47.4%	1.8%	6.11
평균	-	-	3.85
중위수	-	-	4.78

표본 배분은 시/도별 조사구에 목표 표본인 약 15,640명의 가구원을 배분하는 작업이며, 표본 배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시/도별로는 2020년도 조사의 표본설계와 마찬가지로 시도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아래 식으로 17개 시/도별 표본을 배분하였다.

$$n_h = n \times \frac{\sqrt{N_h}}{\sum_{h=1}^{17} \sqrt{N_h}}$$

여기에서, N_h 는 각각 h 시/도의 가구 수이고, n 는 전체 표본크기로 1,000개 조사구이고, n_h 는 h 시/도의 표본 조사구 수이다.

제곱근비례배분을 적용한 이유는 조사 결과의 활용성과 다양한 심층분석을 위해 시/도별로 충분한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비례배분법과 비교하여 표본크기의 시/도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추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도 단위의 다양한 추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2) 설계효과는 집락추출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산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표 2-6〉 7개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모집단		비례배분 결과			제곱근비례배분 결과		
	조사구 수	가구 수	조사구 수	표본 응답자 수	예상 오차의 한계	조사구 수	표본 응답자 수	예상 오차의 한계
전국	383,723	20,926,710	900	15,640	±1.6%p	900	15,640	±1.6%p
서울	71,443	3,982,290	171	2,980	±3.6%p	105	1,830	±4.6%p
부산	26,371	1,405,037	61	1,060	±6.0%p	62	1,080	±6.0%p
대구	17,017	985,816	42	730	±7.3%p	52	900	±6.5%p
인천	20,418	1,147,200	49	850	±6.7%p	56	970	±6.3%p
광주	10,517	599,217	26	450	±9.2%p	41	710	±7.4%p
대전	10,888	631,208	27	470	±9.1%p	42	730	±7.3%p
울산	8,346	444,087	19	330	±10.8%p	35	610	±7.9%p
세종	2,545	139,106	6	100	±19.6%p	19	330	±10.8%p
경기	91,939	5,098,431	219	3,810	±3.2%p	118	2,050	±4.3%p
강원	12,760	661,039	29	500	±8.8%p	43	750	±7.2%p
충북	12,696	678,922	29	500	±8.8%p	43	750	±7.2%p
충남	16,797	892,222	39	680	±7.5%p	49	850	±6.7%p
전북	14,230	755,575	32	560	±8.3%p	45	780	±7.0%p
전남	14,551	761,518	33	570	±8.2%p	46	800	±6.9%p
경북	22,028	1,131,819	49	850	±6.7%p	56	970	±6.3%p
경남	25,863	1,350,155	58	1,010	±6.2%p	61	1,060	±6.0%p
제주	5,314	263,068	11	190	±14.2%p	27	470	±9.1%p

주: 예상 오차의 한계는 설계효과를 반영하여 95% 신뢰수준에서 계산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임

앞의 표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기준으로 2차 층화변수인 동부/읍면부 구분, 3차 층화변수인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에 대해서는 조사구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각 세부 층별 표본배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7〉 세부 층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국	403	309	56	132	900
서울	45	60	-	-	105
부산	35	27	-	-	62
대구	30	22	-	-	52
인천	30	26	-	-	56
광주	27	14	-	-	41
대전	23	19	-	-	42
울산	22	13	-	-	35
세종	14	5	-	-	19
경기	58	39	8	13	118
강원	15	9	5	14	43
충북	14	9	7	13	43
충남	13	9	9	18	49
전북	19	12	2	12	45
전남	12	7	6	21	46
경북	16	12	8	20	56
경남	23	14	9	15	61
제주	7	12	2	6	27

조사구 당 목표 가구 수는 10가구로 하며, 예비 표본 가구 25가구를 추가 추출하여 조사구 당 35가구를 표본 가구로 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층화 2단 집락추출법을 적용하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이다.

1차 추출 단위(psu) 추출 즉 세부 층 내 표본조사구 추출에 대한 분류지표는 주택유형, 65세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이상 인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등을 고려하였다. 주택유형 구분은 세부 층화 단계에서 층화변수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1인 가구 비율을 분류지표로 사용하였다.

1차 기준	• 65세 이상 인구 비율
2차 기준	• 1인 가구 비율

1차 추출 단위(psu) 즉 조사구는 위의 표에 주어진 각 세부 층에서 표본조사구 추출은 세부 층별로 조사구를 아래 분류기준과 주소지 코드로 정렬한 후, 조사구 내 가구 수 기준의 확률비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2차 추출 단위(ssu)인 가구는 추출된 조사구 내의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조사구당 표본 가구 수만큼을 계통추출하여 조사하며, 각 표본 조사구에서 목표 조사성공 가구 수는 10가구이다.

최종 조사단위인 가구원은 선정된 가구 내의 만 18세 이상 가구원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조사원에 의한 선정 편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2 가중값 작성

1) 설계 가중값(Design Weight)

본 조사에서 설계가중치는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층화2단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조사구 내의 가구별 추출확률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될 기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H : 층의 수
-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조사구의 총 가구 수)
-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미착수)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응답)

본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조사구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각 표본조사구에서 가구 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설 계 가 중 치 } w_{hi}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한편 위 식에서 각 표본조사구에서는 원칙적으로 $S_{hi} \approx M_{hi}$ 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무응답 조정은 표본조사구 단위로 진행하였다.

$$w_{2hi} = \frac{m_{hi}}{r_{hi}}$$

여기에서, m_{hi} 는 h 층 내의 i 조사구 내의 표본가구 수를 나타내며, r_{hi} 는 h 층 내의 i 조사구 내 실제 응답한 가구 수를 나타낸다.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가구의 가구원 수 분포를 반영하고자 가구원 수를 다음 식에 따라 보정하였다.

$$BF_{ab} = \frac{G_{ab}}{\sum_a \sum_b (w_{1hi} \times w_{2hi})}$$

여기에서, G_{ab} 는 a 시/도, b 가구원 수(1인, 2인, 3인, 4인 이상)의 모집단 가구 수를 나타낸다.

표본가구 내에서 적격 가구원을 전수조사 하지만 조사불능 및 조사불응의 사유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구마다 가구원 추출률이 상이하므로 이를 보정하고자 표본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을 반영하였다.

한편 사후층화 보정은 모집단과 표본의 구조가 유사하도록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시/도별(17), 연령대(5), 성별(2)의 구성비를 보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얻었다.

$$\begin{aligned} \text{최종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 계수} \times (\text{가구원 수 분포} \text{ 보정 계수} \\ &\quad \times \text{표본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 역수} \times \text{사후층화 보정 계수} \end{aligned}$$

모수 추정과 관련하여,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복합표본설계 방법이 적용되어 표본을 추출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모수 추정식을 적용하였다.

본 조사의 추정대상 모수는 모평균과 모비율이다. 모비율 추정량 및 분산추정은 모평균 추정 방법과 동일한데, 모비율 추정은 조사변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 경우의 모평균 추정에 해당한다. 본 조사에서 중요한 각종 차별 경험률의 경우 전체 만 18세 이상 인구 중 각종 차별을 경험한 비율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성별 차별 경험률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사람 총수 추정값을 만 18세 이상 인구 중의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모평균 추정에는 다음 식이 이용되었다.

$$\hat{Y}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h = 1, 2, \dots, H$: 설계층을 나타내는 첨자
- $i = 1, 2, \dots, n_h$: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 $j = 1, 2, \dots, m_{hi}$: 가구 및 가구원을 나타내는 첨자
- w_{hij} : h 층 i 조사구 j 가구(가구원)의 가중값
- y_{hij} : h 층 i 조사구 j 가구(가구원)의 관측값

또한 모평균에 대한 분산추정은 다음 식을 이용했다.

$$\hat{V}(\hat{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2$$

- $f_h = \frac{N_h}{n_h}$
-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Y}) \right] / w_{hi\cdot}$
- $\bar{e}_{h\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모평균에 대한 표준오차는 다음 식을 이용하였다.

$$\widehat{SE}(\widehat{Y}) = \sqrt{\widehat{V}(\widehat{Y})}$$

모평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추정은 다음 식을 이용하였다.

$$\widehat{rse}(\widehat{Y}) = \frac{\sqrt{\widehat{V}(\widehat{Y})}}{\widehat{Y}} \times 100(\%)$$

통계자료 공표 시 통계표 셀 내의 유효표본크기가 너무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 등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경우(분류, 항목)에는 유사한 층을 통합하여 통계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통계청의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의 제10조(표본오차의 기준)를 따랐다.

〈표 2-8〉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구분	RSE<30%		25%≤RSE<50%	50%≤RSE
	n≥10	n<10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Ⅲ. 조사결과 분석

1. 인권 의식
2. 인권 침해와 차별
3. 인권 관련 의견
4. 인권 교육 및 개선
5. 코로나 19와 인권

III

조사결과 분석

1 인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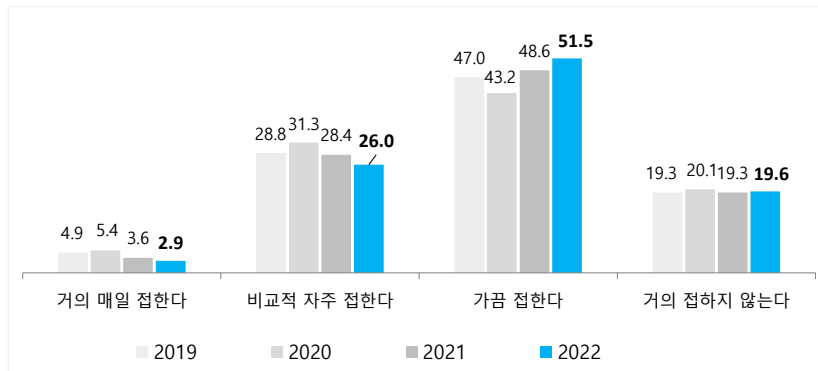
1)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인권을 접하는 정도

평소 인권이란 용어를 접한다(거의 매일+비교적 자주+가끔)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0.4%로 2021년 대비 0.3%p 감소, 2020년 대비 0.5%p 증가, 2019년 대비 0.3%p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인권이란 용어를 거의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19.3%(2019)→20.1%(2020)→19.3%(2021)→19.6%(2022)로 연도별로 큰 변동 없이 유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단위: %)



*주: 이 보고서의 통계자료(그래프, 통계표 등)에 기재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한 것으로, 이에 따라 통계표 및 그래프의 항목별 합계나,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다를 수 있다.

2022년 조사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있어 남성의 32.6%가 거의 매일 혹은 비교적 자주 접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25.1%가 같은 응답을 해, 전반적으로 여성이 인권이라는 용어에 비교적 자주 접하는 비중이 적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부터 40대까지는 거의 매일 혹은 비교적 자주 접하는 비율이 30%를 넘으나, 50대부터 감소(30.0%)하기 시작해 60대 이상은 18.7%로 감소한다. 인권을 거의 매일 혹은 비교적 자주 접하는 비중은 20대부터 40대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나 50대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젊거나 경제활동 비중이 큰 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인권에 관심이 많거나 보다 많은 인권 지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중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인권을 거의 매일 혹은 비교적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37.2%)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인권을 접한다고 한 비율(19.7%)보다 17.5%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46.7%), 사무판매서비스(32.3%),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23.5%), 농림생산직(23%) 순으로, 관리전문직의 경우 다른 직업 집단에 비하여 인권을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26.8%)보다, 종교가 있을 때(32.6%) 좀 더 인권을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34.0%), 중도(32.2%), 보수(25.5%), 무관심(23.5%) 순으로 정치에 무관심할 때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게 접하고 있었다.

〈표 3-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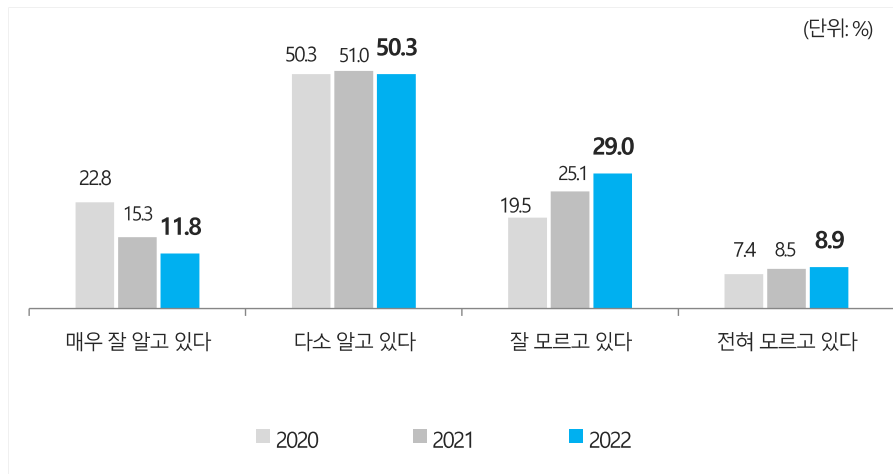
구분	거의 매일 접한다	비교적 자주 접한다	기름 접한다	거의 접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2.9	26.0	51.5	19.6	2.1	
성별						
남자	3.3	29.3	51.6	15.8	2.2	250.908(3)***
여자	2.4	22.7	51.5	23.4	2.0	
지역						
도시[동부]	3.0	27.2	52.1	17.8	2.2	253.152(3)***
농어촌[읍면부]	2.4	20.3	49.2	28.0	2.0	
연령						
20-30대	3.3	30.7	52.8	13.2	2.2	1,242.726(6)***
40-50대	3.2	29.1	53.5	14.2	2.2	
60대 이상	1.9	16.8	47.6	33.7	1.9	
학력						
고졸이하	1.8	17.9	51.6	28.7	1.9	1,306.522(3)***
대재이상	3.8	33.4	51.5	11.3	2.3	
직업						
관리전문직	7.6	39.1	43.2	10.1	2.4	953.346(9)***
사무판매서비스	2.3	30.0	54.7	13.0	2.2	
농림생산직	1.9	21.1	51.6	25.4	2.0	

구분	거의 매일 접한다	비교적 자주 접한다	기금 접한다	거의 접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비경험인구	2.8	20.7	50.2	26.3	2.0	
종교						
없음	2.3	24.5	54.2	19.0	2.1	75.069(3)***
있음	3.9	28.7	46.7	20.8	2.2	
정치성향						
보수	2.5	23.0	50.0	24.5	2.0	457.062(9)***
중도	2.8	29.4	53.1	14.7	2.2	
진보	4.0	30.0	52.0	13.9	2.2	
무관심	2.4	21.1	50.6	25.9	2.0	

(2) 헌법에 기본적 인권보호의 명시 여부를 알고 있는 정도

우리 헌법에 기본적 인권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다소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62.1%로 2021년의 66.4% 대비 4.3%p 감소하였다. 이 수치는 2020년 73.1% 대비 11%p가 감소한 것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인다. 헌법의 기본적 인권보호의 명시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7.4%(2020)→8.5%(2021)→8.9%(2022)로 소폭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3-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헌법에 인권보호가 명시되어 있음을 아는 경우가 남성은 68.6%, 여성이 55.7%로 남성이 12.9%p 더 많이 접한다고 답변해 성별에 관계없이 과반 이

상이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가 72.3%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고, 그다음이 40-50대(68.3%), 60대 이상(42.7%)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헌법에 인권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헌법에 인권보호가 명시되어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75.4%), 고등학교 졸업 이하(47.6%)보다 27.8%p 높았다. 직업에 따른 비중은 관리전문직(81.3%), 사무판매서비스(68.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4.8%), 농림생산직(53.4%) 순으로, 관리전문직의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비중은 종교가 있는 경우(63.4%), 종교가 없는 집단(61.4%)에 비하여 2%p 이상 헌법에 인권보호가 명시된 것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68.9%), 진보(68.1%), 보수(56.2%), 무관심(54.1%) 순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해 가장 인지도가 낮았다.

〈표 3-2〉 헌법 내 인권보호 명시 인지 정도

(단위 : %, 점)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다소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평균 (4점)	X(df)
전체	11.8	50.3	29.0	8.9	2.6	
성별						383.999 (3)***
남자	14.7	53.9	25.7	5.7	2.8	
여자	9.0	46.7	32.3	12.0	2.5	
지역						369.316 (3)***
도시[동부]	12.4	51.7	28.6	7.4	2.7	
농어촌[읍면부]	9.3	43.8	30.9	16.0	2.5	
연령						1,791.547(6)***
20-30대	14.4	57.9	23.4	4.2	2.8	
40-50대	13.4	54.9	26.7	4.9	2.8	
60대 이상	6.9	35.8	38.0	19.2	2.3	
학력						1,963.644(3)***
고졸이하	6.3	41.3	37.1	15.3	2.4	
대재이상	16.9	58.5	21.5	3.1	2.9	
직업						1,236.552(9)***
관리전문직	28.6	52.7	16.5	2.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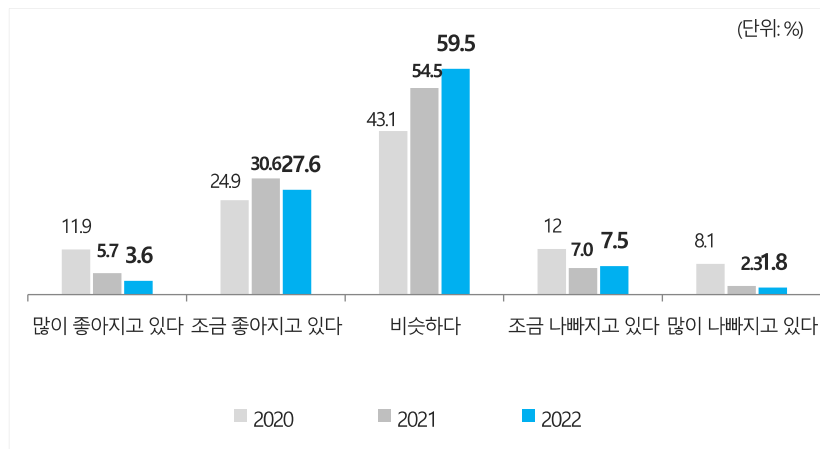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다소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평균 (4점)	$\chi^2(df)$
사무판매서비스	11.3	57.1	27.4	4.2	2.8	
농림생산직	8.8	44.6	33.7	13.0	2.5	
비경활인구	9.8	45.0	31.5	13.7	2.5	
종교						35.412(3)* **
없음	10.9	50.5	30.2	8.4	2.6	
있음	13.5	49.9	26.8	9.9	2.7	
정치성향						563.719 (9)***
보수	9.3	46.9	31.7	12.1	2.5	
중도	13.8	55.1	25.4	5.7	2.8	
진보	15.8	52.3	26.8	5.1	2.8	
무관심	8.6	45.5	32.8	13.1	2.5	

2) 한국 인권상황의 전반적 평가

(1)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지난 1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많이+조금)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1.2%로 2021년 대비 5.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지난 1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남성(33%)이 여성(29.3%)보다 좋아지고

있다(많이 좋아짐+조금 좋아짐)고 응답하였으며, 비슷하다는 비율은 남성(57.3%), 여성(61.7%)로 나타난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34.1%로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에 40-50대(31.7%), 60대 이상(27.2%) 순이었다. 성별과 마찬가지로 연령대에서도 비슷하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많았다(전체 응답의 59.5%).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 재학 이상이 작년에 비해 인권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1%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26.9%)보다 8.2%p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38.6%), 사무판매서비스(34.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28.2%), 농림생산직(27.2%) 순으로, 관리전문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인권 개선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29.6%)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34.2%) 지난 1년 인권 개선 정도에 대해 좋아졌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34.2%), 중도(32.5%), 진보(31.1%), 무관심(26.7%) 순으로 긍정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14.6%가 인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해 정치성향 내에서 가장 높은 부정 응답 비율을 보인다.

〈표 3-3〉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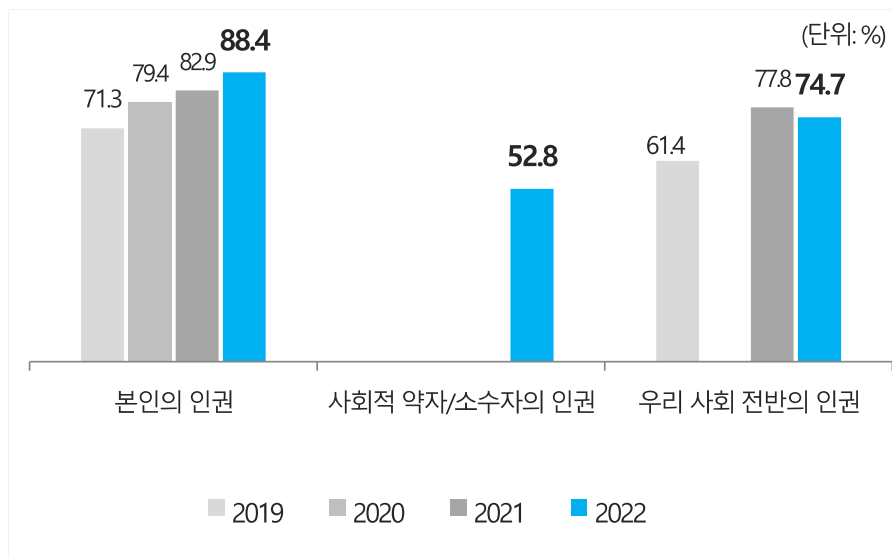
구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조금 좋아지고 있다	비슷하다	조금 나빠지고 있다	많이 나빠지고 있다	평균 (5점)	$\chi^2(df)$
전체	3.6	27.6	59.5	7.5	1.8	3.2	
성별							
남자	4.2	28.8	57.3	7.5	2.2	3.3	29.327 (4)***
여자	3.0	26.3	61.7	7.5	1.4	3.2	
지역							
도시(동부)	3.8	28.1	58.4	7.9	1.9	3.2	59.321 (4)***
농어촌(읍면부)	2.8	25.2	64.8	5.7	1.4	3.2	
연령							
20-30대	4.0	30.1	56.7	7.4	1.8	3.3	73.349 (8)***
40-50대	3.9	27.8	58.1	8.1	2.1	3.2	
60대 이상	2.8	24.4	64.5	6.8	1.5	3.2	
학력							
고졸 이하	2.8	24.1	64.6	7.2	1.3	3.2	161.309 (4)***
대재 이상	4.4	30.7	54.8	7.8	2.3	3.3	
직업							
관리전문직	7.6	31.0	46.8	10.9	3.7	3.3	224.718 (12)***
사무판매서비스	2.7	31.4	57.6	6.7	1.5	3.3	
농림생산직	3.9	23.3	63.7	7.4	1.7	3.2	

구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조금 좋아지고 있다	비슷하다	조금 나빠지고 있다	많이 나빠지고 있다	평균 (5점)	X ² (df)
비경험인구	3.5	24.7	62.6	7.5	1.7	3.2	
종교							
없음	3.0	26.6	61.9	7.1	1.5	3.2	92.390 (4)***
있음	4.8	29.4	55.1	8.2	2.5	3.3	
정치성향							
보수	4.1	30.1	59.1	5.8	0.9	3.3	251.239(12)***
중도	3.7	28.8	58.6	7.5	1.4	3.3	
진보	3.9	27.2	54.4	10.6	4.0	3.2	
무관심	2.8	23.9	65.0	6.7	1.6	3.2	

(2)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에 관한 평가 중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매우 존중됨+존중되는 편임)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88.4%로 2021년 82.9% 대비 5.5%p 증가, 2020년 79.4% 대비 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의 인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3%(2019)→1.5%(2020)→1.1%(2021)→0.4%(2022)로 소폭이나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4]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은 성별에 따라 여성의 88.6%, 남성의

88.2%로 나타나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 30-40대 각각 88.7%가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긍정 응답 비중은 60대 이상(87.7%)에 서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8%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86.9%)보다 2.9%p 높았다. 직업의 경우 사무판매서비스(89%),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88.7%), 관리전문직(88%), 농림생산직(86.8%) 순으로, 농림생산직이 가장 낮은 긍정 응답 비중을 보이나, 두드러진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모두 같은 비율로 긍정 응답(각각 88.4%)을 하였으며,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89.5%), 보수(88%), 무관심(87.9%), 진보(87.8%) 순으로 긍정 응답을 하였으며 정치에 무관심 할 때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으나 이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3-4〉 본인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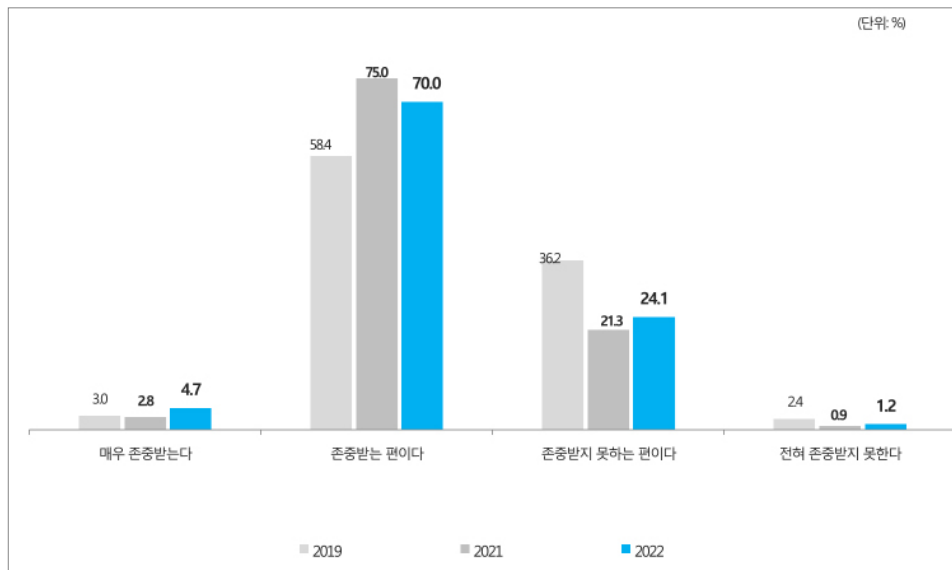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9.0	79.4	11.2	0.4	3.0	
성별						7.424(3)
남자	9.3	78.9	11.3	0.5	3.0	
여자	8.8	79.8	11.1	0.4	3.0	
지역						35.816 (3)***
도시[동부]	8.5	79.9	11.2	0.4	3.0	
농어촌[읍면부]	11.3	77.0	11.1	0.5	3.0	
연령						29.187 (6)***
20-30대	10.0	78.7	10.8	0.6	3.0	
40-50대	9.8	78.9	10.9	0.4	3.0	
60대 이상	7.0	80.7	12.0	0.3	2.9	
학력						44.857 (3)***
고졸이하	7.8	79.1	12.8	0.4	2.9	
대재이상	10.2	79.6	9.7	0.5	3.0	
직업						47.284 (9)***
관리전문직	11.8	76.2	11.1	0.9	3.0	
사무판매서비스	9.2	79.8	10.6	0.5	3.0	
농림생산직	9.1	77.7	12.9	0.3	3.0	
비경제활동인구	8.2	80.5	11.0	0.3	3.0	
종교						0.968(3)
없음	8.8	79.6	11.1	0.5	3.0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있음	9.4	79.0	11.3	0.4	3.0	
정치성향						
보수	10.0	78.0	11.5	0.5	3.0	51.213 (9)***
중도	9.6	79.9	10.2	0.4	3.0	
진보	9.6	78.2	11.8	0.5	3.0	
무관심	7.0	80.9	11.7	0.4	2.9	

(3)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에 관한 평가 중 2022년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다고(매우 존중+존중 받는 편)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74.7%로 2021년 77.8% 대비 3.1%p 감소했으나, 2020년 61.4% 대비 1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4%(2019)→0.9%(2020)→0.9%(2021)%→1.2%(2022)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5]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



성별에 따라 인권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여성의 경우 74.5%, 남성의 경우 74.9%로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에서 76.7%로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가 크다고 응답했고, 이어서 20-30대(75%), 40-50대(73.1%) 순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특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3%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75.2%)보다 0.9%p 낮았다. 직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76.3%)의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무판매서비스(75.3%), 농림생산직(73.7%), 관리전문직(67.6%) 순으로 나타난다.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74.4%)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74.8%) 비중으로 긍정응답을 하였으며,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78.9%), 중도(75.2%), 무관심(73.7%), 진보(69.8%)의 순으로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때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인식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우리 사회 전반

(단위 :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4.7	70.0	24.1	1.2	2.8	
성별						3.017(3)
남자	4.8	70.1	23.8	1.3	2.8	
여자	4.6	69.9	24.4	1.1	2.8	
지역						6.211(3)
도시동부	4.7	69.7	24.4	1.2	2.8	
농어촌읍면동	4.9	71.4	22.6	1.1	2.8	
연령						66.027(6) ***
20-30대	4.9	70.1	23.4	1.6	2.8	
40-50대	5.1	68.0	25.6	1.3	2.8	
60대 이상	4.1	72.5	22.8	0.7	2.8	
학력						15.551(3) **
고졸이하	4.6	70.6	23.7	1.1	2.8	
대재이상	4.8	69.5	24.4	1.3	2.8	
직업						63.266(9) ***
관리전문직	5.4	62.2	30.8	1.7	2.7	
사무판매서비스	5.1	70.2	23.4	1.3	2.8	
농림생산직	4.8	68.9	24.9	1.4	2.8	
비경활인구	4.1	72.2	22.8	0.9	2.8	
종교						1.926(3)
없음	4.5	70.3	23.8	1.3	2.8	
있음	5.0	69.4	24.5	1.0	2.8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정치성향						
보수	5.5	73.4	20.4	0.7	2.8	97.368(9) ***
중도	4.7	70.5	23.6	1.2	2.8	
진보	5.1	64.7	28.3	1.8	2.7	
무관심	3.6	70.1	25.0	1.3	2.8	

(4)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 존중 수준 인식

2022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에 관한 평가 중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과 주요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존중된다(매우 존중+존중 되는 편)는 긍정 응답 비중이 52.8%로, 존중되지 않는다(전혀 존중되지 않음+존중 되지 않는 편) 47.2%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남성의 긍정 응답 비율은 52.7%, 여성의 긍정 응답 비율은 53%로 나타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에 따른 긍정 응답의 비율은 20-30대 50.9%, 40-50대 51.1%, 60대 이상 57.1%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 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55.6%가 긍정 응답을 하였고,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은 50.2%가 긍정 응답을 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긍정 응답 비중이 소폭 높게 나타난다.

직업에 따른 긍정 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관리전문직 46.9%, 사무판매직 52.1%, 농림생산직 54.2%, 비경제활동 집단 54.3%로 나타나 비경제활동 집단이 가장 긍정 응답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농림생산직, 사무판매직, 관리전문직 순으로 긍정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가치의 측면에서 종교의 경우, 긍정 응답의 비중은 각각 종교 없음 52.7%, 종교 있음 53.1%로 나타나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정치 성향의 측면에서는 긍정 응답 비중이 보수적 성향(58.1%), 중도적 성향(51.6%) 진보적 성향(48.8%), 무관심(52.6%)으로 나타나 보수적 성향인 집단이 가장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진보적 성향의 집단이 가장 긍정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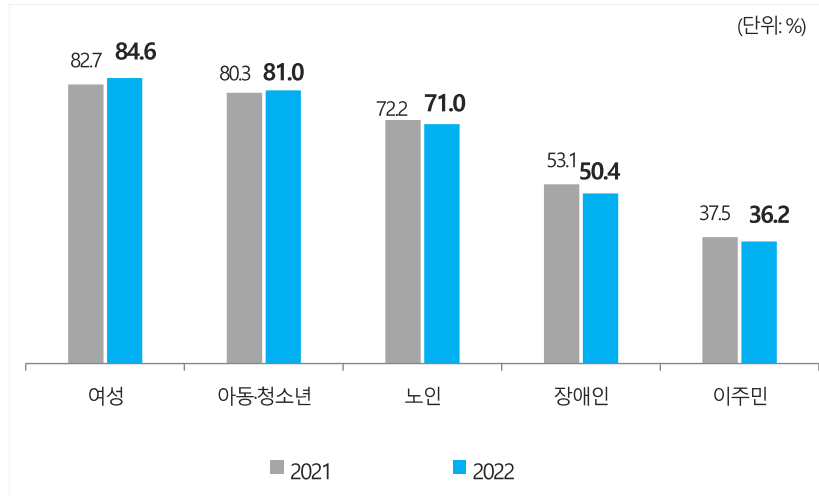
〈표 3-6〉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사회적 약자/소수자

(단위 :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6.2	46.6	43.6	3.6	2.6	
성별						
남자	6.5	46.2	43.5	3.8	2.6	8.091(3)*
여자	6.0	47.0	43.7	3.4	2.6	
지역						
도시[동부]	6.3	45.6	44.5	3.5	2.5	23.970 (3)***
농어촌[읍면부]	5.6	51.3	39.3	3.9	2.6	
연령						
20-30대	6.4	44.5	44.8	4.3	2.5	131.995 (6)***
40-50대	7.1	44.0	44.8	4.1	2.5	
60대 이상	4.8	52.3	40.7	2.1	2.6	
학력						
고졸이하	5.9	49.7	41.5	2.9	2.6	80.054 (3)***
대재이상	6.4	43.8	45.5	4.2	2.5	
직업						
관리전문직	7.5	39.4	46.4	6.7	2.5	99.474 (9)***
사무판매서비스	7.5	44.6	44.4	3.4	2.6	
농림생산직	5.7	48.5	42.2	3.5	2.6	
비경활인구	4.7	49.6	42.7	3.0	2.6	
종교						
없음	6.2	46.5	43.7	3.6	2.6	1.446(3)
있음	6.2	46.9	43.4	3.5	2.6	
정치성향						
보수	6.8	51.3	39.5	2.4	2.6	112.211 (9)***
중도	6.7	44.9	45.3	3.1	2.6	
진보	7.7	41.1	45.8	5.5	2.5	
무관심	3.9	48.7	43.6	3.8	2.5	

이어서 보다 세부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과 같은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 존중 수준 인식을 살펴본다. 조사 결과, 여성(84.6%), 아동·청소년(81%), 노인(71%), 장애인(50.4%), 이주민(36.2%) 순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인권이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은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의 존중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여성 1.9%p, 아동·청소년 0.7%p 증가)했으며, 노인, 장애인, 이주민은 소폭 감소(노인 1.2%p, 장애인 2.7%p, 이주민 1.3%p 감소)하였다.

[그림 3-6]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여성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긍정 응답 비중(매우 존중+ 존중되는 편)은 84.6%로 나타나 과반 이상이 긍정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성의 88.2%, 여성의 81.1%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해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긍정 응답한 비율이 7.1%p 가량 낮게 나타난다.

연령대에 따른 긍정 응답 비중은 20-30대 83.9%, 40-50대 83.5%, 60대 이상이 86.8%로 나타나, 20-30대와 40-50대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60대 이상에서 여성 인권 존중 수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여성 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3%,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5%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직업의 경우 농림생산직(85.9%), 사무판매회서비스(85.2%),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84.7%), 관리전문직(78.9%)순으로, 농림생산직이 여성 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모두 여성 인권이 존중된다는 긍정 응답이 84.6%로 동등한 결과를 보였다.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86.9%), 중도(84.9%), 무관심(84.3%), 진보(81.4%) 순으로 여성 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해 진보 성향의 집단이 가장 긍정 응답 비중이 적게 나타났다.

〈표 3-7〉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여성

(단위 :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0.0	74.6	14.9	0.5	2.1	
성별						222.761 (3)***
남자	12.7	75.5	11.4	0.4	2.0	
여자	7.3	73.8	18.4	0.6	2.1	
지역						3.735(3)
도시[동부]	10.0	74.7	14.8	0.5	2.1	
농어촌[읍면부]	10.0	74.1	15.4	0.5	2.1	
연령						96.047(6) ***
20-30대	12.9	71.0	15.5	0.6	2.0	
40-50대	9.0	74.5	15.9	0.6	2.1	
60대 이상	8.0	78.8	12.9	0.3	2.1	
학력						26.922(3) ***
고졸이하	8.7	76.3	14.6	0.5	2.1	
대재이상	11.2	73.1	15.2	0.6	2.1	
직업						47.405(9) ***
관리전문직	12.4	66.5	20.6	0.4	2.1	
사무판매서비스	9.6	75.6	14.3	0.5	2.1	
농림생산직	10.7	75.2	13.7	0.5	2.0	
비경활인구	9.5	75.2	14.7	0.6	2.1	
종교						3.360(3)
없음	10.0	74.6	14.9	0.6	2.1	
있음	9.9	74.7	14.9	0.4	2.1	
정치성향						53.029(9) ***
보수	12.1	74.8	12.7	0.4	2.0	
중도	9.9	75.0	14.6	0.5	2.1	
진보	8.9	72.5	17.7	0.9	2.1	
무관심	8.9	75.4	15.2	0.4	2.1	

②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경우,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긍정 응답 비중(매우 존중+존중되는 편)은 81.1%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성은 82.4%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79.7%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의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의 84.5%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로는 그다음이 40-50대(79.7%), 20-30대(79.5%)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아동·청소년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4%로, 대학교 재학 이상(79.8)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83.7%),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82.3%), 사무판매서비스(79.6%), 관리전문직(77.1%) 순으로, 농림생산직이 아동-청소년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82.9%) 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80.1%)에 2.8%p 정도 아동-청소년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83.6%)와 무관심(81.1%), 중도(80.1%), 진보(79.6%) 순으로 아동-청소년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8〉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아동-청소년

(단위 :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12.1	69.0	18.0	1.0	2.1	
성별						22.430(3)* **
남자	13.2	69.2	16.6	1.0	2.1	
여자	10.9	68.8	19.4	0.9	2.1	
지역						10.913(3)*
도시(동부)	12.3	68.0	18.7	1.0	2.1	
농어촌(읍면부)	10.8	73.7	14.8	0.7	2.1	
연령						102.074 (6)***
20-30대	14.5	65.0	19.5	1.0	2.1	
40-50대	11.3	68.4	19.0	1.2	2.1	
60대 이상	10.4	74.1	15.0	0.6	2.1	
학력						39.833(3)* **
고졸이하	11.1	71.3	16.9	0.7	2.1	
대재이상	13.0	66.8	19.0	1.2	2.1	
직업						41.117(9)* **
관리전문직	13.6	63.5	21.3	1.7	2.1	
사무판매서비스	12.1	67.5	19.6	0.8	2.1	
농림생산직	11.7	72.0	15.4	0.9	2.1	
비경활인구	11.8	70.5	16.7	1.0	2.1	
종교						21.651(3)* **
없음	11.9	68.2	18.8	1.1	2.1	
있음	12.5	70.4	16.4	0.7	2.1	
정치성향						46.811(9)* **
보수	13.0	70.6	15.8	0.6	2.0	
중도	12.6	67.5	19.2	0.7	2.1	
진보	11.6	68.0	18.8	1.7	2.1	
무관심	10.9	70.2	17.9	1.1	2.1	

③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매우 존중+존중되는 편)은 71%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72%, 여성의 70.1%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이 소폭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이 72.4%로 노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40-50대(70.7%), 20-30대(70.1%) 순으로 나타난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노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3%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71.7%)로 나타난다. 직업의 경우 농림생산직(73.3%),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71.9%) 사무판매서비스(70.3%), 관리전문직(65.8%) 순으로, 농림생산직이 노인 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있는 경우(72%) 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70.5%)에 1.5%p 정도 노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낮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73.2%), 중도(71%), 무관심(70.2%), 진보(69.4%) 순으로 노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9〉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노인

(단위 :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8.4	62.6	26.9	2.1	2.2	
성별						
남자	8.8	63.2	26.0	2.0	2.2	3.559(3)
여자	8.0	62.1	27.8	2.1	2.2	
지역						
도시[동부]	8.6	61.6	27.5	2.2	2.2	32.927(3)* **
농어촌[읍면부]	7.3	67.2	24.1	1.5	2.2	
연령						
20-30대	8.9	61.2	27.7	2.3	2.2	31.716(6)* **
40-50대	8.6	62.1	26.9	2.4	2.2	
60대 이상	7.5	64.9	26.2	1.4	2.2	
학력						
고졸이하	8.0	63.7	26.5	1.8	2.2	10.756(3)*
대재이상	8.7	61.6	27.3	2.3	2.2	
직업						
관리전문직	9.0	56.8	31.4	2.8	2.3	27.710(9)* *
사무판매서비스	8.3	62.0	27.5	2.1	2.2	
농림생산직	8.2	65.1	24.7	2.1	2.2	
비경활인구	8.4	63.5	26.3	1.9	2.2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종교 없음	8.2	62.3	27.4	2.1	2.2	15.329(3)* *
있음	8.8	63.2	25.9	2.1	2.2	
정치성향						56.967(9)* **
보수	9.9	63.3	24.9	2.0	2.2	
중도	8.2	62.8	27.2	1.7	2.2	
진보	8.6	60.8	28.0	2.6	2.2	
무관심	7.0	63.2	27.5	2.2	2.2	

④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긍정 응답 비중(매우 존중+존중되는 편)은 50.5%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50.3%, 여성의 50.5%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해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의 55.8%가 장애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40-50대(48.9%), 20-30대(47.3%)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4%로, 대학교 재학 이상(47.7%)보다 5.7%p 높았다. 직업의 경우 농림생산직(52.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2.8%), 사무판매회사(48.6%), 관리전문직(44.6%) 순으로, 농림생산직이 장애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가 없는 경우(48.8%)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53.3%)에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55.2%), 무관심(50.2%), 중도(49.8%), 진보(45.9%) 순으로 장애인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10〉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장애인

(단위 :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6.4	44.1	43.2	6.4	2.5	
성별						
남자	6.6	43.7	43.1	6.5	2.5	7.569(3)
여자	6.1	44.4	43.2	6.3	2.5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지역						
도시[동부]	6.7	43.3	43.4	6.6	2.5	39.667(3) ***
농어촌[읍면부]	4.7	47.6	42.1	5.6	2.5	
연령						
20~30대	6.4	40.9	45.3	7.4	2.5	170.556 (6)***
40~50대	6.8	42.1	43.7	7.4	2.5	
60대 이상	5.8	50.0	40.2	4.1	2.4	
학력						
고졸이하	6.1	47.3	41.1	5.5	2.5	84.245(3) ***
대재이상	6.6	41.1	45.1	7.3	2.5	
직업						
관리전문직	6.6	38.0	47.2	8.2	2.6	69.657(9) ***
사무판매서비스	6.6	42.0	45.0	6.4	2.5	
농림생산직	5.7	46.7	40.8	6.8	2.5	
비경활인구	6.3	46.5	41.4	5.8	2.5	
종교						
없음	6.0	42.8	44.6	6.6	2.5	39.004(3) ***
있음	7.0	46.3	40.6	6.1	2.5	
정치성향						
보수	7.7	47.5	39.8	5.0	2.4	115.720 (9)***
중도	6.6	43.2	44.3	6.0	2.5	
진보	6.8	39.1	45.1	9.0	2.6	
무관심	4.4	45.8	43.4	6.4	2.5	

⑤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긍정 응답 비중(매우 존중+존중되는 편)은 36.2%로 조사 대상 취약집단 중 가장 낮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인다.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대해 남성 35.7%, 여성 36.7%가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이 40.1%로 이주민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20~30대(34.7%), 40~50대(34.6%)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이주민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2%로, 대학교 재학 이상(33.5%)보다 5.7%p 높았다. 직업의 경우 농림생산직(39.9%),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37.5%), 사무판매서비스(34.7%), 관리전문직(30.5%) 순으로, 농림생산직이 이주민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35.2%)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38.2%)에 3%p 정도 이주민집단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39%), 무관심

(36.7%), 중도(35.7%), 진보(33.2%) 순으로 이주민집단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11〉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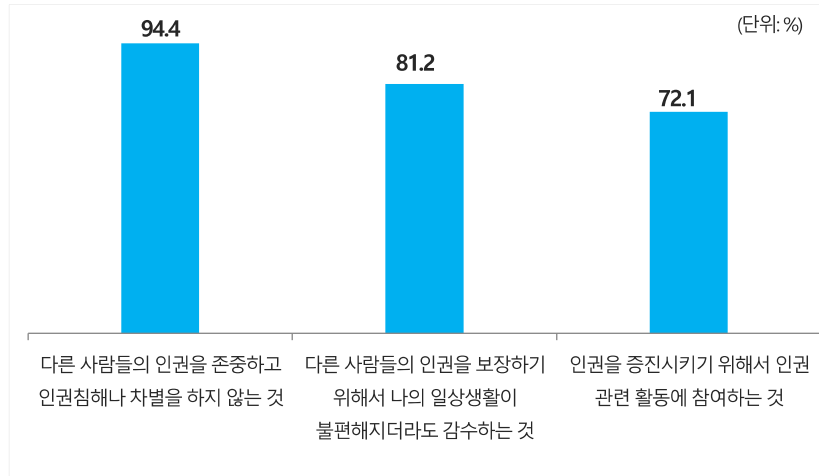
(단위 :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3.2	33.0	54.5	9.3	2.7	
성별						
남자	3.1	32.6	54.4	9.9	2.7	8.598(3)*
여자	3.2	33.5	54.5	8.8	2.7	
지역						
도시(동부)	3.0	32.3	55.4	9.3	2.7	68.744(3) ***
농어촌읍면부	4.1	36.6	50.2	9.1	2.6	
연령						
20-30대	3.9	30.8	55.1	10.2	2.7	135.947 (6)***
40-50대	3.0	31.6	55.0	10.4	2.7	
60대 이상	2.7	37.4	53.0	6.9	2.6	
학력						
고졸이하	3.3	35.9	52.9	7.9	2.7	88.981(3) ***
대재이상	3.1	30.4	55.9	10.6	2.7	
직업						
관리전문직	3.9	26.6	57.3	12.2	2.8	63.068(9) ***
사무판매서비스	3.1	31.6	56.0	9.3	2.7	
농림생산직	3.8	36.1	50.3	9.8	2.7	
비경활인구	2.8	34.7	54.1	8.4	2.7	
종교						
없음	3.1	32.1	55.4	9.4	2.7	23.618(3) ***
있음	3.4	34.8	52.7	9.0	2.7	
정치성향						
보수	3.2	35.8	53.7	7.3	2.7	97.651(9) ***
중도	3.5	32.2	55.6	8.7	2.7	
진보	3.5	29.7	53.7	13.1	2.8	
무관심	2.6	34.1	54.2	9.1	2.7	

(5)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의 필요성을 질문한 문항에서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한 편)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94.4%),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 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81.2%),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72.1%)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3-7]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



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 중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긍정 응답(매우 필요+필요한 편)의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94.4%로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94.2%, 여성의 94.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 94%, 40-50대 94.5%, 60대 이상 94.7%로 긍정 응답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필요하다는 인식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은 94.1%, 대학교 재학 이상은 94.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에서 소폭 높은 비중을 보인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리전문직(94.8%), 사무판매회서비스직(93.7%), 농림생산직(94.8%), 비경제 활동 집단(95%)로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나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이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인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긍정 응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집단(94.2%), 종교가 있는 집단(95%)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집단의 긍정 응답이 소폭 높은 비율을 보인다.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95.2%), 중도(93.6%), 진보(93.5%), 무관심(95.6%)로 나타나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에서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비중이 나타난다.

〈표 3-12〉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단위 : %, 점)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35.0	59.5	5.3	0.3	1.7	
성별						8.153(3)*
남자	34.9	59.3	5.6	0.2	1.7	
여자	35.0	59.6	4.9	0.4	1.7	
지역						1.827(3)
도시(동부)	34.8	59.6	5.3	0.3	1.7	
농어촌읍면부	36.0	58.6	5.1	0.2	1.7	
연령						76.287(6) ***
20-30대	37.3	56.7	5.6	0.3	1.7	
40-50대	36.5	58.0	5.3	0.2	1.7	
60대 이상	30.5	64.2	4.9	0.4	1.8	
학력						165.508 (3)***
고졸이하	29.7	64.4	5.4	0.4	1.8	
대재이상	39.8	54.9	5.1	0.2	1.7	
직업						187.410 (9)***
관리전문직	52.9	41.9	5.1	0.1	1.5	
사무판매서비스	32.2	61.5	6.1	0.2	1.7	
농림생산직	33.9	60.9	4.9	0.3	1.7	
비경활인구	34.2	60.8	4.6	0.4	1.7	
종교						20.908(3) ***
없음	33.7	60.5	5.6	0.3	1.7	
있음	37.4	57.6	4.7	0.3	1.7	
정치성향						79.300(9) ***
보수	33.1	62.1	4.6	0.2	1.7	
중도	35.1	58.5	6.0	0.4	1.7	
진보	38.2	55.3	6.3	0.1	1.7	
무관심	34.2	61.4	4.1	0.3	1.7	

②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 중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긍정 응답(매우 필요+필요한 편)의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81.2%로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80.7%, 여성의 81.6%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여성의 비중이 소폭 높게 나타나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카이제곱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 78%, 40-50대 82.4%, 60대 이상 83.1%로 긍정 응답하여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필요하다는 인식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은 82%, 대학교 재학 이상은 8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 소폭 높은 긍정 응답 비중을 보인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리전문직(82.6%), 사무판매서비스직(80.7%), 농림생산직(81.2%), 비경제 활동 집단(81.3%)로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나타나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인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긍정 응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집단(80.3%), 종교가 있는 집단(82.8%)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집단의 긍정 응답이 소폭 높은 비율을 보인다.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80.2%), 중도(80.8%), 진보(83.9%), 무관심(80.4%)로 나타나 진보 성향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비중이 나타난다.

〈표 3-13〉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단위 : %, 점)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15.8	65.4	17.4	1.5	2.0	
성별						
남자	16.1	64.6	17.7	1.7	2.0	4.454(3)
여자	15.5	66.1	17.1	1.3	2.0	
지역						
도시[동부]	15.7	65.8	17.0	1.5	2.0	15.418(3)**
농어촌[읍면부]	16.2	63.4	18.9	1.5	2.1	
연령						
20~30대	15.4	62.6	19.8	2.2	2.1	50.531(6)***
40~50대	16.7	65.7	16.6	1.0	2.0	
60대 이상	15.1	68.0	15.7	1.2	2.0	
학력						
고졸이하	14.8	67.2	16.5	1.5	2.0	21.919(3)***
대재이상	16.8	63.7	18.2	1.4	2.0	
직업						
관리전문직	18.0	64.6	15.8	1.6	2.0	29.753(9)***
사무판매서비스	16.1	64.6	18.0	1.3	2.0	
농림생산직	16.1	65.1	17.2	1.7	2.0	
비경제활동인구	14.8	66.5	17.1	1.6	2.1	
종교						
없음	15.3	65.0	18.2	1.5	2.1	13.982(3)**
있음	16.7	66.1	15.9	1.4	2.0	
정치성향						
보수	18.2	62.0	17.8	1.9	2.0	135.396(9)***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평균 (4점)	$\chi^2(df)$
중도	13.1	67.7	18.1	1.1	2.1	
진보	19.4	64.5	15.2	0.9	2.0	
무관심	14.3	66.1	17.7	2.0	2.1	

③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 중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긍정 응답(매우 필요+필요한 편)의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72.1%로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71.7%, 여성의 7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여성의 비중이 소폭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카이제곱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 72%, 40-50대 73.6%, 60대 이상 70.1%로 긍정 응답하여 40-50대가 가장 인권 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 응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은 70.1%, 대학교 재학 이상은 73.9%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인 집단에서 좀 더 높은 긍정 응답 비중을 보인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리전문직(74.9%), 사무판매회서비스직(71.4%), 농림생산직(72.9%), 비경제활동 집단(71.7%)로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나타나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인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긍정 응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집단(71.1%), 종교가 있는 집단(73.8%)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집단의 긍정 응답이 소폭 높은 비율을 보인다.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70.4%), 중도(69.6%), 진보(75.7%), 무관심(74%)로 나타나 진보 성향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비중이 나타난다.

〈표 3-14〉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단위 : %, 점)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1.2	60.8	25.6	2.3	2.2	
성별						
남자	11.3	60.4	25.9	2.4	2.2	1.520(3)
여자	11.1	61.3	25.4	2.2	2.2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지역						
도시[동부]	10.8	60.8	26.1	2.3	2.2	29.117(3)***
농어촌[읍면부]	13.2	60.9	23.5	2.4	2.2	
연령						
20~30대	11.7	60.3	25.6	2.4	2.2	17.225(6)**
40~50대	11.6	62.0	24.4	1.9	2.2	
60대 이상	10.2	59.9	27.2	2.7	2.2	
학력						
고졸이하	10.5	59.6	27.0	2.9	2.2	36.943(3)***
대재이상	11.9	62.0	24.3	1.8	2.2	
직업						
관리전문직	12.9	62.0	22.7	2.5	2.1	30.532(9)***
사무판매서비스	10.9	60.5	26.6	2.0	2.2	
농림생산직	11.6	61.3	24.9	2.2	2.2	
비경활인구	10.9	60.8	25.6	2.6	2.2	
종교						
없음	11.0	60.1	26.6	2.2	2.2	17.264(3)**
있음	11.6	62.2	23.8	2.5	2.2	
정치성향						
보수	12.5	57.9	26.7	2.9	2.2	113.987(9)***
중도	9.3	60.3	27.6	2.8	2.2	
진보	13.4	62.3	22.9	1.4	2.1	
무관심	10.9	63.1	24.1	1.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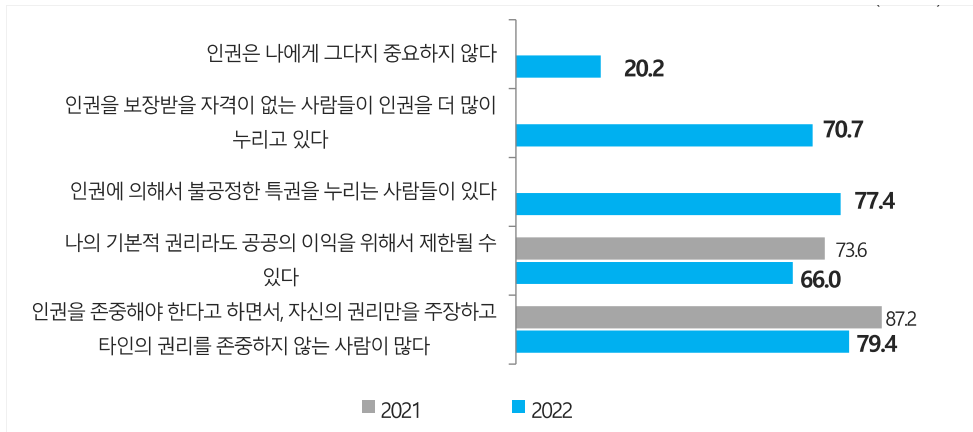
(6) 인권에 대한 의견

일반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본 결과, 문항별로 동의한다는 응답(매우 동의+동의하는 편)의 비중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먼저 “인권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질문에 대하여 20.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에 대해 70.7%,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77.4%,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66%,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79.4%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이 나타난다.

이 중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21년 조사에 비하여 7.6%p 감소하였으며,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에 대한 동의 응답도 7.8%p 감소하였다.

[그림 3-8]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



① 인권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인권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중 “인권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질문에 동의(매우 동의+동의하는 편)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의 20.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20%, 여성의 20.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여성의 비중이 소폭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카이제곱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 19.2%, 40-50대 20.5%, 60대 이상 21%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권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은 22.3%, 대학교 재학 이상은 18.3%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인 집단에서 인권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리전문직(15.6%), 사무판매팀서비스직(21.4%), 농림생산직(20.9%), 비경제 활동 집단(19.7%)로 인권이 자신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동의 비중에서 사무판매팀서비스직이 가장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양상을 보인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동의 응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집단(21%), 종교가 있는 집단(18.9%)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집단이 인권을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19.1%), 중도(20.1%), 진보(20.1%), 무관심(21.5%)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인권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5〉 인권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 점)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3.1	17.1	40.8	39.0	3.2	
성별						
남자	3.0	17.0	40.1	39.9	3.2	3.463(3)
여자	3.2	17.2	41.4	38.1	3.1	
지역						
도시(동부)	3.1	16.8	41.1	39.0	3.2	20.058(3) ***
농어촌(읍면부)	3.0	18.7	39.4	38.9	3.1	
연령						
20-30대	2.7	16.5	40.1	40.7	3.2	29.256(6) ***
40-50대	3.3	17.2	40.4	39.1	3.2	
60대 이상	3.3	17.7	42.1	36.9	3.1	
학력						
고졸이하	3.4	18.9	41.7	36.0	3.1	72.014(3) ***
대재이상	2.8	15.5	40.0	41.7	3.2	
직업						
관리전문직	3.7	11.9	35.1	49.3	3.3	56.507(9) ***
사무판매서비스	3.0	18.4	41.1	37.5	3.1	
농림생산직	3.4	17.5	39.9	39.2	3.1	
비경활인구	2.9	16.8	42.3	38.0	3.2	
종교						
없음	2.9	18.1	41.8	37.3	3.1	42.520(3) ***
있음	3.5	15.4	39.0	42.1	3.2	
정치성향						
보수	4.0	15.1	42.6	38.3	3.2	71.953(9) ***
중도	2.6	17.5	41.9	38.0	3.2	
진보	2.9	17.2	36.2	43.7	3.2	
무관심	3.0	18.5	41.1	37.3	3.1	

②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인권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중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질문에 동의(매우 동의+동의하는 편)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의 70.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70.6%, 여성의 7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여성의 비중이 소폭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카이제곱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 70.3%, 40-50대 72.7%, 60대 이상 68.6%로 동의한다고 응답하

여 40-50대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린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은 70.6%, 대학교 재학 이상은 71%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인 집단에서 인권을 보장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린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직업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관리전문직(65.2%), 사무판매서비스직(72%), 농림생산직(72.3%), 비경제활동 집단(69.8%)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농림생산직에서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동의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동의 응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집단(71.4%), 종교가 있는 집단(69.5%)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집단이 인권을 보장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린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72.4%), 중도(68.9%), 진보(70.6%), 무관심(71.7%)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동의한다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3-16〉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단에 대한 동의

(단위 : %, 점)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4.3	56.5	25.9	3.4	2.2	
성별						
남자	14.5	56.1	26.0	3.4	2.2	3.948(3)
여자	14.0	56.8	25.8	3.4	2.2	
지역						
도시[동부]	14.3	56.5	25.8	3.3	2.2	5.068(3)
농어촌[읍면부]	13.9	56.3	26.3	3.5	2.2	
연령						
20-30대	15.0	55.3	26.2	3.5	2.2	67.654(6) ***
40-50대	16.1	56.6	23.9	3.4	2.1	
60대 이상	11.0	57.6	28.2	3.2	2.2	
학력						
고졸이하	13.3	57.3	26.6	2.9	2.2	21.792(3) ***
대재이상	15.2	55.8	25.2	3.8	2.2	

직업						
관리전문직	17.6	47.6	30.5	4.2	2.2	40.020(9) ***
사무판매서비스	15.2	56.8	24.9	3.1	2.2	
농림생산직	13.2	59.1	24.5	3.1	2.2	
비경제활동인구	12.9	56.9	26.6	3.6	2.2	
종교						
없음	14.0	57.4	25.7	2.9	2.2	12.811(3) **
있음	14.7	54.8	26.3	4.1	2.2	
정치성향						
보수	14.2	58.2	23.5	4.1	2.2	73.268(9) ***
중도	12.4	56.5	27.4	3.7	2.2	
진보	16.7	53.9	25.9	3.6	2.2	
무관심	14.9	56.8	26.2	2.1	2.2	

③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중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질문에 전체의 77.4%가 동의(매우 동의+동의하는 편)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77.1%, 여성의 77.6%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여성의 비중이 소폭 높게 나타나,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카이제곱검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 76%, 40-50대 79.1%, 60대 이상 76.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40-50대에서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은 76.7%, 대학교 재학 이상은 78%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인 집단에서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직업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관리전문직(76.4%), 사무판매서비스직(78.4%), 농림생산직(77.3%), 비경제활동 집단(76.5%)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동의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동의 응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집단(76.9%), 종교가 있는 집단(78.2%)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78.7%), 중도(76.4%), 진보(77.1%), 무관심(77.6%)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동의한다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3-17〉 인권에 의해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 점)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8.0	59.3	20.6	2.0	2.1	
성별						
남자	18.7	58.4	20.8	2.1	2.1	5.238(3)
여자	17.3	60.3	20.4	2.0	2.1	
지역						
도시[동부]	18.2	59.7	20.1	2.0	2.1	23.354(3) ***
농어촌[읍면부]	17.2	57.8	23.0	2.0	2.1	
연령						
20-30대	19.4	56.6	21.6	2.3	2.1	87.324(6) ***
40-50대	20.1	59.0	19.0	1.8	2.0	
60대 이상	13.7	62.7	21.5	2.0	2.1	
학력						
고졸이하	16.0	60.7	21.4	1.9	2.1	39.912(3) ***
대재이상	19.9	58.1	19.9	2.1	2.0	
직업						
관리전문직	24.6	51.8	21.4	2.2	2.0	59.393(9) ***
사무판매서비스	18.4	60.0	20.1	1.6	2.0	
농림생산직	16.1	61.2	20.3	2.3	2.1	
비경활인구	16.9	59.6	21.2	2.4	2.1	
종교						
없음	17.7	59.2	21.4	1.7	2.1	30.825(3) ***
있음	18.5	59.7	19.1	2.7	2.1	
정치성향						
보수	18.1	60.6	18.1	3.2	2.1	66.155(9) ***
중도	17.1	59.3	21.6	2.0	2.1	
진보	19.1	58.0	21.3	1.6	2.1	
무관심	18.3	59.3	21.1	1.3	2.1	

④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중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매우 동의+동의하는 편)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의 66.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65.7%, 여성의 66.2%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여성의 비중이 소폭 높게 나타나,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카이제곱검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 61.4%, 40-50대 68%, 60대 이상 68.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40-50대 이상에서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은 67.4%, 대학교 재학 이상은 64.7%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직업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관리전문직(59.9%), 사무판매서비스직(66.4%), 농림생산직(65.9%), 비경제활동 집단(67.1%)의 비율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동의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동의 응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집단(65.6%), 종교가 있는 집단(66.7%)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68.5%), 중도(64.6%), 진보(66.9%), 무관심(64.6%)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공익에 따른 인권 제한에 동의한다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3-18〉 공익에 따른 기본적 권리 제한에 대한 동의

(단위 : %, 점)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8.9	57.0	30.4	3.7	2.3	
성별						
남자	9.3	56.4	30.6	3.7	2.3	1.547(3)
여자	8.6	57.6	30.1	3.6	2.3	
지역						
도시[동부]	9.2	57.6	29.5	3.7	2.3	43.597(3) ***
농어촌[읍면부]	7.6	54.4	34.5	3.5	2.3	
연령						
20-30대	8.5	52.9	33.5	5.1	2.4	49.882(6) ***
40-50대	9.8	58.2	29.1	2.9	2.3	
60대 이상	8.3	60.1	28.5	3.1	2.3	
학력						
고졸이하	9.1	58.3	29.3	3.3	2.3	13.205(3) **
대재이상	8.8	55.9	31.3	4.0	2.3	
직업						
관리전문직	10.4	49.5	34.1	6.0	2.4	31.567(9) ***
사무판매서비스	9.0	57.4	30.7	3.0	2.3	
농림생산직	8.9	57.0	30.3	3.8	2.3	
비경제활동인구	8.6	58.5	29.1	3.9	2.3	

종교 없음	8.5	57.1	31.1	3.3	2.3	30.704(3) ***
있음	9.8	56.9	29.0	4.3	2.3	
정치성향						67.932(9) ***
보수	10.8	57.7	26.7	4.7	2.3	
중도	8.3	56.3	32.0	3.4	2.3	
진보	9.6	57.3	30.0	3.1	2.3	
무관심	7.5	57.1	31.9	3.6	2.3	

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인권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중 마지막으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질문에 동의(매우 동의+동의하는 편)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의 79.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79.6%, 여성의 7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남성의 비중이 소폭 높게 나타나나,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카이제곱검증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 79.9%, 40-50대 80.6%, 60대 이상 77.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40-50대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은 77.9%, 대학교 재학 이상은 80.7%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직업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관리전문직(81.4%), 사무판매서비스직(79.2%), 농림생산직(79.5%), 비경제활동 집단(79.1%)의 비율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관리전문직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동의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동의 응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집단(79.5%), 종교가 있는 집단(79.1%)로 나타나 종교가 없는 집단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81%), 중도(77.3%), 진보(80.3%), 무관심(79.7%)로 나타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3-19〉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점)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17.7	61.6	19.3	1.3	2.0	
성별						
남자	18.0	61.6	19.0	1.4	2.0	3.304(3)
여자	17.5	61.7	19.6	1.2	2.0	
지역						
도시[동부]	18.0	61.4	19.2	1.4	2.0	34.896(3)
농어촌[읍면부]	16.7	62.8	19.6	0.8	2.0	***
연령						
20~30대	19.7	60.2	18.8	1.4	2.0	58.820(6)
40~50대	18.4	62.2	18.2	1.3	2.0	***
60대 이상	14.7	62.5	21.4	1.4	2.1	
학력						
고졸이하	16.9	61.0	20.7	1.3	2.1	26.634(3)
대재이상	18.5	62.2	18.0	1.3	2.0	***
직업						
관리전문직	22.2	59.2	17.1	1.5	2.0	32.306(9)
사무판매서비스	17.7	61.5	19.6	1.2	2.0	***
농림생산직	17.1	62.4	18.8	1.8	2.1	
비경활인구	17.0	62.1	19.8	1.2	2.1	
종교						
없음	17.4	62.1	19.5	1.0	2.0	21.334(3)
있음	18.3	60.8	19.0	2.0	2.0	***
정치성향						
보수	17.0	64.0	17.0	2.0	2.0	62.193(9)
중도	16.9	60.4	21.2	1.5	2.1	***
진보	18.6	61.7	18.8	0.9	2.0	
무관심	18.8	60.9	19.4	0.8	2.0	

⑥ 인권 인지와 의견에 대한 국제 비교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포함하는 인권 존중 수준에 대한 문항 외에 국제 비교를 위하여 인권 관련 의견 문항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보완한 문항은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을 질문한 문항으로, “(문7-1)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문7-2)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문7-3)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의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세 문항은 아래에서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와 비교한 국제 인권조사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문항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한 주요 국제 인권조사는 국제적 조사기관인 Ipsos의 Human Rights in 2018 조사 결과와 EU의 EU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의 2020 기본권조사(Fundamental Rights Survey)이다. 먼저, Ipsos Human Rights in 2018는 입소스 자체 패널에 등록된 만16세~64세 (캐나다, 미국은 만18세~64세) 패널을 대상으로 2018년 28개국 23,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조사이다. 이 조사에서는 국가 당 최소 1천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인 EU기본권청에서 실시한 EU 기본권조사는 2020년 EU 회원국 27개국과 영국, 북마케도니아의 만 16세 이상 34,9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다.

먼저, 인권에 관한 일반적 인지 수준을 질문한 문항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psos 조사에서 한국의 인권에 대하여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있다+어느정도 알고 있다) 비율은 57%로 나타난다. 조사 대상 국가의 평균은 56%으로, 한국은 평균에 비하여 1%p 가량 높은 비중을 보인다. 한국의 28개국 중 15위에 해당하는데, 한국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국가는 이탈리아(57%), 캐나다(53%), 영국(52%) 등이다. 2019년 EU 기본권조사에서는 EU인권협약, 세계인권선언, EU 기본권헌장에 대한 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는데, 각각 68%, 67%, 53%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는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는데, 여기에서 접한다(거의 매일+비교적 자주+가끔)의 비율은 51.5%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권에 관한 의견을 질문한 문항 중,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Ipsos 조사 결과, 한국은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매우 동의+동의하는 편)하는 비율은 14%로 나타나 전체 평균 19%에 비하여 5%p 가량 낮은 비율을 보인다. 조사대상 국가 중 콜롬비아(13%), 세르비아(10%), 터키(8%)와 함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로 나타난다(28개국 중 25위). 같은 문항에 대하여 2020 EU기본권조사에서는 EU국가의

동의한다는 응답의 평균은 36%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2022 인권실태 조사에서는 동의한다는 비율은 20.2%로 나타나, Ipsos 조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EU 조사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에 관한 문항은 2018년 Ipsos 조사에서 한국은 27%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동의하는 편)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 평균 37%에 비하여 10%p 가량 낮은 결과이다.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은 동의 비중이 적은 국가(28개국 중 23위)로 나타나는데, 한국 보다 동의 비중이 적은 국가는 호주(26%), 스웨덴(24%), 캐나다(23%), 미국(22%), 일본(16%) 순이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EU기본권조사에서 조사 대상 EU국가의 동의한다는 응답 평균은 58%이다. 이 질문에 대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는 동의한다는 비중이 70.7%로 나타나 Ipsos, EU의 조사 결과보다 높은 비율은 보인다. 특히 같은 문항에 대한 Ipsos의 조사결과와 43%p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다만, Ipsos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음과 모름의 비중을 제외한 응답 비중이 62%로 나타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의견에 대한 적극적 동의를 표하지 않으나 잠정적인 태도를 가진 표본을 포함할 경우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인 70.7%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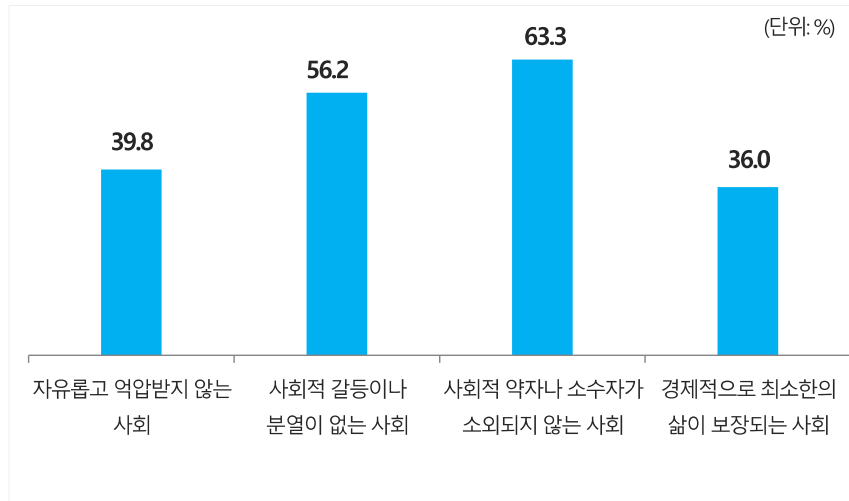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항의 경우, 2018년 Ipsos 조사에서 한국은 72%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동의하는 편)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조사 대상 국가의 평균인 64%에 비하여 8%p 가량 높은 결과이다. 한국은 28개국 중 9위에 해당하며, 한국과 유사한 동의 비율을 보이는 국가는 아르헨티나(72%), 칠레(72%), 말레이시아(71%), 스페인(68%) 등으로 나타난다. EU기본권조사에서 조사 대상 EU국가의 동의한다는 응답 평균은 88%이다.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는 해당 문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이 77.4%로 나타나, Ipsos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7) 인권의 사회적 효용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인권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우선 순위 1, 2위를 조사한 결과, 1위와 2위를 합산한 결과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63.3%를 차지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서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가 56.2%,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가 39.8%,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의 보장되는 사회”가 36%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9] 인권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의견(1+2순위)

(단위 : %)



이어서 이러한 인권의 효용에 관한 선택지 중 1순위 응답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가 31.9%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이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29.9%,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가 26.3%,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1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각 선택지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가 28.1%, 24.6%,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가 31.1%, 32.8%,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29.2%, 30.7%,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11.6%, 12%로 나타나 같은 우선 순위를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란 선택지에 대하여 20-30대 27.4%, 40-50대 25.5%, 60대 이상 26.2%로 나타나 20-30대가 가장 많은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에 대해서는 40-50대가 33.1%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였으며,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는 20-30대가 31%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의 보장되는 사회”는 60대 이상에서 12.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란 선택지에 대하여 대학교 재학 이상이 27.4%로 응답해 가장 많은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2.9%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였으며, “소

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30.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의 보장되는 사회”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12.9%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란 선택지에 대하여 관리전문직이 27.8%로 응답해 가장 많은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에 대해서는 사무판매서비스직이 35.2%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였다.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는 관리전문직이 30.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의 보장되는 사회”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13.1%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표 3-20〉 인권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의견(1순위 선택)

(단위: %)

구분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chi^2(df)$
전체	26.3	31.9	29.9	11.8	
성별					
남자	28.1	31.1	29.2	11.6	18.873(3)***
여자	24.6	32.8	30.7	12.0	
지역					
도시·동부	26.0	32.1	30.4	11.5	11.956(3)**
농어촌·읍면부	27.7	31.3	27.9	13.1	
연령					
20-30대	27.4	30.0	31.0	11.6	13.856(6)*
40-50대	25.5	33.1	29.8	11.6	
60대 이상	26.2	32.6	28.9	12.3	
학력					
고졸이하	25.1	32.9	29.0	12.9	29.247(3)***
대재이상	27.4	31.1	30.8	10.7	
직업					
관리전문직	27.8	29.4	30.5	12.4	45.121(9)***
사무판매서비스	24.6	35.2	29.9	10.4	
농림생산직	27.0	31.3	29.7	12.0	
비경제활동인구	27.6	29.4	29.9	13.1	
종교					
없음	25.3	32.3	31.0	11.4	8.413(3)*
있음	28.3	31.3	27.9	12.4	
정치성향					
보수	26.8	32.7	27.4	13.0	31.958(9)***
중도	25.9	34.0	28.9	11.3	
진보	27.8	30.3	32.1	9.8	
무관심	25.3	29.8	32.1	12.8	

3)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1) 분석 목적

이번 조사 결과 인권의식의 여러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술 통계 중심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인권의식 관련 문항을 주요 변수로 구성하여,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배경 요인의 효과와 그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특히 인권의 토대인 근대적 권리 개념은 자연인이라는 개인을 단위로 작동하는 특징을 지니기에(Donnely, 2003), 개별 행위자가 인권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인식은 각 개인의 여러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이 각 행위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인권 의식에 관한 논의 중 인권 의식을 인권 헌신, 인권 지지, 인권 제한의 세 차원으로 의식을 분류한 논의가 대표적이다(McFarland and Mathews, 2005).

(2) 방법

이번 분석에서는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 인권 의식 관련 요인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이번 분석에서 회귀분석을 위해 구성한 종속변수(분석 대상이 되는 변수), 독립변수(분석 대상이 되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배경 요인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 및 구성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는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종교, 정치적 성향의 6가지 요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성별은 남성(0), 여성(1)으로 코딩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0), 대재 이상(1)으로 코딩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직업은 비경제활동 기준으로 더미변수 생성하였으며, 기준 변수 외의 직업 유형은 관리전문직, 사무판매팀서비스직, 농림생산직으로 분류하였다. 종교는 종교없음(0), 종교있음(1)으로 코딩하였고, 종교가 없는 집단을 기준 변수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정치적 성향의 경우에는 중도적 성향과 무관심층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생성하여 보수와 진보적 성향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어서 분석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는 인권의식, 인권거리감, 인권책임, 인권의견, 인권참여로 설계하였다.

첫째, 인권의식은 본인, 사회적 약자,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관한 문항을 평균화하여 구성하였다. 이 경우 높은 값이 나올수록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인권거리감은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문항을 사용한 것으로, 높은 값이 나올수록 인권을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인권 책임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할 것인지 질문한 문항을 활용한 변수로, 높은 값이 나올수록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인권의견은 인권에 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한 문항이다.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인식하는 정도, 인권을 보장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권을 누린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를 평균화한 문항으로, 높은 값이 나올수록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인권참여는 인권 관련 활동 일곱 가지 유형에 대하여 참여여부를 합산 후 평균화한 문항으로 인권침해 관련 조언 및 상담, 자원활동, 기부, 인권단체 가입 및 활동, 인권문제 관련 글 쓰기, 인권 관련 청원 및 서명 참여, 온라인 또는 거리 집회 참여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높은 값이 나올수록 인권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1〉 인권의식 관련 종속변수 설계 내역

변수	구성문항	코딩
인권인식	문4_1. 본인의 인권 존중받는 정도	1(매우존중)~4(전혀 비존중)
	문4_2.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존중받는 정도	1(매우존중)~4(전혀 비존중)
	문4_3.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존중받는 정도	1(매우존중)~4(전혀 비존중)
인권거리감	문7_1.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매우동의)~4(전혀 비동의)
인권책임	문6_2.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1(매우필요)~4(전혀 불필요)
인권의견	문7_5.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1(매우동의)~4(전혀 비동의)
	문7_2.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1(매우동의)~4(전혀 비동의)
	문7_3.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1(매우동의)~4(전혀 비동의)
인권참여	문34_1.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0=없다, 1=있다.
	문34_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0=없다, 1=있다.
	문34_3.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0=없다, 1=있다.
	문34_4.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0=없다, 1=있다.
	문34_5.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0=없다, 1=있다.
	문34_6.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0=없다, 1=있다.
	문34_7.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0=없다, 1=있다.

(3) 결과

① 인권인식: 인권 존중 수준에 대한 인식

이 모형에서는 본인, 우리사회, 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질문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현재 모형 내에서 연령(+)과 교육(-)이 주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는, 연령이 높을 수록, 남성에 비하여 여성인 경우, 인권을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교 재학 이상, 관리전문 및 사무직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인권을 존중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치 관련 요인의 경우, 종교가 있는 집단이 무교인 집단에 비하여 인권을 존중 받는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수적 정파성을 지닌 경우 중도 및 정치 무관심 집단에 비해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강함을 볼 수 있었다.

〈표 3-22〉 인권의식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계수 (β)	t	유의확률
연령(만)	0.181***	19.081	0.000
성별(여=1)	0.113***	14.725	0.000
교육	-0.171***	-18.094	0.000
관리전문직	-0.106***	-13.329	0.000
사무판매직	-0.073***	-8.524	0.000
농림생산직	0.004	0.419	0.675
종교(있음=1)	-0.076***	-10.248	0.000
정치_진보	-0.005	-0.664	0.507
정치_보수	-0.024**	-3.030	0.002
(상수)		121.239	0.000
결정계수 $R^2=0.157$			

유의수준: $p^*<0.1$, $p^{**}<0.05$, $p^{***}<0.01$

② 인권에 대한 거리감

인권 거리감에 대한 모형은 인권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 수록, 비경제활동 집단에 비하여 사무직인 경우 자신에게 인권이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이거나, 종교가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있는 집단은 인권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권과의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모형 안에서는 교육(.05), 종교(.036), 진보적 성향(.034)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23〉 인권거리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계수 (β)	t	유의확률
연령(만)	-0.023**	-2.222	0.026
성별(여=1)	-0.005	-0.598	0.550
교육	0.050***	4.880	0.000
관리전문직	0.017	1.922	0.055
사무판매직	-0.027***	-2.899	0.004
농림생산직	0.006	0.630	0.528
종교(있음=1)	0.036***	4.537	0.000
정치 진보	0.034***	4.152	0.000
정치 보수	0.018***	2.157	0.031
(상수)		93.255	0.000
결정계수 $R^2=0.008$			

유의수준: $p^*<0.1$, $p^{**}<0.05$, $p^{***}<0.01$

③ 인권책임

인권책임에 관한 모형은 다른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나의 불편 감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관리전문직인 경우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치의 측면에서, 종교가 있는 집단이나, 정치 성향이 진보 성향인 경우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성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모델 내에서 다른 배경 요인에 비하여, 진보적 성향(-.057), 연령(-.041)이 주된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표 3-24〉 인권책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계수 (β)	t	유의확률
연령(만)	-0.041***	-3.937	0.000
성별(여=1)	-0.002	-0.192	0.848
교육	-0.019	-1.893	0.058
관리전문직	-0.025***	-2.924	0.003
사무판매직	-0.011	-1.227	0.220
농림생산직	-0.013	-1.381	0.167
종교(있음=1)	-0.024***	-3.010	0.003
정치 진보	-0.057***	-6.902	0.000
정치 보수	-0.001	-0.082	0.934
(상수)		82.779	0.000
결정계수 $R^2=0.006$			

유의수준: $p^*<0.1$, $p^{**}<0.05$, $p^{***}<0.01$

④ 인권 의견

인권에 관한 의견은 주로 인권을 특권, 이기적 권리 등으로 오용되는가에 관하여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권이 불공정하고 이기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분석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권을 일종의 특권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관리전문직인 경우 인권을 특권, 이기적 권리로 오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인 경우 인권이 오용되고 있다는 관점에 동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델 내에서 연령(.073), 보수적 성향(-.035)이 각각 상반된 방향으로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3-25〉 인권의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계수 (β)	t	유의확률
연령(만)	0.073***	7.098	0.000
성별(여=1)	0.003	0.346	0.729
교육	0.011	1.084	0.278
관리전문직	-0.020***	-2.302	0.021
사무판매직	-0.002	-0.191	0.848
농림생산직	-0.005	-0.497	0.619
종교(있음=1)	-0.003	-0.431	0.667
정치_진보	-0.012	-1.482	0.138
정치_보수	-0.035***	-4.076	0.000
(상수)		86.582	0.000
결정계수 $R^2=0.005$			

유의수준: $p^*<0.1$, $p^{**}<0.05$, $p^{***}<0.01$

⑤ 결과 요약

인권 의식과 관련한 주요 문항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요인 사이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인권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 전반, 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 수준에 관한 인식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고연령층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 존중 수준이 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권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에 비하여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직업 유형의 경우 관리전문직인 경우 비경제활동 집단에 비하여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인권이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강해지고 인권 관련 활동 참여 수준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 수준이거나, 종교, 정치 성향이 있는 집단은 인권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함께 확인하였다.

넷째, 인권 보호를 위한 불편 감수나 인권을 특권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연령이 높을 수

Ⅲ. 조사결과 및 분석

록 강하며, 관리전문직이거나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낮아진다는 점도 이번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2 인권침해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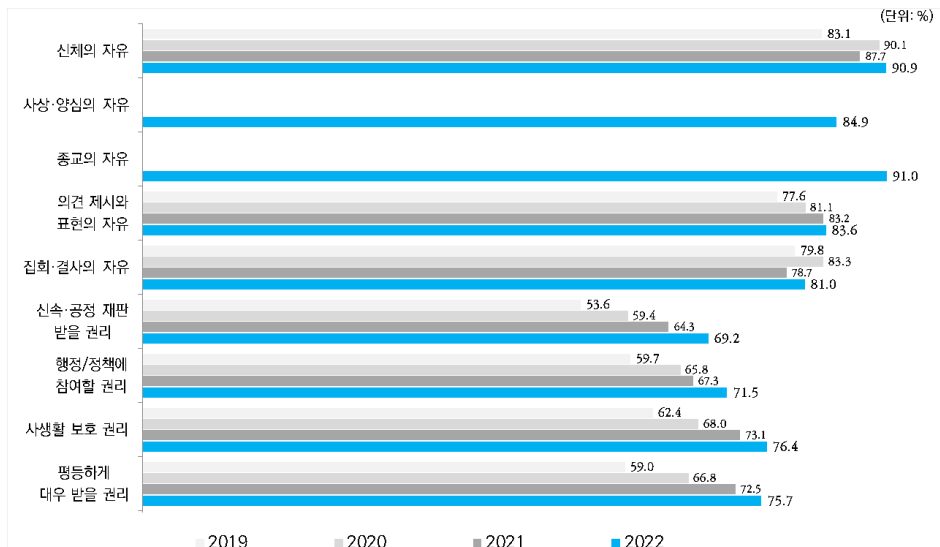
인권을 구성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는 한국에서 얼마나 존중 받는가? 한국의 인권침해와 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객관적 판단이나 평가는 쉽지 않다. 인권침해나 차별이라고 명확하게 판정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응답자들 스스로 판단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경험과 함께 한국의 인권 항목별 존중 정도 및 인권침해와 차별의 심각 정도를 물어 인권 상황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1)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

먼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로 나누어 우리 사회에서 이들 권리에 속하는 다양한 권리 항목들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1)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

[그림 3-10] 시민적, 정치적 권리별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의 변화



[그림 3-10]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속하는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물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존중된다'와 '존중되는 편이다'로 응답한 긍정적 평가의 비율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중에서 존중받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은 종교의 자유(91.0%)와 신체의 자유(90.9%) 그리고 사상, 양심의 자유(84.9%)와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83.6%)이다. 반면 존중받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권리는 신속,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69.2%)와 행정, 정책에 참여할 권리(71.5%)이다.

전반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존중받는다는 응답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021년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감소한 권리는 없었다. 특히 2019년 대비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16.7%p),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15.6%p),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14.0%p), 행정, 정책에 참여할 권리(11.8%p) 등이다.

① 신체 자유 존중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체의 자유가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은 지역, 연령, 종교 유무, 직업,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전반적으로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60대 이상에서 91.4%가 신체 자유를 존중받는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에 비해 미세하지만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사람에 비해 종교가 없는 사람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진보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9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6〉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신체 자유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6.1	74.8	8.9	0.2	3.1	
성별						2.693(3)
남자	16.3	74.5	9.1	0.2	3.1	
여자	16.0	75.1	8.7	0.2	3.1	
지역						11.532(3)*
도시[동부]	15.8	75.2	8.8	0.2	3.1	
농어촌[읍면부]	17.9	72.7	9.2	0.3	3.1	*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연령						
20-30대	18.0	72.8	8.9	0.3	3.1	18.298(6)* *
40-50대	15.3	75.3	9.2	0.2	3.1	
60대 이상	15.2	76.2	8.4	0.1	3.1	
학력						
고졸이하	15.1	75.7	9.0	0.3	3.1	5.421(3)
대재이상	17.1	73.9	8.8	0.2	3.1	
직업						
관리전문직	19.7	69.7	10.3	0.2	3.1	37.154 (9)***
사무판매서비스	14.8	75.6	9.5	0.2	3.0	
농림생산직	16.0	75.1	8.6	0.2	3.1	
비경활인구	16.8	74.9	8.0	0.2	3.1	
종교						
없음	15.3	74.9	9.5	0.3	3.1	38.651 (3)***
있음	17.6	74.4	7.8	0.2	3.1	
정치성향						
보수	17.6	73.4	8.8	0.2	3.1	25.780 (9)**
중도	15.3	75.0	9.5	0.3	3.1	
진보	16.3	74.8	8.8	0.1	3.1	
무관심	15.7	75.8	8.3	0.2	3.1	

② 사상과 양심의 자유 존중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은 성별을 제외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도시(84.8%)보다 농어촌 지역(85.4%)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86.8%로 20-30대(84.5%), 40-50대(83.6%)에 비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학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86.8%로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 여부에서는 존중 받는다는 응답 비중이 종교가 있는 사람이 86.6%로 종교가 없는 집단(84.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성향에서는 보수(85.5%), 무관심층(85.3%), 중도(84.8%), 진보(83.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7〉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사상과 양심 자유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7.9	67.0	14.4	0.7	3.0	
성별						
남자	18.2	66.2	14.8	0.8	3.0	4.001(3)
여자	17.6	67.8	14.0	0.6	3.0	
지역						
도시[동부]	18.1	66.7	14.6	0.6	3.0	10.421(3)*
농어촌[읍면부]	17.1	68.3	13.6	1.0	3.0	
연령						
20~30대	18.9	64.7	15.6	0.8	3.0	19.952(6)* *
40~50대	17.1	67.4	14.6	0.8	3.0	
60대 이상	17.9	68.9	12.8	0.4	3.0	
학력						
고졸이하	17.2	68.4	13.7	0.7	3.0	7.948(3)*
대재이상	18.5	65.7	15.1	0.7	3.0	
직업						
관리전문직	18.5	61.7	18.6	1.2	3.0	38.959(9)* **
사무판매서비스	16.8	67.0	15.5	0.7	3.0	
농림생산직	17.9	67.9	13.6	0.6	3.0	
비경활인구	19.0	67.8	12.6	0.6	3.1	
종교						
없음	16.9	67.1	15.2	0.8	3.0	58.399(3)* **
있음	19.8	66.8	12.8	0.6	3.1	
정치성향						
보수	19.2	66.3	13.7	0.8	3.0	27.829(9)* *
중도	16.9	67.9	14.6	0.5	3.0	
진보	18.0	65.7	15.3	1.0	3.0	
무관심	17.9	67.4	14.0	0.7	3.0	

③ 종교의 자유 존중

종교의 자유가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91.5%)이 농어촌 지역 사람(88.5%)에 비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40~50대 이상(90.7%), 20~30대 이상(90.1%)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에서는 대학 재학 이상(90.6%)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1.5%로 존중받는다는 응답

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이 92.4%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무판매서비스직이 8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있어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91.7%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90.6%)에 비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정치성향에서는 보수가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관심(92.2%), 진보(90.0%), 중도(89.7%)순으로 나타난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인에 비해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28〉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종교의 자유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35.6	55.4	8.2	0.8	3.3	
성별						
남자	36.0	55.0	8.1	0.9	3.3	2.722(3)
여자	35.3	55.7	8.4	0.6	3.3	
지역						
도시[동부]	36.0	55.5	7.8	0.7	3.3	38.259(3)* **
농어촌[읍면부]	33.7	54.8	10.3	1.2	3.2	
연령						
20-30대	36.7	53.4	8.9	1.0	3.3	43.243(6)* **
40-50대	34.4	56.2	8.5	0.8	3.2	
60대 이상	36.0	56.4	7.2	0.4	3.3	
학력						
고졸이하	34.3	57.2	8.0	0.6	3.3	31.410(3)* **
대재이상	36.9	53.7	8.5	0.9	3.3	
직업						
관리전문직	39.3	53.1	6.8	0.8	3.3	61.819(9)* **
사무판매서비스	34.0	55.1	9.7	1.1	3.2	
농림생산직	34.2	58.1	7.4	0.3	3.3	
비경활인구	37.1	54.8	7.4	0.6	3.3	
종교						
없음	34.7	55.9	8.7	0.7	3.2	38.771(3)* **
있음	37.4	54.3	7.4	0.8	3.3	
정치성향						
보수	36.6	55.8	7.0	0.6	3.3	71.025(9)* **
중도	35.7	54.0	9.1	1.2	3.2	
진보	36.4	53.6	9.5	0.6	3.3	
무관심	34.1	58.1	7.3	0.5	3.3	

④ 의견제시와 표현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이 84.8%로 도시 지역(83.4%)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응답차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5.1%로 대학 재학 이상(8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전문직이 8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교에 있어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85.4%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8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에서는 보수가 85.7%로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무관심(85.0%), 진보(82.1%), 중도(81.9%)순으로 나타난다.

〈표 3-29〉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의견제시와 표현의 자유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6.4	67.2	15.6	0.8	3.0	
성별						
남자	16.8	66.8	15.6	0.9	3.0	4.187(3)
여자	16.1	67.6	15.6	0.7	3.0	
지역						
도시[동부]	16.1	67.3	15.8	0.8	3.0	17.447(3)* *
농어촌[읍면부]	18.1	66.7	14.6	0.6	3.0	
연령						
20-30대	18.4	64.3	16.1	1.2	3.0	52.276(6)* **
40-50대	15.4	67.4	16.5	0.8	3.0	
60대 이상	15.6	70.1	13.9	0.4	3.0	
학력						
고졸이하	16.2	68.9	14.2	0.7	3.0	23.906(3)* **
대재이상	16.6	65.6	16.9	0.8	3.0	
직업						
관리전문직	16.7	63.9	18.6	0.8	3.0	53.968(9)* **
사무판매서비스	16.0	65.4	17.6	1.0	3.0	
농림생산직	17.1	69.2	13.3	0.4	3.0	
비경활인구	16.4	69.0	13.8	0.7	3.0	
종교						
없음	15.2	67.4	16.5	0.8	3.0	58.116(3)* **
있음	18.6	66.8	13.9	0.7	3.0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정치성향						
보수	16.8	69.0	13.7	0.6	3.0	64.976(9)* **
중도	15.6	66.3	16.9	1.2	3.0	
진보	17.2	64.8	17.3	0.6	3.0	
무관심	16.5	68.5	14.4	0.6	3.0	

⑤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과 학력에 따라 유의하지만 유의도의 정도가 낮았고, 지역, 연령,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이 81.5%로 남성(80.4%)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30대(80.4%), 40-50대(79.9%) 순으로 나타난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83.7%로 도시 지역(80.4%)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무판매서비스는 78.5%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82.6%)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80.1%)에 비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정치성향에서는 무관심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81.5%), 중도(79.9%), 진보(78.1%) 순으로 나타난다.

〈표 3-30〉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집회 결사의 자유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6.5	64.5	18.0	1.0	3.0	
성별						
남자	17.1	63.3	18.4	1.1	3.0	9.034(3)*
여자	15.9	65.6	17.6	0.9	3.0	
지역						
도시[동부]	16.4	64.0	18.5	1.1	3.0	20.534(3)* **
농어촌[읍면부]	17.0	66.7	15.7	0.7	3.0	
연령						
20-30대	17.8	62.6	18.4	1.1	3.0	37.776(6)* **
40-50대	15.4	64.5	19.0	1.2	2.9	
60대 이상	16.6	66.4	16.3	0.8	3.0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학력						
고졸이하	15.8	65.6	17.6	0.9	3.0	10.401(3)*
대재이상	17.2	63.4	18.3	1.1	3.0	
직업						
관리전문직	17.6	63.5	17.6	1.3	3.0	49.379(9)* **
사무판매서비스	15.4	63.1	20.2	1.3	2.9	
농림생산직	17.0	66.0	16.4	0.7	3.0	
비경활인구	17.3	65.4	16.5	0.8	3.0	
종교						
없음	15.8	64.3	18.9	0.9	3.0	32.715(3)* **
있음	17.9	64.7	16.3	1.1	3.0	
정치성향						
보수	16.2	65.3	17.4	1.1	3.0	62.022(9)* **
중도	16.4	63.5	19.2	0.9	3.0	
진보	17.1	61.0	20.5	1.4	2.9	
무관심	16.6	67.6	15.2	0.7	3.0	

⑥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받고 있는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69.8%로 남성(68.7%)에 비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30대(69.7%), 40-50대(67.0%)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73.0%로 도시 지역(68.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0.5%로 대학 재학 이상(68.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농림생산직이 71.8%로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전문직이 59.0%로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다른 직종에 비해 확연히 낮게 나타난다.

종교 여부에 따른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69.4%)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68.9%)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정치 성향에 있어서는 무관심이 73.6%로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진보가 64.6%로 다른 정치성향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3-31〉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0.6	58.6	28.8	2.0	2.8	
성별						12.328(3)*
남자	10.8	57.9	29.1	2.2	2.8	*
여자	10.4	59.4	28.4	1.9	2.8	
지역						55.702(3)*
도시[동부]	10.1	58.3	29.5	2.1	2.8	**
농어촌[읍면부]	13.0	60.0	25.2	1.8	2.8	
연령						48.232(6)*
20-30대	11.4	58.3	28.0	2.2	2.8	**
40-50대	10.0	57.0	30.6	2.4	2.7	
60대 이상	10.5	61.0	27.2	1.3	2.8	
학력						39.373(3)*
고졸이하	10.5	60.0	28.0	1.5	2.8	**
대재이상	10.7	57.3	29.5	2.5	2.8	
직업						102.816(9)*
관리전문직	9.4	49.6	36.8	4.1	2.6	**
사무판매서비스	10.9	58.5	28.9	1.8	2.8	
농림생산직	11.5	60.3	26.2	2.0	2.8	
비경활인구	10.2	60.1	27.9	1.8	2.8	
종교						20.303(3)*
없음	10.1	59.3	28.7	1.9	2.8	**
있음	11.6	57.3	28.9	2.2	2.8	
정치성향						109.071(9)*
보수	11.1	58.2	28.9	1.7	2.8	**
중도	9.7	58.8	29.4	2.1	2.8	
진보	11.7	52.9	32.4	3.1	2.7	
무관심	10.5	63.1	25.0	1.4	2.8	

⑦ 공공행정,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공공행정,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존중받는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성별,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72.2%)이 남성(70.8%)에 비해 공공행정,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30대(72.2%), 40-50대(69.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75.2%로 도시 지역(70.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2.5%로 대학 재학 이상(7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 전문직이 65.3%로 다른 직종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있어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72.8%로 종교가 없는 사람(7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으며, 정치 성향에서는 무관심이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68.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32〉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공공행정,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0.6	60.9	26.5	2.0	2.8	
성별						13.429(3)* *
남자	10.8	60.0	27.2	2.1	2.8	
여자	10.4	61.8	25.9	1.9	2.8	
지역						60.270(3)* **
도시[동부]	10.0	60.7	27.5	1.8	2.8	
농어촌[읍면부]	13.1	62.2	22.1	2.7	2.9	
연령						26.959(6)* **
20-30대	11.2	60.9	25.9	1.9	2.8	
40-50대	10.5	59.2	27.9	2.4	2.8	
60대 이상	9.9	63.1	25.4	1.6	2.8	
학력						23.541(3)* **
고졸이하	10.7	61.8	25.5	2.0	2.8	
대재이상	10.5	60.1	27.4	2.0	2.8	
직업						62.367(9)* **
관리전문직	9.7	55.6	31.6	3.1	2.7	
사무판매서비스	10.4	60.4	27.3	1.9	2.8	
농림생산직	12.2	60.2	25.3	2.4	2.8	
비경활인구	10.2	63.2	25.0	1.7	2.8	
종교						25.979(3)* **
없음	10.0	60.8	27.2	2.0	2.8	
있음	11.6	61.1	25.2	2.0	2.8	
정치성향						72.746(9)* **
보수	11.5	61.6	24.9	2.0	2.8	
중도	9.5	60.5	28.0	1.9	2.8	
진보	11.2	57.1	29.4	2.3	2.8	
무관심	10.6	63.7	23.9	1.8	2.8	

⑧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받고 있는가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을 제외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78.9%로 도시 지역(75.9%)에 비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30대 74.9%, 40-50대 74.6% 순으로 나타난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8.4%로 대학 재학 이상(7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79.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관리전문직이 68.7%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종교 유무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76.6%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76.3%)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성향에 있어서는 무관심이 79.1%, 보수가 78.7%, 중도 74.1%, 진보 7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3〉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12.6	63.8	21.7	1.9	2.9	
성별						
남자	12.9	63.5	21.5	2.1	2.9	4.099(3)
여자	12.4	64.1	21.8	1.7	2.9	
지역						
도시[동부]	12.3	63.6	22.2	1.9	2.9	23.365(3)* **
농어촌[읍면부]	14.0	64.9	19.2	1.9	2.9	
연령						
20-30대	13.0	61.9	22.0	3.1	2.8	131.447(6) ***
40-50대	11.8	62.8	23.7	1.7	2.8	
60대 이상	13.3	67.1	18.6	1.0	2.9	
학력						
고졸이하	13.1	65.3	20.0	1.6	2.9	56.463(3)* **
대재이상	12.2	62.4	23.2	2.2	2.8	
직업						
관리전문직	10.4	58.3	28.9	2.4	2.8	68.931(9)* **
사무판매서비스	12.9	62.3	22.6	2.2	2.9	
농림생산직	12.7	66.9	19.1	1.3	2.9	
비경활인구	12.8	65.3	20.1	1.8	2.9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종교						
없음	11.8	64.5	21.9	1.8	2.9	25.333(3)* **
있음	14.2	62.5	21.3	2.1	2.9	
정치성향						
보수	14.1	64.6	20.0	1.3	2.9	78.891(9)* **
중도	11.3	62.9	23.4	2.5	2.8	
진보	13.5	60.4	23.5	2.6	2.8	
무관심	12.3	66.8	19.6	1.3	2.9	

⑨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성별,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75.9%로 남성(75.4%)에 비해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77.8%로 도시 지역(7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8.3%로 대학 재학 이상(73.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78.9%로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 전문직이 6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있어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76.5%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7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에 있어서는 보수가 79.1%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보가 71.6%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34〉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9.9	65.7	22.9	1.4	2.8	
성별						
남자	10.3	65.1	22.8	1.7	2.8	11.630(3)* *
여자	9.6	66.3	23.0	1.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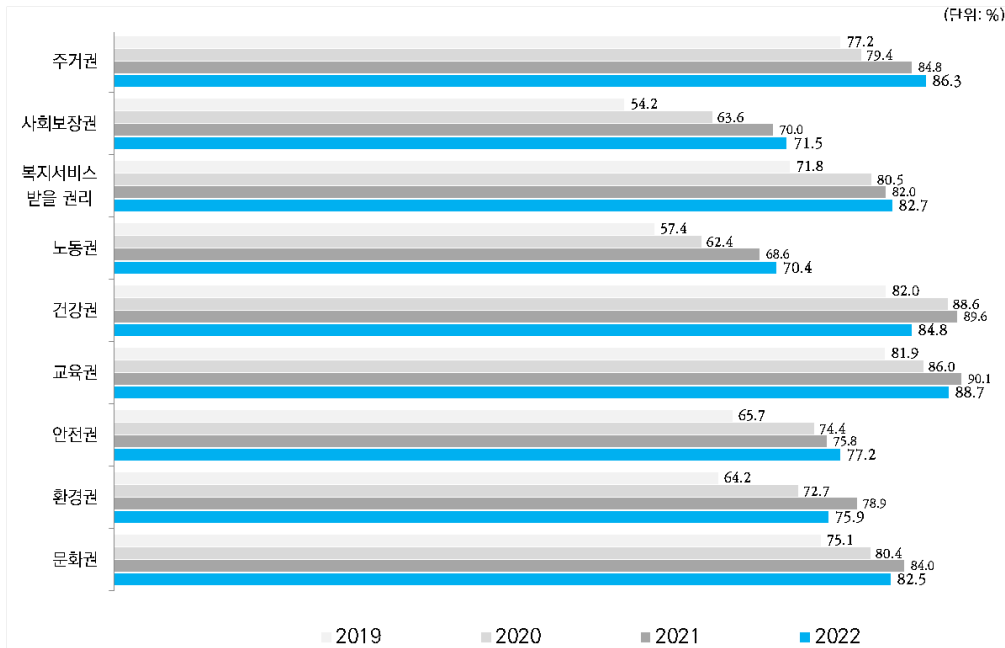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지역						
도시[동부]	9.5	65.7	23.3	1.4	2.8	36.041(3)* **
농어촌[읍면부]	11.8	65.9	20.9	1.3	2.9	
연령						
20-30대	10.7	62.8	24.6	2.0	2.8	106.765(6)* **
40-50대	9.4	65.3	23.9	1.4	2.8	
60대 이상	9.7	69.6	19.8	0.8	2.9	
학력						
고졸이하	9.7	68.5	20.6	1.1	2.9	85.375(3)* **
대재이상	10.1	63.2	25.0	1.7	2.8	
직업						
관리전문직	9.1	57.1	30.6	3.2	2.7	115.975(9)* **
사무판매서비스	9.8	65.2	23.7	1.2	2.8	
농림생산직	10.9	68.0	19.9	1.2	2.9	
비경활인구	9.8	67.3	21.6	1.3	2.9	
종교						
없음	9.2	66.1	23.3	1.4	2.8	30.548(3)* **
있음	11.4	65.1	22.1	1.4	2.9	
정치성향						
보수	11.1	67.9	20.1	0.8	2.9	98.548(9)* **
중도	8.5	65.6	24.5	1.4	2.8	
진보	11.0	60.5	26.0	2.4	2.8	
무관심	9.9	67.8	21.1	1.2	2.9	

(2)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

[그림 3-11]은 사회, 경제, 문화 권리별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의 추세이다. 사회, 경제, 문화 권리별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권리 내용별로 차이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높은 긍정 비율을 보이는 것이 교육권(88.7%), 주거권(86.3%), 건강권(84.8%),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82.7%), 문화권(82.5%)이고,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 노동권(70.4%), 사회보장권(71.5%) 등이다.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긍정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9년에 비해 가장 큰 개선을 보이는 것은 사회보장권(17.3%p), 노동권(13%p), 안전권(11.5%p),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10.9%p) 등이다. 반면 2021년에 비해 2022년 긍정 비율이 낮아진 권리들도 있다. 건강권(-4.8%p), 환경권(-3%p), 문화권(-1.5%p), 교육권(-1.4%p) 등이다.

[그림 3-11]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추이



① 주거권

주거권이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 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89.0%로 도시(85.7%)에 비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89.3%로 40-50대(85.3%), 20-30대(8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표본이 88.0%로 대학 재학 이상(84.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88.0%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관리전문직은 81.9%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88.0%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85.3%)에 비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을 살펴보면 무관심이 8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88.1%), 진보(84.6%), 중도(8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5〉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주거권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3.6	72.7	12.9	0.8	3.0	
성별						
남자	13.5	72.3	13.2	1.0	3.0	3.375(3)
여자	13.7	73.0	12.6	0.7	3.0	
지역						
도시[동부]	12.6	73.1	13.5	0.9	3.0	68.056(3)* **
농어촌[읍면부]	18.4	70.6	10.3	0.7	3.1	
연령						
20-30대	12.5	72.1	13.9	1.5	3.0	128.928(6)* **
40-50대	13.4	71.9	14.2	0.6	3.0	
60대 이상	15.0	74.3	10.3	0.4	3.0	
학력						
고졸이하	14.3	73.7	11.5	0.5	3.0	58.395(3)* **
대재이상	12.9	71.7	14.2	1.1	3.0	
직업						
관리전문직	14.5	67.4	15.9	2.2	2.9	66.926(9)* **
사무판매서비스	12.2	73.4	13.9	0.6	3.0	
농림생산직	15.5	72.5	11.5	0.5	3.0	
비경활인구	14.0	73.3	11.8	0.9	3.0	
종교						
없음	12.9	72.5	13.7	1.0	3.0	56.768(3)* **
있음	15.0	73.0	11.5	0.5	3.0	
정치성향						
보수	15.8	72.2	11.0	0.9	3.0	78.513(9)* **
중도	12.1	72.3	15.1	0.6	3.0	
진보	13.9	70.8	14.4	1.0	3.0	
무관심	13.2	75.1	10.7	1.0	3.0	

②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이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이 77.1%로 도시 지역(70.3%)에 비해 사회보장권을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20-30대(68.7%)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3.9%로 대학 재학 이상(69.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75.0%로 다른 직종에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관리전문직은 63.7%로 다른 직종에 비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73.5%)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70.5%)에 비해 사회보장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성향에서는 보수가 74.5%로 가장 높았으며, 진보 71.6%, 무관심 71.2%, 중도 69.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6〉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사회보장권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12.1	59.4	26.8	1.7	2.8	
성별						
남자	12.0	59.0	27.0	2.0	2.8	5.426(3)
여자	12.2	59.8	26.5	1.4	2.8	
지역						
도시[동부]	11.5	58.8	28.0	1.7	2.8	58.660(3)* **
농어촌[읍면부]	15.0	62.1	21.1	1.9	2.9	
연령						
20-30대	12.0	56.7	28.7	2.6	2.8	65.730(6)* **
40-50대	11.9	59.4	27.1	1.6	2.8	
60대 이상	12.5	62.3	24.2	1.0	2.9	
학력						
고졸이하	12.5	61.4	24.5	1.5	2.8	43.395(3)* **
대재이상	11.7	57.6	28.8	1.9	2.8	
직업						
관리전문직	11.2	52.5	33.6	2.7	2.7	57.540(9)* **
사무판매서비스	12.6	58.6	27.4	1.5	2.8	
농림생산직	13.5	61.6	23.0	2.0	2.9	
비경활인구	11.2	60.9	26.3	1.7	2.8	
종교						
없음	11.6	58.8	27.6	2.0	2.8	34.027(3)* **
있음	13.0	60.5	25.2	1.3	2.9	
정치성향						
보수	12.7	61.8	23.9	1.6	2.9	78.143(9)* **
중도	10.1	59.4	29.1	1.4	2.8	
진보	14.9	56.7	26.0	2.3	2.8	
무관심	12.0	59.2	27.0	1.8	2.8	

③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84.7%로 도시 지역 82.3%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85.8%로 40-50대(82.0%), 20-30대(8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3.6%로 대학 재학 이상(81.9%)보다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 있어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84.4%로 종교가 없는 사람(81.8%)에 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에 있어서는 보수가 8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관심이 83.9%, 중도와 진보가 각각 80.6%로 나타났다.

〈표 3-37〉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7.0	65.7	16.5	0.8	3.0	
성별						
남자	16.9	65.4	16.7	0.9	3.0	2.027(3)
여자	17.2	65.9	16.3	0.6	3.0	
지역						
도시(동부)	16.4	65.9	16.9	0.8	3.0	39.309(3)* **
농어촌(읍면부)	20.0	64.8	14.7	0.6	3.0	
연령						
20-30대	15.5	65.3	18.0	1.2	3.0	48.487(6)* **
40-50대	17.3	64.7	17.4	0.6	3.0	
60대 이상	18.5	67.3	13.7	0.5	3.0	
학력						
고졸이하	17.6	66.0	15.6	0.8	3.0	14.460(3)* *
대재이상	16.5	65.4	17.3	0.7	3.0	
직업						
관리전문직	16.3	64.0	18.5	1.1	3.0	23.948(9)* *
사무판매서비스	16.3	65.5	17.5	0.8	3.0	
농림생산직	18.2	65.7	15.3	0.8	3.0	
비경활인구	17.5	66.3	15.6	0.6	3.0	
종교						
없음	16.1	65.7	17.4	0.8	3.0	29.728(3)* **
있음	18.7	65.7	14.9	0.7	3.0	
정치성향						
보수	18.2	67.9	13.4	0.5	3.0	63.704(9)* **
중도	17.5	63.1	18.4	1.0	3.0	
진보	16.9	63.8	18.6	0.7	3.0	
무관심	15.5	68.4	15.4	0.7	3.0	

④ 노동권

노동권이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74.0%로 도시 지역(69.6%)에 비해 노동권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40-50대(68.9%), 20-30대(68.4%)와 차이가 다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2.1%로 대학 재학 이상(68.8)보다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사무판매서비스직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관리전문직은 62.1%로 가장 높은 사무판매서비스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종교에 있어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71.8%)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69.6%)에 비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있어서는 보수가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보가 67.7%로 노동권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38〉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노동권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11.3	59.1	28.0	1.6	2.8	
성별						
남자	11.3	58.2	28.6	1.9	2.8	6.214(3) **
여자	11.3	59.9	27.4	1.4	2.8	
지역						
도시[동부]	10.7	58.9	28.8	1.6	2.8	62.896(3)* **
농어촌[읍면부]	14.1	59.9	24.4	1.6	2.9	
연령						
20-30대	11.3	57.1	29.5	2.1	2.8	94.967(6)* **
40-50대	10.5	58.4	29.5	1.6	2.8	
60대 이상	12.4	62.1	24.4	1.2	2.9	
학력						
고졸이하	12.0	60.0	26.5	1.4	2.8	45.198(3)* **
대재이상	10.7	58.2	29.3	1.8	2.8	
직업						
관리전문직	11.4	50.7	36.0	2.0	2.7	46.941(9)* **
사무판매서비스	11.1	60.4	26.6	1.8	2.8	
농림생산직	12.9	57.8	27.8	1.5	2.8	
비경활인구	10.7	60.2	27.6	1.5	2.8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종교						
없음	10.5	59.1	28.7	1.7	2.8	32.864(3)* **
있음	12.8	59.0	26.6	1.6	2.8	
정치성향						
보수	13.7	59.0	25.8	1.6	2.8	49.941(9)* **
중도	10.4	59.2	28.9	1.6	2.8	
진보	11.6	56.1	30.4	1.9	2.8	
무관심	10.1	61.3	27.1	1.6	2.8	

⑤ 건강권

건강권이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 연령,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86.6%)이 도시 지역(84.4%)에 비해 건강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85.9%), 20-30대(85.1%), 40-50대(83.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85.9%로 건강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농림생산직(85.2%), 사무판매서비스직(84.3%), 관리전문직(81.3%)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85.7%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84.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 성향에서는 보수가 86.6%로 건강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9〉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건강권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7.5	67.3	14.3	0.9	3.0	
성별						
남자	17.5	67.0	14.6	0.9	3.0	2.496(3)
여자	17.4	67.6	14.1	0.9	3.0	
지역						
도시[동부]	16.7	67.7	14.7	0.9	3.0	60.104(3)* **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농어촌[읍면부]	21.1	65.5	12.7	0.8	3.1	
연령						
20~30대	17.9	67.2	14.1	0.9	3.0	33.662(6)* **
40~50대	16.6	67.0	15.3	1.1	3.0	
60대 이상	18.1	67.8	13.4	0.7	3.0	
학력						
고졸이하	17.4	67.3	14.5	0.8	3.0	5.392(3)
대재이상	17.5	67.3	14.2	1.0	3.0	
직업						
관리전문직	16.6	64.8	17.1	1.5	3.0	26.329(9)* *
사무판매서비스	16.7	67.6	14.7	1.0	3.0	
농림생산직	18.5	66.7	14.1	0.7	3.0	
비경제활동인구	18.0	67.9	13.4	0.7	3.0	
종교						
없음	16.3	67.9	14.8	1.0	3.0	40.477(3)* **
있음	19.5	66.2	13.5	0.8	3.0	
정치성향						
보수	19.5	67.2	12.6	0.7	3.1	38.866(9)* **
중도	16.5	67.2	15.4	0.9	3.0	
진보	17.1	65.6	16.1	1.2	3.0	
무관심	17.1	68.9	13.2	0.9	3.0	

⑥ 교육권

교육권이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달리 교육권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88.4%)이 도시(88.8%)에 비해 권리가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이 91.4%로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30대(88.0%), 40-50대(87.3%) 순으로 나타난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9.4%로 대학 재학 이상(88.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90.2%)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관리전문직은 8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89.6%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88.3%)에 비해 권리가 존중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정치성향에서는 보수가 90.6%로 가장 높았으며, 진보가 8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40〉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교육권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22.1	66.7	10.7	0.5	3.1	
성별						
남자	22.3	66.2	10.9	0.5	3.1	1.088(3)
여자	21.8	67.1	10.6	0.5	3.1	
지역						
도시[동부]	21.6	67.2	10.6	0.5	3.1	21.036(3)* **
농어촌[읍면부]	24.4	64.1	11.2	0.4	3.1	
연령						
20-30대	22.8	65.2	11.5	0.5	3.1	69.393(6)* **
40-50대	21.3	66.0	12.1	0.7	3.1	
60대 이상	22.3	69.1	8.2	0.3	3.1	
학력						
고졸이하	21.6	67.8	10.1	0.5	3.1	11.952(3)* *
대재이상	22.5	65.7	11.3	0.6	3.1	
직업						
관리전문직	22.2	64.8	12.4	0.7	3.1	36.309(9)* **
사무판매서비스	21.2	66.1	12.0	0.7	3.1	
농림생산직	22.9	66.9	9.9	0.4	3.1	
비경활인구	22.6	67.6	9.4	0.4	3.1	
종교						
없음	21.1	67.2	11.2	0.5	3.1	35.763(3)* **
있음	23.9	65.7	9.8	0.6	3.1	
정치성향						
보수	24.8	65.8	9.2	0.2	3.2	46.963(9)* **
중도	22.1	65.4	12.0	0.5	3.1	
진보	21.1	66.0	12.0	0.9	3.1	
무관심	20.2	69.7	9.6	0.5	3.1	

⑦ 안전권

안전권이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 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81.4%로 도시 지역(76.3%)보다 안전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79.3%), 40-50대(76.6%), 20-30대(75.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8.0%로 대학 재학 이상(76.4%)에 비해 권리가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비

경제활동(77.9%), 사무판매서비스(76.0%), 관리전문직(72.9%)순으로 나타난다.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77.4%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77.1%)에 비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미세하게 높았으며, 정치 성향에서는 보수가 7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가 7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41〉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안전권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2.9	64.2	21.3	1.5	2.9	
성별						
남자	13.1	65.6	19.7	1.7	2.9	4.641(3)
여자	12.8	62.9	22.8	1.4	2.9	
지역						
도시[동부]	12.5	63.8	22.0	1.8	2.9	52.093(3)* **
농어촌[읍면부]	15.0	66.4	18.0	0.6	3.0	
연령						
20-30대	13.9	62.0	22.0	2.1	2.9	59.881(6)* **
40-50대	12.4	64.2	22.0	1.4	2.9	
60대 이상	12.6	66.7	19.6	1.1	2.9	
학력						
고졸이하	13.0	65.0	20.3	1.6	2.9	27.382(3)* **
대재이상	12.9	63.5	22.2	1.5	2.9	
직업						
관리전문직	13.6	59.3	24.9	2.2	2.8	38.193(9)* **
사무판매서비스	12.8	63.2	22.4	1.6	2.9	
농림생산직	14.0	66.4	18.3	1.3	2.9	
비경활인구	12.4	65.6	20.6	1.5	2.9	
종교						
없음	12.5	64.6	21.5	1.5	2.9	15.541(3)* *
있음	13.8	63.6	20.9	1.7	2.9	
정치성향						
보수	15.2	63.9	19.9	1.0	2.9	63.231(9)* **
중도	12.0	62.7	23.3	1.9	2.8	
진보	12.7	64.5	21.1	1.7	2.9	
무관심	12.2	66.4	20.0	1.4	2.9	

⑧ 환경권

환경권이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이 80.0%로 도시 지역(75.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78.7%로 가장 높고 40-50대가 74.3%로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7.1%로 대학 재학 이상(74.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관리전문직은 73.1%로 환경권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다.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76.6%로 환경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 성향에서는 무관심이 79.8%로 보수(77.7%), 진보(73.7%), 중도(72.8%)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3-42〉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환경권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11.2	64.7	22.9	1.2	2.9	
성별						
남자	11.0	64.5	23.3	1.2	2.9	2.528(3)
여자	11.4	64.8	22.6	1.2	2.9	
지역						
도시(동부)	10.7	64.3	23.8	1.2	2.8	60.202(3)** *
농어촌(읍면부)	13.8	66.2	18.7	1.3	2.9	
연령						
20-30대	11.2	64.0	23.6	1.2	2.9	64.653(6)** *
40-50대	10.8	63.5	24.3	1.3	2.8	
60대 이상	11.8	66.9	20.4	1.0	2.9	
학력						
고졸이하	11.6	65.5	21.7	1.2	2.9	35.959(3)** *
대재이상	10.8	63.9	24.1	1.2	2.8	
직업						
관리전문직	10.8	62.3	24.3	2.7	2.8	61.039(9)** *
사무판매서비스	10.7	62.9	25.3	1.0	2.8	
농림생산직	12.5	66.8	19.7	1.1	2.9	
비경활인구	11.2	66.1	21.5	1.1	2.9	
종교						
없음	10.9	64.6	23.4	1.1	2.9	21.982(3)** *
있음	11.8	64.8	22.0	1.3	2.9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정치성향						
보수	13.0	64.7	21.2	1.1	2.9	70.418(9)** *
중도	10.3	62.5	26.1	1.0	2.8	
진보	11.5	62.2	24.5	1.8	2.8	
무관심	10.5	69.3	19.1	1.1	2.9	

⑨ 문화권

문화권이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84.2%로 도시 지역(82.2%)에 문화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83.8%로 20-30대(82.5%), 40-50대(81.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표본이 83.1%로 대학교 재학 이상(82.0%)에 비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리전문직이 7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있어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84.7%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81.4%)에 비해 문화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 성향에서는 무관심 84.9%, 보수 83.7%, 중도 81.0%, 진보 80.7%로 무관심을 제외하면 보수와 비교하면 진보성향으로 올수록 문화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3〉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문화권

(단위: %, 점)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3.8	68.7	16.5	0.9	3.0	
성별						
남자	14.0	67.8	17.3	1.0	2.9	4.082(3)
여자	13.6	69.7	15.8	0.9	3.0	
지역						
도시[동부]	13.5	68.7	17.0	0.8	2.9	27.549(3)* **
농어촌[읍면부]	15.2	69.0	14.5	1.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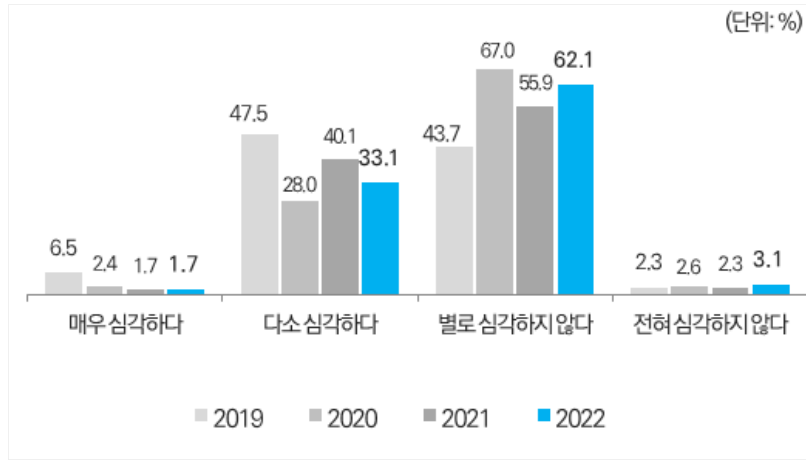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chi^2(df)$
연령						
20-30대	15.1	67.4	16.5	1.0	3.0	38.548(6)* **
40-50대	13.4	68.2	17.6	0.8	2.9	
60대 이상	12.9	70.9	15.3	0.9	3.0	
학력						
고졸이하	12.7	70.4	15.8	1.1	2.9	32.922(3)* **
대재이상	14.8	67.3	17.2	0.8	3.0	
직업						
관리전문직	15.5	64.4	18.5	1.6	2.9	57.144(9)* **
사무판매서비스	13.2	67.5	18.6	0.6	2.9	
농림수산직	13.8	71.1	14.0	1.2	3.0	
비경활인구	14.1	70.0	15.1	0.9	3.0	
종교						
없음	13.4	68.0	17.5	1.1	2.9	55.015(3)* **
있음	14.5	70.2	14.8	0.6	3.0	
정치성향						
보수	15.0	68.7	15.1	1.2	3.0	82.025(9)* **
중도	12.7	68.3	18.5	0.5	2.9	
진보	14.1	66.6	18.4	1.0	2.9	
무관심	13.9	71.0	14.0	1.1	3.0	

2) 차별의 심각성과 차별상황 및 취약집단에 대한 인식

(1) 인권침해와 차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그림 3-12]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것에 대한 응답의 추세를 보여준다. 이 질문에서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심각하다(매우+다소)는 응답이 34.8%로 심각하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 65.2%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인권침해 심각도에 대한 응답의 추세는 일관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9년(54%)과 2021년(41.8%)에 비해서는 낮고, 2020년(30.4%)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3-12]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닌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이념 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더, 60대 이상에 비해 아래 연령대가 더, 학력이 높을수록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더, 그리고 진보에 가까울수록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4〉 한국사회의 인권 침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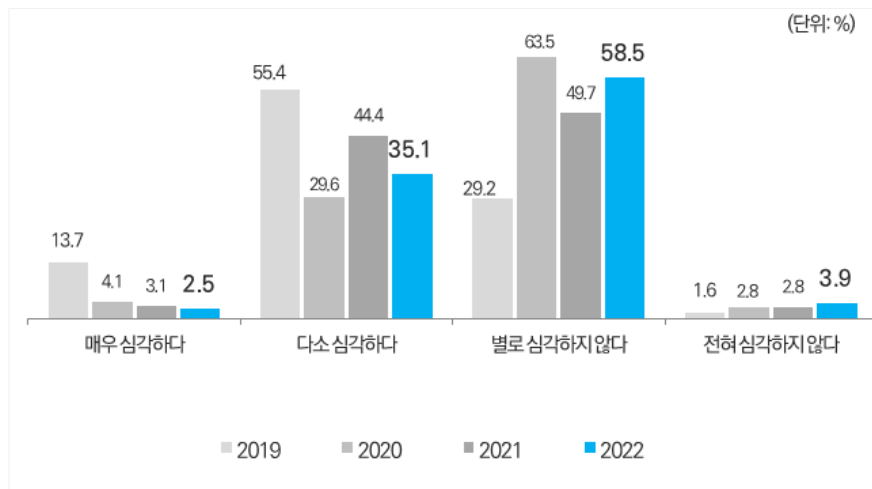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7	33.1	62.1	3.1	2.7	
성별						
남자	1.8	33.0	62.1	3.1	2.7	1.460(3)
여자	1.6	33.3	62.1	3.1	2.7	
지역						
도시[동부]	1.9	34.0	61.2	2.9	2.7	58.152(3)* **
농어촌[읍면부]	0.7	29.1	66.1	4.1	2.7	
연령						
20-30대	1.4	36.1	59.8	2.7	2.6	148.044(6)* **
40-50대	2.1	35.0	59.9	3.0	2.6	
60대 이상	1.5	27.6	67.3	3.6	2.7	
학력						
고졸이하	1.8	30.3	64.1	3.8	2.7	111.047(3)* **
대재이상	1.6	35.8	60.2	2.4	2.6	

구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평균 (4점)	X ² (df)
직업						
관리전문직	3.4	41.8	52.5	2.3	2.5	152.421(9)* **
사무판매서비스	1.7	33.8	62.1	2.5	2.7	
농림생산직	1.1	30.4	64.2	4.3	2.7	
비경활인구	1.6	31.7	63.4	3.4	2.7	
종교						
없음	1.5	31.5	63.7	3.2	2.7	28.980(3)* **
있음	2.0	36.1	59.0	2.9	2.6	
정치성향						
보수	1.9	30.0	63.9	4.2	2.7	72.952(9)* **
중도	1.7	32.9	63.1	2.3	2.7	
진보	1.9	36.3	59.0	2.7	2.6	
무관심	1.3	34.0	61.3	3.4	2.7	

[그림 3-13]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차별이 심각하다(매우+다소)는 응답이 37.6%로 심각하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 62.4% 비해 낮게 나타났다. 차별 심각도에 대한 응답의 추세 역시 인권침해 심각도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일관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9년(69.1%)과 2021년(47.5%)에 비해서는 낮고, 2020년(33.7%)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3-13] 한국 사회의 차별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추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닌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이념 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더, 그리고 진보에 가까울수록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5〉 한국사회의 차별 심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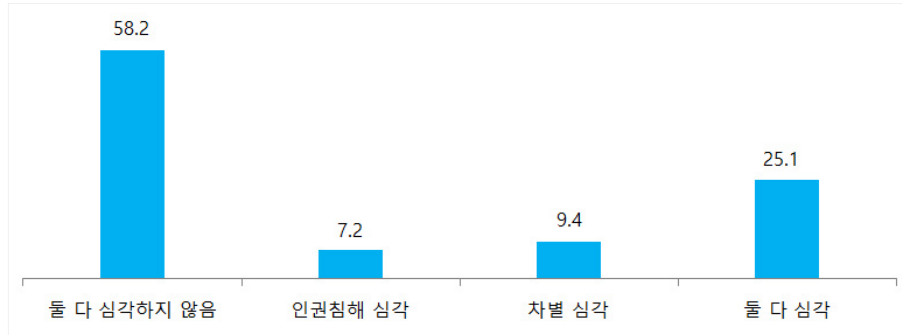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2.5	35.1	58.5	3.9	2.6	
성별						
남자	2.6	35.5	58.0	3.9	2.6	4.745(3)
여자	2.4	34.7	59.0	3.8	2.6	
지역						
도시[동부]	2.7	35.9	57.5	3.8	2.6	43.207(3)* **
농어촌[읍면부]	1.4	31.3	63.1	4.1	2.7	
연령						
20-30대	3.5	38.4	54.6	3.5	2.6	236.562(6)* **
40-50대	2.6	37.4	56.6	3.4	2.6	
60대 이상	1.3	28.5	65.4	4.8	2.7	
학력						
고졸이하	2.3	31.1	61.5	5.1	2.7	183.338(3)* **
대재이상	2.7	38.8	55.8	2.8	2.6	
직업						
관리전문직	5.7	45.5	46.1	2.7	2.5	222.640(9)* **
사무판매서비스	2.4	36.1	58.4	3.2	2.6	
농림수산직	1.6	32.1	60.8	5.6	2.7	
비경활인구	2.3	33.0	60.6	4.1	2.7	
종교						
없음	2.6	33.6	59.9	3.9	2.7	13.340(3)* *
있음	2.4	37.8	56.0	3.8	2.6	
정치성향						
보수	1.9	30.8	61.7	5.5	2.7	118.258(9) ***
중도	2.5	36.0	58.4	3.2	2.6	
진보	3.4	38.4	54.9	3.3	2.6	
무관심	2.4	35.5	58.4	3.7	2.6	

인권침해와 차별의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을 교차해서 보면, [그림 3-14]에서 볼 수 있듯이 둘 다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이 58.2%로 가장 많고, 둘 다 심각하다는 응답이 25.1%이며, 인권침해만 심각하다는 응답이 7.2%, 차별만 심각하다는 응답이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인권침해와 차별의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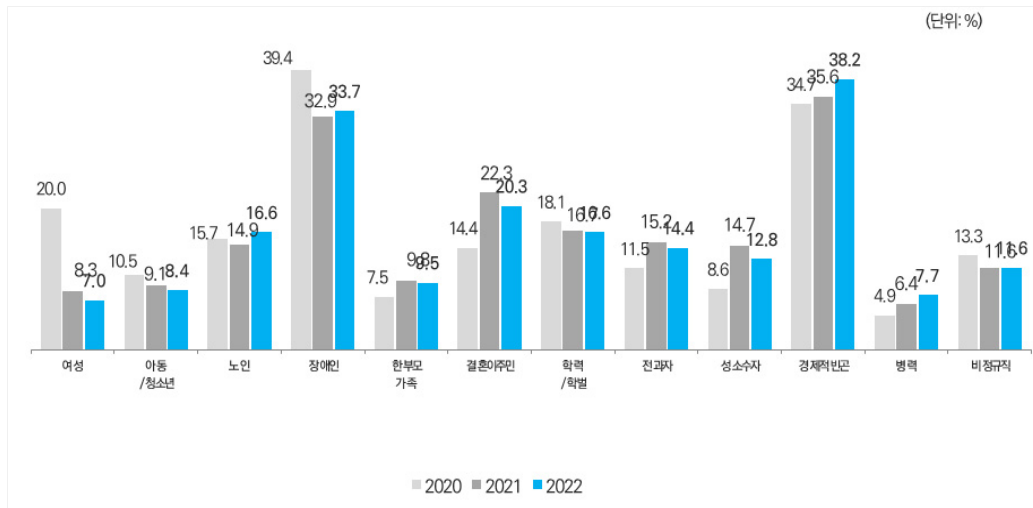
(단위: %)



(2)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및 발생하기 쉬운 상황

[그림 3-15]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응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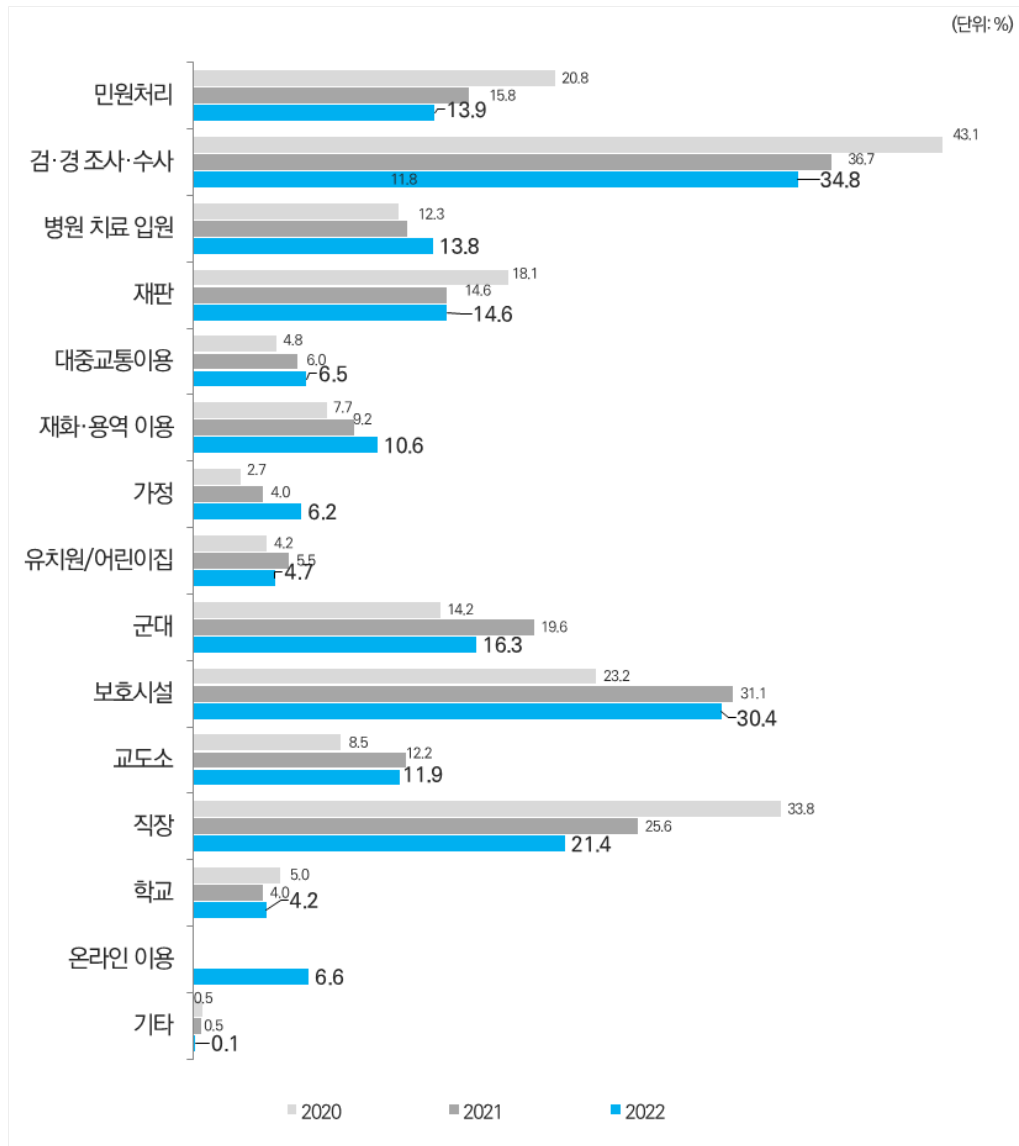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15]는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은 경제적 빈곤층(38.2%), 장애인(33.7%), 이주민(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장애인, 경제적 빈곤층, 여성 순이었던 것에 비해 바뀌었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이 대체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취약집단으로 응답한 비율이 2020년에

비해 높아진 것은 경제적 빈곤층, 이주민, 전과자와 성소수자 등이며, 낮아진 것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학력과 학별이 낮은 사람, 비정규직 등이었다.

[그림 3-16] 인권침해와 차별 발생이 쉬운 상황 응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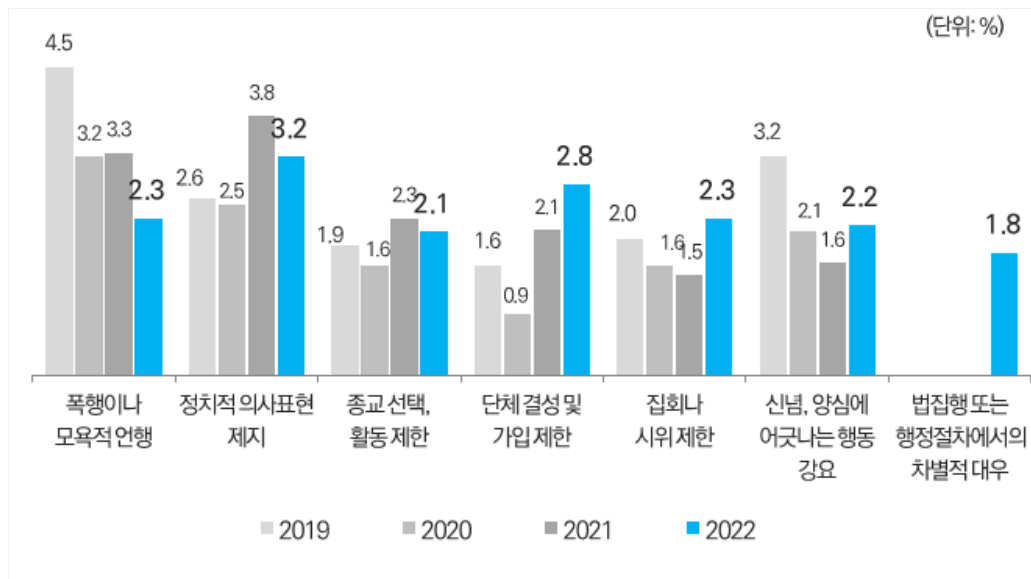
[그림 3-16]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종합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와 수사로 34.8%이다. 이것은 2020년 43.1%, 2021년 36.7%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보호시설로 30.4%가 선택했으며, 역시 2020년 23.2%에 크게 높지만, 2021년 31.1%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반면 2020년 둘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직장은 33.8%에서 2021년 25.6%, 2022년 21.4%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으로는 민원처리, 검경 조사와 수사, 직장 등이 있으며,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주로 병원 치료와 입원, 대중교통 이용, 재화와 용역 이용, 가정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다.

3) 인권침해의 경험

(1)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

[그림 3-17] 시민,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의 추이



[그림3-17]은 본인이 직접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것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4%가 채 안 되는 낮은 비율을 보인다. 그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 등으

로 2021년 3.8%에서 3.2%으로 감소했으며, 다음은 2020년 0.9% 이후 계속 증가해온 단체 결성 및 가입제한으로 2.8%이다. 2019년 4.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의 경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2.3%로 줄었다. 한편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었던 집회나 시위제한은 조금 늘어서 2.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 당했다는 응답 비율 역시 지난해에 비해 늘어서 2.2%이다. 한편 올해 새로 추가된 법집행이나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였다.

〈표 3-46〉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여부와 권리별 침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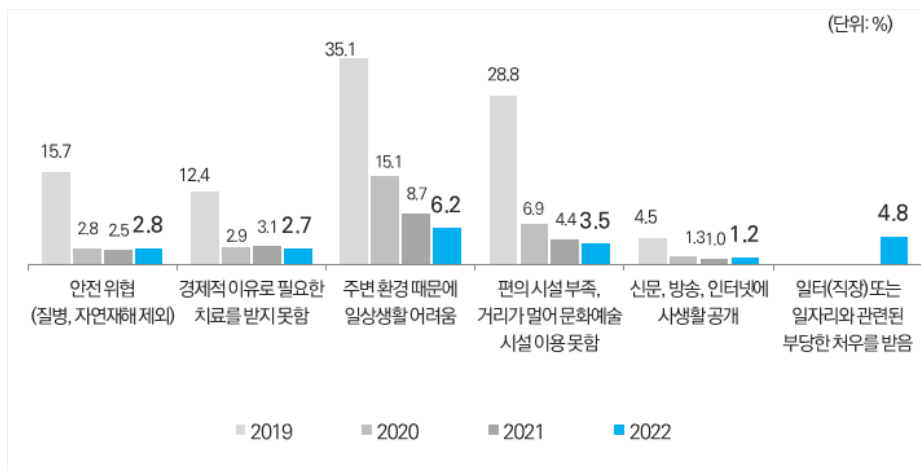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없음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정치적 의사 표현 제지, 방해, 비난, 차별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 제한	집회나 시위의 자유 제한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법집행 행정절차에서 차별 대우
전체	89.7	2.3	3.2	2.1	2.8	2.3	2.2	1.8
성별								
남자	89.5	2.2	2.9	2.0	2.9	2.4	2.2	2.0
여자	89.8	2.4	3.4	2.1	2.7	2.2	2.2	1.6
지역								
도시[동부]	89.3	2.4	3.3	2.2	2.9	2.5	2.2	1.8
농어촌[읍면부]	91.7	2.1	2.4	1.7	2.2	1.6	2.0	1.8
연령								
20~30대	89.2	2.4	3.1	2.2	3.0	2.3	2.5	1.8
40~50대	89.0	2.2	3.1	2.2	3.1	2.7	2.4	2.0
60대 이상	91.1	2.4	3.2	1.8	2.3	1.9	1.6	1.6
학력								
고졸이하	90.3	2.3	3.4	1.9	2.6	2.3	2.1	1.5
대재이상	89.1	2.4	3.0	2.3	3.0	2.4	2.3	2.1
직업								
관리전문직	82.6	2.6	3.7	3.8	4.5	3.9	3.3	4.1
사무판매서비스	88.7	2.4	3.5	2.6	3.5	2.8	2.2	1.7
농림생산직	92.3	2.3	2.0	1.3	2.2	1.9	1.9	1.1
비경활인구	91.2	2.2	3.3	1.4	2.0	1.7	2.1	1.8
종교								
없음	89.4	2.3	3.2	2.2	2.9	2.6	2.5	1.8
있음	90.3	2.4	3.0	1.8	2.6	1.8	1.7	1.9
정치성향								
보수	90.9	2.4	3.0	1.8	2.8	2.0	2.0	1.8
중도	87.5	2.3	3.8	2.8	3.3	2.6	2.8	2.2
진보	87.9	2.9	3.3	2.3	3.5	2.9	2.4	1.7
무관심	92.8	2.0	2.4	1.2	1.6	1.8	1.4	1.4

〈표 3-46〉은 시민 정치적 권리들의 침해 경험 여부와 권리별 침해 경험을 배경변수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에 비해 더, 60대 이상에 비해 다른 연령대가 더,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에 더, 그리고 정치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집회와 시위 등이며,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신념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의 경험이다. 직업별 차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집회와 시위 자유의 제한,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신념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등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의 시민, 정치적 권리의 제약이 침해 경험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2)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그림 3-18]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별 침해 경험의 비율 추이



[그림3-18]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별로 지난 1년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시민, 정치적 권리에 비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비율이 높다. 여러 권리들 중에서 환경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6.2%로 가장 높지만 2021년의 침해 경험 비율 8.7%에 낮아진 것이다. 다음으로 침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은 2022년에 새로 추가된 일터(직장)나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으로 4.8%이다. 2021년 4.4%로 침해

경험 비율 두 번째였던 문화권 침해 경험 비율은 3.5%로 낮아졌다. 대체로 2020년과 21년에 비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9년에 비해 다른 해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비율이 낮은 것은 질문 문항에 각각 분야에서 경험을 “권리 침해로” 느꼈느냐는 표현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4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경험 여부 및 권리별 침해 경험

(단위: %)

구분	없음	안전의 위험(질병 감염, 자연재해 제외)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지 못함	일터작장 일자리 관련 부당 처우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 어려움	편의 시설 부족, 거리로 문화권 침해	언론, 인터넷에 사생활 공개, 모욕적 대우
전체	85.8	2.8	2.7	4.8	6.2	3.5	1.2
성별							
남자	86.0	2.7	2.8	4.9	6.0	3.1	1.1
여자	85.6	2.9	2.5	4.7	6.4	3.8	1.2
지역							
도시[동부]	84.8	3.0	2.9	5.3	6.8	3.5	1.2
농어촌[읍면부]	90.6	2.0	1.7	2.7	3.1	3.4	0.9
연령							
20~30대	83.6	2.6	2.5	6.2	7.2	3.9	1.6
40~50대	84.5	3.1	3.0	5.2	6.9	3.9	1.0
60대 이상	89.9	2.7	2.4	2.7	4.1	2.6	0.9
학력							
고졸이하	88.4	2.7	2.7	4.0	4.6	2.7	0.8
대제이상	83.4	3.0	2.7	5.5	7.6	4.2	1.5
직업							
관리전문직	74.9	4.5	3.8	8.0	10.1	6.8	1.9
사무판매서비스	84.5	2.7	3.3	6.3	7.0	3.2	1.2
농림생산직	89.5	1.9	1.7	4.3	4.3	2.1	0.9
비경활인구	88.0	2.9	2.1	2.6	5.2	3.6	1.1
종교							
없음	86.2	2.6	2.9	5.0	5.7	3.4	1.1
있음	85.0	3.2	2.2	4.4	7.1	3.6	1.3
정치성향							
보수	88.7	2.7	2.3	3.8	5.0	2.7	1.0
중도	82.8	3.6	3.8	5.7	6.8	4.2	1.2
진보	81.7	3.4	2.5	6.2	8.5	4.3	1.9
무관심	90.1	1.5	1.6	3.6	4.7	2.7	0.7

〈표 3-47〉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별로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배경 변인별로

비교한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은 배경 변인들 중에서 지역, 연령, 학력, 직업과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성별 차이는 대체로 두드러지지 않지만 문화권의 침해 경험에서는 여성(3.8%)이 남성(3.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가 두드러진 것을 보면 도시의 노동권 침해 경험(5.3%)이 농어촌에서의 침해 경험(2.7%)에 비해, 또한 도시의 환경권 침해 경험(6.8%)이 농어촌에서의 침해 경험(3.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학력별 차이는 노동권과 환경권, 문화권의 침해 경험에서 두드러지며, 연령대별 차이 역시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침해 경험에서 크게 나타난다. 종교 유무의 차이는 다른 권리들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환경권 침해 경험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7.1%)가 그렇지 않은 경우(5.7%)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정치 성향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의 차이는 진보 성향에 가까울수록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침해 경험이 높게 나타나지만, 건강권의 경우에는 중도 성향이 보수와 진보에 비해 침해 경험 응답이 많다.

(3)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침해 개수에 대한 음이항 이항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 침해 경험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배경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빠른 고등교육 확대로 교육 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가, 아니면 남녀 간 성별 차이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등 배경 변인들이 서로 교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변량 분석을 통해 이들 효과를 서로 통제하여 비교한 결과가 아래 <표 3-48>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된 결과는 인권침해를 각각의 권리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라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1, 하나라도 권리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없는 경우를 0으로 간주하고, 권리침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binary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구분되는 권리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들을 별도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48〉 권리 유형별 침해 경험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 결과

구분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침해 경험		
	B	유의확률	Exp(B)	B	유의확률	Exp(B)
나이 (만)	-0.003	0.076	0.997*	-0.011	0.000	0.989***
성별 (여성)	0.009	0.876	1.009	0.120	0.018	1.128**
지역 (농어촌)	-0.181	0.010	0.834**	-0.419	0.000	0.658***
학력 (고졸)	-0.193	0.003	0.824***	-0.035	0.546	0.966
관리전문직	0.955	0.000	2.598***	0.861	0.000	2.366**
사무판매서비스직	0.272	0.002	1.313***	0.163	0.036	1.177**
경제활동 유무	0.011	0.901	1.011	0.047	0.546	1.048
상수항	-1.840	0.000	0.159***	-1.207	0.000	0.299***
R2		0.007			0.017	

유의수준: p*(0.1, p**(0.05, p***0.01)

전반적으로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에 비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에 대한 설명모형이 더 설명하는 정도가 높다(R2 값 비교). 연령이 높을수록 두 권리의 침해 경험 가능성이 낮지만 그 효과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 인권침해 경험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역은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모두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학력의 효과는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에 대해서만 유의한데, 고졸 이하인 경우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침해 경험의 가능성이 낮다. 고등교육이 이들 권리에 대한 권리의식을 높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활동 여부는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모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직업군별 비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모두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침해 경험의 가능성이 높다. 침해 경험의 가능성이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무서비스판매직, 그리고 농림생산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각각의 권리별로 경험의 유무를 응답하였다. 권리의 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하나의 권리 침해를 경험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권리를 함께 침해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권리 침해를 경험

했다고 응답한 경우 몇 개의 권리 침해를 경험했는지는 권리 침해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권리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 침해당한 권리의 수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가 <표3-49>에 제시되어 있다. 침해당한 권리의 발생 건수(count)의 통계적 확률분포는 일반적 변수들과 달리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 하지만 포아송 분포를 가정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발생 건수의 평균이 표준편차와 일치한다는 비현실적인 혹은 경험적으로 검증해야 할 가정을 선형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이항(negative binomial) 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3-49>는 권리 침해 경험자에 한해 몇 개의 권리가 침해되었는가에 대해 다변량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49> 권리침해 경험자의 침해 권리 건수에 대한 음이항 회귀모형 추정 결과

	B	유의확률	Exp(B)
나이 (만)	0.002	0.014	1.002**
성별(여성)	0.000	0.996	1.000
지역(농어촌)	-0.02	0.585	0.980
학력(고졸)	-0.044	0.154	0.957
관리전문직	0.044	0.418	1.045
사무판매서비스직	0.11	0.012	1.116**
경제활동 유무	-0.042	0.332	0.959
상수항	0.732	0.000	2.079***
R2		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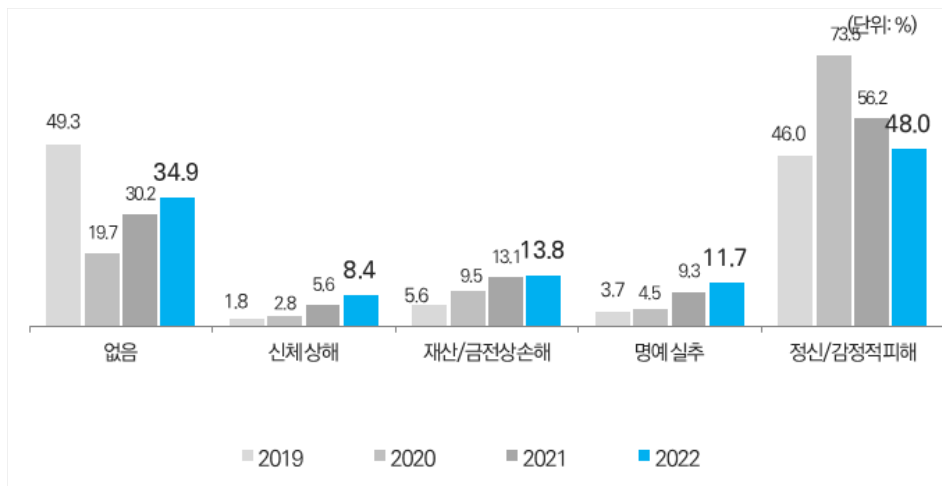
유의수준: p*(<0.1, p**(<0.05, p***(<0.01

인구학적 변인의 효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인권침해 건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고, 만 나이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앞의 분석에서 젊은 층의 인권침해 경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침해 건수에 대해서는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침해 건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과 학력, 경제활동 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사무판매서비스직의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인권침해 건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4)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

[그림 3-19]는 시민, 정치적 권리 혹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 이들 인권 침해로 어떤 피해나 불이익을 당했는지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그림 3-19]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 중에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정신적, 감정적 피해로 인권침해 경험자의 48%가 응답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피해나 불이익이 없었다는 응답으로 34.9%이며, 재산, 금전상 손해가 13.8%, 명예 실추가 11.7%, 그리고 신체 상해가 8.4%의 순이었다. 피해가 없다는 응답은 2019년에 비해 줄었지만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정신적, 감정적 피해는 2019년에 비해 늘었지만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다른 피해나 불이익 비율은 모두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50〉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와 불이익

(단위: %)

구분	없었음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 적 피해	기타
전체	34.9	8.4	13.8	11.7	48.0	1.0
성별						
남자	37.8	8.8	14.7	10.7	43.5	1.3
여자	32.1	8.0	12.9	12.5	52.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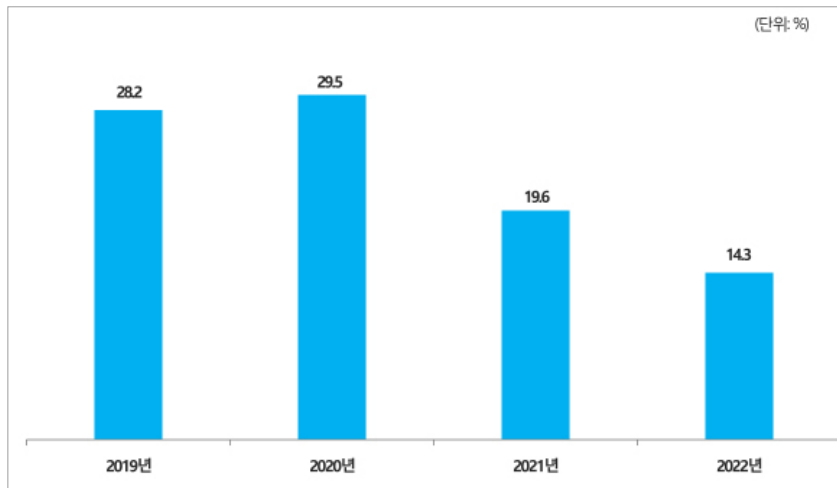
구분	없었음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기타
지역						
도시[동부]	33.0	8.3	14.2	12.4	49.1	1.1
농어촌[읍면부]	47.4	9.0	11.0	6.3	40.6	0.3
연령						
20-30대	29.1	8.0	12.7	12.1	55.4	1.3
40-50대	33.7	8.4	14.4	12.1	47.1	1.2
60대 이상	46.6	8.9	14.3	10.1	37.4	0.0
학력						
고졸이하	40.6	9.0	14.9	14.2	40.3	0.1
대재이상	30.9	8.0	13.0	9.9	53.3	1.5
직업						
관리전문직	27.1	6.8	16.4	15.1	52.9	0.0
사무판매서비스	35.9	9.5	14.3	11.2	44.8	1.4
농림생산직	39.3	5.2	14.5	9.4	46.4	0.6
비경활인구	35.4	9.0	11.6	11.6	50.7	0.9
종교						
없음	36.6	8.5	14.0	12.4	45.8	1.1
있음	31.8	8.2	13.3	10.4	52.0	0.7
정치성향						
보수	42.6	10.4	15.9	12.2	37.6	0.5
중도	36.0	9.6	13.6	12.3	46.1	0.5
진보	28.4	5.6	13.9	12.2	53.8	2.0
무관심	32.3	7.3	11.5	9.0	56.2	1.0

〈표 3-50〉은 배경 변인 별로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와 불이익의 응답 비율을 비교해서 보여준다. 성별로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나 불이익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도시와 농어촌의 비교에서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나 불이익을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응답한 비율이 농어촌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 별 비교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역시 정신적, 감정적 피해의 응답 비율이 낮은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비교를 보면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을 응답한 비율이 높고 특히 정신적, 감정적 피해의 응답 비율이 높지만, 사회적 명예의 실추 응답은 고졸 이하인 경우가 대학 재학 이상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는 종교를 가진 경우에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을 입었다는 응답이 높았고 정신적, 감정적 피해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정치성향별 비교에서는 진보에 가까울수록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주된 차이가 정신적, 감정적 피해에서 나타나지만,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는 응답 비율은 보수에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난다.

4) 차별의 경험

(1) 차별 경험 비율 및 사유별 차별 경험

[그림 3-20] 차별 경험 비율의 추이



어떤 사유에서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제시한 [그림 3-20]을 보면, 2019년의 28.2%, 2020년의 29.5%, 2021년의 19.6%에 2022년에는 14.3%의 응답자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서 차별 경험 응답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표 3-51〉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배경별로 비교한 것이다. 성별,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와 정치성향 모두 차별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이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 차별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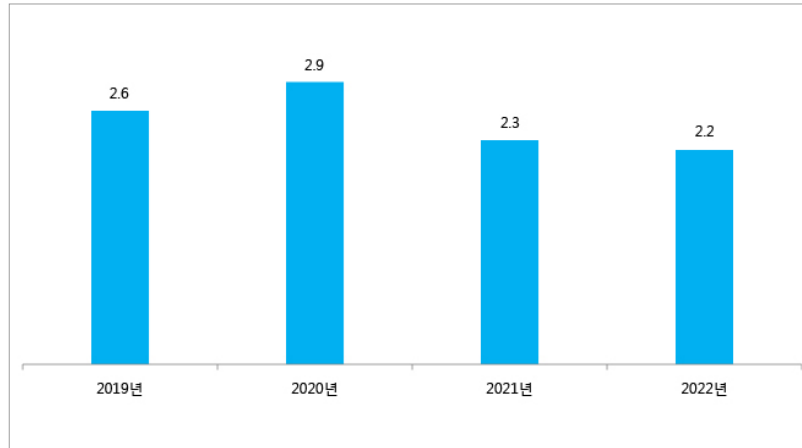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차별 경험 없음	차별 경험 있음	$\chi^2(df)$
전체	85.7	14.3	
성별			
남자	87.3	12.7	17.819(1)***
여자	84.2	15.8	
지역			
도시[동부]	84.4	15.6	137.533(1)***
농어촌[읍면부]	91.9	8.1	
연령			
20~30대	82.6	17.4	90.886(2)***
40~50대	85.6	14.4	
60대 이상	89.4	10.6	
학력			
고졸이하	86.5	13.5	20.055(1)***
대재이상	84.9	15.1	
직업			
관리전문직	76.5	23.5	123.174(3)***
사무판매서비스	85.3	14.7	
농림생산직	88.4	11.6	
비경활인구	87.2	12.8	
종교			
없음	83.7	16.3	16.183(1)***
있음	86.1	13.9	
정치성향			
보수	88.9	11.1	66.478(3)***
중도	85.2	14.8	
진보	80.8	19.2	
무관심	87.3	12.7	

[그림 3-21]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차별을 당한 사유의 평균 개수를 연도별로 나타낸다. 2019년 2.6개, 2020년 2.9개, 2021년 2.3개였던 차별 사유의 평균 개수는 2022년 2.2개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차별 경험의 비율과 함께 차별을 당한 사유의 개수도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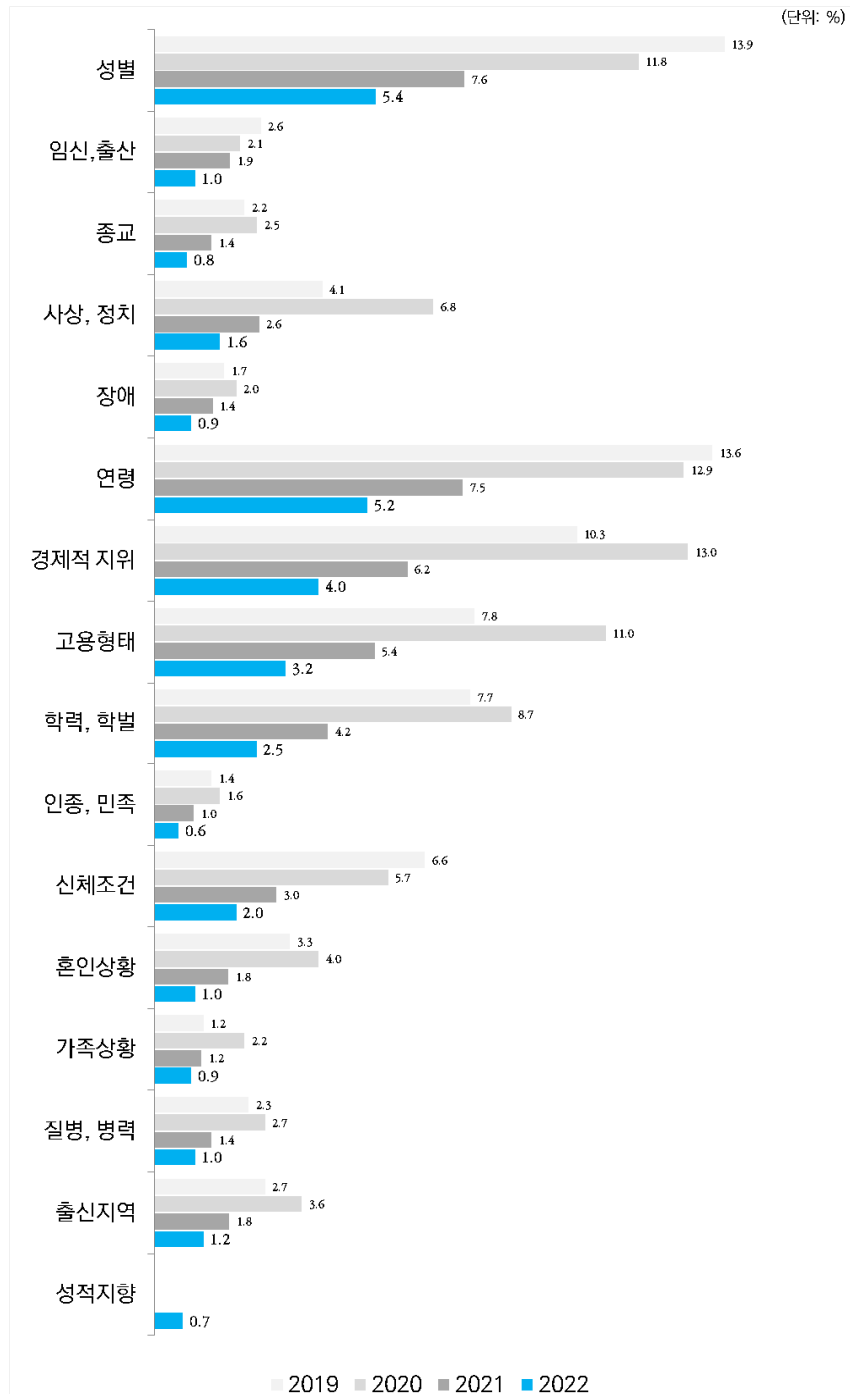
[그림 3-21] 차별 경험 응답자의 평균 차별 사유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그림 3-22]는 차별 사유별로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가장 차별 경험 응답이 높은 것은 5.4%의 남녀 차별이며, 다음은 5.2%의 연령 차별, 4.0%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다. 전반적으로 2020년 이후 차별 경험 비율이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해 낮아졌다.

[그림 3-22]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추이



〈표 3-52〉는 성별, 임신/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입장, 장애, 연령, 경제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경험에 대한 배경 변인별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표 3-52〉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1)

(단위: %)

구분	성별	임신/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입장	장애	연령	경제 지위	고용 형태
전체	5.4	1.0	0.8	1.6	0.9	5.2	4.0	3.2
성별								
남자	3.1	0.0	0.6	1.4	1.0	4.4	4.3	3.0
여자	7.6	2.0	1.0	1.8	0.8	6.0	3.8	3.4
지역								
도시(동부)	5.9	1.1	0.9	1.8	0.9	5.9	4.5	3.6
농어촌(읍면부)	3.0	0.7	0.4	0.8	0.7	2.0	2.0	1.4
연령								
20-30대	9.4	1.9	1.0	2.2	1.2	5.8	4.9	4.4
40-50대	4.5	0.9	0.9	2.1	0.9	4.0	4.7	3.7
60대 이상	2.1	0.2	0.5	0.4	0.6	6.1	2.2	1.4
학력								
고졸이하	3.4	0.4	0.6	0.9	0.9	5.2	3.3	2.9
대재이상	7.2	1.5	1.0	2.3	0.9	5.2	4.7	3.5
직업								
관리전문직	10.6	1.6	2.3	4.1	1.8	6.6	7.1	5.2
사무판매서비스	6.2	1.2	0.7	1.8	0.7	4.8	4.6	3.8
농림생산직	3.2	0.3	0.4	0.9	1.0	3.9	4.4	4.1
비경활인구	4.3	1.0	0.7	1.2	0.9	5.9	2.5	1.8
종교								
없음	5.3	0.9	0.6	1.5	0.7	4.6	4.0	3.1
있음	5.6	1.2	1.2	1.8	1.2	6.2	4.1	3.4
정치성향								
보수	3.3	0.4	0.7	0.9	0.6	5.2	2.6	1.9
중도	5.6	1.3	1.0	1.9	0.9	5.2	4.2	3.3
진보	8.3	1.5	1.0	3.0	1.1	5.8	5.6	4.8
무관심	4.9	0.7	0.4	0.9	1.0	4.7	4.0	3.2

각 차별 사유와 관련된 변수가 차별 경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 종교에 따른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사상,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별은 20-30대와 60대 이상이 모두 4-50대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고용형태와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관리전문직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인데 차별이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문직의 비판적 사회의식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대부분의 사유에 대해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학력이 대졸 이상일수록, 도시가 농촌에 비해 더,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차별 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3〉은 학력/학벌, 인종과 민족,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병력, 출신지역,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경험 여부의 배경변인별 응답 비율이다.

〈표 3-53〉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2)

(단위: %)

구분	학력/ 학벌	인종, 출신국/ 민족, 피부색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 병력	출신지역	성적지향/ 성정체성
전체	2.5	0.6	2.0	1.0	0.9	1.0	1.2	0.7
성별								
남자	2.4	0.6	1.7	0.6	0.6	1.0	1.2	0.8
여자	2.5	0.6	2.2	1.5	1.2	1.0	1.2	0.7
지역								
도시[동부]	2.8	0.7	2.2	1.2	0.9	1.1	1.3	0.8
농어촌[읍면부]	0.8	0.3	0.7	0.4	0.5	0.5	0.8	0.3
연령								
20-30대	4.2	1.0	3.5	1.5	1.1	1.0	1.5	1.4
40-50대	2.2	0.7	1.8	1.1	1.0	1.2	1.3	0.5
60대 이상	0.8	0.2	0.5	0.5	0.4	0.7	0.7	0.2
학력								
고졸이하	2.2	0.5	1.2	0.7	0.7	0.8	0.7	0.4
대재이상	2.7	0.8	2.7	1.4	1.0	1.1	1.6	1.0
직업								
관리전문직	4.8	0.9	3.9	1.5	1.4	1.4	2.9	1.3
사무판매서비스	2.7	0.6	2.3	1.3	1.1	0.9	1.1	0.8
농림생산직	2.3	0.6	0.9	0.6	0.6	0.7	0.8	0.4
비경활인구	1.7	0.7	1.7	0.8	0.6	1.1	1.0	0.6
종교								
없음	2.6	0.5	1.7	0.8	0.7	0.8	1.1	0.7
있음	2.3	0.9	2.5	1.5	1.1	1.3	1.4	0.9
정치성향								
보수	1.5	0.3	0.9	0.4	0.4	0.7	0.8	0.3
중도	2.7	0.8	2.3	1.2	1.1	1.0	1.3	0.7
진보	3.5	0.8	2.8	1.9	1.2	1.5	1.9	1.3
무관심	2.3	0.6	1.9	0.8	0.8	0.9	0.9	0.8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이 대졸 이상에서 더 높은 비율은 보이는 것은 대졸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벌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인다. 신체조건과 혼인상황, 가족 상황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 그리고 젊은 층에서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다 높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차별 사유에 대해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더,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 이상과 관리전문직이, 그리고 종교가 있거나 정치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차별 경험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 차별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차별 사유 개수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

인권침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차별 경험 역시 다변량 분석이 필요하다. 연령, 직업, 학력, 지역, 성별이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 배경변인들이 서로의 효과에 영향을 주거나, 서로 결합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3-54>는 차별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차별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간주하고, 연령, 성별, 지역, 학력, 직업, 경제활동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54> 차별 경험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 결과

구분	B	유의확률	Exp(B)
나이 (만)	-0.012	0.000	0.988***
성별 (여성)	0.281	0.000	1.324***
지역 (농어촌)	-0.722	0.000	0.486***
학력 (고졸)	-0.136	0.016	0.873**
관리전문직	0.663	0.000	1.94***
사무판매서비스직	-0.048	0.524	0.953
경제활동 유무	0.135	0.071	1.144*
상수항	-0.855	0.000	0.425***
R2		0.02	

유의수준: p* < 0.1, p** < 0.05, p*** < 0.01

차별 경험에 대한 다변량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은 유의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연령이 젊을수록 차별 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또한 도시 거주자가 농어촌 거주자에 비해 유의하게 차별 경험의 가능성이 높았다.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에 비해 차별 경험의 가능성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차별 경험의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관리전문직이 다른 직종들에 비해 차별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5〉는 인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사유별 차별 건수를 차별 경험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대해 몇 건의 차별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배경변수들의 효과를 다변량 음이항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이다. 인권침해 건수와 마찬가지로 발생건수라는 변수의 분포적 특성을 고려해서 음이항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3-55〉 차별 경험의 건수에 대한 음이항 회귀모형 추정 결과

구분	B	유의확률	Exp(B)
나이 (만)	-0.009	0.000	0.991***
성별 (여성)	0.101	0.008	1.106***
지역 (농어촌)	-0.093	0.099	0.911*
학력(고졸)	0.063	0.117	1.065
관리전문직	0.088	0.207	1.092
사무판매서비스직	-0.069	0.232	0.933
경제활동 유무	0.156	0.007	1.169
상수항	0.763	0.000	2.145***
R2		0.016	

유의수준: p*(<0.1, p**(<0.05, p***(<0.01

연령 효과는 인권침해 건수와 반대로 유의하게 부정적이다. 젊은 층이 더 많은 건수의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차별 건수가 더 많았고, 지역 비교에서도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차별 건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경제활동 여부의 효과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차별 건수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앞의 차별 경험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차별 건수에 대한 학력과 직업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유별 차별의 유형

〈표 3-56〉은 차별 사유별로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차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유형별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가장 차별 경험이 많은 남녀 차별의 경우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된 차별이 3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5.7%로 2021년의 28.6%에 비해 크게 늘었다.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비율은 33.0%였다.

〈표 3-56〉 차별 사유별 경험 유무 비율

(단위: %)

차별 이유	차별 경험	차별 유형			
	있다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 차별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당하는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성별	5.4	33.0	39.6	35.7	10.7
임신, 출산	1.0	8.6	66.5	25.8	7.1
종교	0.8	31.6	30.6	28.8	26.3
사상, 정치	1.6	39.6	23.4	21.8	31.8
장애	0.9	31.9	28.6	33.4	33.9
연령	5.2	17.7	42.1	32.5	17.3
경제적 지위	4.0	23.6	40.6	27.1	21.5
고용형태	3.2	20.5	65.1	10.9	13.6
학력, 학벌	2.5	17.8	62.5	18.4	14.3
인종, 민족	0.6	15.2	43.7	26.0	25.0
신체조건	2.0	33.7	25.6	37.4	20.8
혼인상황	1.0	26.3	36.8	25.6	22.3
가족상황	0.9	20.2	35.2	26.0	31.0
질병, 병력	1.0	29.3	30.5	21.8	30.3
출신지역	1.2	28.1	31.3	16.0	29.2
성적 지향	0.7	30.7	33.0	14.7	37.9

남녀 차별 다음으로 경험이 많은 연령 차별의 경우도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된 차별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한다는 응답도 32.5%였다. 그밖에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비율은 17.7%, 따돌림이나 배제를 당한다는 비율은 17.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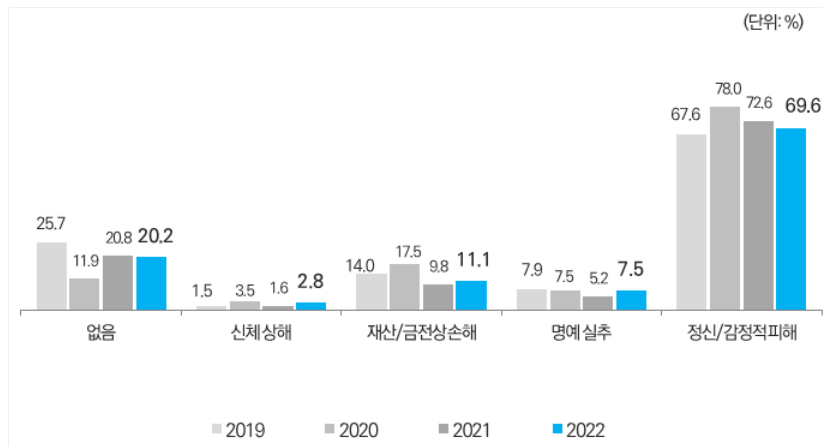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차별의 유형은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된 차별로 성별이나 연령 외에도 고용형태(65.1%), 임신과 출산(66.5%), 학력과 학벌(62.5%), 경제적 지위(40.6%), 혼인 상황(36.8%), 성적 지향(33.0%)에 따라 일자리 관련 차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할 때(33.4%)나 따돌림과 배제를 당하는 경우(33.9%)가 많았다. 또한 장애 외에도 성적 지향(37.9%), 사상과 정치지향(31.8%)에 따라 따돌림과 배제를 당한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4)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

[그림 3-23]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피해나 불이익을 당했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차별 경험이 있는 사람의 69.6%가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해서 가장 많았다. 이것은 2020년의 78%, 2021년의 72.6%에 비해 줄은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산, 금전상 손해로 11.1%, 명예 실추 7.5%, 신체적 상해 2.8% 순이었다. 별다른 피해나 불이익이 없었다는 응답은 20.2%로 2020년의 11.9%에 비해 늘었으며, 2021년의 20.8%와 비슷하다.

[그림 3-23]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



〈표 3-57〉은 차별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응답을 배경변인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차별 경험의 비율은 높지만, 신체적, 재산적, 사회적 명예의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남성이 더 높다. 여성의 경우 별다른 피해가 없었거나 심리적, 정신

적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비교에서는 60대 이상에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반면, 20-30대에서는 재산, 명예,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다. 학력 간 비교에서는 고졸 이하가 별다른 피해가 없었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는데 이는 연령과 학력의 상관관계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경우에 더, 그리고 정치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신체, 재산, 명예의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7〉 차별에 따른 피해와 불이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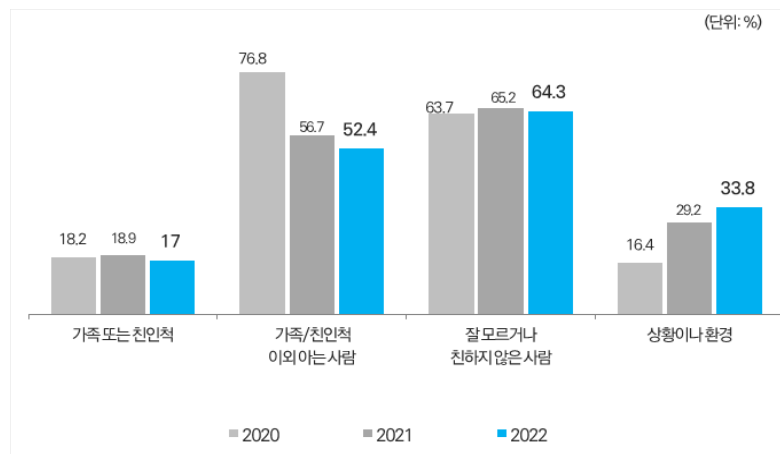
구분	없었음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전체	20.2	2.8	11.1	7.5	69.6
성별					
남자	19.6	3.4	12.8	8.8	68.0
여자	20.6	2.4	9.8	6.5	71.0
지역					
도시(동부)	20.0	3.1	11.7	7.8	69.2
농어촌(읍면부)	22.1	0.2	6.0	5.1	73.4
연령					
20-30대	19.3	1.4	11.6	8.0	70.6
40-50대	19.6	3.7	12.5	7.5	69.6
60대 이상	22.8	4.0	7.7	6.6	68.1
학력					
고졸이하	21.7	4.0	9.5	6.4	68.7
대재이상	19.0	1.9	12.3	8.4	70.4
직업					
관리전문직	16.9	4.3	19.4	11.8	67.6
사무판매서비스	19.8	3.0	11.5	7.9	68.6
농림생산직	24.5	1.6	7.3	3.6	70.4
비경활인구	20.2	2.5	8.7	6.9	71.5
종교					
없음	22.3	2.3	10.3	6.5	67.7
있음	17.0	3.6	12.3	9.0	72.7
정치성향					
보수	20.7	6.0	12.8	6.6	66.4
중도	21.4	1.5	8.9	7.8	68.7
진보	13.1	3.0	14.7	9.6	75.8
무관심	26.0	2.0	9.0	5.5	66.7

5) 인권침해, 차별의 가해자와 대응

(1)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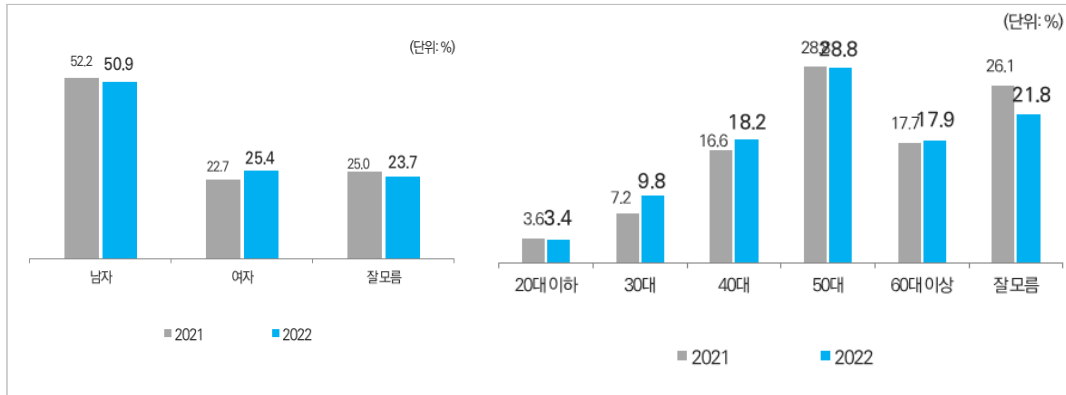
[그림 3-24]는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해자가 본인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응답 비율 추이를 보여준다. 이때 응답 비율은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이다. 가해자와의 관계들 중에서는 가해자가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다.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응답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이 가족,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으로 52.4%이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가 가족,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은 비율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인권침해나 차별이 상황이나 환경의 결과라는 응답의 비율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림 3-24]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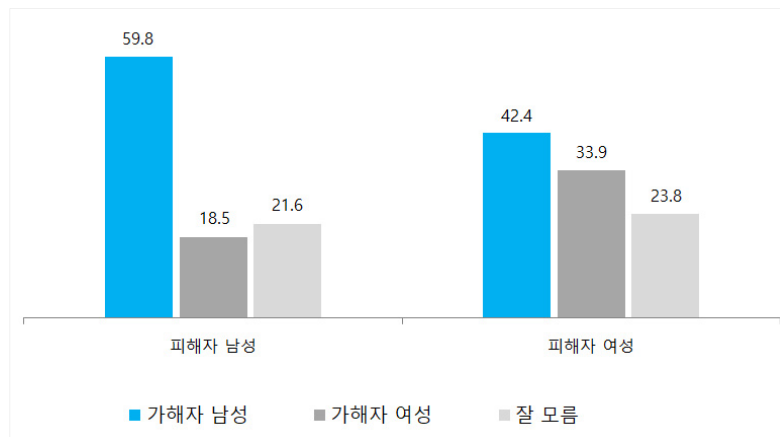
[그림 3-25]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의 분포이다.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0.9%로 여성 25.4%의 두 배이며, 연령대는 50대가 28.8%, 40대가 18.2%, 60대 이상이 17.9%로 50대가 가장 많다.

[그림 3-25]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의 성별, 연령대 비율



[그림 3-26]은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대한 응답을 교차 분류한 것이다. 피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 비해 여성일 경우에 가해자가 여성인 비율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6] 인권침해 및 차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응답 교차분석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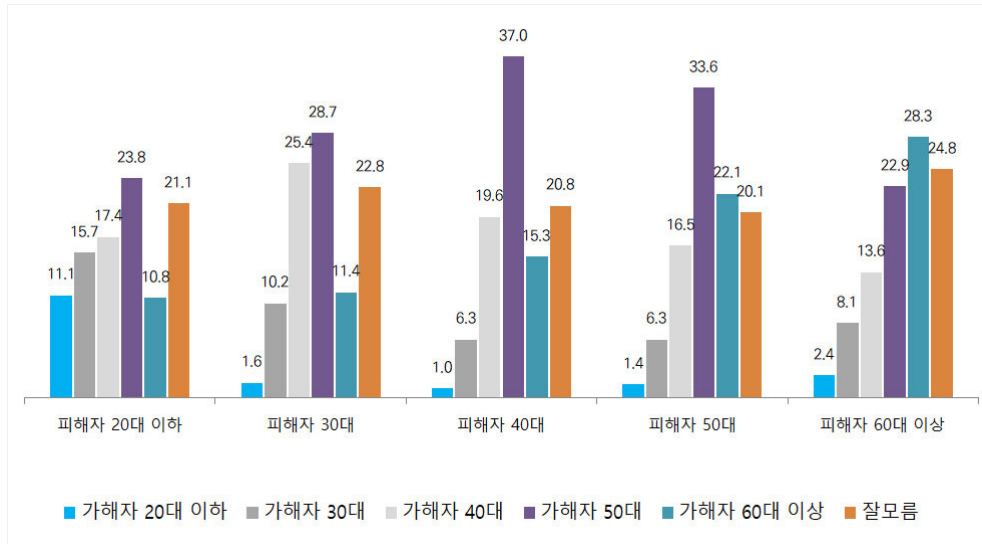


[그림 3-27]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에 대한 응답을 교차 분류한 결과이다. 20대에서 50대의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으며 60대 이상 피해자는 비슷한 연령대인 경우가 가장 많다. 20대에서 50대 피해자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연령대가 더 높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유유서의 유교적 연

령주의가 강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27] 인권침해 및 차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별 응답 교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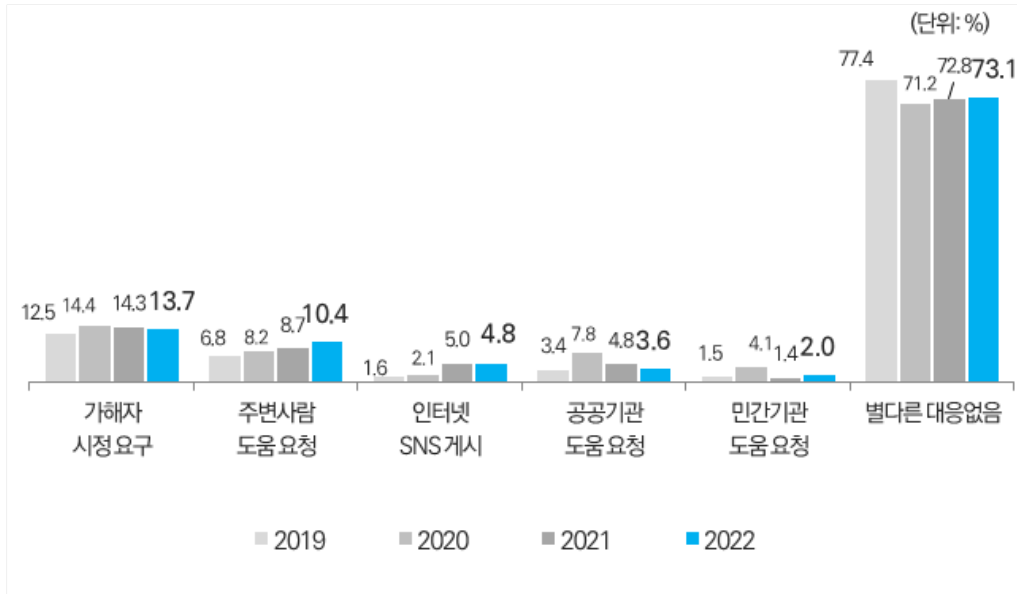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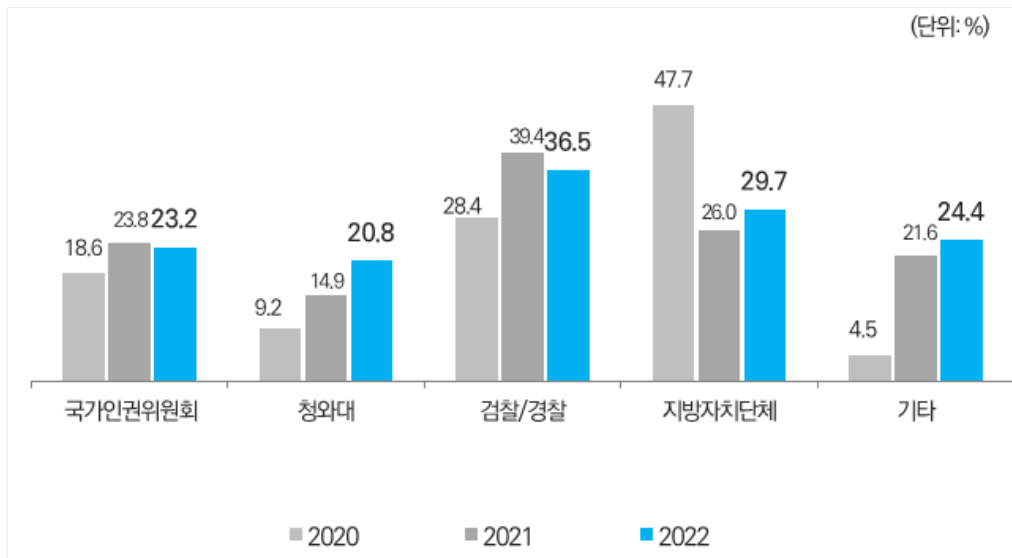
(2)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

[그림 3-28]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이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3.1%로 가장 많다. 그 비율은 2019년보다 줄었지만, 2020년 조금 씩 늘고 있다.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13.7%였으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가 10.4%,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한 경우가 4.8%,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각각 3.6%와 2.0%이다.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의 비율 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지 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림 3-28]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



[그림 3-29]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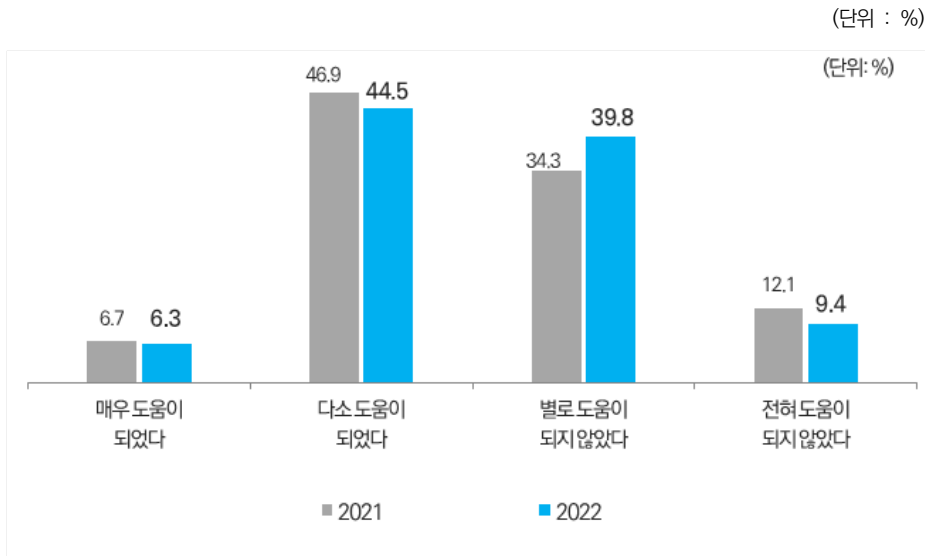


[그림 3-29]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중복응답을 허용할 경우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로 36.5%이고, 다

음은 지방자치단체로 29.7%, 기타 국가기관 24.4%, 국가인권위원회 23.2%, 청와대 20.8%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2020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이후 감소했으며,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비율은 가장 낮지만 2020년 이후 계속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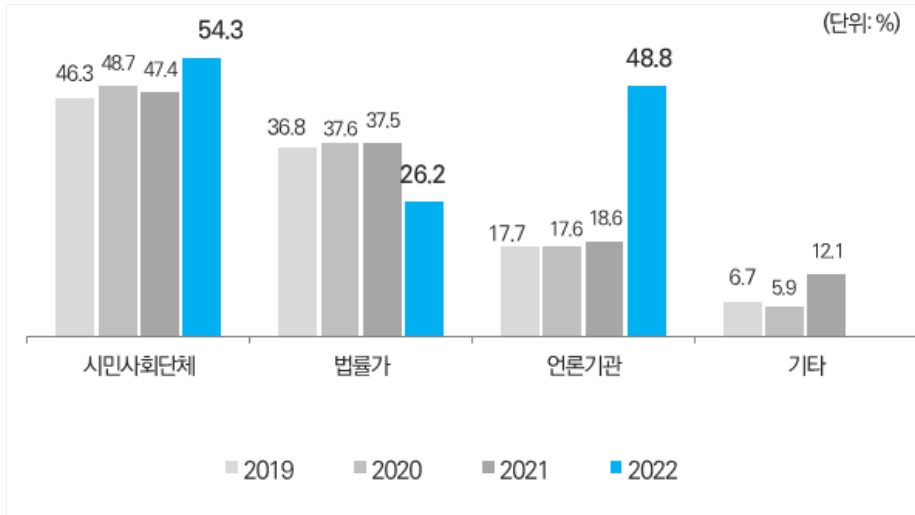
[그림 3-30]은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은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이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 49.2%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2021년 53.6%에 비해 2.8%p 낮아졌다.

[그림 3-30]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의 결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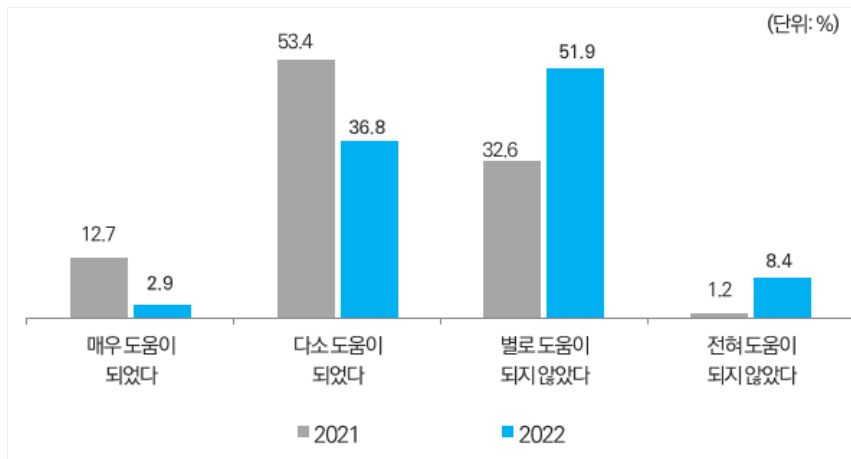
[그림 3-31]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의 중복응답 비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시민사회단체로 54.3%이고, 다음은 언론기관으로 48.8%, 그리고 법률가 26.2% 순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언론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반면, 법률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그림 3-31] 민간기관 도움 요청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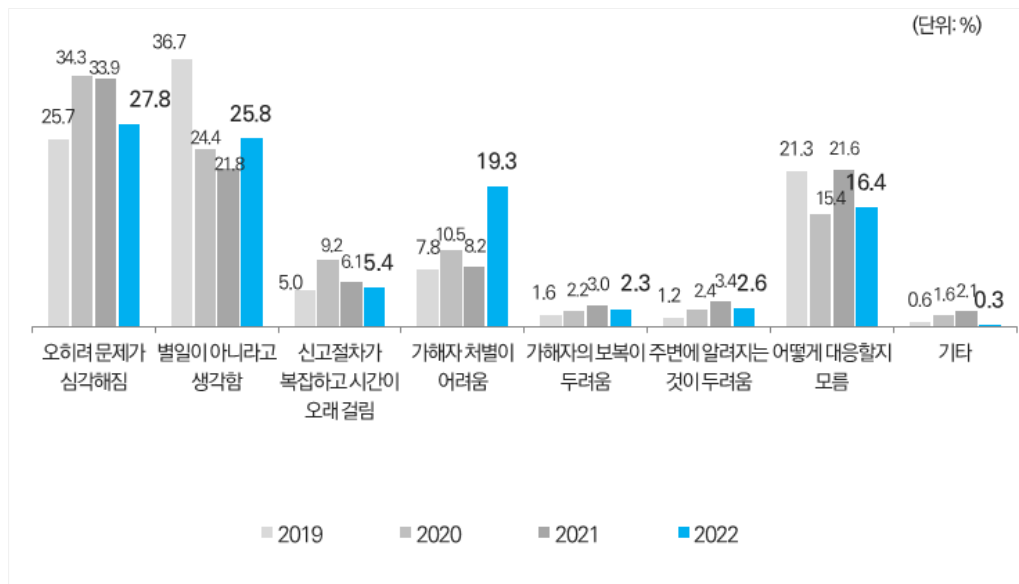
[그림 3-32]는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은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이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7%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 60.3%에 비해 낮다. 이 결과는 2021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66.1%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 33.8%를 크게 앞선 것과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그림 3-32] 민간기관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



[그림 3-33]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를 물은 것에 대한 응답의 연도별 추이이다. 많이 응답한 이유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으로 27.8%이며 다음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대로 25.8%,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서 19.3% 순이다.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응을 안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2020년 이후 계속 줄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021년에 비해 11.1%p나 늘어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4%로 2021년에 비해 줄었다.

[그림 3-33]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시 아무 대응하지 않은 이유의 연도별 추이



6)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의 결과

인권침해와 차별은 사회적 차원에서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트라우마가 되어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한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변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표 3-58〉은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이 피해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변량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때 삶의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우 불만족인 0점에서 매우 만족인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022년부터 설문 문항으로 추가된 삶의 만족도 측정 결과는 평균이 6.45점이며, 이 결과는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삶의 만족도 평균 6.3점과 근사하다.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연속변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영향은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3-58〉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의 영향에 대한 다변량 회귀모형 추정 결과

구분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연령	-0.037***	0.000	-0.037***	0.000
연령제곱	0.038***	0.000	0.038***	0.000
성별(남자)	-0.060	0.108	-0.060	0.106
지역(도시)	-0.099**	0.019	-0.098**	0.019
학력(중졸)	-0.617***	0.000	-0.616***	0.000
학력(고졸)	-0.287***	0.000	-0.287***	0.000
직업(관리전문직)	0.252***	0.005	0.250***	0.005
직업(사무직)	0.361***	0.000	0.358***	0.000
직업(서비스판매직)	0.147**	0.048	0.145*	0.051
직업(생산직)	0.167**	0.039	0.165**	0.041
직업(농림어업)	0.621***	0.000	0.620***	0.000
경제활동여부	-0.140**	0.046	-0.139**	0.049
월평균 가구소득	0.143***	0.000	0.143***	0.000
인권침해, 차별 경험 정도	-0.419**	0.000		
인권침해 경험			-0.398***	0.000
차별 경험			-0.443***	0.000
상수항	7.015***	0.000	7.016***	0.000
결정계수(R2)	0.102		0.102	

유의수준: p*〈0.1, p**〈0.05, p***〈0.01

회귀모형에는 일반적인 배경 변수들과 함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소득 변수를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추가하였으며, 연령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2차 함수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연령제곱을 추가하였다.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은 각각을 별도의 변수로 추가한 모형과 함께, 이들 중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를 1, 둘 다 경험한 경우를 2,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간주한 단일 변수를 이용한 모형을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은 예상대로 2차함수적인 관계 즉 연령이 높아지면서 삶의 만족도와 U자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거주자가 농어촌 거주자에 비해 낮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직업에 따라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관된 패턴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효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모형의 주요 관심 변수인 차별 경험과 인권침해 경험은 모두 독립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는 큰 차이는 없으나 차별 경험이 인권침해 경험보다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정도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모두 경험한 경우 하나만 경험한 경우보다 더, 그리고 하나만 경험한 경우는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와 차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 여부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 그리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59>는 인권침해와 차별로 나누어 각각의 경험에 경험의 건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고 또한 피해와 불이익의 종류를 신체, 재산, 명예의 피해와 심리적, 정신적 피해, 그리고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가변수로 추가한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표 3-59> 삶의 만족도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건수,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회귀모형 추정 결과

구분	인권침해		차별	
	B	유의수준	B	유의수준
연령	-0.037	0.000	-0.038	0.000
연령제곱	0.039	0.000	0.039	0.000
성별(남자)	-0.056	0.131	-0.057	0.129
지역(도시)	-0.111	0.009	-0.104	0.014
학력(중졸)	-0.614***	0.000	-0.600***	0.000
학력(고졸)	-0.285***	0.000	-0.288***	0.000
직업(관리전문직)	0.282***	0.002	0.207**	0.020

구분	인권침해		차별	
	B	유의수준	B	유의수준
직업(사무직)	0.399**	0.000	0.331***	0.000
직업(서비스판매직)	0.172**	0.021	0.124*	0.097
직업(생산직)	0.208**	0.010	0.150*	0.064
직업(농림어업)	0.646***	0.000	0.604***	0.000
경제활동여부	-0.166**	0.019	-0.122*	0.085
월평균 가구소득	0.143**	0.000	0.145***	0.000
경험여부	-0.223**	0.039	-0.295***	0.009
경험개수	0.049	0.171	-0.106***	0.000
피해(신체, 재산, 명예)	-0.804***	0.000	-0.153	0.292
피해(심리, 정신적)	-0.576***	0.000	-0.074	0.531
상수항	6.988**	0.000	7.000***	0.000
결정계수(R2)	0.980		0.101	

유의수준: p*(<0.1, p**(<0.05, p***(<0.01

다른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앞의 모형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인권침해의 경우를 보면 인권침해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반면, 침해경험의 건수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 재산, 명예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심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 또한 심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다른 피해나 불이익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차별의 경우를 보면 차별 경험 역시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유의한 효과를 가지며, 차별 경험의 건수가 많을수록 추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아지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유의했던 피해 유형의 차이가 차별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의 경험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겪게 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의 의지나 주체적 의식과 관련이 깊다. 인권침해와 경험이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면 대응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권침해와 경험에 대한 대응을 추가한 회귀분석 결과가 <표 3-60>에 제시되어 있다.

〈표 3-60〉 삶의 만족도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과 대응에 대한 회귀모형 추정 결과

구분	B	유의확률
연령	-0.047**	0.036
연령제곱	0.051**	0.018
성별(남자)	0.138	0.226
지역(도시)	-0.493***	0.001
학력(중졸)	-0.416**	0.042
학력(고졸)	-0.144	0.247
직업(관리전문직)	-0.114	0.650
직업(사무직)	0.088	0.731
직업(서비스판매직)	-0.226	0.338
직업(생산직)	-0.048	0.858
직업(농림어업)	0.868**	0.012
경제활동여부	-0.151	0.520
월평균 가구소득	0.229***	0.000
인권침해, 차별 경험 정도	-0.493***	0.000
대처(항의, 시정요구)	0.275**	0.062
대처(주변도움요청)	0.010	0.945
상수항	7.231***	0.000
결정계수(R ²)	0.110	

유의수준: p*(<0.1, p**(<0.05, p***(<0.01

다른 배경변수들의 통제효과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인권침해와 차별의 추가적 효과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대응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보면 항의나 시정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단측 검정으로 유의하게($p<0.1$)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효과가 인권침해와 차별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을 상쇄할 만큼은 아니지만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는 보인다. 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의 인권상황 평가에 대한 영향: 순서형 로짓분석

인권침해와 차별은 이를 경험한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인권상황에 대

한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는 본인에 대해, 사회의 취약집단과 소수자에 대해,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인권 존중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4점 척도로 물었다. 다른 배경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응답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순서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아래 <표 3-61>에 제시되어 있다.

<표 3-61>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의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에 대한 순서형 회귀모형 추정 결과

구분	본인		소수자, 취약집단		사회 전반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임계값(1)	-2.091***	0.000	-3.189***	0.000	-4.130***	0.000
임계값(2)	2.300***	0.000	-0.257***	0.009	-0.478***	0.000
임계값(3)	5.815***	0.000	2.987***	0.000	3.606***	0.000
연령	0.000	0.950	0.004***	0.000	0.005***	0.000
성별(남성)	0.038	0.356	0.009	0.791	0.016	0.640
지역(도시)	0.205***	0.000	0.026	0.514	0.067	0.119
비경제활동	0.198**	0.028	0.207***	0.004	0.180**	0.020
직업(관리전문직)	0.420***	0.000	-0.143	0.114	-0.200**	0.038
직업(사무직)	0.298***	0.004	-0.417***	0.000	-0.193**	0.030
직업(서비스판매직)	0.183*	0.055	-0.239***	0.002	-0.159*	0.051
직업(생산직)	0.240**	0.027	0.227***	0.009	0.211	0.023
직업(농림어업직)	0.255**	0.030	0.318***	0.001	0.476***	0.000
학력(중졸)	0.389***	0.000	0.211***	0.000	0.276***	0.000
학력(고졸)	0.170***	0.001	0.148***	0.000	-0.048	0.253
인권침해 차별 경험	-0.646***	0.000	-0.361***	0.000	-1.047***	0.000
결정계수(R2)	0.019		0.011		0.053	

유의수준: p*(<0.1, p**(<0.05, p***(<0.01

이 표에서 임계값이란 4개의 응답 범주의 순서대로 얼마나 응답 비율의 차이가 있는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본인에 대한 인권 존중 정도 평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인권상황 평가가 유의하게 긍정적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인권상황 평가 역시 유의하게 긍정적이다. 직업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본인 인권 존중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긍정적이고, 소수자, 취약

집단이나 사회 전반의 인권 존중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부정적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존중에 대한 평가는 유의하게 부정적이다.

이 모형의 주된 관심 독립변수인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의 인권 존중에 대한 효과를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본인, 소수자나 취약집단, 사회 전반에 대한 인권 존중 정도의 평가에서 유의하게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를 보면 소수자나 취약집단 인권존중에 대한 평가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적고, 본인 인권존중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중간이며, 사회 전반의 인권 존중에 대한 평가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인의 경험을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2〉 인권침해/차별 심각도 평가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경험의 순서형 로짓 모형 추정 결과

구분	인권침해 심각도		차별 심각도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임계값(1)	-4.130***	0.000	-3.463***	0.000
임계값(2)	-0.478**	0.000	-0.081	0.440
임계값(3)	3.606***	0.000	3.762***	0.000
연령	-0.005***	0.000	-0.009***	0.000
성별(남성)	-0.016	0.640	0.026	0.455
지역(도시)	0.067	0.119	-0.019	0.654
비경제활동	-0.180**	0.020	-0.275***	0.000
직업(관리전문직)	0.200**	0.038	0.145	0.126
직업(사무직)	-0.193**	0.030	-0.318***	0.000
직업(서비스판매직)	-0.159*	0.051	-0.272***	0.001
직업(생산직)	-0.211**	0.023	-0.385***	0.000
직업(농림어업직)	-0.476***	0.000	-0.596***	0.000
학력(중졸)	-0.276***	0.000	-0.256***	0.000
학력(고졸)	0.048	0.253	0.031	0.456
인권침해 차별 경험	1.047***	0.000	1.299***	0.000
결정계수(R2)	0.053		0.075	

유의수준: p* < 0.1, p** < 0.05, p*** < 0.01

〈표 3-62〉는 인권침해나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이 응답자의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한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권침해와 차별이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높아질수록 인권침해와 차별의 심각성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또한 직업 간 비교에서는 직업지위가 올라갈수록 심각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모형의 주된 관심 독립변수인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인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보다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강화 효과가 조금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3)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의 인권의식에 대한 영향: 순서형 로짓분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은 인권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권 존중과 타인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그리고 인권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순서형 로짓 분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3-63>에 제시되어 있다. 인권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는 인권 중요성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역코딩을 해서 분석하였다.

<표 3-63>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의 순서형 로짓 회귀모형 추정 결과

	인권 존중의 중요성		인권 중요성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임계값(1)	0.014	0.896	-3.475***	0.000
임계값(2)	3.519***	0.000	-1.301***	0.000
임계값(3)	6.433***	0.000	0.515***	0.000
연령	-0.005***	0.000	-0.004***	0.001
성별(남성)	-0.064*	0.061	0.028	0.371
지역(도시)	0.076*	0.065	0.105***	0.006
비경제활동	-0.217***	0.004	-0.137**	0.048
직업(관리전문직)	0.309***	0.001	0.081	0.363
직업(사무직)	0.438***	0.000	0.373***	0.000
직업(서비스판매직)	-0.417***	0.000	-0.198***	0.007
직업(생산직)	-0.358***	0.000	-0.199**	0.017
직업(농림어업직)	0.001	0.989	-0.022	0.810
학력(중졸)	-0.346***	0.000	-0.236***	0.000
학력(고졸)	-0.292***	0.000	-0.241***	0.000
인권침해 차별 경험	0.088*	0.052	0.597***	0.000

	인권 존중의 중요성		인권 중요성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결정계수(R2)	0.018		0.022	

유의수준: $p^*<0.1$, $p^{**}<0.05$, $p^{***}<0.01$

배경 변인들 중에서 인권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 학력이다. 젊은 층일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간 비교 역시 일관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직종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한다.

본 모형에서 주된 관심 독립변수인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은 인권 존중의 중요성과 인권의 중요성 모두 긍정적 인식을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를 발견하였다. 인권 존중의 중요성보다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을 회귀계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3-64〉 인권 관련 규범/대응 인지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한 순서형 로짓모형 추정 결과

	인권 존중 의무, 규범 인지		인권침해 차별 대응 인지	
	회귀계수	유의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임계값(1)	-2.440***	0.000	-2.840***	0.000
임계값(2)	0.702***	0.000	0.122	0.242
임계값(3)	3.117***	0.000	2.989***	0.000
연령	-0.008***	0.000	-0.009***	0.000
성별(남성)	-0.173***	0.000	-0.248***	0.000
지역(도시)	0.301***	0.000	0.115***	0.004
비경제활동	-0.011	0.879	-0.029	0.686
직업(관리전문직)	0.467***	0.000	0.311***	0.001
직업(사무직)	0.104	0.216	-0.122	0.143
직업(서비스판매직)	0.059	0.440	0.057	0.458
직업(생산직)	-0.074	0.393	0.051	0.557
직업(농림어업직)	-0.174*	0.059	-0.438***	0.000
학력(중졸)	-0.760***	0.000	-0.928***	0.000
학력(고졸)	-0.282***	0.000	-0.208***	0.000
인권침해 차별 경험	0.213***	0.000	0.149***	0.001
결정계수(R2)	0.064		0.087	

유의수준: $p^*<0.1$, $p^{**}<0.05$, $p^{***}<0.01$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무와 규범을 잘 안다거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응하는 방안을 잘 안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규범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도로 인지적 차원의 인권의식에 해당한다. 배경 변수들과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변수를 포함한 순서형 로짓 추정 결과, 연령, 성별, 지역, 학력과 직업이 모두 유의하게 인권 관련 지식과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그리고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더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본 모형의 주된 관심 독립변수인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은 인권 존중의 의무와 규범에 대한 인지와 인권침해와 차별 시 대응에 대한 인지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본인이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더 잘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 인권 관련 의견

인권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인권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의 교류와 논의를 통해 인권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수정된다. 인권을 둘러싼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다양한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따라서 인권정책과 제도의 추진이 수월하기도 하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따라서 인권 쟁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지 또는 변화하는지, 특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하위집단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인권과 관련된 여론의 향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주요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1) 주요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그림 3-34]는 한국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친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문항의 경우, 2021년부터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로 각각 구분하여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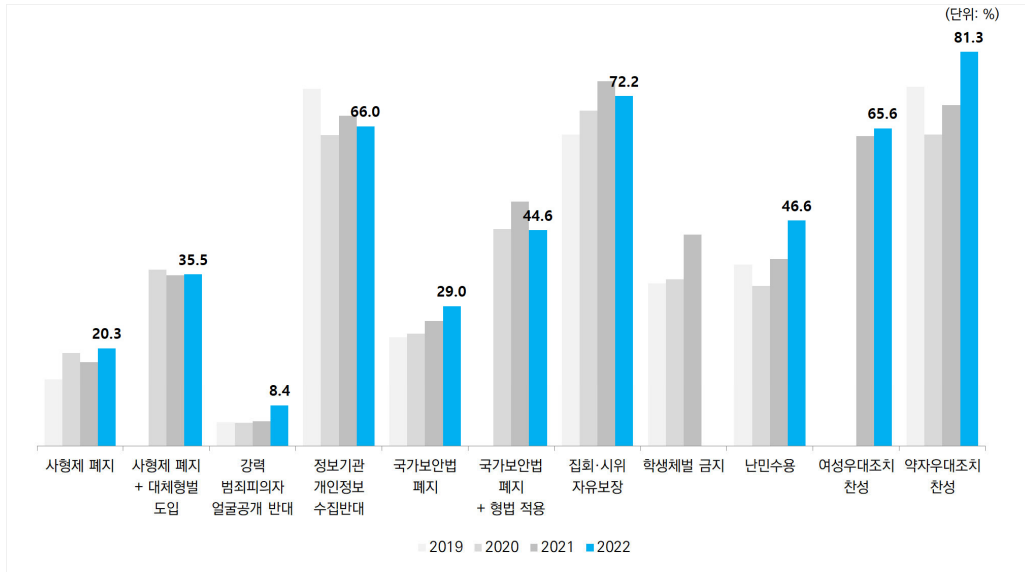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시위·집회의 자유 보장’, ‘정보기관의 개인 정보 수집 반대’ 항목은 인권에 친화적인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사형제 폐지’, ‘강력범죄 얼굴 공개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여전히 30% 이하로 낮은 편이다.

2021년과 비교해서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보인 항목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10.9%p), ‘난민 수용’ (+7.9%p)이며,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 (+3.3%p), ‘국가보안법 폐지’(+3.1%p), ‘사형제 폐지’ (+2.8%p)에 대한 의견은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2021년보다 인권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보인 항목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반대’ (-2.2%p), ‘시위·집회의 자유 보장’ (-3.1%p)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난민 수용’은 인권에 친화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형제 폐지’,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도입’,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3-34]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비교



(2) 사형제도 폐지 여부 및 대체 형벌의 도입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한국은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이 1997년으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사형 집행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매우 +다소)는 의견은 여전히 20.3%로 낮은 비율이며, 2019년 13.9%에서 소폭이나마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응답자의 배경 요인별로 사형제도 폐지론은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60대 이상은 18.2%가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대학교 재학 이상(22.3%),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24.1%)에서 사형제 폐지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종교가 있는 사람(21.6%)이 사형제 폐지의견이 더 높았고, 정치적 진보 성향의 25.4%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였다.

〈표 3-65〉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구분	매우 유지해야	다소 유지해야	다소 폐지해야	매우 폐지해야	평균 (4점)	χ^2 (df)
전체	54.3	25.3	12.2	8.2	3.3	
성별						
남자	54.4	24.7	12.0	8.9	3.2	8.507(3)*
여자	54.2	25.9	12.4	7.5	3.3	
연령						
20-30대	49.6	28.1	13.8	8.5	3.2	60.603(6)***
40-50대	55.2	24.6	12.1	8.2	3.3	
60대 이상	58.5	23.3	10.4	7.8	3.3	
학력						
고졸이하	57.5	24.3	11.1	7.0	3.3	59.793(3)***
대재이상	51.4	26.3	13.1	9.2	3.2	
직업						
관리전문직	51.2	24.7	12.6	11.5	3.2	124.008(9)** *
사무판매서비스	50.1	28.3	14.1	7.5	3.2	
농림생산직	60.4	22.4	10.0	7.1	3.4	
비경활인구	56.7	23.6	11.0	8.7	3.3	
종교						
없음	53.2	27.1	12.3	7.3	3.3	63.184(3)***
있음	56.3	22.1	11.9	9.7	3.2	
정치성향						
보수	62.8	19.9	10.1	7.1	3.4	135.882(9)** *
중도	50.7	28.1	13.2	7.9	3.2	
진보	47.8	26.7	14.4	11.0	3.1	
무관심	56.0	25.7	11.0	7.3	3.3	

한편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대체형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이 35.5%로 나타났다. 아무런 대안이 없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율 20.3%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에 ‘반대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이 64.5%로 훨씬 우세하다.

배경 요인별로는 20-30대(37.3%), 대학 재학 이상(37.8%), 관리전문직 (44.5%), 정치적 진보 성향(40.0%)을 가진 응답자들이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농림생산직, 정치적 보수 성향은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더 낮다.

〈표 3-66〉 사형제도 폐지 + 대체 형벌 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구분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χ^2 (df)
전체	14.4	21.1	35.6	28.9	2.2	
성별						
남자	14.1	20.6	35.1	30.2	2.2	9.391(3)*
여자	14.6	21.6	36.1	27.6	2.2	
연령						
20-30대	14.0	23.3	35.3	27.5	2.2	38.271(6)***
40-50대	15.8	20.5	34.5	29.2	2.2	
60대 이상	12.9	19.6	37.4	30.1	2.2	
학력						
고졸이하	12.3	20.7	37.1	29.9	2.2	53.400(3)***
대재이상	16.3	21.5	34.2	28.0	2.3	
직업						
관리전문직	22.9	21.6	25.4	30.1	2.4	182.057(9)** *
사무판매서비스	13.1	22.9	37.7	26.3	2.2	
농림생산직	11.9	18.9	35.3	33.9	2.1	
비경활인구	14.8	20.2	36.0	29.0	2.2	
종교						
없음	13.1	21.8	36.8	28.3	2.2	52.958(3)***
있음	16.7	19.9	33.5	29.9	2.2	
정치성향						
보수	12.3	16.1	37.8	33.8	2.1	133.338(9)** *
중도	14.4	22.8	37.8	25.0	2.3	
진보	16.7	23.4	32.5	27.4	2.3	
무관심	14.6	21.9	33.0	30.5	2.2	

(3)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절대다수인 91.6%가 ‘찬성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였고 ‘반대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8.4%에 불과하다. 201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90% 이상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연령별로는 의견 차이가 없으며, 학력수준, 직업, 종교 유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표 3-67〉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χ^2 (df)
전체	71.9	19.7	6.4	1.9	3.6	
성별						
남자	71.5	20.3	6.3	1.9	3.6	2.806(3)
여자	72.4	19.1	6.5	2.0	3.6	
연령						
20-30대	70.7	20.8	6.6	1.9	3.6	2.134(6)
40-50대	72.8	19.2	6.2	1.9	3.6	
60대 이상	72.2	19.2	6.6	2.0	3.6	
학력						
고졸이하	70.9	20.4	6.6	2.1	3.6	17.397(3)**
대재이상	72.9	19.0	6.3	1.7	3.6	
직업						
관리전문직	76.0	18.3	3.9	1.8	3.7	78.659(9)***
사무판매서비스	67.4	22.5	8.3	1.9	3.6	
농림생산직	73.9	18.6	5.5	2.1	3.6	
비경활인구	75.0	17.5	5.5	2.0	3.7	
종교						
없음	70.4	20.9	7.0	1.8	3.6	53.712(3)***
있음	74.8	17.6	5.4	2.2	3.7	
정치성향						
보수	73.9	17.3	6.3	2.5	3.6	63.012(9)***
중도	69.3	22.5	6.4	1.7	3.6	
진보	70.3	21.4	6.9	1.4	3.6	
무관심	74.8	17.0	6.2	2.1	3.6	

(4)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찰

개인 간의 대화나 통신기록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 보지 않고 국가안보 등의 목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사이버 감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이 34.0%, ‘반대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이 66.0%로 나타나서, 사이버 감찰에 대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2배 정도 많다. 사이버 감찰에 대한 반대 의견은 2019년 73.7%에서 2020년 64.2%로 9.5%p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68.2%로 증가했다가 2022년 66.0%로 약간 감소하는 등 다소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배경 요인별로 여성(64.3%)보다는 남성(67.7%), 20-30대 청년층(68.6%), 고등학교 졸업 이하(62.8%)보다는 대학교 재학 이상(68.9%), 관리전문직(69.2%)에서 사이버 감찰에 반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중도층과 진보층은 모두 67.4%가 사이버 감찰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였다.

〈표 3-68〉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찰 찬반 비율

(단위: %, 점)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χ^2 (df)
전체	10.6	23.5	33.6	32.4	2.1	
성별						
남자	9.9	22.4	33.5	34.1	2.1	21.507(3)***
여자	11.2	24.5	33.6	30.7	2.2	
연령						
20-30대	10.3	21.1	35.3	33.2	2.1	90.632(6)***
40-50대	10.6	23.5	31.1	34.8	2.1	
60대 이상	10.8	26.1	34.7	28.3	2.2	
학력						
고졸이하	11.4	25.8	34.2	28.6	2.2	139.632(3)***
대재이상	9.8	21.3	33.0	35.8	2.1	
직업						
관리전문직	9.9	20.9	24.8	44.4	2.0	120.800(9)***
사무판매서비스	9.1	24.1	35.3	31.4	2.1	
농림생산직	11.8	24.0	34.7	29.5	2.2	
비경활인구	11.7	23.2	33.2	31.9	2.1	
종교						
없음	10.3	23.6	34.9	31.2	2.1	44.402(3)***
있음	11.0	23.3	31.2	34.5	2.1	
정치성향						
보수	12.3	25.9	31.2	30.5	2.2	96.586(9)***
중도	9.2	23.4	35.1	32.3	2.1	
진보	10.3	22.3	31.9	35.5	2.1	
무관심	10.8	22.2	35.0	31.9	2.1	

(5)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형법 등 다른 법률 적용

국가보안법은 오래전부터 기본적인 권리 침해의 소지를 가진 법률로 인식되어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29.0%로 나타났고, 이는 ‘유지해야 한다’(매우+다소)는 의견(71.0%)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2019년 22.6%, 2020년 23.3%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배경 요인별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은 여성(26.5%)보다 남성(31.6%), 연령별로는 20-30대층(33.1%)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학력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23.5%)보다는 대학교 재학 이상(34.1%),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34.5%), 사무판매회서비스직(3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38.8%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여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폐지 여론이 강하다.

〈표 3-69〉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의견

(단위 : %, 점)

구분	매우 유지해야	대체로 유지해야	대체로 폐지해야	매우 폐지해야	평균 (4점)	$\chi^2(df)$
전체	35.9	35.0	20.1	8.9	3.0	
성별						
남자	35.8	32.6	20.7	11.0	2.9	91.875(3)* **
여자	36.1	37.4	19.6	6.9	3.0	
연령						
20-30대	30.2	36.6	24.5	8.7	2.9	290.926(6) ***
40-50대	33.8	34.6	20.6	11.0	2.9	
60대 이상	45.0	33.9	14.6	6.5	3.2	
학력						
고졸이하	41.4	35.1	17.2	6.3	3.1	249.474(3) ***
대재이상	30.9	35.0	22.8	11.3	2.9	
직업						
관리전문직	32.4	33.0	18.3	16.3	2.8	306.596(9) ***
사무판매회서비스	29.4	36.5	24.9	9.2	2.9	
농림생산직	42.1	34.3	16.0	7.6	3.1	
비경활인구	40.9	34.3	17.4	7.4	3.1	
종교						
없음	32.8	36.0	22.0	9.2	2.9	125.509(3) ***
있음	41.7	33.2	16.7	8.4	3.1	

구분	매우 유지해야	대체로 유지해야	대체로 폐지해야	매우 폐지해야	평균 (4점)	$\chi^2(df)$
정치성향						
보수	48.7	31.2	13.2	6.9	3.2	505.557(9) ***
중도	31.8	36.9	22.8	8.5	2.9	
진보	26.8	34.3	24.1	14.7	2.7	
무관심	36.2	36.8	20.1	6.9	3.0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이 44.6%로, 국가보안법 폐지론보다 찬성 의견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사형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대안을 제시할 때는 인권에 친화적인 여론이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6) 집회·시위의 자유

기본적인 자유권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토대가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을 막기 위한 집회·시위 제한이 시행되어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이 72.2%이며 ‘제한해야 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27.8%로 나타났다. 시계열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의견의 추세를 보면, 2019년 64.3%, 2020년 69.2%, 2021년 75.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강하게 표출되었다.

〈표 3-70〉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견

(단위 : %, 점)						
구분	매우 보장해야	다소 보장해야	다소 제한해야	매우 제한해야	평균 (4점)	χ^2 (df)
전체	28.9	43.3	22.2	5.6	3.0	
성별						
남자	30.9	42.8	20.5	5.8	3.0	27.162(3)***
여자	26.9	43.8	23.8	5.5	2.9	
연령						
20-30대	33.6	44.5	18.1	3.7	3.1	314.610(6)***
40-50대	30.7	42.8	21.2	5.3	3.0	
60대 이상	21.3	42.5	28.0	8.1	2.8	

구분	매우 보장해야	다소 보장해야	다소 제한해야	매우 제한해야	평균 (4점)	χ^2 (df)
학력						
고졸이하	23.0	43.3	26.6	7.1	2.8	296.062(3)***
대재이상	34.2	43.3	18.2	4.3	3.1	
직업						
관리전문직	40.8	42.1	12.4	4.8	3.2	158.836(9)***
사무판매서비스	28.0	44.2	23.1	4.7	3.0	
농림생산직	27.9	41.6	23.6	6.9	2.9	
비경활인구	27.4	43.4	22.9	6.3	2.9	
종교						
없음	28.0	44.7	22.5	4.8	3.0	55.789(3)***
있음	30.5	40.8	21.6	7.1	2.9	
정치성향						
보수	22.9	43.5	25.0	8.6	2.8	292.510(9)***
중도	27.0	46.6	22.4	4.0	3.0	
진보	37.6	38.5	19.5	4.4	3.1	
무관심	30.4	42.4	21.3	5.9	3.0	

배경 요인별로는 전반적으로 여성(70.7%)보다는 남성(73.7%), 20-30대 저연령층(78.1%), 고등학교 졸업 이하(66.3%)보다는 대학교 재학 이상 고학력층(77.5%),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82.9%), 그리고 정치적 진보 성향층(76.1%)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7) 한국에서 난민의 인정

한국은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 건수는 매년 급증하였으나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난민 인정과 수용은 인권뿐만 아니라 정치적 쟁점을 형성하기도 한다. 난민을 ‘가급적 받아들여야 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46.6%인 반면,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53.4%로 나타나, 난민 인정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여론이 더 우세하다. 난민을 가급적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2019년 37.5%에서 2020년 33.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1년 38.7%, 2022년 46.6%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배경 요인별로 한국에서의 난민 인정을 찬성하는 의견은 여성(45.0%)보다는 남성(48.2%), 40-50대 중년층(47.3%), 고등학교 졸업 이하(45.1%)보다는 대학교 재학 이상 고학력층(48.0%),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52.4%), 정치적 진보 성향(53.6%)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71〉 한국에서의 난민 인정에 대한 의견

(단위 : %, 점)

구분	적극 받아들여야	가급적 받아들여야	가급적 제한해야	적극 제한해야	평균 (4점)	χ^2 (df)
전체	9.6	37.0	37.7	15.7	2.4	
성별						
남자	10.3	37.9	36.6	15.1	2.4	16.037(3)**
여자	8.8	36.1	38.8	16.3	2.4	
연령						
20-30대	8.6	38.1	36.4	16.9	2.4	36.808(6)***
40-50대	10.2	37.1	37.3	15.4	2.4	
60대 이상	9.9	35.6	39.6	14.9	2.4	
학력						
고졸이하	9.7	35.4	39.1	15.8	2.4	11.254(3)*
대재이상	9.5	38.5	36.4	15.6	2.4	
직업						
관리전문직	14.1	38.3	31.8	15.8	2.5	83.581(9)***
사무판매서비스	7.9	38.5	38.6	15.0	2.4	
농림생산직	9.7	35.4	39.6	15.2	2.4	
비경활인구	10.3	35.8	37.2	16.7	2.4	
종교						
없음	8.7	37.6	38.5	15.3	2.4	32.668(3)***
있음	11.2	36.0	36.3	16.6	2.4	
정치성향						
보수	8.8	32.4	40.5	18.3	2.3	121.630(9)***
중도	7.7	38.9	38.6	14.8	2.4	
진보	12.5	41.1	32.5	13.9	2.5	
무관심	10.6	35.8	37.9	15.8	2.4	

(8)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사회적 약자들이 구조적인 불리함 때문에 출발선에서부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성별, 인종 등에 기반한 할당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불평등 상황을 고치기 위한 수단이다.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의견을 2019년과 2020년에는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한데 묶었지만 2021년, 2022년에는 여성을 분리하여 별도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찬성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65.6%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58.7%, 여성은 72.3%가 이에 찬성하여 남녀 간의 격차가 약 15%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층은 60.6%가 찬성한 반면 60대 이상 노인층은 70.0%가 찬성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찬성률(68.7%)이 대학교 재학 이상의 찬성률(62.7%)보다 더 높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관리전문직(61.9%)의 찬성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표 3-72〉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

(단위: %, 점)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χ^2 (df)
전체	16.8	48.7	25.7	8.7	2.7	
성별						
남자	13.5	45.2	28.8	12.4	2.6	362.319(3)***
여자	20.1	52.2	22.6	5.1	2.9	
연령						
20-30대	15.6	44.9	26.5	12.9	2.6	180.184(6)***
40-50대	18.1	48.4	25.3	8.2	2.8	
60대 이상	16.6	53.3	25.2	4.9	2.8	
학력						
고졸이하	18.1	50.6	25.2	6.1	2.8	126.364(3)***
대재이상	15.7	47.0	26.1	11.1	2.7	
직업						
관리전문직	16.6	45.3	22.4	15.7	2.6	98.262(9)***
사무판매서비스	15.8	47.9	27.6	8.7	2.7	
농림생산직	17.9	48.1	25.8	8.2	2.8	
비경활인구	17.6	50.8	24.3	7.3	2.8	
종교						
없음	16.0	49.2	26.2	8.6	2.7	23.023(3)***
있음	18.4	48.0	24.7	8.9	2.8	
정치성향						
보수	15.2	51.1	24.5	9.2	2.7	84.073(9)***
중도	14.5	49.4	27.3	8.8	2.7	
진보	19.8	46.8	24.6	8.8	2.8	
무관심	19.2	47.2	25.5	8.1	2.8	

한편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서 ‘찬성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81.3%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 65.6%보다 약 15% 더 높다. 여성을 별도로 구분하고 장애인 등의 약자로 한정지어 의견을 물었지만 2020년

64.3%, 2021년 70.4%, 2022년 81.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배경 요인별로 남성(80.5%)보다는 여성(82.1%), 60대 이상 연령층(82.0%)에서 사회적 약자 우대조치에 대한 찬성의견이 더 높다. 종교가 없는 사람(80.7%)보다는 종교가 있는 사람(82.5%)이 장애인 등의 적극적 우대조치에 더 찬성하며 정치적 진보 성향층(83.0%)의 응답자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보다 장애인 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찬성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73〉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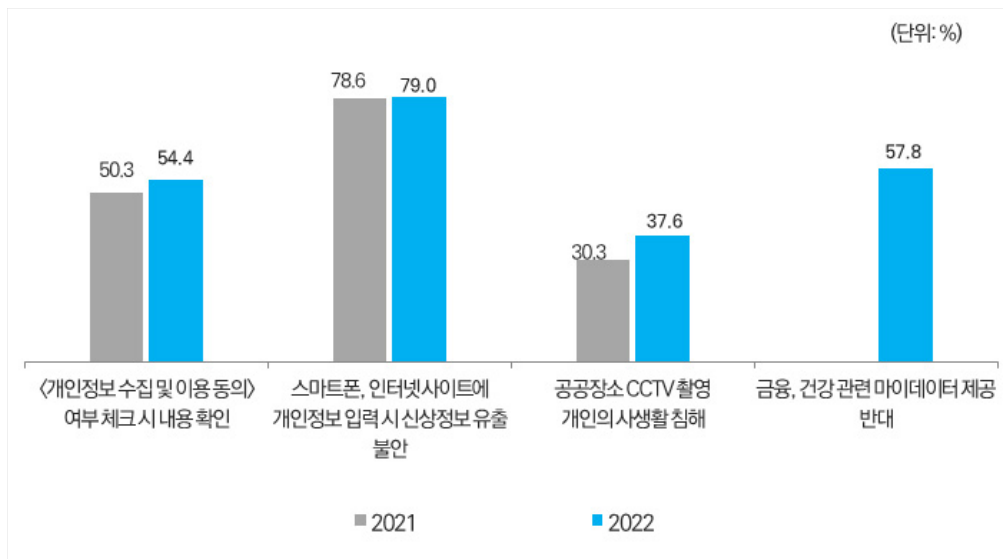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χ^2 (df)
전체	28.8	52.5	16.4	2.4	3.1	
성별						
남자	27.5	53.0	16.8	2.8	3.1	15.184(3)**
여자	30.1	52.0	16.0	2.0	3.1	
연령						
20~30대	27.0	53.3	16.8	2.9	3.0	26.138(6)***
40~50대	30.7	50.8	15.8	2.6	3.1	
60대 이상	28.4	53.6	16.5	1.5	3.1	
학력						
고졸이하	28.4	52.9	16.4	2.3	3.1	3.118(3)
대재이상	29.2	52.1	16.3	2.4	3.1	
직업						
관리전문직	35.1	49.5	12.4	3.0	3.2	70.378(9)***
사무판매서비스	25.7	53.5	18.0	2.8	3.0	
농림생산직	29.7	53.1	15.0	2.1	3.1	
비경활인구	30.2	51.7	16.2	1.9	3.1	
종교						
없음	26.7	54.0	17.1	2.2	3.1	67.603(3)***
있음	32.8	49.7	14.9	2.6	3.1	
정치성향						
보수	26.5	53.8	16.6	3.1	3.0	103.864(9)** *
중도	26.1	54.6	17.2	2.1	3.0	
진보	33.5	49.5	14.7	2.3	3.1	
무관심	31.1	50.6	16.2	2.0	3.1	

2)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자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보인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약간 강화되었는데, 특히 공공장소의 CCTV에 대한 경각심이 2021년 30.3%에서 2022년 37.6%로 7.3%p 증가하였다.

[그림 3-35] 정보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비교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 확인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파악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정보 이용 등을 설명하는데, 동의서에 체크할 때 내용을 ‘확인하다’(매우+대체로)는 경우는 54.4%로, 2021년 50.3%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배경 요인별로는 여성(53.7%)보다 남성(55.1%)이 동의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고, 20-30대(61.2%)와 40-50대(56.9%)에 비해 60대 이상(43.7%)의 경우에는 확인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낮아서 노년층과 다른 연령층 간에 격차를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별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48.7%)는 대학교 재학 이상(59.6%)보다 동의서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10%p 이상 낮고, 직업별로는 사무판매서비스직의 확인율이 60.4%로 가장 높은 반면 농림생산직의 확인율은 48.5%에 머물러 있다.

정치적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60.5%가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는 반면 정치적 무관심층은 48.4%가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표 3-7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 확인 여부

(단위: %,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은 편	평균 (4점)	χ^2 (df)
전체	10.8	43.6	35.3	10.3	2.5	
성별						
남자	10.9	44.2	35.1	9.8	2.4	13.049(3)**
여자	10.6	43.1	35.5	10.8	2.5	
연령						
20~30대	12.9	48.4	30.4	8.4	2.3	547.529(6)* **
40~50대	11.6	45.3	35.3	7.8	2.4	
60대 이상	7.4	36.3	40.7	15.6	2.6	
학력						
고졸이하	9.8	39.0	38.2	13.1	2.5	349.938(3)* **
대재이상	11.7	48.0	32.7	7.7	2.4	
직업						
관리전문직	12.5	42.9	35.6	9.0	2.4	296.026(9)* **
사무판매서비스	12.2	48.3	32.4	7.1	2.3	
농림생산직	9.0	39.6	38.9	12.6	2.6	
비경활인구	9.7	40.8	36.6	12.9	2.5	
종교						
없음	10.8	44.0	34.8	10.4	2.4	7.149(3)
있음	10.7	43.1	36.2	10.0	2.5	
정치성향						
보수	10.1	39.8	37.9	12.1	2.5	334.803(9)* **
중도	11.0	47.6	34.4	7.0	2.4	
진보	11.6	48.9	32.6	6.9	2.3	
무관심	10.4	38.0	36.1	15.4	2.6	

(2) 개인정보 입력 시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여부

개인정보는 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점차 빈번해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 유출 우려로 ‘불안하다’(매우+다소)는 응답은 79.0%로 상당히 높고 ‘불안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응답은 21.0%로 나타났다.

배경 요인별로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응답자는 남성(78.4%)보다는 여성(79.6%), 40-50대 연령층(82.7%), 고등학교 졸업 이하(76.5%)보다는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81.3%),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83.9%), 정치적 진보성향(82.1%)을 꼽을 수 있다.

〈표 3-75〉 신상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불안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은 편	평균 (4점)	χ^2 (df)
전체	26.3	52.7	18.8	2.2	2.0	
성별						
남자	26.3	52.1	19.5	2.1	2.0	9.267(3)*
여자	26.3	53.2	18.1	2.3	2.0	
연령						
20-30대	27.8	51.9	18.0	2.2	1.9	310.158(6)***
40-50대	28.7	54.0	16.1	1.2	1.9	
60대 이상	21.7	51.7	23.0	3.6	2.1	
학력						
고졸이하	23.1	53.3	20.4	3.1	2.0	168.611(3)***
대재이상	29.3	52.1	17.3	1.4	1.9	
직업						
관리전문직	31.6	52.3	14.7	1.4	1.9	132.817(9)***
사무판매서비스	26.6	53.5	18.7	1.3	1.9	
농림생산직	25.8	52.3	18.8	3.0	2.0	
비경활인구	25.0	52.0	19.8	3.1	2.0	
종교						
없음	25.9	52.4	19.3	2.4	2.0	11.171(3)*
있음	27.1	53.1	17.8	2.0	1.9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은 편	평균 (4점)	χ^2 (df)
정치성향						
보수	24.8	52.6	19.7	2.9	2.0	175.564(9)***
중도	25.3	54.9	18.5	1.4	2.0	
진보	29.6	52.5	16.8	1.1	1.9	
무관심	26.6	49.9	19.8	3.7	2.0	

(3) 공공장소의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범죄 사건 해결에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범죄 예방 및 억제의 목적으로 CCTV 없는 시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CCTV 설치는 타인의 행동 감시를 위해 악용되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장소의 CCTV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데,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37.6%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매우+다소)는 의견은 62.4%이다.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2021년 30.3%에서 7.3%p 증가하였다.

공공장소의 CCTV 설치가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들은 40-50대 (39.0%), 직업별로는 사무판매팀서비스직(39.9%), 정치적 진보 성향층(41.0%)이다.

〈표 3-76〉 공공장소의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χ^2 (df)
전체	6.7	30.8	42.2	20.2	2.8	
성별						
남자	6.9	30.9	41.9	20.3	2.8	1.232(3)
여자	6.5	30.8	42.5	20.2	2.8	
연령						
20-30대	6.8	30.0	44.0	19.3	2.8	52.281(6)***
40-50대	6.9	32.1	41.5	19.4	2.7	
60대 이상	6.3	30.2	41.1	22.3	2.8	
학력						
고졸이하	6.7	31.2	40.9	21.1	2.8	31.973(3)***
대재이상	6.7	30.5	43.4	19.4	2.8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χ^2 (df)
직업						
관리전문직	5.9	27.0	44.4	22.7	2.8	97.655(9)***
사무판매서비스	7.0	32.9	43.1	17.0	2.7	
농림생산직	5.9	31.6	38.6	23.9	2.8	
비경활인구	6.9	29.2	42.5	21.4	2.8	
종교						
없음	6.6	31.5	42.7	19.2	2.7	11.253(3)*
있음	6.9	29.7	41.3	22.1	2.8	
정치성향						
보수	7.6	29.3	39.5	23.5	2.8	134.785(9)** *
중도	6.3	32.1	46.0	15.6	2.7	
진보	7.1	34.0	39.4	19.6	2.7	
무관심	6.1	28.3	41.9	23.7	2.8	

(4) 개인의 건강, 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개인의 은행 계좌, 신용카드 등의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하에 여러 곳에 흩어진 금융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노출의 우려, 정보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의 배제 등의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찬성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42.2%, ‘반대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57.8%로 찬성하는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직은 데이터 활용의 편리성보다 개인정보 유출 또는 악용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요인별로 마이데이터 제공에 반대하는 의견은 40-50대층(59.9%), 사무판매서비스직(59.4%), 농림생산직(59.1%)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적 보수층(54.2%)은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7〉 금융, 건강 등 관련 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견

(단위 : %)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chi^2(df)$
전체	9.2	33.0	41.5	16.3	2.6	
성별						
남자	9.8	32.7	40.5	17.0	2.6	5.193(3)
여자	8.7	33.2	42.5	15.6	2.6	
연령						
20~30대	9.4	33.2	40.8	16.6	2.6	19.422(6)**
40~50대	9.2	30.9	43.0	16.9	2.7	
60대 이상	9.1	35.4	40.4	15.0	2.6	
학력						
고졸이하	8.9	33.1	42.4	15.7	2.6	7.975(3)*
대재이상	9.6	32.9	40.7	16.8	2.6	
직업						
관리전문직	11.9	31.9	36.2	20.0	2.6	66.529(9)***
사무판매서비스	8.6	32.0	43.9	15.5	2.7	
농림생산직	7.5	33.3	41.6	17.5	2.7	
비경활인구	10.1	34.1	40.2	15.6	2.6	
종교						
없음	8.5	32.0	43.2	16.2	2.7	42.202(3)***
있음	10.6	34.7	38.3	16.3	2.6	
정치성향						
보수	10.4	35.4	38.1	16.1	2.6	46.290(9)***
중도	8.1	32.3	43.7	15.9	2.7	
진보	8.8	32.8	41.1	17.3	2.7	
무관심	9.9	31.7	42.2	16.2	2.6	

3)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인식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흐름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기후위기의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심각하다’(매우+다소)고 보는 의견은 8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응답자는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남성(88.5%)보다 여성(89.7%), 20-30대(89.9%), 40-50대(89.1%), 60대 이상(88.3%)으로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87.9%)보다 대학교 재학 이상(90.3%)의 고학력층이 심각성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78〉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식

(단위: %,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다소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1	9.8	30.4	58.7	3.5	
성별						
남자	1.2	10.3	31.7	56.8	3.4	16.512(3)**
여자	1.0	9.2	29.2	60.5	3.5	
연령						
20-30대	0.9	9.2	30.1	59.8	3.5	19.268(6)**
40-50대	1.3	9.6	29.4	59.6	3.5	
60대 이상	1.0	10.6	32.1	56.3	3.4	
학력						
고졸이하	1.3	10.9	31.6	56.3	3.4	34.624(3)***
대재이상	1.0	8.8	29.4	60.9	3.5	
직업						
관리전문직	1.5	9.5	24.8	64.2	3.5	26.662(9)**
사무판매서비스	1.0	10.2	31.4	57.4	3.5	
농림생산직	1.0	10.6	32.6	55.9	3.4	
비경활인구	1.2	9.0	29.7	60.1	3.5	
종교						
없음	1.0	10.7	31.6	56.6	3.4	78.984(3)***
있음	1.2	8.0	28.2	62.6	3.5	
정치성향						
보수	1.2	9.2	31.1	58.5	3.5	50.695(9)***
중도	1.0	9.3	32.4	57.3	3.5	
진보	1.1	9.7	27.7	61.5	3.5	
무관심	1.2	10.9	29.2	58.7	3.5	

(2) 기후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44.4%,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다’는 의견은 48.0%를 차지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층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별로 크지 않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51.9%), 정치적 성향은 진보 성향(52.0%)에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79〉 기후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인식

(단위: %)

구분	모두에게 똑같이 심각하다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chi^2(df)$
전체	44.4	48.0	7.6	
성별				
남자	45.2	47.4	7.4	1.631(2)
여자	43.6	48.7	7.8	
연령				
20~30대	44.9	47.3	7.8	8.423(4)
40~50대	43.2	49.7	7.1	
60대 이상	45.2	46.7	8.0	
학력				
고졸이하	43.8	48.1	8.1	9.584(2)**
대재이상	44.9	48.0	7.1	
직업				
관리전문직	44.3	51.9	3.9	51.503(6)***
사무판매서비스	42.2	48.4	9.3	
농림생산직	45.9	46.0	8.1	
비경활인구	45.9	47.7	6.4	
종교				
없음	42.5	49.3	8.2	25.041(2)***
있음	47.7	45.8	6.5	
정치성향				
보수	48.9	44.3	6.9	63.510(6)***
중도	42.7	49.7	7.6	
진보	40.4	52.0	7.6	
무관심	45.2	46.5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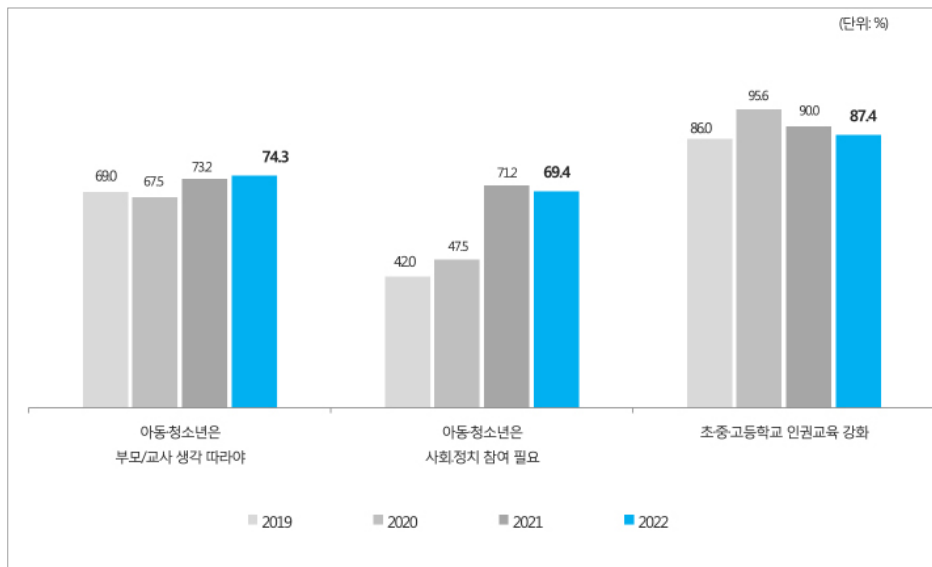
4)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법적 미성년자로서 미숙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간주되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담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집단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나이에 따른 서열과 위계질서가 강하고 장유유서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1)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그림 3-36]은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동의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 필요’ 항목으로 2019년 42.0%, 2020년 47.5%에서 2021년 71.2%, 2022년 69.4%로 2021년 이후 약 20%p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은 2019년 69.0%, 2020년 67.5%였으나, 2021년 73.2%, 2022년 74.3%로 아동·청소년을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학교 인권교육 강화’는 2020년 95.6%, 2021년 90.0%, 2022년 87.4%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6] 아동·청소년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2)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주체성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의사결정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주장에 ‘동의한다’(매우+다소)는 응답은 74.3%로 우세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매우+다소)는 응답은 25.7%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불완전, 미성숙의 존재로 보는 시각이 매우 우세하게 퍼져있다.

배경 요인별로 남성과 여성 간의 의견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며, 연령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아동·청소년은 어른(부모, 교사) 말을 들어야 한다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78.7%), 직업별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76.7%), 농림생산직(75.1%), 그리고 정치적 보수 성향층(81.6%)이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80〉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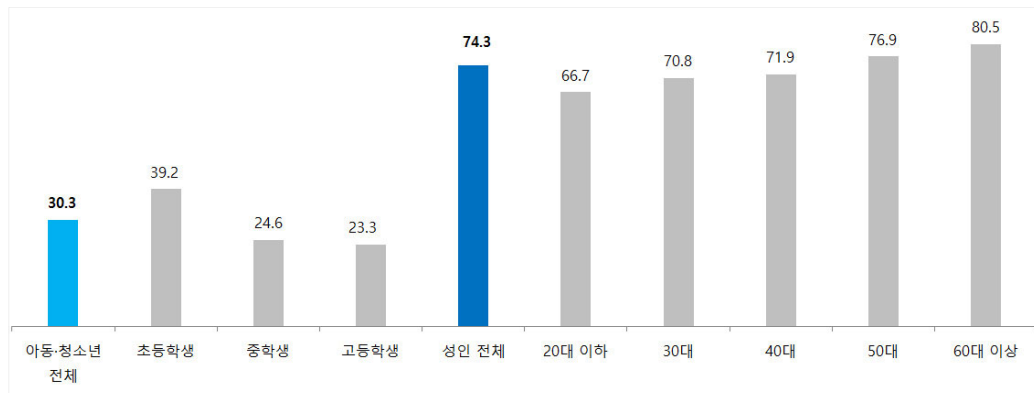
구분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인함	매우 동의 인함	평균 (4점)	χ^2 (df)
전체	16.8	57.6	22.7	2.9	2.9	
성별						
남자	15.7	57.8	23.3	3.2	2.9	8.065(3)*
여자	17.8	57.4	22.2	2.7	2.9	
연령						
20-30대	14.4	54.2	27.3	4.1	2.8	244.657(6)***
40-50대	15.9	58.6	23.1	2.4	2.9	
60대 이상	20.4	60.1	17.1	2.4	3.0	
학력						
고졸이하	19.2	59.5	18.8	2.5	3.0	177.604(3)***
대재이상	14.5	55.8	26.3	3.4	2.8	
직업						
관리전문직	14.1	52.1	31.1	2.6	2.8	96.661(9)***
사무판매서비스	15.8	57.8	23.7	2.7	2.9	
농림생산직	17.0	58.2	21.6	3.3	2.9	
비경활인구	18.3	58.4	20.2	3.2	2.9	
종교						
없음	16.3	57.6	23.0	3.1	2.9	17.992(3)***
있음	17.5	57.6	22.2	2.7	2.9	
정치성향						
보수	19.4	62.2	16.3	2.1	3.0	161.511(9)***
중도	14.6	56.4	26.4	2.5	2.8	

구분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 인함	매우 동의 인함	평균 (4점)	χ^2 (df)
진보	14.6	55.4	26.2	3.8	2.8	
무관심	18.7	56.4	21.2	3.6	2.9	

한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1년 기준)와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주체성에 대한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의사결정 주체성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매우+다소)는 비율이 30.3%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문항에 대한 일반국민의 동의 비율(74.3%)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더욱이 초등학생은 39.2%가 동의한 반면 중학생은 24.6%, 고등학생은 23.3%가 동의하여 훨씬 더 낮아진다. 청소년 시기를 거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대층도 아동·청소년이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데 66.7%가 동의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3-37] 연령층별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동의율 비교

(단위 : %)



(3)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문제에 참여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매우+다소)는 비율은 69.4%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매우+다소)는 비율은 30.6%이다.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에 동의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많다.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에 대한 동의가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2.0%, 47.5%였는데 2021년에는 약 70%로 급상

승하였고, 2022년에는 69.4%로 큰 변화가 없다.

배경 요인별로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문제 참여를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없으며, 연령층별로는 20-30대층 74.6%, 40-50대층 71.7%, 60대 이상 60.9%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73.2%), 사무판매서비스직(73.0%), 정치적 진보 성향층(77.7%)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표 3-81〉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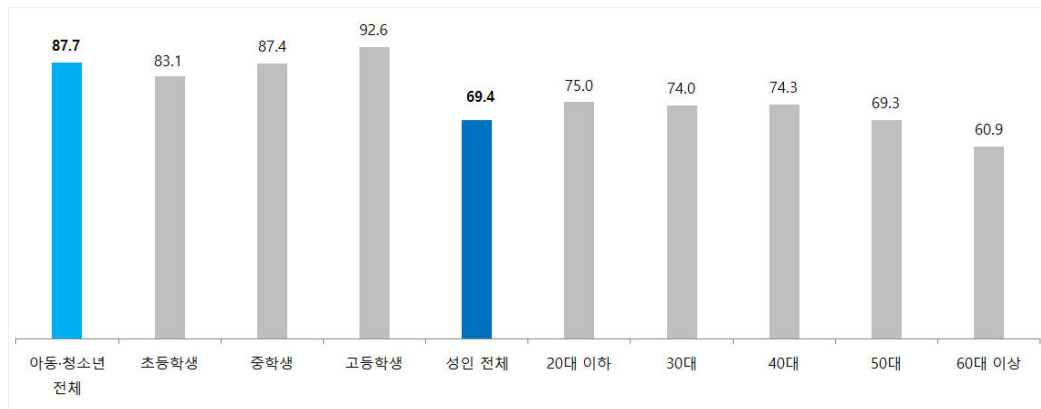
구분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다소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평균 (4점)	χ^2 (df)
전체	15.6	53.8	25.8	4.7	2.8	
성별						
남자	16.1	53.7	25.7	4.5	2.8	1.021(3)
여자	15.2	53.9	25.9	5.0	2.8	
연령						
20-30대	16.8	57.7	22.0	3.5	2.9	372.541(6)** *
40-50대	16.7	55.0	24.7	3.5	2.8	
60대 이상	12.9	47.9	31.4	7.7	2.7	
학력						
고졸이하	14.4	51.0	28.6	6.0	2.7	180.979(3)** *
대재이상	16.7	56.4	23.2	3.6	2.9	
직업						
관리전문직	15.4	56.0	24.2	4.4	2.8	101.312(9)** *
사무판매서비스	17.0	56.0	23.5	3.5	2.9	
농림생산직	15.2	52.3	27.2	5.3	2.8	
비경활인구	14.4	51.7	28.0	5.9	2.7	
종교						
없음	15.5	54.4	25.8	4.3	2.8	17.179(3)**
있음	15.9	52.7	25.8	5.6	2.8	
정치성향						
보수	14.1	48.7	31.0	6.1	2.7	350.688(9)** *
중도	15.4	57.3	24.2	3.1	2.8	
진보	21.6	56.1	19.2	3.1	3.0	
무관심	12.8	52.3	28.0	6.8	2.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1년 기준)와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이 사회·정치문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예전보다는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인식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들은 아동·청소년이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약 70%가 ‘동의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을 내보였지만 아동·청소년들은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87.7%의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20대 이하(75.0%), 30대(74.0%), 40대(74.3%)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문제 참여에 대해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높지만 60대 이상(60.9%)의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낮은 편이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동의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은 초등학교 83.1%, 중학생 87.4%로 높은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은 92.6%가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문제 참여에 ‘동의한다’(매우+다소)고 하였다.

[그림 3-38] 연령층별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찬성률 비교

(단위 : %)



(4) 초·중고 정규수업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학교 정규수업에서 인권 관련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이 8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와 교육수준에 따른 의견 차이는 없으며, 20-30대층은 86.0%로 다른 연령층보다 동의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표 3-82〉 학교 정규수업에서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배경 요인별 비교

(단위 : %)

구분	매우동의	다소동의	다소 동의인함	전혀 동의인함	평균 (4점)	χ^2 (df)
전체	26.2	61.2	11.5	1.2	3.1	
성별						
남자	25.9	61.1	11.9	1.2	3.1	3.331(3)
여자	26.5	61.3	11.1	1.1	3.1	
연령						
20-30대	25.9	60.1	12.5	1.5	3.1	15.880(6)*
40-50대	27.3	60.5	11.1	1.0	3.1	
60대 이상	25.2	63.2	10.7	0.9	3.1	
학력						
고졸이하	24.8	62.7	11.3	1.1	3.1	4.909(3)
대재이상	27.5	59.7	11.6	1.2	3.1	
직업						
관리전문직	29.7	57.8	11.2	1.3	3.2	24.243(9)**
사무판매서비스	25.0	62.0	11.7	1.3	3.1	
농림생산직	24.5	64.0	10.5	1.0	3.1	
비경활인구	27.5	59.7	11.7	1.0	3.1	
종교						
없음	24.9	62.0	11.9	1.1	3.1	34.875(3)** *
있음	28.7	59.6	10.6	1.2	3.2	
정치성향						
보수	26.8	60.2	11.5	1.6	3.1	85.317(9)** *
중도	24.7	61.2	13.1	1.0	3.1	
진보	30.2	59.3	9.7	0.8	3.2	
무관심	24.6	63.5	10.6	1.3	3.1	

5)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해 편견과 혐오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포용적이고 관용적인지는 인권 침해와 차별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거리감은 이러한 인식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로서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친밀감의 정도이다. 한 개인이 자신과 다른 인종, 종족 등의 사람과 접촉을 허용하는 정도로 측정된다. 사회적 거리감은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가족의 배우자로 인정’하는 데까지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관계 맺음을 허용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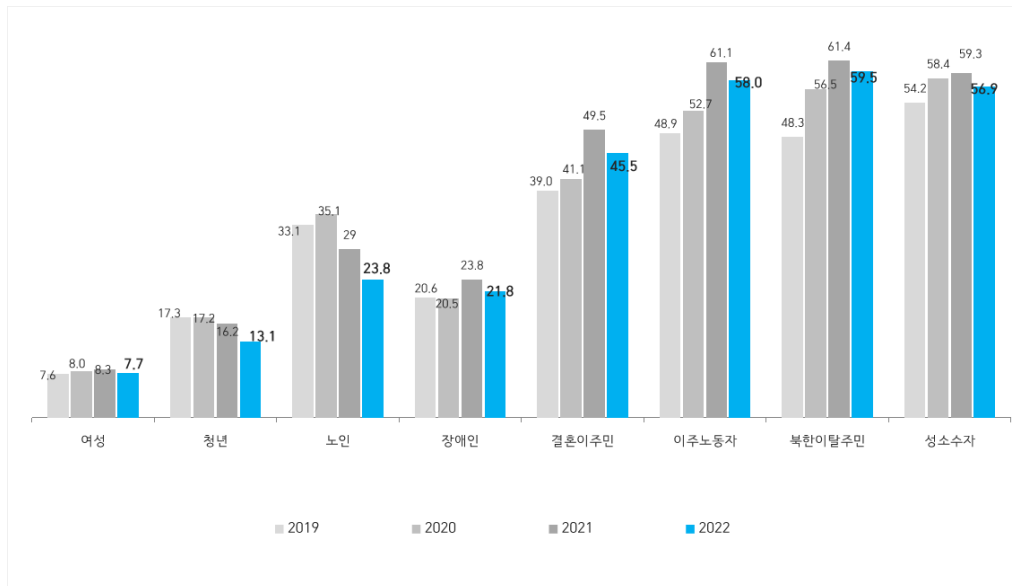
한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공적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약자/소수자가 선출직 정치인(지자체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에 진출하고 대표자로 선출되어야 한다. 공적 관계인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해 어느 정도 불편하게 느끼는지를 질문하였다.

(1) 선출직 정치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시계열 추이

다양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포용성, 관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매우+다소)고 응답한 약자/소수자 집단은 북한이탈주민(59.5%), 이주노동자(58.0%), 성소수자(56.9%), 결혼이주민(4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7.7%)과 청년(13.1%)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감이 낮게 나타났다.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장애인(21.8%)과 노인(23.8%)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은 21~23% 수준이다. 2019~2021년 사이에는 여성, 청년, 노인을 제외하고 약자/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2년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약간 줄어들었다.

[그림 3-39] 선출직 정치인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시계열 추이

(단위: %)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은 이주(migration)를 통해 정주하지만 해당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기 쉬운 상황에 놓인다. 그런데 이주민의 인종적, 사회적 특성과 함께 지역 내부인의 태도와 반응으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은 다르게 형성된다. 2012년 19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당선된 적이 있으며, 2020년 21대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이 당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59.5%로, 보기 항목으로 제시된 사회적 약자/소수자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경 요인별로 남성(58.1%)보다는 여성(60.9%), 60대 이상 고연령층(67.8%),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65.6%),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64.7%)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63.2%),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층(63.5%)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83〉 선출직 정치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단위 : %)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전체	17.7	41.8	30.9	9.5	2.3	
성별						
남자	17.0	41.1	31.6	10.3	2.4	14.677(3)**
여자	18.4	42.5	30.3	8.7	2.3	
연령						
20-30대	14.1	39.1	33.5	13.3	2.5	296.293(6)***
40-50대	16.7	41.8	32.0	9.5	2.3	
60대 이상	23.1	44.7	26.7	5.4	2.1	
학력						
고졸이하	21.1	44.5	28.0	6.3	2.2	294.141(3)***
대재이상	14.6	39.3	33.6	12.5	2.4	
직업						
관리전문직	13.9	33.8	34.8	17.4	2.6	219.171(9)***
사무판매서비스	14.7	41.8	33.6	10.0	2.4	
농림생산직	21.9	42.8	27.1	8.2	2.2	
비경활인구	19.9	43.3	29.0	7.8	2.2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종교						
없음	17.5	42.1	30.7	9.7	2.3	4.616(3)
있음	18.1	41.3	31.4	9.2	2.3	
정치성향						
보수	20.4	43.2	28.3	8.2	2.2	83.210(9)***
중도	14.5	42.4	33.8	9.3	2.4	
진보	17.0	39.4	31.9	11.7	2.4	
무관심	20.0	41.5	29.0	9.5	2.3	

(3)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이주노동자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58.0%로 나타났다. 배경 요인별로는 남성(56.3%)보다 여성(59.6%), 60대 이상 고연령층(67.4%),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층(64.1%),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63.3%)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61.1%),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61.6%)이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거리감을 더 강하게 표출하였다.

〈표 3-84〉 선출직 정치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리감

(단위 : %, 점)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전체	15.4	42.5	31.2	10.8	2.4	
성별						
남자	14.8	41.5	32.4	11.3	2.4	11.145(3)*
여자	16.0	43.6	30.0	10.4	2.3	
연령						
20-30대	12.7	37.9	34.5	14.8	2.5	318.873(6)***
40-50대	14.2	42.7	32.2	10.9	2.4	
60대 이상	20.0	47.3	26.3	6.3	2.2	
학력						
고졸이하	18.1	46.0	28.4	7.5	2.3	276.900(3)***
대재이상	13.0	39.3	33.8	13.9	2.5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직업						
관리전문직	12.3	35.0	34.3	18.4	2.6	207.099(9)***
사무판매서비스	12.5	42.6	33.6	11.4	2.4	
농림생산직	18.8	44.6	28.2	8.5	2.3	
비경활인구	17.8	43.3	29.4	9.6	2.3	
종교						
없음	14.9	43.1	31.1	10.9	2.4	13.497(3)**
있음	16.5	41.5	31.3	10.7	2.4	
정치성향						
보수	17.8	43.8	28.8	9.5	2.3	89.025(9)***
중도	12.4	43.6	33.5	10.4	2.4	
진보	13.9	41.0	32.1	13.0	2.4	
무관심	18.3	41.0	29.7	11.0	2.3	

(4)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성소수자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56.9%로 나타났다. 2020년 58.4%, 2021년 59.3%보다는 거리감이 약간 악화되었다.

배경 요인별로는 성별 차이가 없으며, 60대 이상 고연령층(69.0%),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64.9%),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64.0%), 종교가 있는 경우(60.1%),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63.9%)을 가진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드러냈다.

〈표 3-85〉 선출직 정치인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전체	21.6	35.2	31.2	11.9	2.3	
성별						
남자	21.4	35.3	30.8	12.5	2.3	2.832(3)
여자	21.9	35.2	31.5	11.4	2.3	
연령						
20-30대	16.0	28.8	36.1	19.1	2.6	649.936(6)***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40-50대	21.3	36.6	31.1	11.0	2.3	
60대 이상	28.3	40.6	25.8	5.3	2.1	
학력						
고졸이하	25.3	39.6	28.0	7.1	2.2	458.973(3)***
대재이상	18.3	31.2	34.1	16.4	2.5	
직업						
관리전문직	20.0	28.8	30.9	20.3	2.5	251.500(9)***
사무판매서비스	17.6	34.2	35.4	12.8	2.4	
농림생산직	25.8	38.2	26.5	9.5	2.2	
비경활인구	24.4	36.5	28.9	10.2	2.2	
종교						
없음	19.9	35.2	32.0	12.8	2.4	25.494(3)***
있음	24.8	35.3	29.6	10.3	2.3	
정치성향						
보수	26.9	37.0	27.3	8.8	2.2	121.942(9)***
중도	18.7	35.5	33.9	11.9	2.4	
진보	20.2	32.4	32.0	15.4	2.4	
무관심	21.7	35.4	30.6	12.3	2.3	

(5)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결혼이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45.5%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결혼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4.0%p 감소하였다.

배경 요인별로는 남성(44.1%)보다는 여성(47.0%), 60대 이상 고연령층(54.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51.2%),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50.6%)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48.8%), 종교가 있는 경우(46.1%), 정치적 보수 성향층(50.9%)에서 결혼이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6〉 선출직 정치인 결혼이주민에 대한 거리감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전체	10.7	34.9	39.3	15.2	2.6	
성별						
남자	10.4	33.7	39.8	16.2	2.6	9.750(3)*
여자	11.0	36.0	38.9	14.2	2.6	
연령						
20~30대	8.9	30.7	40.8	19.7	2.7	315.843(6)***
40~50대	9.3	34.6	40.6	15.5	2.6	
60대 이상	14.4	39.7	36.1	9.8	2.4	
학력						
고졸이하	12.6	38.6	37.7	11.1	2.5	265.087(3)***
대재이상	8.9	31.4	40.8	18.9	2.7	
직업						
관리전문직	8.4	27.2	40.0	24.3	2.8	176.145(9)***
사무판매서비스	8.6	33.9	42.0	15.5	2.6	
농림생산직	13.1	37.5	37.0	12.4	2.5	
비경활인구	12.4	36.4	37.3	13.9	2.5	
종교						
없음	10.2	35.0	39.7	15.1	2.6	13.833(3)**
있음	11.5	34.6	38.6	15.2	2.6	
정치성향						
보수	12.3	38.6	36.1	13.0	2.5	121.442(9)***
중도	8.4	33.9	41.9	15.8	2.7	
진보	8.8	33.6	40.4	17.3	2.7	
무관심	13.5	33.5	38.1	14.8	2.5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지역구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17대 50.8세, 18대 53.2세, 19대 54.5세, 20대 55.7세, 21대 54.9세이다. 2022년 광역단체장 후보의 평균 연령은 57세, 기초단체장 후보의 평균 연령은 60세였다. 투표에 의한 결정되는 선출직 정치인 후보의 연령은 50~60대의 장년층, 노년층의 비중이 매우 높게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23.8%로 낮은 반면 ‘불편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의견은 76.2%로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

배경 요인별로는 남성(22.2%)보다는 여성(25.4%), 60대 이상 고연령층(28.8%),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27.5%),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26.2%), 정치적으로 무관심층(26.9%) 및 진보 성향층(25.2%) 중에서 노인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3-87〉 선출직 정치인 노인에 대한 거리감

(단위 : %)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전체	3.8	20.0	47.1	29.1	3.0	
성별						
남자	3.6	18.6	47.3	30.5	3.0	13.745(3)**
여자	4.0	21.4	46.9	27.7	3.0	
연령						
20-30대	3.0	15.8	48.1	33.1	3.1	127.145(6)** *
40-50대	4.0	20.2	46.6	29.3	3.0	
60대 이상	4.4	24.4	46.6	24.5	2.9	
학력						
고졸이하	4.6	22.8	48.1	24.4	2.9	178.584(3)** *
대제이상	3.1	17.4	46.1	33.5	3.1	
직업						
관리전문직	3.8	18.4	42.3	35.5	3.1	49.588(9)***
사무판매서비스	3.1	18.5	49.2	29.1	3.0	
농림생산직	4.8	21.3	46.4	27.4	3.0	
비경활인구	4.0	21.4	46.2	28.4	3.0	
종교						
없음	4.2	19.8	47.4	28.6	3.0	25.298(3)***
있음	3.1	20.4	46.4	30.1	3.0	
정치성향						
보수	3.3	20.3	48.0	28.5	3.0	69.753(9)***
중도	2.8	18.1	49.3	29.8	3.1	
진보	5.1	20.1	43.8	31.0	3.0	
무관심	4.6	22.3	45.8	27.3	3.0	

(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장애인의 경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로 장애인이 공천 받은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최근 선거에서는 장애인 후보의 비례대표 공천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장애인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21.8%로 낮게 나타났고, ‘불편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의견은 78.2%로,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의견이 그렇지 않은 의견의 약 1/4 수준이다.

배경 요인별로는 성별 차이가 없으며, 60대 이상의 고연령층(27.5%),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25.8%),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25.1%),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24.4%)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88〉 선출직 정치인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전체	3.3	18.6	51.5	26.7	3.0	
성별						
남자	3.2	18.1	51.0	27.7	3.0	1.959(3)
여자	3.3	19.1	51.9	25.7	3.0	
연령						
20-30대	2.8	15.8	49.2	32.3	3.1	239.628(6)***
40-50대	3.3	17.0	52.4	27.3	3.0	
60대 이상	3.7	23.7	52.7	19.8	2.9	
학력						
고졸이하	4.0	21.9	53.1	21.1	2.9	278.386(3)***
대재이상	2.6	15.6	50.0	31.8	3.1	
직업						
관리전문직	2.4	13.3	48.3	36.1	3.2	103.556(9)***
사무판매회서비스	2.7	17.6	52.8	26.9	3.0	
농림생산직	4.5	20.6	51.4	23.5	2.9	
비경활인구	3.5	20.0	50.8	25.7	3.0	
종교						
없음	3.6	19.3	50.5	26.6	3.0	25.092(3)***
있음	2.6	17.4	53.2	26.8	3.0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정치성향						
보수	3.5	21.0	51.8	23.7	3.0	60.281(9)***
중도	2.3	18.6	51.3	27.8	3.0	
진보	3.8	16.7	49.8	29.8	3.1	
무관심	3.9	17.9	52.6	25.7	3.0	

(8) 청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나이 기준의 위계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경륜이 있는 정치인에 대한 선호가 강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13.1%로 매우 낮은 반면 ‘불편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의견은 86.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배경 요인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으며, 60대 이상 고령층(15.0%)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14.9%),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15.1%), 정치적 진보 성향(14.7%) 중에서 청년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20-30대 연령층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은 11.2%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표 3-89〉 선출직 정치인 청년에 대한 거리감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전체	2.2	10.9	46.6	40.3	3.2	
성별						
남자	2.1	11.0	46.7	40.2	3.3	2.813(3)
여자	2.3	10.8	46.5	40.4	3.2	
연령						
20-30대	1.7	9.5	44.0	44.7	3.3	90.490(6)***
40-50대	2.4	11.0	47.0	39.7	3.2	
60대 이상	2.6	12.4	48.9	36.1	3.2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학력						
고졸이하	2.4	12.4	49.2	35.9	3.2	136.773(3)***
대재이상	2.0	9.5	44.1	44.3	3.3	
직업						
관리전문직	2.3	12.7	40.1	44.9	3.3	29.773(9)***
사무판매서비스	2.4	11.0	46.8	39.8	3.2	
농림생산직	2.3	11.8	48.0	38.0	3.2	
비경활인구	2.0	10.0	47.3	40.8	3.3	
종교						
없음	2.1	10.9	47.1	40.0	3.2	11.015(3)*
있음	2.5	10.9	45.7	40.9	3.2	
정치성향						
보수	1.9	11.0	45.9	41.2	3.3	50.422(9)***
중도	2.0	10.7	48.6	38.6	3.2	
진보	3.1	11.6	43.1	42.2	3.2	
무관심	2.0	10.6	47.2	40.2	3.3	

(9) 여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여성의 정치 진출은 이전부터 시도되었고 다른 약자/소수자에 비해서 여성 후보의 공천도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이고, 이 중 비례대표로 선출된 경우는 24명이다. 국회 및 시도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천할당제’ 추진을 위해 정당법을 개정한 이후 여성의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후보 공천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어서 여성 후보 공천율은 매우 낮고 여성 단체장의 비율도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7.7%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 정치인, 여성 자치단체장에 대한 거리감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배경 요인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8.1%), 60대 이상 고령층(9.0%), 고등학교 졸업 이하(9.0%), 농림생산직(9.0%), 정치적 진보층(9.3%)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3-90〉 선출직 정치인 여성에 대한 거리감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편	다소 불편	별로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전체	0.9	6.8	45.7	46.6	3.4	
성별						
남자	0.9	7.2	47.6	44.3	3.4	35.045(3)***
여자	0.9	6.4	43.9	48.8	3.4	
연령						
20-30대	0.9	5.5	42.9	50.7	3.4	92.443(6)***
40-50대	0.9	6.8	46.0	46.3	3.4	
60대 이상	0.9	8.2	48.5	42.5	3.3	
학력						
고졸이하	0.8	8.2	49.3	41.7	3.3	180.191(3)***
대재이상	1.0	5.5	42.4	51.1	3.4	
직업						
관리전문직	1.6	5.9	39.3	53.2	3.4	51.416(9)***
사무판매서비스	1.0	7.0	45.9	46.0	3.4	
농림생산직	0.8	8.2	48.8	42.2	3.3	
비경활인구	0.6	6.1	45.5	47.7	3.4	
종교						
없음	1.0	7.3	46.5	45.1	3.4	53.676(3)***
있음	0.7	5.8	44.2	49.4	3.4	
정치성향						
보수	1.2	5.9	46.7	46.3	3.4	66.156(9)***
중도	0.8	6.9	45.9	46.4	3.4	
진보	1.0	8.3	42.0	48.8	3.4	
무관심	0.8	6.3	47.5	45.5	3.4	

6) 혐오표현의 경험 및 대응

(1)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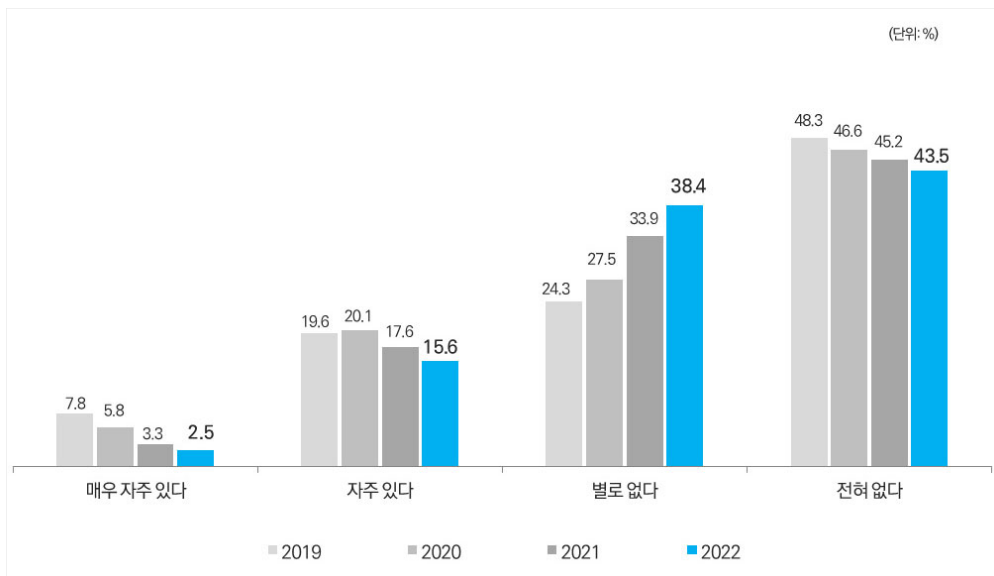
①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

지난 1년간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매우 자주+자주+별로)는 응답은 56.5%를

차지하는 반면 ‘응답자의 43.5%는 혐오표현에 노출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019년 48.3%, 2020년 46.6%, 2021년 45.2%에서 2022년 43.5%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매우 자주 있다’는 응답도 마찬가지로 2019년 7.8%, 2020년 5.8%, 2021년 3.3%, 2022년 2.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주 있다’는 응답은 2019년 19.6%에서 2020년 20.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17.6%, 2022년 15.6%로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별로 없다’는 응답은 2019년 24.3%에서 2020년 27.5%, 2021년 33.9%, 2022년 38.4%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40] 혐오표현의 노출 경험 시계열 추이



배경 요인별로 혐오표현에 노출된 적이 ‘있다’(매우 자주+자주+별로)는 응답에는 종교에 따른 차이가 없고, 남성(59.6%)보다는 여성(63.4%), 20-30대층(65.3%),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63.7%),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66.1%), 정치적 진보 성향층(67.3%)에서 상대적으로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1〉 혐오표현 노출 경험

(단위 : %)

구분	매우 자주 있다	자주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평균 (4점)	χ^2 (df)
전체	2.5	15.6	38.4	43.5	3.2	
성별						
남자	2.7	17.4	39.6	40.4	3.2	63.593(3)***
여자	2.3	13.9	37.2	46.5	3.3	
연령						
20-30대	4.8	21.9	38.7	34.7	3.0	739.550(6)***
40-50대	1.9	15.5	40.4	42.2	3.2	
60대 이상	0.7	9.0	35.5	54.9	3.4	
학력						
고졸이하	1.1	10.5	37.1	51.3	3.4	606.992(3)***
대재이상	3.8	20.3	39.5	36.3	3.1	
직업						
관리전문직	5.8	24.9	35.5	33.9	3.0	335.821(9)***
사무판매서비스	2.7	17.5	40.3	39.4	3.2	
농림생산직	1.1	12.2	37.4	49.2	3.3	
비경활인구	2.2	13.0	37.4	47.4	3.3	
종교						
없음	2.6	15.9	38.2	43.3	3.2	1.718(3)
있음	2.3	15.2	38.6	43.9	3.2	
정치성향						
보수	1.7	11.9	36.9	49.5	3.3	401.133(9)***
중도	2.9	17.5	38.8	40.8	3.2	
진보	4.1	19.5	43.7	32.7	3.0	
무관심	1.5	13.9	35.1	49.5	3.3	

②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

혐오표현의 접촉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를 모두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TV/라디오방송’(46.7%), ‘인터넷방송’(39.7%), ‘온라인 포털 등’(31.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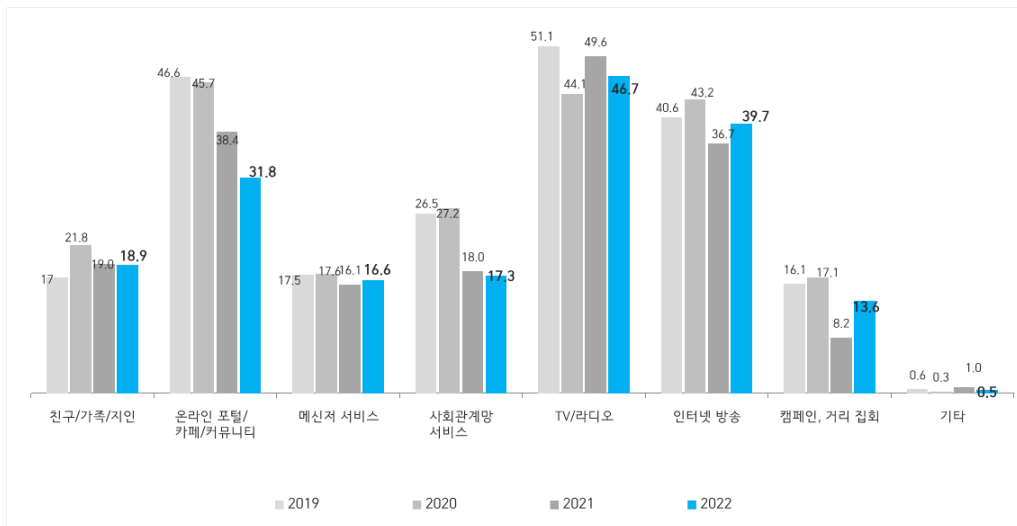
2021년과 비교해 보면,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는 ‘인터넷 방송’의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바뀌었고 ‘온라인 포털 등’은 2위에서 3위가 되었다. ‘TV/라디오방송’의 순위는 여전히 1위를 차지

하고 있어서 혐오표현을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결국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혐오표현을 접촉하는 경험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이후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온라인 포털 등’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비중도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2021년과 2022년에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림 3-41]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 시계열 추이

(단위: %)



배경 요인별로 혐오표현의 주요 경로 중에서 ‘TV/라디오 방송’은 여성(48.5%), 60대 이상 고령층(65.7%), 고등학교 졸업 이하(56.8%), 농림생산직 52.4%)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53.4%), 종교가 있는 경우(51.2%), 정치적 보수층(59.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혐오표현의 접촉 경험은 남성(41.0%), 20-30대(49.7%), 대학교 재학 이상(46.5%), 관리전문직(46.8%) 및 사무판매서비스직(43.5%), 정치적 진보 성향층(46.3%)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또한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한 혐오표현 접촉 경험은 남성(33.7%), 20-30대(45.9%), 대학교 재학 이상(41.8%), 관리전문직(50.9%), 정치적 진보 성향층(38.8%)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92〉 혐오표현 접촉 경로

(단위 : %)

구분	친구/가족 /지인	온라인 포털 등	메신저 서비스	SNS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캠페인, 집회	기타
전체	18.9	31.8	16.6	17.3	46.7	39.7	13.6	0.5
성별								
남자	19.1	33.7	16.9	16.9	44.9	41.0	14.1	0.4
여자	18.6	29.7	16.2	17.7	48.5	38.3	13.2	0.6
연령								
20~30대	17.4	45.9	23.1	28.0	32.9	49.7	12.9	0.6
40~50대	17.3	30.3	15.2	13.7	48.4	41.3	13.9	0.4
60대 이상	23.8	11.7	8.4	6.0	65.7	21.0	14.4	0.5
학력								
고졸이하	24.0	17.5	11.8	9.2	56.8	30.0	12.9	0.3
대재이상	15.3	41.8	19.9	23.0	39.5	46.5	14.1	0.7
직업								
관리전문직	14.1	50.9	18.2	24.2	34.6	46.8	16.0	1.1
사무판매서비스	18.8	33.7	19.8	21.1	42.0	43.5	14.6	0.5
농림생산직	22.5	22.2	11.2	9.1	52.4	33.2	10.4	0.3
비경활인구	18.8	28.1	14.6	14.3	53.4	35.8	13.2	0.4
종교								
없음	19.1	30.9	17.0	17.9	44.2	41.2	12.8	0.4
있음	18.4	33.4	15.8	16.2	51.2	37.0	15.1	0.7
정치성향								
보수	20.7	22.3	9.1	10.4	59.6	29.7	15.3	0.5
중도	20.1	32.2	18.8	18.4	41.9	42.7	12.9	0.5
진보	17.3	38.8	19.6	21.1	42.6	46.3	15.5	0.3
무관심	16.9	33.0	17.1	18.2	45.8	37.7	11.2	0.6

③ 혐오표현의 대상

혐오표현의 접촉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접해본 혐오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었는지를 모두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다양한 집단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정치인(44.1%), 성소수자(26.5%), 여성(25.7%), 장애인(24.0%), 특정 종교인(22.0%), 연예인(20.7%), 남성(18.1%), 특정 지역 출신인(17.7%) 등의 순으로 혐오표현의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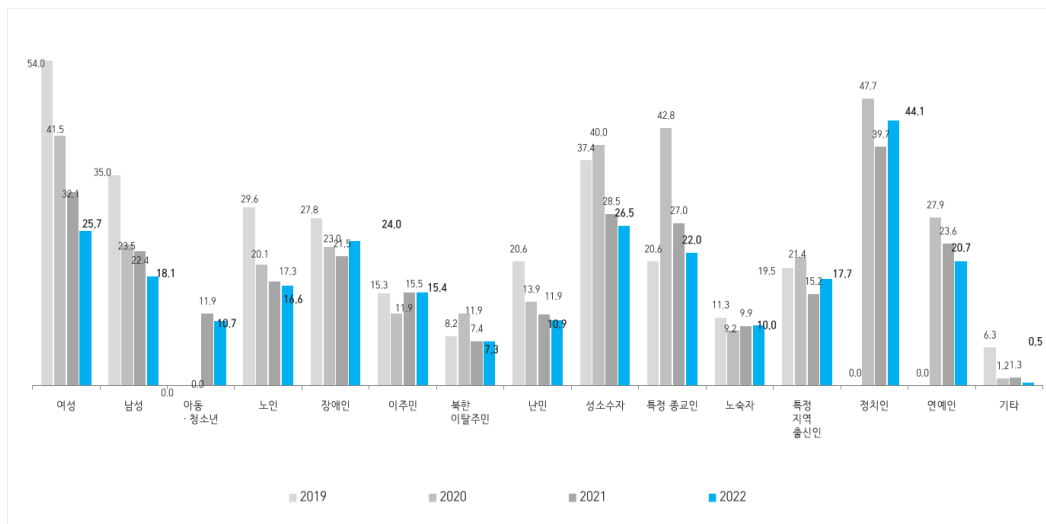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15.4%), 난민(10.9%), 아동·청소년(10.7%), 노숙자(10.0%), 북한이탈주민(7.3%)에 대한 혐오표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21년 대비 혐오표현의 대상자로서 여성, 남성, 특정 종교인, 연예인 등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장애인, 특정 지역 출신인, 정치인 등은 오히려 혐오표현이 증가하였다.

[그림 3-42] 혐오표현의 대상 시계열 추이

(단위 : %)



배경 요인별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 혐오 표현의 대상자로 지목했는지를 살펴보면, 혐오 표현의 대상자로서 가장 순위가 높은 ‘정치인’은 남성(46.0%), 60대 이상(46.2%), 관리전문직(46.4%)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들 집단이 갖는 특성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고 관여층’, 즉 정치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며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표현의 대상자로서 두 번째 순위로 거론된 ‘성소수자’를 지목한 사람들은 20-30대 청년층(32.3%), 대학교 재학 이상(30.9%), 관리전문직(36.7%), 종교가 있는 경우(28.0%), 정치적 진보 성향층(28.4) 및 중도층(27.8%)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혐오표현의 대상자로서 ‘여성’을 꼽은 사람들은 20-30대 청년층(35.3%), 대학교 재학 이상(30.8%), 관리전문직(30.7%)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으로 논란이 되었던 ‘장애인’ 혐오표현은 20-30대층(26.8%), 대학교 재

학 이상(26.0%), 관리전문직(28.9%), 정치적 진보 성향층(29.1%)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3-93〉 혐오표현의 주요 대상자 인식

(단위 : %)

구분	여성	남성	장애인	성소수자	특정 종교인	정치인	연예인
전체	25.7	18.1	24.0	26.5	22.0	44.1	20.7
성별							
남자	24.6	19.2	23.8	26.8	23.5	46.0	19.8
여자	26.9	16.8	24.1	26.1	20.4	42.0	21.7
연령							
20~30대	35.3	24.2	26.8	32.3	22.9	42.0	25.0
40~50대	23.3	16.3	23.9	25.3	22.4	44.8	20.2
60대 이상	14.2	11.3	19.5	19.1	20.0	46.2	14.7
학력							
고졸이하	18.4	14.6	21.1	20.3	19.3	43.2	18.4
대재이상	30.8	20.5	26.0	30.9	23.9	44.7	22.3
직업							
관리전문직	30.7	19.4	28.9	36.7	27.9	46.4	22.5
사무판매서비스	26.4	17.7	24.5	27.8	21.8	42.3	22.1
농림생산직	20.2	17.4	21.5	19.6	18.9	43.3	18.4
비경활인구	25.9	18.5	22.9	25.0	21.9	46.0	19.5
종교							
없음	26.8	18.9	22.6	25.7	21.5	42.7	20.6
있음	23.7	16.5	26.5	28.0	23.0	46.7	20.9
정치성향							
보수	20.0	14.9	19.5	21.7	21.7	45.8	15.5
중도	28.1	20.6	23.1	27.8	23.2	44.8	22.7
진보	28.2	16.4	29.1	28.4	22.4	45.8	22.1
무관심	24.9	19.0	24.4	27.1	20.1	39.5	21.1

그런데 가까운 지인 중에서 소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해당 소수자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더 많이 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실제로 지

인 관계망으로 인해 혐오표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외에도 민감성이 더 높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를 많이 하게 된다. 장애인 지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에도 더 많이 노출되었다. 결혼이주민 또는 이주노동자 지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더 많이 접했고 또한 장애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더 많이 접하였다.

〈표 3-94〉 혐오표현의 주요 대상자 인식의 소수자 지인의 유무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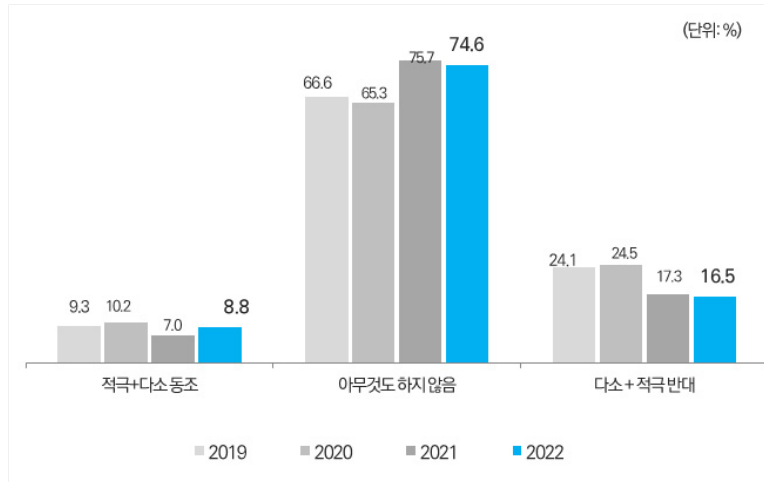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특정 종교인	정치인	연예인
장애인 지인	없음	23.7	16.9	23.5	15.8	23.7	21.4	42.4	19.8
	있음	24.8	18.9	24.8	15.3	25.9	25.6	46.2	17.8
결혼이주민 지인	없음	24.4	17.4	23.5	15.0	24.1	22.2	43.8	19.4
	있음	21.2	18.3	27.2	20.5	26.2	25.7	41.0	17.3
이주노동자 지인	없음	24.1	17.2	23.7	15.3	24.3	22.4	43.6	19.2
	있음	22.9	20.6	26.6	20.2	25.5	25.5	42.1	19.5

④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혐오표현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의 대응 행동을 질문한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74.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혐오표현에 대해서 ‘반대 의견 및 시정 요구’의 응답은 16.5%로 낮았고, ‘동조’하는 경우도 8.8%에 달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대응’은 2020년 65.3%에서 2021년 75.7%로 10.4%p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74.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반대 의견 및 시정 요구’는 2020년 24.5%, 2021년 17.3%, 2022년 16.5%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적극적으로 비판적 대응을 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대신에 무대응과 침묵을 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이다. 혐오표현에 ‘동조’는 2020년 10.2%에서 2021년 7.0%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8.8%로 1.8%p 증가하였다.

[그림 3-43] 혐오표현 노출시 대응의 변화



배경 요인별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무대응’의 답변은 남성과 여성간 성별 차이가 없고, 60대 이상의 고연령층(76.9%), 고등학교 졸업 이하(77.3%),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79.1%), 종교가 없는 경우(75.8%), 정치적 무관심층(78.9%)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혐오표현을 접하고도 무대응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들 집단의 특성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저관여층의 특성을 갖는다.

혐오표현을 접하고 ‘반대 의견/시정 요구’하는 행동의 경우에는 20-30대층(18.0%), 대학교 재학 이상(18.7%), 관리전문직(24.2%), 종교가 있는 경우(18.8%), 정치적 진보 성향층(21.5%)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95〉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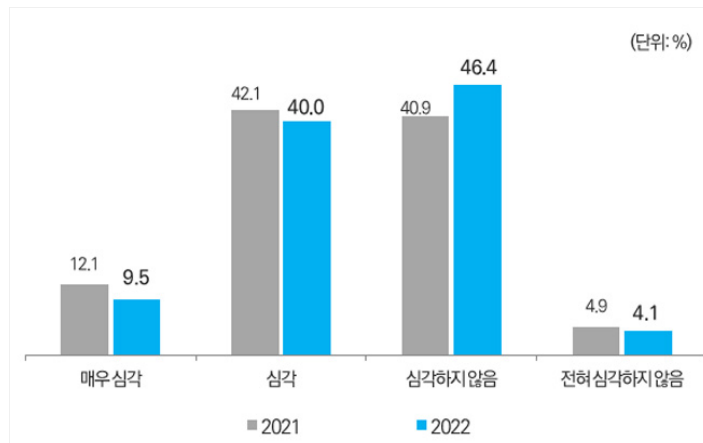
구분	매우 동조	다소 동조	무대응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5점)	X ² (df)
전체	0.8	7.9	74.6	14.2	2.4	2.9	
성별							
남자	0.9	8.6	74.0	13.9	2.6	2.9	1.703(4)
여자	0.7	7.2	75.4	14.4	2.3	2.9	
연령							
20-30대	0.7	7.8	73.6	15.4	2.6	2.9	18.411(8)*
40-50대	1.0	7.9	74.3	14.5	2.3	2.9	
60대 이상	0.7	8.3	76.9	11.7	2.4	2.9	

구분	매우 동조	다소 동조	무대응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5점)	X ² (df)
학력							
고졸이하	0.8	8.4	77.3	11.9	1.6	3.0	48.231(4)* **
대재이상	0.8	7.7	72.8	15.7	3.0	2.9	
직업							
관리전문직	1.9	8.7	65.2	19.7	4.5	2.8	85.534(12) ***
사무판매서비스	0.7	8.2	74.3	14.2	2.6	2.9	
농림생산직	0.5	6.8	79.1	12.4	1.2	2.9	
비경활인구	0.8	7.9	75.9	13.2	2.2	2.9	
종교							
없음	0.8	8.0	75.8	13.4	2.0	2.9	27.050(4)* **
있음	0.9	7.8	72.4	15.6	3.3	2.9	
정치성향							
보수	0.6	8.4	77.4	11.3	2.3	2.9	66.160(12) ***
중도	1.0	7.7	73.8	15.6	2.0	2.9	
진보	0.7	8.4	69.3	17.8	3.8	2.8	
무관심	0.9	7.5	78.9	11.0	1.8	2.9	

(2) 혐오표현의 심각성

혐오표현이 ‘심각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49.5%인 반면 ‘심각하지 않다’(매우+다소)는 의견은 50.5%로 나타나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2021년 54.2%에서 2022년 49.5%로 4.7%p 감소하였다.

[그림 3-44] 혐오표현의 심각성



배경 요인별로 혐오표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여성(48.1%)보다는 남성(50.9%), 20-30대 청년층(55.9%),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55.1%),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65.3%), 종교가 있는 경우(51.0%), 정치적 진보 성향층(55.5%)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 3-96〉 혐오표현의 심각성 인지

(단위 : %)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다소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평균 (4점)	χ^2 (df)
전체	9.5	40.0	46.4	4.1	2.5	
성별						
남자	9.6	41.3	45.1	3.9	2.4	11.249(3)*
여자	9.3	38.7	47.6	4.4	2.5	
연령						
20-30대	14.3	41.6	41.7	2.4	2.3	448.704(6)** *
40-50대	8.9	41.5	45.8	3.8	2.4	
60대 이상	4.9	36.4	52.2	6.6	2.6	
학력						
고졸이하	5.9	37.5	50.8	5.8	2.6	398.945(3)** *
대재이상	12.8	42.4	42.3	2.6	2.3	
직업						
관리전문직	16.8	48.5	32.9	1.8	2.2	293.567(9)** *
사무판매서비스	9.1	40.7	47.0	3.2	2.4	
농림생산직	5.8	36.8	51.1	6.3	2.6	
비경활인구	9.8	38.7	46.7	4.7	2.5	
종교						
없음	8.8	39.8	47.5	3.8	2.5	14.955(3)**
있음	10.6	40.4	44.3	4.7	2.4	
정치성향						
보수	6.7	36.1	50.9	6.3	2.6	258.731(9)** *
중도	10.6	40.5	46.2	2.7	2.4	
진보	12.2	43.3	41.3	3.2	2.4	
무관심	8.5	40.5	46.2	4.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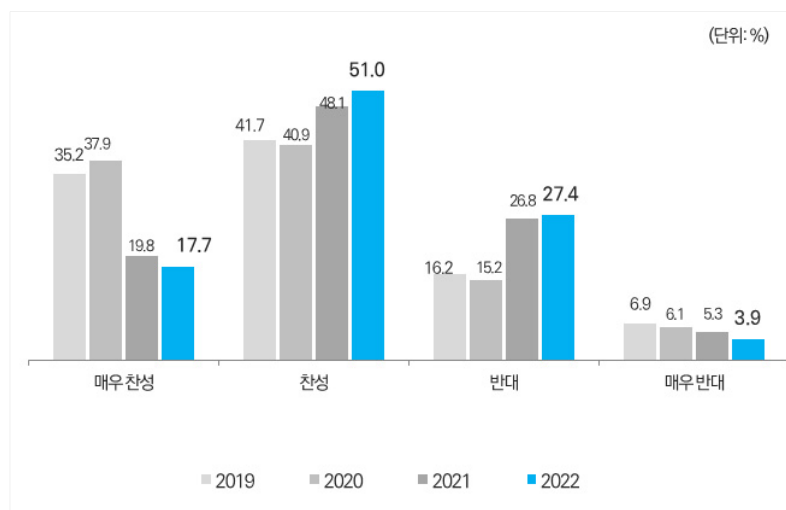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자유라는 서로 상반된 논리 간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나 법적 규제는 이미 유럽, 미국에서는 논의가 오래되었다. 혐오표현은 단순한 욕설 등에 의한 인격의 훼손이 아니라 기존 사회에서 경험한 차별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현재에 지속되고 미래에도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혐오표현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표적이 되는 집단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혐오표현을 줄이는데 법적 규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혐오표현 규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찬성한다’(매우+다소)는 응답은 68.7%이며, ‘반대한다’(매우+다소)는 응답은 31.3%이다.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혐오표현이 ‘심각하다’(매우+다소)는 의견(49.5%)보다 법적 규제에 ‘찬성한다’(매우+다소)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대비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19.8%에서 17.7%로 약간 감소하였고 ‘다소 찬성’한다는 의견은 48.1%에서 51.0%로 약간 증가하였다. ‘다소 반대’ 의견은 26.8%에서 27.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020년 78.8%에서 2021년 67.9%로 감소한 이후 2022년 68.7%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3-45]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배경 요인별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성(67.6%)보다는 여성(69.8%), 40-50대층(70.0%),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70.2%),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71.6%), 종교가 있는 경우(69.5%), 정치적 진보 성향층(71.7%)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97〉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찬성율

(단위 : %)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평균 (4점)	χ^2 (df)
전체	17.7	51.0	27.4	3.9	2.8	
성별						
남자	17.0	50.6	28.3	4.1	2.8	8.925(3)*
여자	18.4	51.4	26.5	3.7	2.8	
연령						
20-30대	18.1	51.3	26.1	4.5	2.8	26.786(6)***
40-50대	18.6	51.4	26.4	3.6	2.8	
60대 이상	16.2	50.1	30.1	3.6	2.8	
학력						
고졸이하	15.8	51.3	29.1	3.8	2.8	49.429(3)***
대재이상	19.5	50.7	25.8	4.0	2.9	
직업						
관리전문직	25.0	46.6	22.7	5.7	2.9	69.769(9)***
사무판매서비스	16.2	52.3	28.2	3.3	2.8	
농림생산직	15.8	52.3	27.3	4.6	2.8	
비경활인구	18.5	50.0	27.7	3.8	2.8	
종교						
없음	16.7	51.6	27.9	3.9	2.8	28.147(3)***
있음	19.6	49.9	26.5	4.0	2.9	
정치성향						
보수	17.5	48.2	29.4	5.0	2.8	62.257(9)***
중도	16.4	52.7	27.4	3.5	2.8	
진보	19.7	52.1	25.1	3.2	2.9	
무관심	18.2	50.5	27.3	3.9	2.8	

7) 인권 의식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인권 의식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은 개인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인권 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각 개인들이 인권 의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어떤 집단이 인권에 민감한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에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등의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인권의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그러한 요인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다중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가 되는 인권 의식은 개인이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옹호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인지, 정서, 행동의 3요소로 구성되지만, 인권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인권은 단순히 인지, 정서, 행동의 3가지 요소만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보다 복합적인 의미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차원적인 개념인 인권 의식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로, 기존의 인권의식조사에서 필수적으로 탐구되어 왔던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부분의 인권의식조사에서 볼 수 있는 인권 인식(awareness)은 인권 의식의 기본적인 요소로 꼽힌다. 인권 옹호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인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인권 인식의 측정은 평소 인권이라는 용어를 접하는 정도, 헌법에 기본권이 명시된 것을 인지하는지 정도의 평균값이다.

인권 의식의 요소로 인권 헌신(commitment)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인권이라는 가치의 수호는 수사로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요구한다. 인권 헌신은 바로 이러한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을 감수할 것인지의 의미를 내포한다. 인권 헌신도가 높으면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권의 가치를 높이 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권을 보류하거나 다른 집단의 인권을 희생하게 될 것이다. 인권 헌신은 타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의 권리 제한을 수용할 것인지 정도의 평균값이다.

인권 지지(support)는 인권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쟁점을 지지하는지를 뜻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에서 인권 친화적인 의견을 지지한다면 인권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권 행동(participation)은 실제로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인권 옹호는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기부나 자원봉사, 개인적인 조언이나 상담이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활동에 국한하여 참여 여부를 파악하였다.

〈표 3-98〉 인권 의식의 구성 요소와 측정

인권의식	인권인식(HR awareness)	아래의 2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함 - 평소 인권 용어를 접하는 정도 (① 전혀 접하지 않음 ~ ④ 매우 자주 접함) - 헌법에 기본 인권의 보호 명시 인지도 (① 전혀 모름 ~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인권에 대한 헌신 (HR commitment)	아래의 2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함 - 타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함 (① 전혀 불필요 ~ ④ 매우 필요) - 나의 기본권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 가능함 (① 전혀 비동의 ~ ④ 매우 동의)
	인권지지 (HR support)	아래 8개 문항의 주요 인권쟁점에 대한 인권에 친화적인 의견을 점수화 (4점 척도)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① 사형제도 폐지 찬반 ②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찬반 ③ 국가정보기관의 온라인 사찰 찬반 ④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⑤ 집회·시위의 장 보장/제한 ⑥ 난민 수용 찬반 ⑦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 찬반 ⑧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주체성 인정 여부
	인권행동 (HR participation)	아래 7개 유형의 행동에 참여 여부(1/0)를 카운트하여 계산함 ① 인권 피해자 조인·상담 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활동 ③ 소수자/약자를 위한 기부 ④ 인권단체 가입·활동 ⑤ 인권 관련 글쓰기 ⑥ 인권 관련 청원/서명운동 ⑦ 온오프라인 인권캠페인/집회

인권 의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직업, 종교, 정치적 성향이다. 이 중 성별은 남성=0인 더미변수로 여성을 포함하였다. 학력 수준은 교육 받은 햇수를 말하며, 무학=0, 초등학교=6, 중학교=9, 고등학교=12, 전문대=15, 대학교=17, 대학원 석사=20, 대학원 박사=25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직업은 비경제활동=0인 더미변수이며, 관리전문직, 사무판매팀서비스직, 농림생산직을 각각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종교는 종교 없음=0인 더미변수로 종교 있음을 포함하였으며, 정치적 성향은 중도 및 무관심=0인 더미변수로 보수 성향,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였다.

〈표 3-99〉 독립변수의 측정

독립변수	성별(더미)	여성=1, 남성=0
	만나이	1세 단위
	교육연수	없음=0, 초등학교=6, 중학교=9, 고등학교=12, 전문대=15, 대학교=17, 대학원 석사=20, 대학원 박사=25
	관리전문직(더미)	관리전문직=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기타=0
	사무판매서비스직(더미)	사무판매서비스직=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기타=0
	농림생산직(더미)	농림생산직=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기타=0
		회귀분석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기타를 기준으로 함
	종교 유무(더미)	종교있음=1, 종교없음=0
	정치적 보수(더미)	정치적 보수=1, 무관심/다른 정치성향=0
	정치적 중도(더미)	정치적 중도=1, 무관심/다른 정치성향=0
	정치적 진보(더미)	정치적 진보=1, 무관심/다른 정치성향=0
		회귀분석에는 정치적 무관심을 기준으로 함

(1) 인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권 인식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결과는 농림생산직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이 인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권 의식의 인지적인 측면이다보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인권 인식이 낮고,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권 인식은 낮아진다. 이렇게 볼 때 여성 고령층의 인권 인식이 다른 집단들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교육연수가 올라갈수록 인권 인식은 높아지는데, 교육연수는 표준화된 베타값이 0.382로,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 중에서 인권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에 비해서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는 인권 인식이 높은 반면 농림생산직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와 인권 인식의 차이가 없다. 정치적 무관심층에 비해서 정치 성향을 가진 경우 인권 인식이 높게 된다.

〈표 3-100〉 인권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유의확률
(상수)	1.574		0.000
여성(더미)	-0.114	-0.083***	0.000
만나이	-0.003	-0.069**	0.000
교육연수	0.068	0.382***	0.000
관리전문직(더미)	0.179	0.068**	0.000
사무판매서비스(더미)	0.042	0.029***	0.000
농림생산직(더미)	-0.007	-0.004	0.615
종교있음(더미)	0.064	0.044***	0.000
정치적보수(더미)	0.050	0.032***	0.000
정치적중도(더미)	0.116	0.078**	0.000
정치적진보(더미)	0.095	0.053***	0.000
결정계수(R2)		0.251	

유의수준: p(<0.1, p**(<0.05, p***(<0.01

(2) 인권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식 헌신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결과를 만나이, 교육연수, 정치적 진보 성향층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독립변수들은 인권 헌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권 헌신 정도가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인권 헌신 정도가 높아진다. 인권 헌신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의 불이익 또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므로,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성향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정치적 진보성향층이 정치 무관심층보다 인권 헌신도가 높으며, 정치적 보수 성향층, 정치적 중도층은 정치 무관심층에 비교해서 인권 헌신도의 차이가 없다.

그밖에 성별, 직업, 종교 유무는 인권 헌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권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표 3-101〉 인권 헌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유의확률
(상수)	2.566		0.000
여성(더미)	0.006	0.006	0.499
만나이	0.002	0.082***	0.000
교육연수	0.009	0.066***	0.000
관리전문직(더미)	-0.007	-0.004	0.674
사무판매서비스(더미)	0.008	0.007	0.434
농림생산직(더미)	0.004	0.003	0.727
종교있음(더미)	0.017	0.016*	0.051
정치적보수(더미)	0.001	0.001	0.901
정치적중도(더미)	-0.016	-0.015	0.145
정치적진보(더미)	0.057	0.042***	0.000
결정계수(R2)		0.007	

*유의수준: $p < 0.1$, ** $p < 0.05$, *** $p < 0.01$

(3) 인권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식 지지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결과를 만나이, 교육연수, 직업 요인으로서는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 정치적 성향은 보수 성향층과 진보 성향층이 인권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연수가 높아질수록 인권 쟁점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인권 친화적인 의견을 내보이게 된다. 직업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에 비해서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이 인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갖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층에 비해서 정치적 보수 성향층은 인권을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갖고 있는 반면 정치적 진보 성향층은 인권을 지지하는 의견은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인권 지지 정도는 차이가 없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와 농림생산직도 인권 쟁점을 둘러싼 찬반 의견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종교의 유무도 인권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특정 종교에 따라 인권 쟁점을 둘러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의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 무관심층과 정치적 중도층은 인권 지지에 있어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인권 쟁점에 대한 태도는 높은 고관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무관심층, 중도층은 인권 지지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02〉 인권 지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유의확률
(상수)	2.267		0.000
여성(더미)	0.010	0.015 [*]	0.067
만나이	0.000	0.026 ^{**}	0.017
교육연수	0.005	0.056 ^{***}	0.000
관리전문직(더미)	0.055	0.044 ^{***}	0.000
사무판매서비스(더미)	0.021	0.030 ^{***}	0.001
농림생산직(더미)	-0.010	-0.012	0.170
종교있음(더미)	-0.001	-0.002	0.796
정치적보수(더미)	-0.063	-0.084 ^{***}	0.000
정치적중도(더미)	-0.004	-0.006	0.563
정치적진보(더미)	0.079	0.092 ^{***}	0.000
결정계수(R ²)		0.029	

*유의수준: p<0.1, p<0.05, p<0.01

(4) 인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식 행동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결과는 농림생산직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이 인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권 의식의 행동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인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인권 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권 행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때 여성 청년층이 다른 집단들보다 인권 옹호를 위한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교육연수가 올라갈수록 인권 행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에 비해서 관리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는 인권 행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는 반면에 농림생산직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와 인권 행동 참여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인권 행동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종교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행동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종교가 있으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정치적 성향도 모두 인권 행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정치적 무관심층에 비

해서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은 모두 인권 행동 참여가 높으며, 그 중에서도 정치적 진보층의 인권 행동 참여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

〈표 3-103〉 인권 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유의확률
(상수)	-0.055		0.191
여성(더미)	0.037	0.028***	0.001
만나이	-0.001	-0.038***	0.000
교육연수	0.014	0.082***	0.000
관리전문직(더미)	0.333	0.131***	0.000
사무판매서비스(더미)	0.021	0.015*	0.098
농림생산직(더미)	-0.006	-0.004	0.680
종교있음(더미)	0.094	0.068***	0.000
정치적보수(더미)	0.046	0.030***	0.002
정치적중도(더미)	0.029	0.020**	0.040
정치적진보(더미)	0.163	0.094***	0.000
R2		0.052	

유의수준: p(0.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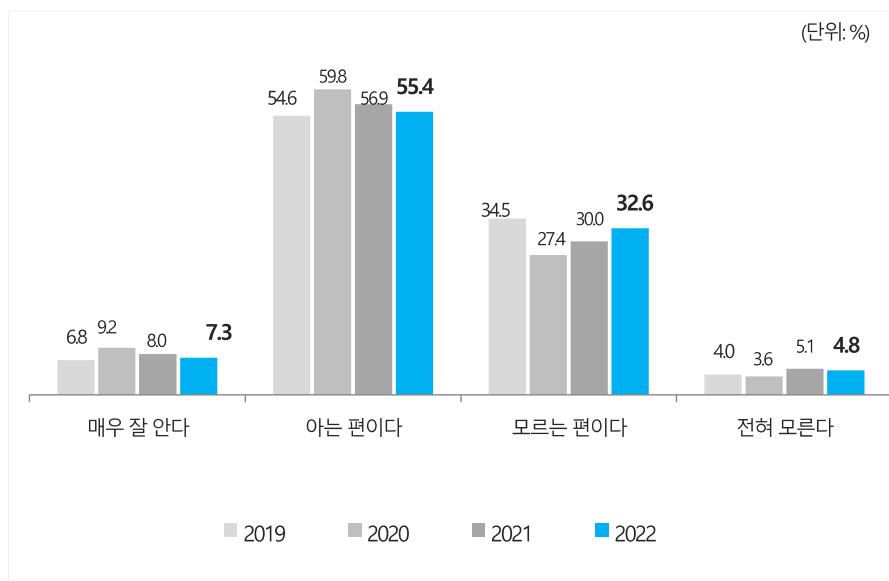
4 인권 교육 및 개선

1) 인권에 대한 인지와 교육

(1) 인권 존중의 의무와 규범에 대한 인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매우 잘 안다 + 아는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62.7%로 2021년 64.9% 대비 2.2%p 감소, 2020년 69.0% 대비 6.3%p가 감소했다.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019년 4.0%에서 2020년 3.6%로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다시 5.1%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4.8%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3-46]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인권 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의 경우, 남성은 65.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59.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의 긍정 응답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

연령에 따르면, 20-30대 67.6%, 40-50대 65%, 60대 이상 54.1%으로 응답해, 연령이 높아

질수록 알고 있다는 긍정 응답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55.4%,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에서는 69.3%가 긍정 응답을 하여,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에서 인권 관련 행동 규범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이 약 14%p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인다.

직업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긍정 응답 비중은 관리전문직 73.6%, 사무판매서비스직 64.4%, 농림생산직 57.6%,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60.5%로 응답하였다. 이는 인권 관련 행동 규범에 대하여 관리전문직이 가장 많은 인권 관련 행동 규범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집단은 61.1%, 종교가 있는 집단은 65.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종교가 있는 집단의 긍정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60%), 중도(66.6%), 진보(65.4%), 무관심(57.8%)의 비율로 나타나 중도적 성향인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3-104〉 인권 존중의 의무와 규범에 대한 인지 수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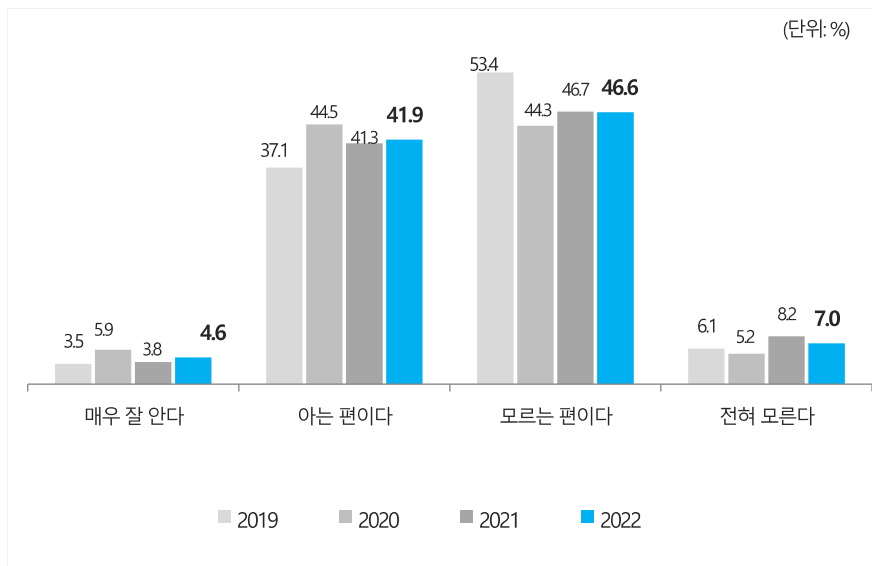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7.3	55.4	32.6	4.8	2.7	
성별						78.571(3) ***
남자	8.2	57.1	30.8	3.8	2.7	
여자	6.3	53.6	34.3	5.7	2.6	
지역						301.909 (3)***
도시[동부]	7.5	57.1	31.7	3.7	2.7	
농어촌[읍면부]	6.3	47.3	36.7	9.7	2.5	
연령						451.335 (6)***
20-30대	9.3	58.3	29.3	3.1	2.7	
40-50대	7.9	57.1	31.4	3.6	2.7	
60대 이상	4.3	49.8	37.8	8.2	2.5	
학력						653.283 (3)***
고졸이하	4.5	50.9	37.3	7.4	2.5	
대재이상	9.8	59.5	28.3	2.4	2.8	
직업						411.985 (9)***
관리전문직	15.6	58.0	23.9	2.5	2.9	
사무판매서비스	7.4	57.0	32.5	3.1	2.7	
농림생산직	5.5	52.1	35.0	7.4	2.6	
비경제활동인구	6.0	54.5	33.5	6.0	2.6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평균 (4점)	$\chi^2(df)$
종교						26.685(3) ***
없음	7.0	54.1	34.0	4.9	2.6	
있음	7.7	57.6	29.9	4.7	2.7	
정치성향						180.799 (9)***
보수	6.1	53.9	34.2	5.8	2.6	
중도	7.9	58.7	30.0	3.4	2.7	
진보	8.5	56.9	30.5	4.1	2.7	
무관심	6.7	51.1	36.1	6.2	2.6	

(2) 인권 침해와 차별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본인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안다(매우 잘 안다+아는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6.5%로, 2021년 45.1% 대비 1.6%p 증가했으나, 2020년 50.4% 대비 3.9%p가 감소했다.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6.1%(2019)→5.2%(2020)→8.2%(2021)→7%(2022)로 등락을 반복하며 변동하고 있다.

[그림 3-47] 인권 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인권 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의 경우, 남성은 51.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41.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의 긍정 응답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

연령에 따르면, 20-30대 53.7%, 40-50대 50.1%, 60대 이상 33.8%으로 응답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알고 있다는 긍정 응답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37.6%,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에서는 54.5%가 긍정 응답을 하여,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에서 인권 관련 행동 규범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이 약 16.9%p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인다.

직업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긍정 응답 비중은 관리전문직 55.4%, 사무판매서비스직 51.5%, 농림생산직 40.7%,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41.4%로 응답하였다. 이는 차별시의 대처 방법에 대하여 관리전문직이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집단은 44.8%, 종교가 있는 집단은 49.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종교가 있는 집단의 긍정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43.1%), 중도(51%), 진보(51.5%), 무관심(39.7%)의 비율로 나타나 진보적 성향인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3-105〉 인권 침해와 차별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수준

(단위: %, 점)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4.6	41.9	46.6	7.0	2.4	
성별						
남자	5.7	45.4	43.2	5.7	2.5	150.484(3)***
여자	3.5	38.4	49.9	8.3	2.4	
지역						
도시[동부]	4.4	43.4	46.2	5.9	2.5	237.010(3)***
농어촌[읍면부]	5.1	34.7	48.2	12.0	2.3	
연령						
20-30대	6.2	47.5	42.0	4.4	2.6	726.578(6)***
40-50대	4.9	45.2	45.1	4.8	2.5	
60대 이상	2.3	31.5	53.6	12.6	2.2	
학력						
고졸이하	2.8	34.8	51.7	10.7	2.3	778.913(3)***
대재이상	6.1	48.4	41.9	3.6	2.6	
직업						
관리전문직	9.3	46.1	39.9	4.7	2.6	472.5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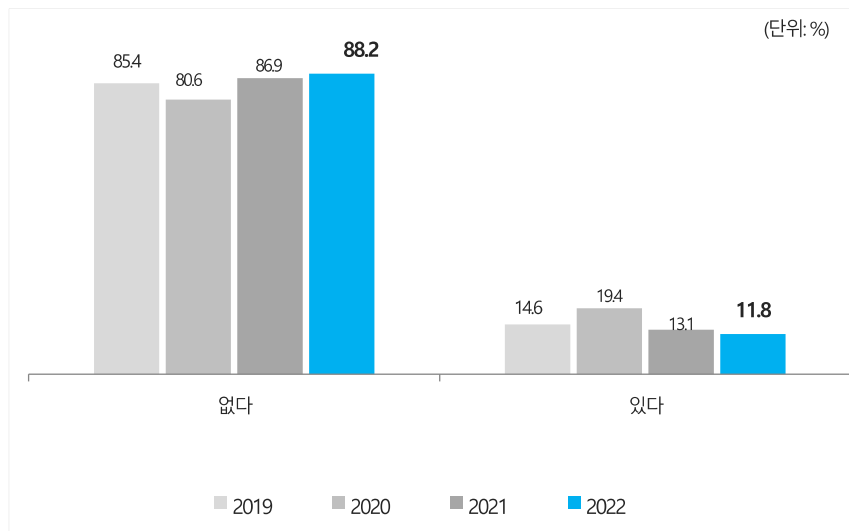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평균 (4점)	$\chi^2(df)$
사무판매서비스	4.7	46.8	44.5	3.9	2.5	
농림생산직	3.7	37.0	48.6	10.7	2.3	
비경활인구	3.6	37.8	49.5	9.1	2.4	
종교						31.223(3)***
없음	4.2	40.6	48.3	6.9	2.4	
있음	5.2	44.2	43.4	7.1	2.5	
정치성향						259.158(9)***
보수	3.8	39.3	47.6	9.3	2.4	
중도	5.0	46.0	44.1	5.0	2.5	
진보	5.1	46.4	43.9	4.6	2.5	
무관심	4.3	35.4	51.0	9.3	2.3	

(3) 인권교육 경험

최근 1년 이내에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1.8%로 나타나, 14.6%(2019)→19.4%(2020)→13.1%(2021)→11.8%(2022)로 2019년 조사 이후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202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교육이나 집단 교육의 진행이 어려웠던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48] 인권교육 경험 추이



인권교육 여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교육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남성은 13.6%, 여성 9.9%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교육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30대 17.5%, 40-50대 13.2%, 60대 이상 3.5%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1년 이내에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은 4.8%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의 집단은 18.2%가 긍정 응답을 하여 약 13%p 이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직업 유형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관리전문직 31.2%, 사무판매서비스직 14.3%, 농림생산직 7.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6.5%로 나타나 직업 유형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관리전문직의 경우 가장 많은 31.2%가 교육 경험이 있음을 응답해 2위인 사무판매서비스직과도 약 16%p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며, 전체의 11.8%에 비해서도 20%p에 가까운 비율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10.8%, 종교가 있는 경우 13.6%가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종교가 있는 경우 교육 받은 경험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7.9%), 중도(13.0%), 진보(16.7%), 무관심(10.1%)가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진보적 성향인 경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보수적 성향인 경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3-106〉 인권교육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없다	있다	$\chi^2(df)$
전체	88.2	11.8	
성별			
남자	86.4	13.6	48.418(1)***
여자	90.1	9.9	
지역			
도시[동부]	87.6	12.4	48.591(1)***
농어촌[읍면부]	91.1	8.9	
연령			
20-30대	82.5	17.5	629.735(2)***
40-50대	86.8	13.2	
60대 이상	96.5	3.5	
학력			
고졸이하	95.2	4.8	911.068(1)***
대재이상	81.8	18.2	

구분	없다	있다	$\chi^2(df)$
직업			
관리전문직	68.8	31.2	921.917(3)***
사무판매서비스	85.7	14.3	
농림생산직	92.6	7.4	
비경활인구	93.5	6.5	
종교			
없음	89.2	10.8	13.193(1)***
있음	86.4	13.6	
정치성향			
보수	92.1	7.9	188.659(3)***
중도	87.0	13.0	
진보	83.3	16.7	
무관심	89.9	10.1	

(4) 인권 교육 경험 여부(1년 이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권 교육 경험 여부에 관한 주요 배경 요인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분석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의 유형이 예, 아니오와 같이 이분형으로 범주화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회귀분석 방법의 하나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1년 이내의 인권 교육 경험 여부가 있음과 없음 두 가지로 이분화되어 있어 본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3-107〉 인권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B	S.E.	Exp(B)
연령(만)	-0.025***	0.002	0.975***
성별(여=1)	-0.129***	0.056	0.879***
교육	0.966***	0.076	2.628***
관리전문직	1.657***	0.090	5.243***
사무판매직	0.717***	0.072	2.048***
농림생산직	0.575***	0.098	1.776***
종교(있음=1)	0.369***	0.057	1.446***
정치_진보	0.217***	0.064	1.242***
정치_보수	-0.125	0.076	0.883
상수항	-2.245	0.144	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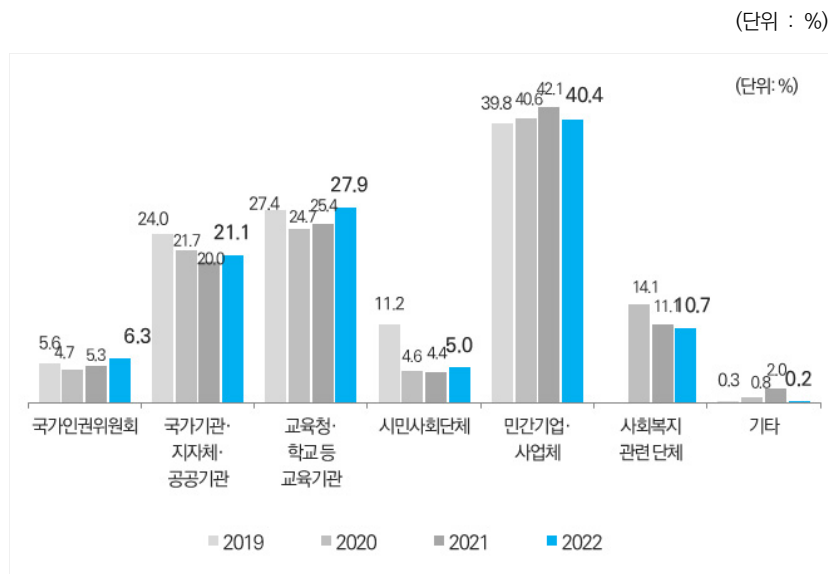
*유의수준: p<0.1, **<0.05, ***<0.01

인권 교육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 성향 중 보수적 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모두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지거나, 남성에 비하여 여성인 경우 인권 교육 경험이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교육 수준이 대학 재학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권 교육 경험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치의 측면에서, 종교가 있는 집단이나, 정치 성향이 진보적 성향인 경우에도 교육 경험은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 모형 내에서 경제활동 여부(직업)와 교육(대학 재학 이상)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5)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은 1위가 민간기업·사업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나나, 42.1%였던 2021년 대비 1.7%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이 27.9%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대비 2.5%p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밖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5.6%(2019)→4.7%(2020)→5.3%(2021)→6.3%(2022)로 나타나 2020년 이후 소폭 증가 추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9]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추이(중복응답)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민간기업·사업체가 4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22.9%),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22.6%)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여성은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3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민간기업·사업체(31%),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18.6%) 순으로 나타난다.

연령대에 따라서 교육받은 기관에 대해 20-30대와 40-50대의 경우 민간기업·사업체가 각각 38.5%, 45.8%로 1순위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2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에서는 민간기업·사업체(40.8%)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서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30.4%) 순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경우에도 민간기업·사업체(38.9%) 비중이 가장 크나, 2순위 기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21.1%) 순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40.9%), 사무판매팀서비스(50.4%), 농림생산직(53.1%) 모두 민간기업·사업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56.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44.8%)와 있는 경우(33.9%) 모두 민간기업·사업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치 성향에서도 보수(38.2%), 중도(46.4%), 진보 성향(45%)은 민간기업·사업체에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39.8%)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108〉 인권 교육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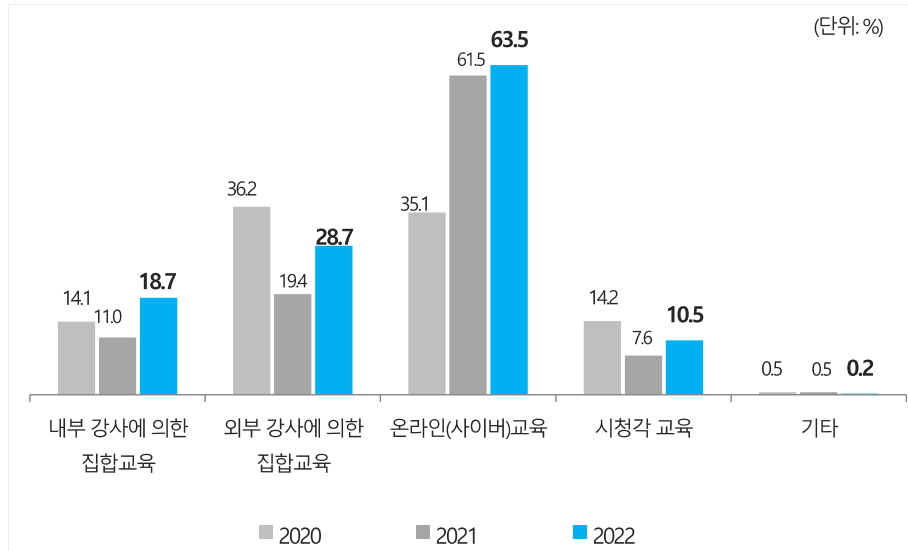
구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시민사회 단체	민간기업· 사업체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타
전체	6.3	21.1	27.9	5.0	40.4	10.7	0.2
성별							
남자	7.3	22.9	22.6	4.7	47.5	5.8	0.2
여자	5.0	18.6	35.0	5.4	31.0	17.4	0.3
지역							
도시[동부]	6.3	21.0	27.2	4.7	41.1	10.8	0.2
농어촌[읍면부]	6.4	21.7	32.4	7.2	36.4	10.6	0.7
연령							
20-30대	6.1	18.9	36.7	3.1	38.5	7.3	0.4

구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시민사회 단체	민간기업· 사업체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타
40-50대	6.6	23.0	19.1	6.4	45.8	10.8	0.1
60대 이상	6.5	23.6	21.6	9.1	25.3	29.5	0.0
학력							
고졸이하	8.0	20.3	17.7	8.5	38.9	21.1	0.0
대재이상	5.9	21.3	30.4	4.2	40.8	8.2	0.3
직업							
관리전문직	4.7	21.5	31.5	4.9	40.9	7.6	0.0
사무판매서비스	7.4	20.5	18.1	4.8	50.4	9.9	0.1
농림생산직	6.4	22.2	10.4	6.0	53.1	13.4	0.0
비경활인구	5.7	21.3	56.9	5.1	9.1	14.9	0.9
종교							
없음	6.1	21.0	28.7	5.3	44.8	6.6	0.2
있음	6.6	21.2	26.7	4.6	33.9	16.8	0.2
정치성향							
보수	8.5	27.0	23.3	3.6	38.2	12.3	0.0
중도	5.2	19.8	24.4	5.2	46.4	10.0	0.2
진보	4.8	18.7	25.8	6.3	45.0	8.2	0.1
무관심	8.5	21.8	39.8	4.1	26.3	14.1	0.4

(6) 인권교육방식

인권교육방식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온라인(사이버)교육(63.5%)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35.1%이던 2020년에 비하여 약 28.4% 가량 증가한 수치로, 2020년 처음으로 61.5%로 교육 방식 1위를 차지한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1위였던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은 28.7%로 나타나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20년의 36.2%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교육방식의 변화는 강의실 중심의 대면 집합 교육 보다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빠르게 확산할 수 밖에 없었던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0] 경험한 인권교육 방식 추이



인권교육의 방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온라인(사이버)교육의 비율이 각각 59.1%, 6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이 각각 31.3%, 25.1%로 2순위를 차지했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30대와 40-50대, 60대 이상까지 온라인(사이버)교육이 각각 65.8%, 65.4%, 41.9%로 1순위를 차지한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모두 온라인(사이버)교육의 비율이 각각 46.8%, 6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순이었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73.0%)과 사무판매서비스(63.9%), 농림생산직(49.8%),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9.1%) 모두에서 온라인(사이버)교육이 1순위를 차지했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에도, 종교가 없는 경우(65.0%)와 있는 경우(61.3%) 모두 온라인(사이버)교육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치 성향에서도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온라인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109〉 인권교육 방식에 대한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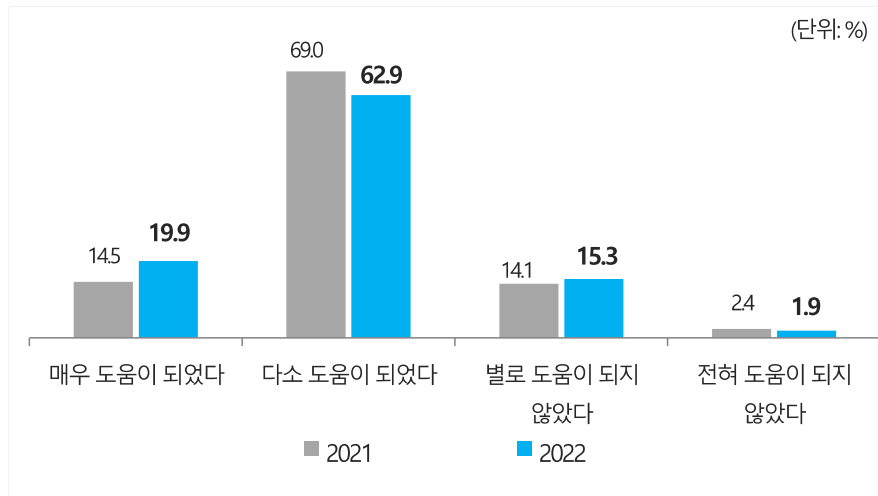
구분	내부 강사/교사에 의한 집합교육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온라인(사이버) 교육	사청각 교육	기타
전체	18.7	28.7	63.5	10.5	0.2
성별					
남자	20.4	31.3	59.1	11.6	0.2
여자	16.5	25.1	69.4	9.1	0.2
지역					
도시[동부]	17.9	28.2	64.6	11.1	0.1
농어촌[읍면부]	23.8	31.8	56.5	6.7	0.6
연령					
20~30대	18.8	27.6	65.8	11.9	0.1
40~50대	17.6	27.8	65.4	9.3	0.3
60대 이상	23.5	38.9	41.9	9.1	0.0
학력					
고졸이하	25.0	41.9	46.8	11.1	0.4
대재이상	17.2	25.4	67.6	10.4	0.1
직업					
관리전문직	15.5	23.0	73.0	8.2	0.3
사무판매서비스	18.6	28.6	63.9	9.4	0.0
농림생산직	22.8	35.1	49.8	11.5	0.7
비경활인구	20.4	32.0	59.1	15.4	0.2
종교					
없음	19.6	28.3	65.0	9.5	0.2
있음	17.4	29.2	61.3	12.0	0.1
정치성향					
보수	20.7	29.8	58.2	10.5	0.0
중도	14.8	27.9	66.0	9.7	0.1
진보	19.8	26.9	64.1	10.2	0.4
무관심	22.4	31.4	62.4	12.5	0.2

2)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1) 인권교육이 도움 된 정도

인권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다소 도움)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2.8%로 2021년 83.5% 대비 0.7%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80% 이상 인권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2021년 2.4%에서 2022년 1.9%로 0.5%p 소폭 감소했다.

[그림 3-51] 인권교육 도움 정도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 주요 배경 요인별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의 82.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83.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여성의 긍정 응답이 소폭 높았으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40-50대가 87.1%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60대 이상(85.8%), 20-30대(78.7%), 순으로 나타난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6%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87.9%보다 6.3%p 낮았다.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농림생산직(85.8%), 사무판매서비스(83.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81.9%), 관리전문직(81.0%) 순으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80.9%)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85.8%)에 4.9%p 정도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84.3%), 보수(83.4%), 무관심(81.6%), 진보(81.5%) 순으로 긍정 응답 비중이 높았다.

〈표 3-110〉 인권 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수준

(단위: %, 점)

구분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9.9	62.9	15.3	1.9	2.0	
성별						
남자	20.5	61.8	15.6	2.0	2.0	0.830(3)
여자	19.1	64.4	14.8	1.6	2.0	
지역						
도시[동부]	20.3	62.6	15.3	1.8	2.0	6.396(3)
농어촌[읍면부]	17.9	64.9	14.8	2.5	2.0	
연령						
20~30대	17.2	61.5	18.4	2.9	2.1	34.073(6)***
40~50대	21.9	65.2	12.3	0.6	1.9	
60대 이상	25.8	60.0	12.2	2.0	1.9	
학력						
고졸이하	22.6	65.3	9.9	2.2	1.9	5.412(3)
대재이상	19.3	62.3	16.6	1.8	2.0	
직업						
관리전문직	23.4	57.6	16.1	2.9	2.0	36.786(9)***
사무판매서비스	17.7	65.7	16.1	0.4	2.0	
농림생산직	21.4	64.4	13.3	0.9	1.9	
비경활인구	20.4	61.5	13.3	4.7	2.0	
종교						
없음	17.1	63.8	17.4	1.7	2.0	23.792(3)***
있음	24.2	61.6	12.2	2.0	1.9	
정치성향						
보수	27.5	55.9	12.6	3.9	1.9	32.904(9)***
중도	17.1	67.2	14.7	0.9	2.0	
진보	20.7	60.8	16.9	1.6	2.0	
무관심	18.1	63.5	16.1	2.3	2.0	

(2) 인권 교육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권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주요 배경 요인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이 모형에서 연령과 종교 두 배경변수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이 높을 수록 인권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종교가 있을 경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 역시 확인하였다. 특히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고연령층 여성일수록 인권 교육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변수는 인권 교육 도움 정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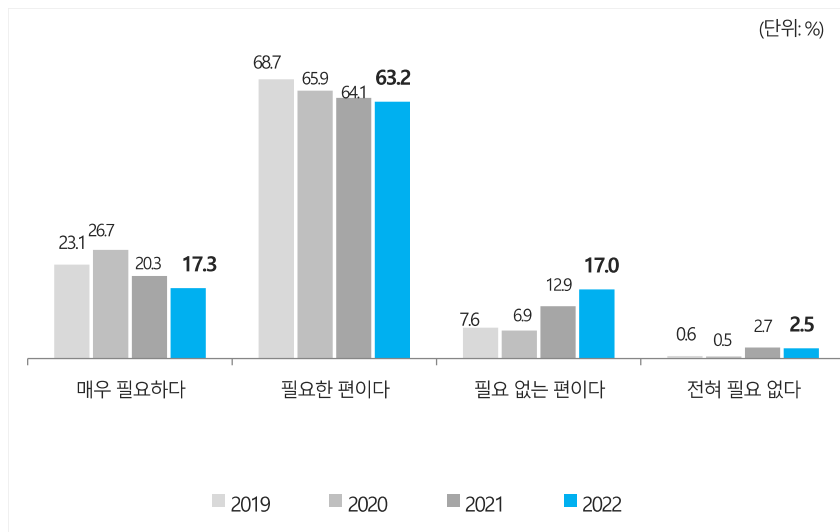
〈표 3-111〉 인권교육 효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준화 계수(β)	t	유의확률
연령(만)	-0.111***	-4.006	0.000
성별(여=1)	-0.003	-0.127	0.899
교육	-0.022	-0.794	0.427
관리전문직	-0.032	-0.967	0.334
사무판매직	-0.014	-0.416	0.678
농림생산직	-0.032	-1.027	0.305
종교(있음=1)	-0.078***	-3.120	0.002
정치_진보	-0.027	-1.082	0.280
정치_보수	-0.020	-0.787	0.431
(상수)		28.665	0.000
결정계수 $R^2=0.025$			

*유의수준: p<0.1, p**<0.05, p***<0.01

(3) 인권교육의 필요성

[그림 3-52]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한 편)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80.5%로 2021년의 84.4%에 비하여 3.9%p 감소, 2020년 92.6%에 비해 11.9%p 감소해 교육 필요성의 긍정 응답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육이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은 2021년과 2.7%에 비하여 소폭 감소한 2.5%로 나타난다.

〈표 3-112〉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 점)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 없다	평균 (4점)	$\chi^2(df)$
전체	17.3	63.2	17.0	2.5	3.0	
성별						10.013(3) *
남자	17.2	64.4	16.1	2.3	3.0	
여자	17.3	62.1	17.8	2.8	2.9	
지역						100.303 (3)***
도시[동부]	17.9	63.8	16.1	2.2	3.0	
농어촌[읍면부]	14.2	60.5	21.1	4.2	2.8	
연령						273.637 (6)***
20-30대	19.9	64.9	13.4	1.8	3.0	
40-50대	18.4	63.2	16.3	2.0	3.0	
60대 이상	12.8	61.4	21.7	4.1	2.8	
학력						352.549 (3)***
고졸이하	13.8	61.7	20.7	3.8	2.9	
대재이상	20.5	64.6	13.6	1.3	3.0	
직업						184.287 (9)***
관리전문직	27.7	60.2	11.0	1.1	3.1	
사무판매서비스	16.1	65.1	16.9	1.9	3.0	
농림생산직	16.0	61.4	18.8	3.9	2.9	
비경활인구	16.7	62.8	17.6	3.0	2.9	
종교						40.986(3) ***
없음	16.1	63.4	17.8	2.7	2.9	
있음	19.4	62.9	15.5	2.3	3.0	
정치성향						128.995 (9)***
보수	14.3	65.0	17.5	3.2	2.9	
중도	18.8	63.6	15.4	2.2	3.0	
진보	21.6	59.1	17.1	2.2	3.0	
무관심	14.8	64.2	18.4	2.7	2.9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의 81.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은 7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남성인 경우 교육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84.8%, 40-50대 81.6%, 60대 이상 74.2%순으로 교육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 질수록 교육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인권교육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1%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75.5%보다 9.6%p 높았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87.9%), 사무 판매서비스(81.2%),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79.5%), 농림생산직(77.4%)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79.5%)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82.3%) 2.8%p 정도 인권교육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의 경우, 중도(82.4%), 진보(80.7%), 보수(79.3%), 무관심(79.0%) 순으로 교육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4) 교육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교육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 전반적 필요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계한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인권 교육이 전반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집단이나, 경제활동 집단 중에서도 관리전문직인 경우 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치의 측면에서, 종교가 있거나,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우에도 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연령(.089)과 교육(-.084)은 교육 필요성 인식에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효과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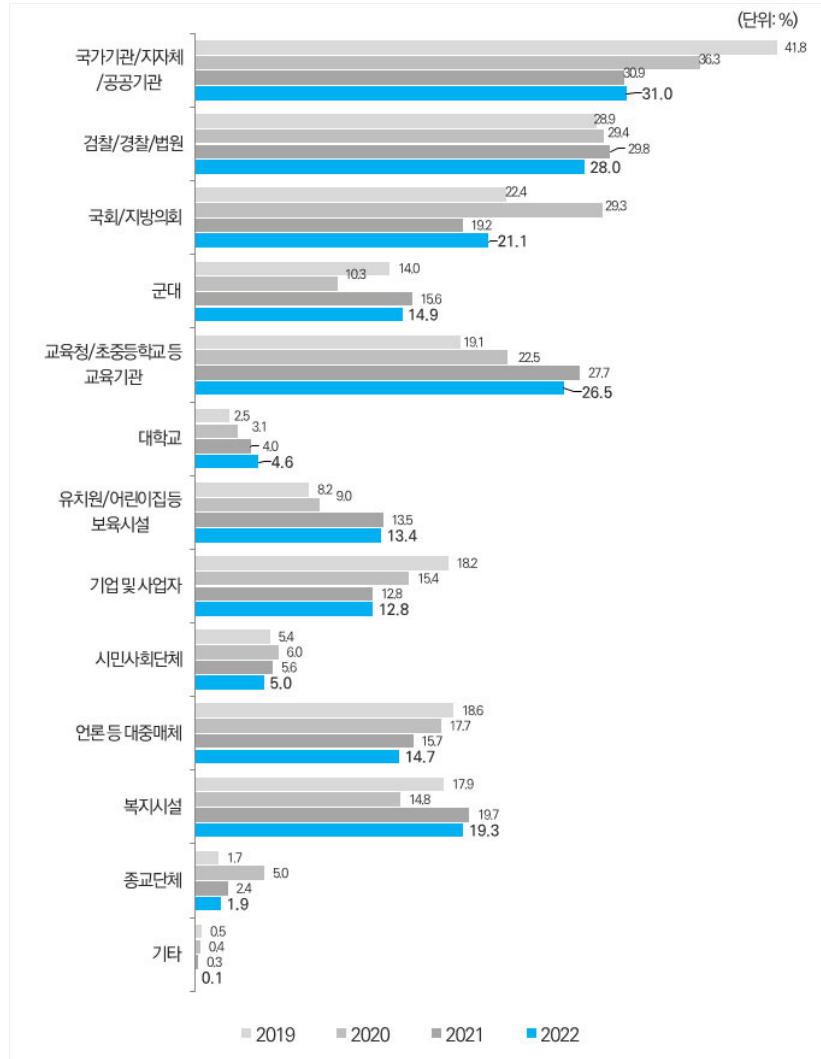
〈표 3-113〉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준화 계수(β)	t	유의확률
연령(만)	0.089***	8.712	0.000
성별(여=1)	0.007	0.844	0.399
교육	-0.084***	-8.261	0.000
관리전문직	-0.049***	-5.753	0.000
사무판매직	0.015	1.599	0.110
농림생산직	-0.002	-0.193	0.847
종교(있음=1)	-0.061***	-7.667	0.000
정치_진보	-0.021***	-2.587	0.010
정치_보수	-0.001	-0.098	0.922
(상수)		69.081	0.000
결정계수 $R^2=0.032$			

유의수준: p(0.1, p**(0.05, p***)(0.01

(5)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

[그림 3-53]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 추이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중 1위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31.0%)로 나타난다. 이어서 2위는 검찰/경찰/법원 (28.0%), 3위는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 기관(26.5%)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와 순위의 변화는 없으나 교육청/초/중등학교는 2019년 19.1%에서 2020년 22.5%, 2021년 27.7%로 지속 증가하다 2022년 26.5% 증가 추세는 멈

2022 인권익실실태조사

추였으나 여전히 주요 인권익실 제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검찰/경찰/법원의 경우도 28.9% (2019), 29.4%(2020), 29.8%(2021)로 약간씩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22년 조사에서 28%로 나타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지속하여 인권익실 제고 대상 1위로 나타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41.8%(2019) → 36.3%(2020) → 30.9%(2021) → 31.0%(2022)로 꾸준히 그 비중은 감소 후 정체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표 3-114〉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익실을 높여야 할 대상

(단위: %)

구분	국가 기관 /지 자체 /공 공기 관	검찰 /경 찰/ 법원	국회 /지 방 의회	군대	교육 청/ 초중 등학 교 등 교육 기관	대학 교	유치 원/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기업 및 사업 자	시민 사회 단체	언론 등 대중 매체	복지 시설(요양 원, 집단 거주 시설 등)	종교 단체	기타
전체	31.0	28.0	21.1	14.9	26.5	4.6	13.4	12.8	5.0	14.7	19.3	1.9	0.1
성별													
남자	30.7	29.1	21.7	17.0	25.3	4.8	12.1	13.9	5.0	14.2	17.7	2.0	0.1
여자	31.3	26.9	20.4	12.9	27.7	4.5	14.7	11.8	5.0	15.2	20.9	1.8	0.1
지역													
도시[동부]	30.9	27.8	20.9	14.8	26.6	4.7	14.3	13.4	4.9	15.0	19.2	1.8	0.1
농어촌[읍면부]	31.5	29.2	21.9	15.4	25.9	4.2	9.6	10.0	5.5	13.7	19.7	2.1	0.1
연령													
20-30대	28.1	25.1	18.5	18.3	29.2	6.6	14.1	14.9	4.6	16.9	16.6	1.5	0.1
40-50대	31.2	30.2	22.8	14.0	24.9	3.7	13.1	13.3	5.8	14.6	18.2	2.1	0.1
60대 이상	33.9	28.4	21.7	12.5	25.7	3.7	13.1	9.9	4.5	12.5	23.8	2.0	0.0
학력													
고졸이하	32.7	27.7	21.7	13.3	26.4	3.6	13.5	11.7	5.1	12.7	21.4	2.0	0.0
대재이상	29.4	28.3	20.4	16.4	26.7	5.6	13.3	13.9	5.0	16.6	17.4	1.8	0.1
직업													
관리전문직	29.2	35.1	21.9	16.2	24.7	4.1	13.1	11.4	5.0	17.7	14.1	2.7	0.1
사무판매서비스	30.2	28.5	21.9	15.5	25.7	5.1	13.8	15.3	5.1	14.6	17.1	1.4	0.1
농림생산직	30.1	29.6	21.2	14.5	26.6	3.5	10.9	14.3	5.7	12.6	19.8	2.0	0.0
비경활인구	32.7	25.1	19.9	14.2	27.7	4.9	14.3	9.8	4.6	15.2	22.7	2.2	0.1
종교													
없음	31.1	27.9	20.9	14.8	27.1	4.7	13.1	13.8	5.0	14.9	17.8	1.6	0.0
있음	30.8	28.3	21.4	15.2	25.5	4.5	14.0	11.0	5.1	14.3	22.2	2.4	0.2

구분	국가 기관/지 자체/공 공기관	검찰/ 경찰/ 법원	국회/ 지방 의회	군대	교육 청/초 중등학 교 등 교육 기관	대학 교	유치 원/어 린이 집 등 보육 시설	기업 및 사 업자	시민 사회 단체	언론 등 대 중매 체	복지 시설/ 요양 원, 집 단거 주사 설 등	종교 단체	기타
정치성향													
보수	30.7	26.4	21.1	15.7	25.3	4.3	13.2	10.7	5.1	13.7	24.7	2.1	0.1
중도	30.3	27.9	20.8	15.9	26.7	5.4	15.0	13.3	4.7	13.9	16.7	1.9	0.1
진보	29.9	30.9	19.6	14.9	26.2	4.8	12.4	14.3	6.0	16.7	17.4	1.8	0.0
무관심	32.9	27.5	22.5	13.0	27.6	3.8	12.4	13.0	4.6	15.3	19.1	1.6	0.1

인권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응답한 결과(1순위, 2순위 합산)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성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3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검찰/경찰/법원이 29.1%로 나타난다. 여성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31.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27.7%)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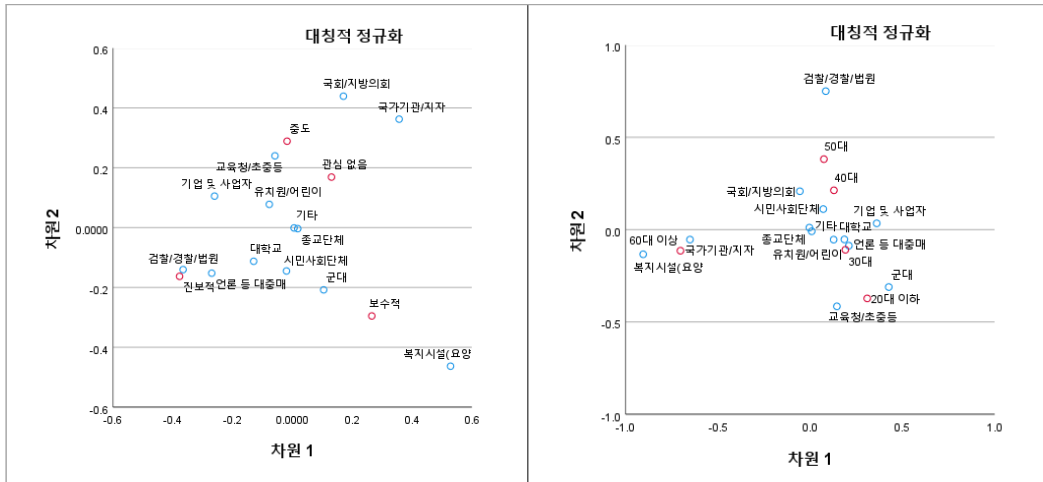
연령을 기준으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20-30대는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29.2%)을, 40-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31.2%, 33.9%의 비율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가장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꼽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3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학교 재학 이상의 집단에서도 2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은 검찰/경찰/법원(35.1%)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나, 사무판매서 비스직(30.2%), 농림생산직(30.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32.7%) 모두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 없음(31.1%), 있음(30.8%) 모두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가장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꼽았으며,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다도 진보 성향 집단이 검찰/경찰/법원(30.9%)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나 다른 보수, 중도, 무관심 집단에서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54]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정치성향과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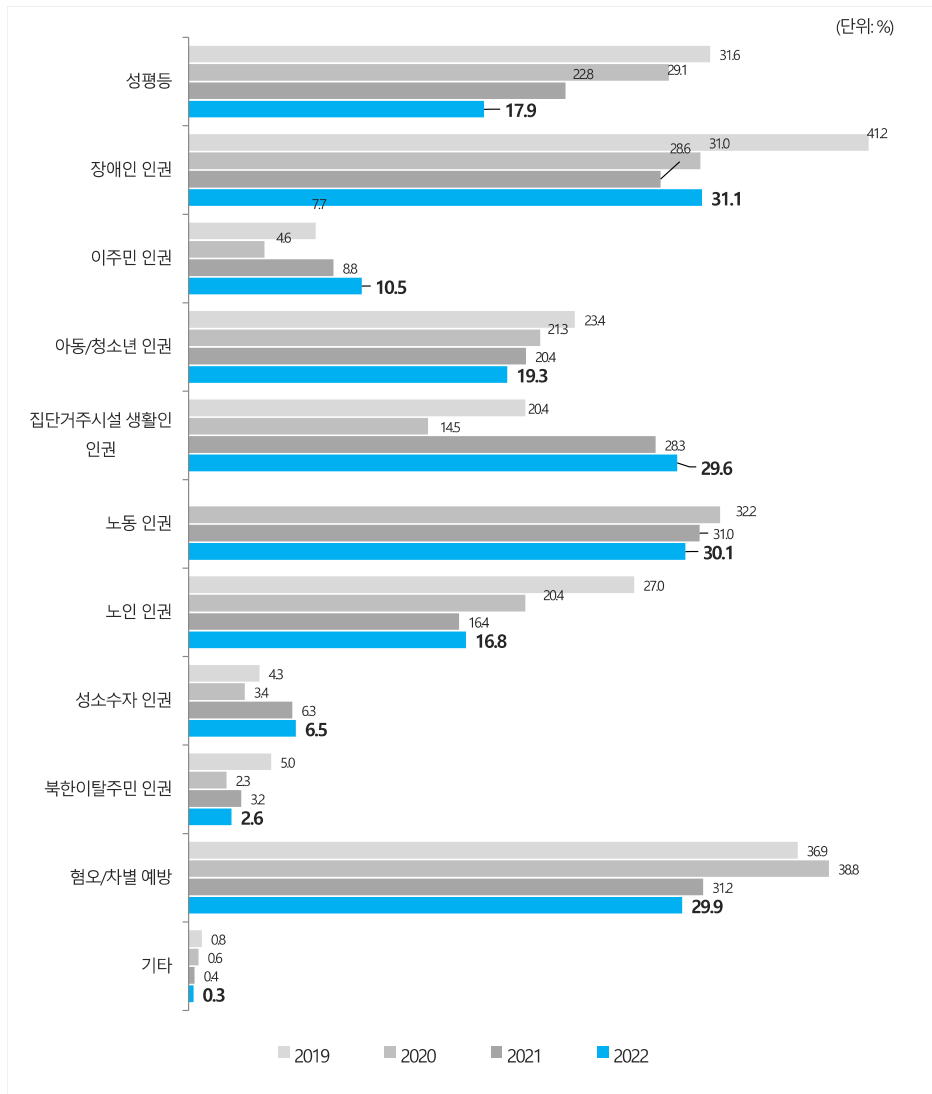
인권 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을 위에서 확인한 주요 배경 요인을 활용하여, 배경 요인과 인권 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래 [그림 3-5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연령과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권의식을 제고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대상의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연령 요인과 대상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군대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20대 이하는 교육기관이나 군대를 인권 의식 제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볼 수 있다. 30대는 보육기관 및 언론, 대학, 기업을 꼽는 양상을 보이며, 40~50대는 국회, 시민단체, 검찰/경찰과 법원 등을 꼽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복지시설과의 거리가 가깝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는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경험이 인권 교육이 필요한 대상과 연결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어서 정치적 성향 요인과 대상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보수적 성향은 군대, 복지시설과의 거리가 가깝게 나타나며, 진보적 성향은 검찰/경찰과 법원, 언론, 대학, 중도적 성향 및 정치적 무관심층은 교육기관, 국회를 인권 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으로 꼽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6) 시급한 인권 교육의 주제

[그림 3-55]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추이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를 묻는 질문을 종합(1순위와 2순위 합산)해 분석한 결과, 가장 시급한 주제로 꼽은 것은 노동인권(30.1%)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혐오/차별 예방(29.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순위는 2021년도 조사에서 1순위가 혐오/차별 예방, 2순위가 노동인권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이나, 0.2% 가량의 차이만이 있어 거의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인권과 혐오/차별 예방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나 2019년 조사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2019년과 2022년 사이 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이주민 인권(7.7%→10.5%),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20.4%→29.6%), 성소수자 인권(4.3%→6.5%)은 그 비중은 앞서 두 주제에 비하여 작으나, 2019년 조사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15〉 시급한 인권 교육의 주제

(단위: %)

구분	성평 등	장애 인 인권	이주 민 인권	아동/ 청소년 인권	집단 거주 시설 생활인 인권	노동 인권	노인 인권	성 소수 자 인권	북한 이탈 주민 인권	혐오/ 차별 예방	기타
전체	17.9	31.1	10.5	19.3	29.6	30.1	16.8	6.5	2.6	29.9	0.3
성별											
남자	16.1	30.5	10.7	18.2	29.5	33.0	16.1	6.5	2.8	31.0	0.4
여자	19.8	31.7	10.3	20.5	29.8	27.3	17.5	6.5	2.4	28.8	0.2
지역											
도시[동부]	18.7	31.1	10.3	19.2	29.0	30.7	16.3	6.8	2.5	30.3	0.3
농어촌[읍면부]	14.7	31.3	11.1	19.9	32.5	27.4	19.0	4.9	3.1	27.9	0.6
연령											
20~30대	22.2	31.0	9.9	20.8	24.1	32.3	11.2	7.1	2.3	33.3	0.7
40~50대	18.1	32.0	11.6	19.8	29.4	30.9	14.2	7.3	2.7	28.7	0.1
60대 이상	13.0	30.1	9.6	17.1	36.0	26.7	26.3	4.8	2.9	27.6	0.1
학력											
고졸이하	15.0	30.9	10.5	18.5	33.5	28.5	21.2	5.4	2.8	26.8	0.3
대재이상	20.6	31.3	10.4	20.1	26.1	31.6	12.8	7.5	2.5	32.8	0.4
직업											
관리전문직	22.1	35.2	8.1	19.5	22.3	29.5	12.4	7.6	2.5	35.4	0.5
사무판매서비스	18.7	31.1	12.0	20.4	29.3	31.6	13.4	7.2	2.4	28.6	0.2
농림생산직	13.5	30.0	11.0	18.3	32.9	32.9	18.7	5.5	2.4	27.4	0.4
비경활인구	18.2	30.7	9.1	18.7	30.2	27.4	20.6	6.0	2.9	31.1	0.4
종교											
없음	18.1	30.5	10.5	18.9	29.8	30.9	16.3	6.7	2.6	29.6	0.3
있음	17.7	32.2	10.4	20.2	29.3	28.7	17.8	6.2	2.7	30.4	0.3
정치성향											
보수	15.3	28.8	8.6	19.4	34.1	28.6	20.8	5.8	3.7	29.7	0.4
중도	17.6	30.1	11.7	19.9	28.9	29.8	16.1	6.3	2.4	31.0	0.2
진보	20.1	33.4	11.9	20.0	26.3	31.9	12.0	8.4	1.9	28.2	0.4
무관심	19.3	32.9	9.4	18.0	29.0	30.5	17.6	5.9	2.5	29.9	0.3

시급한 인권 교육 주제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노동인권(33.0%)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혐오/차별 예방(31.0%), 장애인 인권(30.5%)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장애인 인권(3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집단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29.8%), 혐오/차별 예방(28.8%)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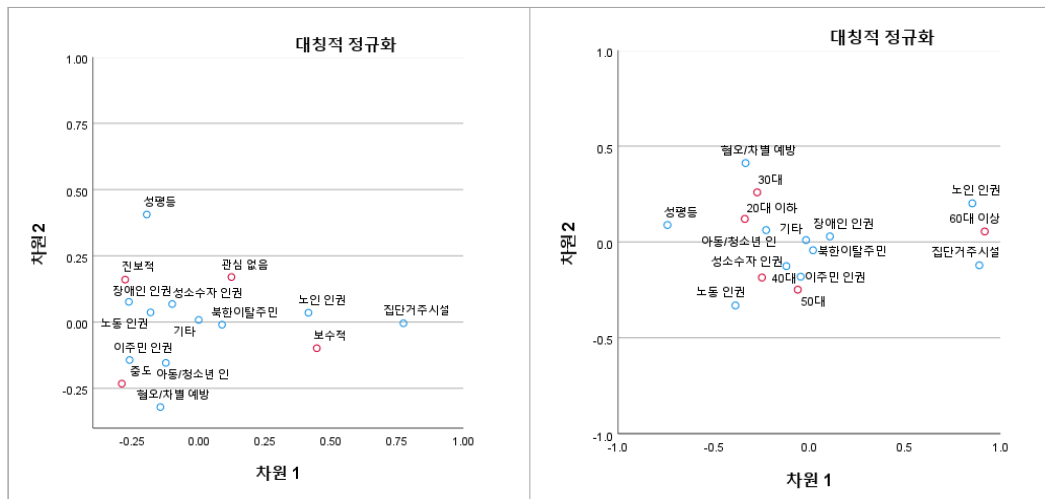
연령별로 20-30대는 혐오/차별 예방(33.3%)를, 40-50대는 장애인 인권(32.0%)을, 60대 이상은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6.0%)를 꼽았다.

학력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은 집단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3.5%)을, 대학교 재학 이상인 집단은 혐오/차별 예방(32.8%)을 가장 큰 비중으로 꼽았다.

직업에 따른 차이의 경우, 관리전문직은 혐오/차별예방(35.4%), 사무판대서비스직은 노동 인권(31.6%), 농림생산직은 집단 거주시설 생활인권과 노동인권(모두 32.9%),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혐오/차별예방(31.1%)이 가장 시급한 주제로 선정되었다.

종교 여부에 따른 차이를 들여다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 노동 인권(30.9%), 종교가 있는 경우 장애인 인권(32.2%)을 시급한 주제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정치 성향에 따른 경우, 보수적 성향은 집단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4.1%), 중도 성향은 노동 인권(29.8%), 진보 성향은 장애인 인권(33.4%), 정치적 무관심층은 장애인 인권(32.9%)을 시급히 교육이 필요한 주제로 꼽았다.

[그림 3-56]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주제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정치성향과 세대)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주제에 관하여 연령과 정치 성향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심층분석은 두 요인 사이의 관계성을 거리를 통해 2차원 도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대응분석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떤 주제가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중요한 대상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연령, 정치성향에 따른 경계가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먼저 세대 요인과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주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혐오차별 예방, 성평등, 장애, 아동청소년과의 거리가 가깝게 나타난다. 40대와 50대는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 북한이탈주민을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주제로 꼽는 경향이 나타나며, 60대는 앞선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노인 인권, 집단거주시설 인권 등을 주요 주제로 꼽는 경향을 도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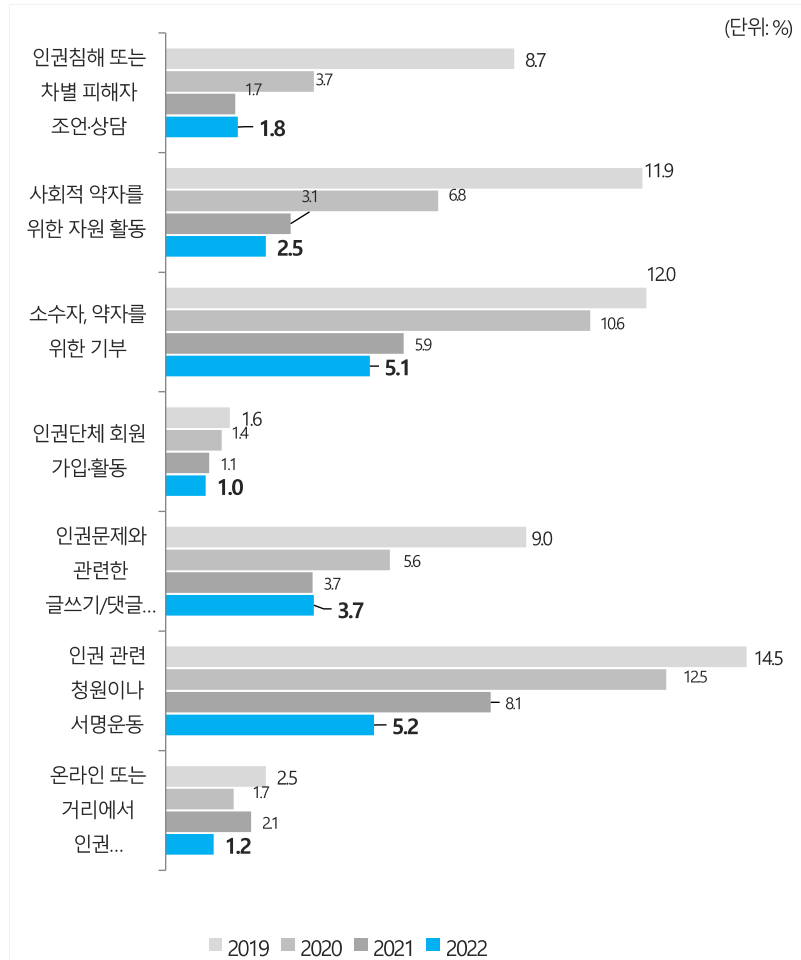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수적 성향은 노인 인권, 집단거주시설 인권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며 진보적 성향은 장애, 성소수자, 노동 인권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이들 주제를 시급한 인권 주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도층은 이주민, 아동청소년, 혐오차별예방을, 정치적 무관심층은 북한이탈주민 인권 문제를 꼽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해소

(1)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최근 1년간 인권 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어떠한 활동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대부분의 문항에서 참여 경험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응답자가 참여했다고 응답한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은 2019년 14.5%에서 2022년 5.2%로 9.3%p 가량 감소하기도 한다. 2022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은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5.2%)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5.1%),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7] 인권 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추이



① 조언과 상담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 남성의 1.9%, 여성의 1.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어서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1.8%, 40-50대 2.3%, 60대 이상 1.2%가 참여 경험있다고 응답해, 40-50대가 가장 경험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1.2%가 참여 경험이 있음을 응답했고, 대학교 재

학 이상 집단은 2.4%가 경험했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의 경험률이 소폭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리전문직 5.2%, 사무판매서비스직 1.9%, 농림생산직 1.3%,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1.2%가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응답해,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 1.4%, 종교가 있는 경우 2.6%로 응답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관련 경험이 소폭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 1.6%, 중도 1.8%, 진보 3.2%, 무관심층 1.0%로 나타나, 진보 성향인 집단이 관련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16〉 조연과 상담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chi^2(df)$
전체	1.8	98.2	
성별			2.144(1)
남자	1.9	98.1	
여자	1.7	98.3	
지역			4.425(1)*
도시[동부]	1.9	98.1	
농어촌[읍면부]	1.6	98.4	
연령			34.526(2)***
20-30대	1.8	98.2	
40-50대	2.3	97.7	
60대 이상	1.2	98.8	
학력			45.865(1)***
고졸이하	1.2	98.8	
대재이상	2.4	97.6	
직업			175.124(3)***
관리전문직	5.2	94.8	
사무판매서비스	1.9	98.1	
농림생산직	1.3	98.7	
비경제활동인구	1.2	98.8	
종교			33.642(1)***
없음	1.4	98.6	
있음	2.6	97.4	
정치성향			43.247(3)***
보수	1.6	98.4	
중도	1.8	98.2	
진보	3.2	96.8	
무관심	1.0	99.0	

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의 2.5%, 여성의 2.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0.1%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어서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2.4%, 40-50대 3.2%, 60대 이상 1.5%가 참여 경험있다고 응답해, 40-50대가 가장 경험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1.5%가 참여 경험이 있음을 응답했고,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은 3.3%가 경험했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의 경험률이 소폭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리전문직 8.0%, 사무판매팀서비스직 2.2%, 농림생산직 1.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2.0%가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응답해,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 1.9%, 종교가 있는 경우 3.4%로 응답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관련 경험이 소폭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 2.6%, 중도 2.4%, 진보 3.4%, 정치적 무관심층 1.7%로 나타나, 진보 성향인 집단이 관련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17〉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X ² (df)
전체	2.5	97.5	
성별			0.082(1)
남자	2.5	97.5	
여자	2.4	97.6	
지역			20.986(1)***
도시(동부)	2.7	97.3	
농어촌(읍면부)	1.2	98.8	
연령			41.357(2)***
20-30대	2.4	97.6	
40-50대	3.2	96.8	
60대 이상	1.5	98.5	
학력			52.392(1)***
고졸이하	1.5	98.5	
대재이상	3.3	96.7	
직업			187.081(3)***
관리전문직	8.0	92.0	
사무판매팀서비스	2.2	97.8	

구분	있다	없다	$\chi^2(df)$
농림생산직	1.4	98.6	
비경활인구	2.0	98.0	
종교			35.218(1)***
없음	1.9	98.1	
있음	3.4	96.6	
정치성향			22.379(3)***
보수	2.6	97.4	
중도	2.4	97.6	
진보	3.4	96.6	
무관심	1.7	98.3	

③ 소수자/약자를 위한 기부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의 4.9%, 여성의 5.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여성이 남성보다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어서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6.5%, 40-50대 6.3%, 60대 이상 2.1%가 참여 경험 있다고 응답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관련 경험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2.6%가 참여 경험이 있음을 응답했고,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은 7.5%가 경험했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의 경험률이 소폭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리전문직 13.4%, 사무판매서비스직 5.1%, 농림생산직 3.0%,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4.1%가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응답해, 앞선 문항과 유사하게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 4%, 종교가 있는 경우 7.2%로 응답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관련 경험이 3.2%p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 4.2%, 중도 5.6%, 진보 7.8%, 정치적 무관심층 3.3%로 나타나, 진보 성향인 집단이 관련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18〉 소수자/약자를 위한 기부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chi^2(df)$
전체	5.1	94.9	
성별			
남자	4.9	95.1	1.101(1)
여자	5.3	94.7	
지역			
도시(동부)	5.5	94.5	29.039(1)***
농어촌(읍면부)	3.2	96.8	
연령			
20-30대	6.5	93.5	142.138(2)***
40-50대	6.3	93.7	
60대 이상	2.1	97.9	
학력			
고졸이하	2.6	97.4	219.480(1)***
대재이상	7.5	92.5	
직업			
관리전문직	13.4	86.6	253.478(3)***
사무판매서비스	5.1	94.9	
농림생산직	3.0	97.0	
비경활인구	4.1	95.9	
종교			
없음	4.0	96.0	70.150(1)***
있음	7.2	92.8	
정치성향			
보수	4.2	95.8	118.269(3)***
중도	5.6	94.4	
진보	7.8	92.2	
무관심	3.3	96.7	

④ 인권단체 회원가입/활동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단체 회원가입/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의 1.1%, 여성의 0.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어서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0.9%, 40-50대 1.4%, 60대 이상 0.5%가 참여 경험있다고 응답해, 40-50대가 가장 경험이 많은 집단으로 나타난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0.6%가 참여 경험이 있음을 응답했고,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은 1.2%가 경험했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의 경험률이 소폭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리전문직 2.7%, 사무판매서비스직 1.1%, 농림생산직 0.7%,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0.5%가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응답해, 앞선 문항과 유사하게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 0.8%, 종교가 있는 경우 1.3%로 응답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관련 경험이 0.5%p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 0.8%, 중도 1.0%, 진보 1.5%, 정치적 무관심층 0.6%로 나타나, 진보 성향인 집단이 관련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19〉 인권단체 회원가입/활동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chi^2(df)$
전체	1.0	99.0	
성별			
남자	1.1	98.9	0.415(1)
여자	0.9	99.1	
지역			
도시[동부]	1.0	99.0	2.967(1)
농어촌[읍면부]	0.6	99.4	
연령			
20-30대	0.9	99.1	25.530(2)***
40-50대	1.4	98.6	
60대 이상	0.5	99.5	
학력			
고졸이하	0.6	99.4	15.137(1)***
대재이상	1.2	98.8	
직업			
관리전문직	2.7	97.3	61.184(3)***
사무판매서비스	1.1	98.9	
농림생산직	0.7	99.3	
비경제활동인구	0.5	99.5	
종교			
없음	0.8	99.2	26.817(1)***
있음	1.3	98.7	
정치성향			
보수	0.8	99.2	19.173(3)***
중도	1.0	99.0	
진보	1.5	98.5	
무관심	0.6	99.4	

⑤ 인권 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의 3.9%, 여성의 3.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어서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5.8%, 40-50대 4.1%, 60대 이상 1.1%가 참여 경험있다고 응답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련 경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1.5%가 참여 경험이 있음을 응답했고,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은 5.8%가 경험했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의 경험률이 4.3%p 가량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리전문직 9%, 사무판매서비스직 4.1%, 농림생산직 1.9%,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3%가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응답해, 앞선 문항과 유사하게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 3.3%, 종교가 있는 경우 4.6%로 응답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관련 경험이 1.3%p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 2.6%, 중도 3.2%, 진보 8.3%, 정치적 무관심층 2.1%로 나타나, 진보 성향인 집단이 관련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20〉 인권 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chi^2(df)$
전체	3.7	96.3	
성별			
남자	3.9	96.1	1.593(1)
여자	3.6	96.4	
지역			
도시[동부]	4.1	95.9	27.191(1)***
농어촌[읍면부]	2.3	97.7	
연령			
20-30대	5.8	94.2	163.102(2)***
40-50대	4.1	95.9	
60대 이상	1.1	98.9	
학력			
고졸이하	1.5	98.5	224.000(1)***

구분	있다	없다	$\chi^2(df)$
대제이상	5.8	94.2	
직업			
관리전문직	9.0	91.0	177.576(3)***
사무판매서비스	4.1	95.9	
농림생산직	1.9	98.1	
비경활인구	3.0	97.0	
종교			
없음	3.3	96.7	18.743(1)***
있음	4.6	95.4	
정치성향			
보수	2.6	97.4	181.982(3)***
중도	3.2	96.8	
진보	8.3	91.7	
무관심	2.1	97.9	

⑥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참여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의 경우, 남성의 4.8%, 여성의 5.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0.7%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어서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7.4%, 40-50대 6%, 60대 이상 1.5%가 참여 경험있다고 응답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련 경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2.1%가 참여 경험이 있음을 응답했고,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은 8.0%가 경험했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의 경험률이 5.9%p 가량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리전문직 14.9%, 사무판매서비스직 5.6%, 농림생산직 2.8%,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3.4%가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응답해, 앞선 문항과 유사하게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 4.3%, 종교가 있는 경우 6.7%로 응답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관련 경험이 2.4%p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 3.3%, 중도 5.4%, 진보 9.6%, 정치적 무관심층 3.2%로 나타나, 진보 성향인 집단이 관련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21〉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참여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chi^2(df)$
전체	5.2	94.8	
성별			
남자	4.8	95.2	1.160(1)
여자	5.5	94.5	
지역			
도시[동부]	5.6	94.4	32.932(1)***
농어촌[읍면부]	3.2	96.8	
연령			
20-30대	7.4	92.6	201.287(2)***
40-50대	6.0	94.0	
60대 이상	1.5	98.5	
학력			
고졸이하	2.1	97.9	291.316(1)***
대재이상	8.0	92.0	
직업			
관리전문직	14.9	85.1	307.365(3)***
사무판매서비스	5.6	94.4	
농림생산직	2.8	97.2	
비경제활동인구	3.4	96.6	
종교			
없음	4.3	95.7	29.912(1)***
있음	6.7	93.3	
정치성향			
보수	3.3	96.7	157.448(3)***
중도	5.4	94.6	
진보	9.6	90.4	
무관심	3.2	96.8	

⑦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의 인권 캠페인, 집회 참여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의 경우, 남성의 1.2%, 여성의 1.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0.1%p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어서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가 1.1%, 40-50대 1.7%, 60대 이상 0.6%가 참여 경험있다고 응답해, 40-50대의 경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0.7%가 참여 경험이 있음을 응답했고,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은 1.6%가 경험했다고 응답해, 대학교 재학 이상 집단의 경험률이 0.9%p 가량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관리전문직 3.2%, 사무판매서비스직 1.3%, 농림생산직 0.7%,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0.7%가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응답해,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 1.1%, 종교가 있는 경우 1.3%로 응답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관련 경험이 0.2%p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 1.0%, 중도 1.1%, 진보 2.3%, 정치적 무관심층 0.6%로 나타나, 진보 성향인 집단이 관련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22〉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의 인권 캠페인, 집회 참여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chi^2(df)$
전체	1.2	98.8	
성별			0.260(1)
남자	1.2	98.8	
여자	1.1	98.9	
지역			7.051(1)**
도시[동부]	1.3	98.7	
농어촌[읍면부]	0.6	99.4	
연령			20.381(2)***
20-30대	1.1	98.9	
40-50대	1.7	98.3	
60대 이상	0.6	99.4	
학력			33.383(1)***
고졸이하	0.7	99.3	
대재이상	1.6	98.4	
직업			84.691(3)***
관리전문직	3.2	96.8	
사무판매서비스	1.3	98.7	
농림생산직	0.7	99.3	
비경제활동인구	0.7	99.3	
종교			4.835(1)*
없음	1.1	98.9	
있음	1.3	98.7	
정치성향			47.318(3)***
보수	1.0	99.0	
중도	1.1	98.9	
진보	2.3	97.7	
무관심	0.6	99.4	

인권 참여 수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하여 인권 관련 활동(캠페인, 단체 활동, 의견 개진 등) 참여 수준에 관한 질문을 종속변수로 구성 후 주요 배경요인을 독립변수로 상정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설계 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권 관련 참여 수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고연령층일수록 관련 활동 경험이 적을 수 있음을 추정 가능하였다. 반면,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하여 참여수준이 높아나는 경향이 드러난다. 대학 재학 이상이거나, 비경제 활동 집단에 비하여 관리전문 및 사무직인 경우에 참여 수준이 높아나는 경향도 나타난다. 가치의 측면에서 종교가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경우(진보, 보수 관계없이)에도 참여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치적 성향 중 진보적 성향이 더 효과를 보이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 모델에서 관리전문직 여부(.136)가 주된 효과를 보이며, 진보적 성향(.085)과 교육(.07)도 상대적으로 주된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표 3-123〉 인권 참여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표준화 계수(β)	t	유의확률
연령(만)	-0.050***	-4.941	0.000
성별(여=1)	0.022***	2.718	0.007
교육	0.070***	6.996	0.000
관리전문직	0.136***	16.092	0.000
사무판매직	0.022***	2.451	0.014
농림생산직	0.000	0.006	0.995
종교(있음=1)	0.071***	9.080	0.000
정치_진보	0.085***	10.536	0.000
정치_보수	0.022***	2.600	0.009
(상수)		4.164	0.000
결정계수 $R^2=0.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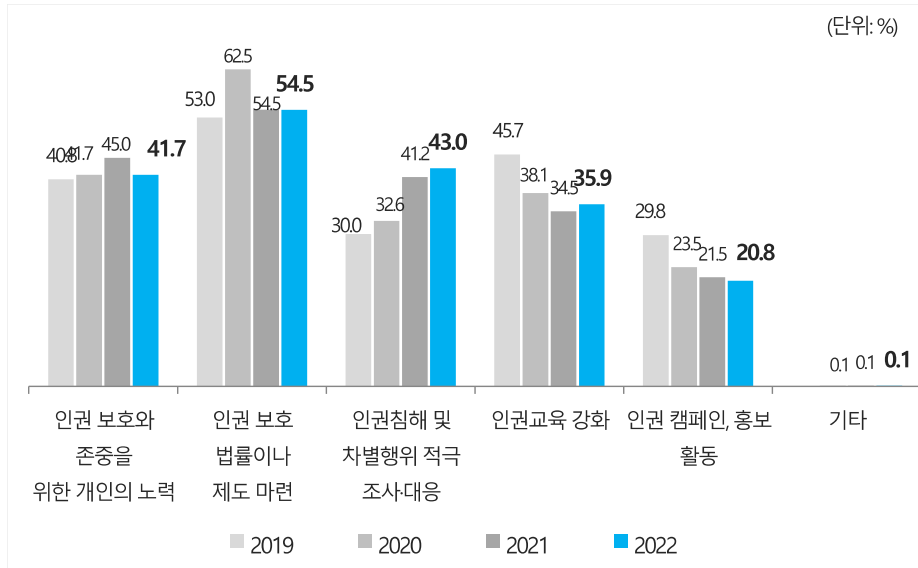
*유의수준: p<0.1, p**<0.05, p***<0.01

(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와 2순위 합산)으로는 2021년에 이어 2022년 조사에서도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54.5%)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하지만 2021년과 달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43.0%)이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41.7%)보다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조사 대응을 선택한 응답은 2019년 30.0%, 2020년 32.6%, 2021년 41.2%, 2022년 4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 이는 모든 문항 중 유일하게 지속해 증가 양상을 보이는 문항이다.

[그림 3-58]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2순위)



아래 표와 같이 인권보호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1순위 선택에 대한 세부 응답을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인권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을 꼽았으며(남성 28.4%, 여성 29.2%), 이어서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라 답했다(남성 27.1%, 여성 25.5%).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30대와 40-50대는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이 가장 큰 비중(각각 30.2%, 29.7%)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에서는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꼽고 있었다(27.8%)

학력에 따른 차이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는 인권 보호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27.4%), 대학교 재학 이상의 집단에서는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30.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관리전문직(32.7%), 사무판매회서비스직(29.3%), 농림생산직(27.4%),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27.9%) 모두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의 경우, 종교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의 경우 중도와 진보는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각각 30.3%, 32.5%), 보수와 정치적 무관심층은 개인의 노력(각각 26.8%, 28.1%)을 꼽고 있다.

〈표 3-124〉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 선택)

(단위: %)

구분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 응	인권교육 강화	인권 캠페인, 홍보 활동	기타	$\chi^2(df)$
전체	26.3	28.8	18.1	17.7	9.2	0.1	
성별							
남자	27.1	28.4	18.0	17.7	8.9	0.0	7.035(5)
여자	25.5	29.2	18.1	17.6	9.5	0.1	
지역							
도시(동부)	26.3	29.2	18.0	17.4	9.1	0.1	7.491(5)
농어촌(읍면부)	26.0	26.9	18.6	18.9	9.6	0.1	
연령							
20~30대	26.5	30.2	18.1	16.6	8.5	0.1	57.919 (10)***
40~50대	24.9	29.7	18.0	17.8	9.7	0.0	
60대 이상	27.8	26.0	18.2	18.6	9.3	0.1	
학력							
고졸이하	27.4	27.1	18.6	17.6	9.3	0.1	40.186 (5)***
대재이상	25.2	30.3	17.6	17.7	9.1	0.1	
직업							
관리전문직	22.7	32.7	16.4	18.1	9.9	0.3	46.727 (15)***
사무판매서비스	25.9	29.3	18.1	17.7	9.0	0.0	
농림생산직	27.1	27.4	18.9	17.1	9.5	0.0	
비경활인구	27.1	27.9	18.1	17.8	9.1	0.1	
종교							
없음	26.5	28.8	18.8	16.9	8.9	0.1	21.381 (5)**
있음	25.9	28.7	16.7	19.0	9.7	0.0	
정치성향							
보수	26.8	25.8	19.6	17.3	10.3	0.0	64.924 (15)***
중도	25.7	30.3	17.7	18.0	8.3	0.0	
진보	24.2	32.5	17.4	18.2	7.6	0.1	
무관심	28.1	26.7	17.5	17.1	10.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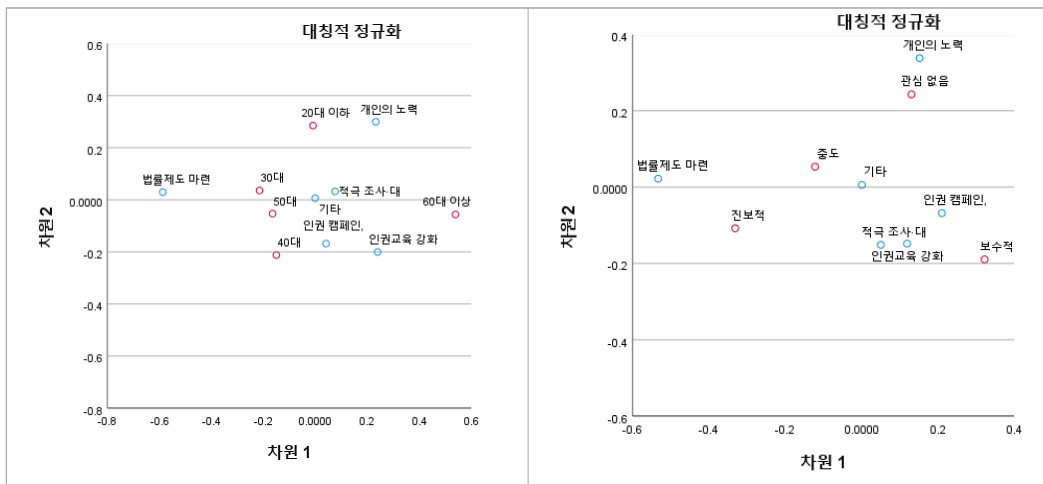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법에 대한 선택과 주요 배경 요인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과 정치 성향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심층분석은 두 요인 사이의 관계성을 거리를 통해 2차원 도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대응분석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연령, 정치 성향에 따른 다른 선택지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세대 요인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는 개인의 노력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30대와 40대는 캠페인, 적극적 조사 대응, 교육과의 거리가 가깝게 나타나 개인 의식 수준의 대응 보다 제도화된 대응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대 이상은 교육과의 거리가 가깝게 나타난다.

이어서 정치적 성향 요인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수적 성향은 교육, 적극적 조사, 캠페인과의 거리가 가깝고, 진보적 성향은 법률 제도 마련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무관심층은 개인의 노력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며,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기타 수단을 선택한 경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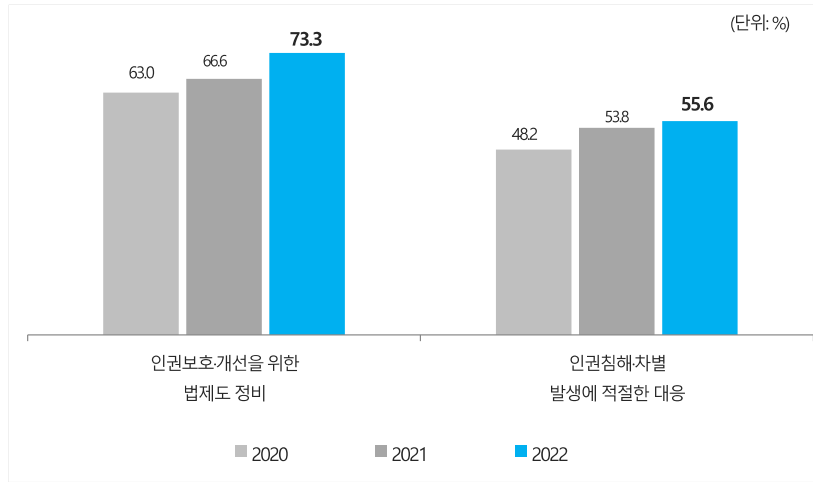
[그림 3-59] 인권 보호 증진 방법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세대와 정치성향)



(3)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평가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인식은 73.3%로 2021년의 66.6%, 2020년의 63.0%에 비하여 계속 증가하였으며, ‘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 역시 55.6%로 2020년의 48.2%, 2021년의 53.8%에 이어서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60]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평가



① 인권 보호,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의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남성의 73.9%, 여성의 72.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 70.0%, 40-50대 73.0%, 60대 이상의 77.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인권 증진 행위 중 법제도 정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71.9%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75.0%)보다 3.1%p 낮았다.

직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74.5%), 농림생산직(74.2%), 사무판매서비스(74%), 관리전문직(64%) 순으로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73.9%)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72.3%)에 1.6%p 정도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잘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77.1%), 정치적 무관심층(72.8%), 중도(72.6%), 진보(70.6%) 순으로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25〉 인권 보호,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구분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3.3	70.0	24.9	1.7	2.7	
성별						
남자	3.3	70.6	24.4	1.7	2.8	0.222(3)
여자	3.4	69.5	25.5	1.7	2.7	
지역						
도시[동부]	2.9	69.6	25.7	1.8	2.7	68.715(3) ***
농어촌[읍면부]	5.2	71.8	21.6	1.4	2.8	
연령						
20-30대	3.0	67.0	27.6	2.3	2.7	92.081(6) ***
40-50대	3.2	69.8	25.4	1.6	2.7	
60대 이상	3.9	73.6	21.4	1.1	2.8	
학력						
고졸이하	3.5	71.5	23.6	1.4	2.8	28.308(3) ***
대재이상	3.2	68.7	26.2	2.0	2.7	
직업						
관리전문직	3.2	60.8	33.3	2.7	2.6	69.425(9) ***
사무판매서비스	2.9	71.1	24.3	1.7	2.8	
농림생산직	3.4	70.8	24.5	1.3	2.8	
비경활인구	3.8	70.7	23.8	1.6	2.8	
종교						
없음	3.0	70.9	24.5	1.6	2.8	11.988(3) **
있음	3.9	68.4	25.8	1.9	2.7	
정치성향						
보수	4.9	72.2	21.6	1.3	2.8	82.796(9) ***
중도	3.0	69.6	25.7	1.7	2.7	
진보	3.1	67.5	26.8	2.6	2.7	
무관심	2.4	70.4	25.7	1.4	2.7	

② 인권 침해나 차별 발생시의 대응 수준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의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남성의 54.7%, 여성의 56.5%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여성의 긍정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20-30대 52.8%, 40-50대 53.7%, 60대 이상의 61.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인권 증진 행위 중 법제도 정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학력에 따라서는 인권 침해나 차별 발생시의 대처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대학교 재학 이상

의 집단에서 52.0%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59.5%)보다 7.5%p 낮았다.

직업의 경우 앞서 문항과 유사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57.5%)의 긍정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어서 사무판매서비스직(56.2%), 농림생산직(55.8%), 관리전문직(44.9%) 순으로 긍정 응답을 하였다.

종교를 고려했을 때, 종교가 없는 경우(55.6%) 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55.7%)에 0.1%p 차이로 긍정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정치 성향의 경우, 보수(57.7%), 정치적 무관심(56.8%), 중도(54.8%), 진보(52.6%) 순으로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26〉 인권 침해나 차별 발생시의 대응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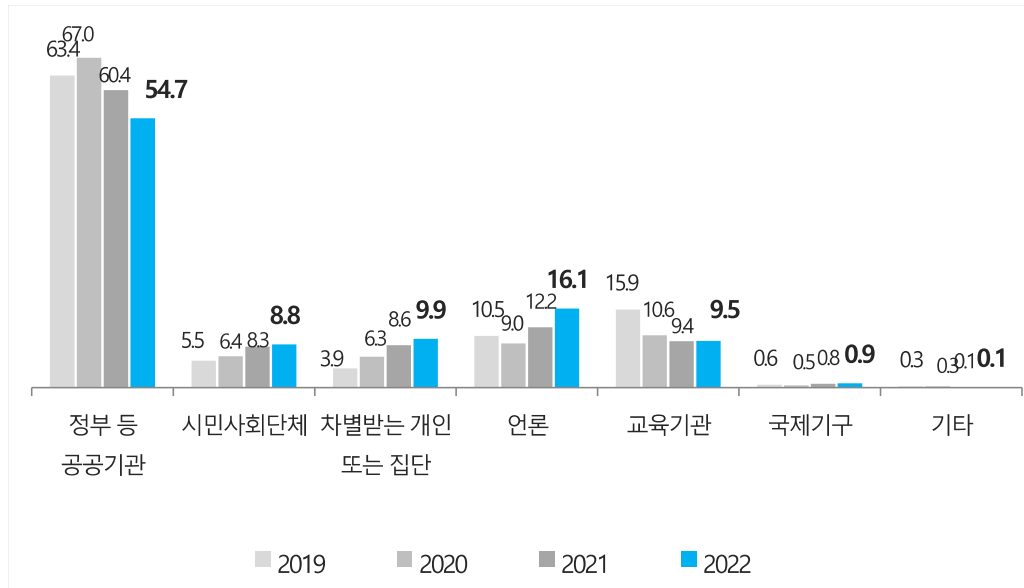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X ² (df)
전체	5.1	50.5	40.6	3.8	2.6	
성별						12.471(3) **
남자	5.0	49.7	41.5	3.8	2.6	
여자	5.2	51.3	39.8	3.8	2.6	
지역						9.054(3)*
도시[동부]	5.3	49.9	41.0	3.8	2.6	
농어촌[읍면부]	4.2	53.0	39.0	3.8	2.6	
연령						129.575(6))***
20-30대	5.0	47.8	42.5	4.7	2.5	
40-50대	5.2	48.5	42.5	3.8	2.6	
60대 이상	5.1	55.9	36.2	2.7	2.6	
학력						111.237(3))***
고졸이하	5.1	54.4	37.4	3.1	2.6	
대재이상	5.1	46.9	43.6	4.4	2.5	
직업						83.781(9) ***
관리전문직	3.7	41.2	49.3	5.9	2.4	
사무판매서비스	5.6	50.6	40.3	3.5	2.6	
농림생산직	5.0	50.8	40.6	3.6	2.6	
비경활인구	5.0	52.5	38.9	3.7	2.6	
종교						12.253(3) **
없음	4.7	50.9	40.7	3.8	2.6	
있음	5.9	49.8	40.6	3.8	2.6	
정치성향						123.500(9))***
보수	7.4	50.3	38.2	4.0	2.6	
중도	3.7	51.1	41.8	3.4	2.6	
진보	5.7	46.9	42.4	5.0	2.5	
무관심	4.3	52.5	40.1	3.1	2.6	

(3)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에 관한 문항에서 정부 등 공공기관의 비중이 과반 이상(54.7%)를 차지해 모든 문항 중 가장 큰 차이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으로 꼽혔다. 다만, 정부 등 공공기관을 선택한 비중은 2020년 67.0%, 2021년 60.4%, 2022년 54.7%로 지속 감소 추세를 볼 수 있다. 동시에 언론(16.1%),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9.9%), 교육기관(9.5%) 등의 응답도 조사가 이루어지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61]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단위 : %)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에 대해 세부 사항을 살펴본 결과, 남성(54.8%)과 여성(54.7%) 모두 정부 등 공공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남성(15.9%), 여성(16.2%) 모두 2순위로 언론을 꼽았다.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와 무관하게 모든 세대에서 20-30대(53.8%), 40-50대(54.0%), 60대 이상(56.8%)의 비율로 정부 등 공공기관을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으로 꼽았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을 선택한 비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학력을 살펴봐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55.6%)와 대학교 재학 이상(53.9%) 모두 정부 등 공

공기관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1순위 집단으로 꼽았다. 이어서 종교와 정치 성향에서도 정부 등 공공기관이 인권 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 공통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만,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정치 성향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층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정부 등 공공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27〉 인권 및 차별 해결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집단

(단위: %)

구분	정부 등 공공기 관	시민사 회단체	차별받 는 개인 또는 집단	언론	교육기 관	국제기 구	기타	$\chi^2(df)$
전체	54.7	8.8	9.9	16.1	9.5	0.9	0.1	
성별								
남자	54.8	8.8	10.1	15.9	9.4	1.0	0.1	5.579(6)
여자	54.7	8.8	9.6	16.2	9.7	0.8	0.1	
지역								
도시[동부]	54.5	8.5	9.8	16.6	9.5	1.0	0.1	24.421(6)** *
농어촌[읍면부]	55.9	10.1	10.0	13.8	9.7	0.4	0.1	
연령								
20-30대	53.8	8.8	10.2	16.5	9.6	1.0	0.1	38.109(12)* **
40-50대	54.0	9.0	10.2	16.3	9.5	0.9	0.0	
60대 이상	56.8	8.6	9.1	15.2	9.4	0.8	0.2	
학력								
고졸이하	55.6	8.7	10.5	14.8	9.5	0.9	0.1	34.190(6)** *
대재이상	53.9	8.9	9.3	17.2	9.6	1.0	0.1	
직업								
관리전문직	56.9	8.4	9.4	15.7	8.6	0.9	0.1	51.736(18)* **
사무판매서비스	52.0	9.3	10.8	17.2	9.4	1.2	0.1	
농림생산직	57.1	9.3	9.5	14.3	9.1	0.6	0.1	
비경활인구	56.0	8.2	9.1	15.7	10.0	0.8	0.1	
종교								
없음	53.5	8.5	10.5	16.8	9.6	1.2	0.1	40.246(6)** *
있음	57.1	9.4	8.7	14.7	9.4	0.5	0.2	
정치성향								
보수	54.6	8.8	9.7	16.5	9.3	0.9	0.1	87.560(18)* **
중도	53.8	8.6	10.4	16.4	9.7	1.1	0.0	
진보	52.7	10.0	8.9	17.5	10.0	1.0	0.0	
무관심	57.7	8.2	10.0	14.1	9.1	0.7	0.2	

5 코로나19와 인권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과 예방 과정에서 중요한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신상정보 및 동선 공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시위·집회의 제한, 영업제한 등 소상공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3년 가까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일상을 회복하였지만, 동시에 비대면 접촉의 확산과 가속화 등 일상의 상당 부분이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인권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된 문항을 질문하였다.

1) 코로나19가 인권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인식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인권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매우+대체로)는 의견은 56.4%이고 ‘영향을 주지 않았다’(전혀+별로)는 의견은 43.6%로 나타났다. 인권 상황에 ‘매우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은 7.0%를 차지한다.

배경 요인별로 성별 의견 차이는 없으며, 코로나19가 인권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20-30대(59.4%), 고등학교 졸업 이하(54.8%)보다는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57.8%),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59.2%), 정치적 진보 성향층(61.8%)으로 나타났다.

〈표 3-128〉 코로나19가 인권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4점)	$\chi^2(df)$
전체	6.4	37.2	49.4	7.0	2.6	
성별						
남자	6.7	37.5	48.8	7.0	2.6	1.025(3)
여자	6.1	37.0	50.0	6.9	2.6	
연령						
20-30대	5.6	34.9	51.3	8.1	2.6	83.997(6)***
40-50대	6.5	37.0	49.4	7.2	2.6	
60대 이상	7.1	40.2	47.3	5.4	2.5	
학력						
고졸이하	7.0	38.2	48.4	6.4	2.5	37.210(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4점)	X ² (df)
대재이상	5.8	36.4	50.3	7.5	2.6	
직업						
관리전문직	7.4	33.5	48.9	10.3	2.6	68.289(9)***
사무판매서비스	5.0	37.3	51.0	6.6	2.6	
농림생산직	8.0	38.4	47.1	6.5	2.5	
비경활인구	6.8	37.5	48.9	6.7	2.6	
종교						
없음	6.4	37.4	49.7	6.5	2.6	17.590(3)**
있음	6.4	37.0	48.9	7.8	2.6	
정치성향						
보수	7.4	38.2	47.3	7.2	2.5	134.831(9)* **
중도	5.0	37.2	51.6	6.3	2.6	
진보	5.7	32.5	52.8	9.0	2.7	
무관심	7.8	40.1	46.0	6.1	2.5	

2)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우선순위로 2개를 골랐을 때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문제(37.6%) >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33.9%) >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31.1%) > 사회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28.0%) > 백신/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20.5%) > 휴직, 실업 등 일자리(19.9%)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나 지출 등의 경제문제를 꼽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는 40-50대 중년층(42.0%)으로 나타난다.

〈표 3-129〉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단위: %)

구분	휴직, 실업 등 일자리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문제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	백신/코로나 감염의 후유증
전체	19.9	37.6	33.9	10.1	13.0	31.1	28.0	20.5
성별								
남자	21.7	38.9	33.8	9.3	12.2	31.4	26.5	20.1
여자	18.2	36.4	33.9	10.8	13.8	30.8	29.5	20.9

구분	휴직, 실업 등 일자리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문제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	백신/코로나 감염의 후유증
연령								
20~30대	22.2	37.4	31.3	11.6	12.7	36.5	25.3	18.7
40~50대	20.6	42.0	32.9	12.2	14.4	28.3	24.9	19.3
60대 이상	16.6	32.3	38.0	5.7	11.6	28.7	35.1	24.0
학력								
고졸이하	20.3	38.9	35.4	7.4	11.8	27.4	29.8	21.8
대재이상	19.6	36.5	32.5	12.5	14.2	34.4	26.4	19.2
직업								
관리전문직	17.0	37.0	30.2	12.2	18.6	32.0	27.4	18.3
사무판매서비스	21.6	42.7	32.7	11.9	13.6	31.9	23.6	17.4
농림생산직	22.6	39.4	32.9	7.8	10.6	28.7	27.8	22.0
비경활인구	17.6	31.5	36.5	8.7	12.3	31.1	33.0	23.6
종교								
없음	20.6	38.9	33.7	10.2	12.7	31.8	26.9	19.4
있음	18.7	35.2	34.2	9.9	13.7	29.7	30.1	22.4
정치성향								
보수	18.2	34.8	35.5	7.8	11.6	31.4	30.4	24.8
중도	20.3	39.8	33.3	11.5	14.5	30.3	26.4	18.0
진보	20.0	37.4	32.9	12.6	14.1	31.1	27.0	18.8
무관심	21.0	37.6	33.7	8.5	11.8	31.9	28.7	20.8

3)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44.3%) >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43.5%) > 백신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25.7%) > 방역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 제한(23.9%) >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18.5%) >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30〉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단위 : %)

구분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	백신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소상공인·자 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방역을 이유로 사회복지시 설 내 접근제한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
전체	25.7	18.5	43.5	28.2	44.3	23.9	10.7
성별							
남자	26.7	19.3	41.0	28.7	44.8	22.9	11.2
여자	24.7	17.7	45.9	27.7	43.8	24.9	10.2
연령							
20~30대	27.7	18.0	41.7	30.8	44.7	20.3	12.0
40~50대	25.9	18.9	43.3	27.6	45.0	23.1	11.2
60대 이상	23.1	18.4	45.6	26.1	43.0	29.1	8.5
학력							
고졸이하	24.0	19.3	43.9	26.9	43.8	26.8	8.8
대재이상	27.2	17.7	43.1	29.4	44.7	21.3	12.4
직업							
관리전문직	25.1	14.5	46.2	27.9	43.9	22.0	14.4
사무판매서비스	25.7	20.0	41.8	28.6	48.4	21.2	9.8
농림생산직	24.7	19.3	42.3	26.9	42.7	25.6	11.1
비경활인구	26.2	17.4	45.2	28.4	40.7	26.6	10.5
종교							
없음	25.8	18.5	42.6	28.7	45.3	23.0	10.7
있음	25.5	18.6	45.1	27.3	42.4	25.6	10.6
정치성향							
보수	26.1	18.9	41.6	29.0	43.2	26.7	10.7
중도	24.5	19.0	44.6	27.3	45.3	23.3	10.0
진보	25.7	20.0	44.0	26.8	44.1	21.1	12.8
무관심	26.8	16.2	43.4	29.6	44.2	24.4	9.9

코로나19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하위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심각하다고 보는 문제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재산권 침해’가 가장 심각했다는 응답은 사무판매서비스(48.4%)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돌봄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을 지적한 의견은 남성(41.0%)보다는 여성(45.9%)이 비율이 높고 관리전문직(46.2%)도 상대적으로 많다.

‘백신/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를 문제삼은 사람들

은 20-30대층에서 각각 30.8%, 27.7%로 전체 평균 28.2%, 25.7%보다 높다. 또한 '방역을 이유로 복지시설 접근 제한'은 아무래도 60대 이상의 고령층(29.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V. 결과 요약 및 정책 함의와 과제

1. 요약 및 결론
2.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IV

결과 요약 및 정책 함의와 과제

1 요약 및 결론

1) 인권의식

인권 의식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인권을 인식하고 인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사회의 인권 의식은 해당 사회의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권 문제 및 인권 상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22년 조사에서는 인권 의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은 현재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이 놓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인권 용어 접촉의 감소와 인권 상황이 정체되었다는 인식의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20년 이후 인권이라는 용어를 접하는 정도, 헌법에서의 기본적 권리 명시 인지 여부 등에서 ‘인권’ 용어를 ‘자주 접한다’는 빈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36.7%→28.9%), 가끔 접한다는 빈도는 지속 증가(43.2%→51.5%)한다. 2020년 이후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명시한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p 이상 감소함에 비해, ‘모른다’는 응답은 10%p 이상 증가(26.9%→37.9%)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 용어 및 인권 관련 개념에 대한 접촉과 인식 수준은 2020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특히 인권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 집단에 비하여 사무직인 경우 자신에게 인권이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이거나, 종교가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있는 집단은 인권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권과의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 상황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의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응답에 비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지속 증가했으며, 이는 2020년 비해 16.4%p 가량 증가(43.1%→59.5%)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인식이 증가 추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의견은 2019년 이후 지속 증가하나(71.3%→88.4%),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은 2021년에 비하여 소

폭 감소(77.8%→74.7%)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은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존중 받는다’고 응답(52.8%)했다.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의 주요 취약집단 중 여성이 가장 인권을 존중 받고 있다고 응답(84.6%)하였고, 마찬가지로, 2021년에 이어 이주민은 가장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인식(36.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인권적 주체로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질문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94.4%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항목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타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불편을 감수’, ‘인권 관련 활동 참여’를 꼽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인권이 누군가의 특권, 불공정한 권리로 인식하는 비중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인권이 특권적 권리로 오용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이 일부 계층에게 특권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인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권을 일종의 특권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관리전문직인 경우 인권을 특권, 이기적 권리로 오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인 경우 인권이 오용되고 있다는 관점에 동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소외계층의 감소와 연결하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이 줄어드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지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인권 보호하고 존중할 때 나타날 우리 사회의 변화에 관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63.3%)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사회적 갈등, 분열이 없는 사회’,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의 보장되는 사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인권 침해와 차별

많은 나라에서 인권의 명시와 보호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서 시작해서 점차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로 확대되어 왔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권위주의 시대 한국에는 자유 및 기본권의 제한 및 공권력에 대한 통제의 부족 때문에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가 많았다.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는 많이 줄어든 반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인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 그 결과 인권 존중에 대한 평가에서 시민, 정치

적 권리보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존중에 대한 요구가 더 많다.

시민, 정치적 권리들 중에서 2019년 조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 상대적으로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행정, 정책에 참여할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측면에서 존중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존중에 대한 평가에서 주거권, 안전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에서 개선된 양상이 보이는 반면, 건강권, 환경권, 문화권, 교육권 등에서는 최근 들어 악화되는 양상이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활동의 제약에 영향을 받은 면이 있다고 보인다. 향후 건강과 환경, 교육과 문화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34.8%,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37.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권침해보다 차별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2019년에 비해 각각 20%, 30% 가깝게 낮아졌다. 인권 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으로는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 이주민의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인권 취약집단으로 응답 비율이 증가한 것은 경제적 빈곤층과 이주민이며, 응답 비율이 감소한 것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이지만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재화나 용역의 사용, 가정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경우이다.

인권 침해 경험도 인권의 존중 정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 응답 비율이 모두 4%에 못 미쳐 7% 미만 수준인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응답에 비해 낮다.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 단체 결성이나 가입 제한 경험이 증가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응답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히 환경권이 많이 줄어든 편이다. 환경권과 건강권, 문화권의 존중에 대한 응답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과 달리 실제 경험에서는 침해 경험이 줄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변량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 거주자일수록, 인권침해 경험 응답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나 내용이든 상관없이 차별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14.3%이다. 2019년(28.2%), 2020년(29.5%), 2021년(19.6%)에 비해 계속 줄고 있다. 다변량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젊을수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더, 대재 이상이 고졸 이하에 비해 더, 그리고 관리전문직일수록 차별 경험을 응답할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다. 차별을 경험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 경제적 지위와 고용형태, 학력·학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의 이유가 된 항목에 대해 성별과 연령을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20-30대 여성의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 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로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50대가 가장 많고(28.8%),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았다(남 50.9%, 여 25.4%).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73.1%로 가장 높으며, 그 이유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응답과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2020년 이후 공공기관(7.8%→3.6%)과 민간기관(4.1%→2.0%) 모두 줄어드는 추세이며, 도움을 요청한 기관이 공공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도 낮아졌다. 특히 민간기관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2021년 66.2%에서 39.7%로 크게 낮아졌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은 피해자의 삶과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자료의 다변량 분석 결과 나타났다.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른 조건이나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의 경우 다양한 사유로 차별을 당하면 그만큼 더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인권침해의 경우 피해가 명확할수록 더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덜 낮아졌다. 또한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른 조건이나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인권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의 중요성이나 인권존중의 중요성과 같은 규범적 측면, 인권 존중의 의무나 규범 혹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 등 인지적 측면에서 인권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인권 관련 의견

인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고, 인권 정책과 제도 추진이 수월해질 수 있으므로 여론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난 4년간의 여론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친화적으로 여론이 개선되는 쟁점이 있는 반면 좀처럼 여론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는 쟁점들도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난민 수용’은 인권친화적인 여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사형제 폐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의 경우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보다 인권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여론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 인권 정책과 제도의 개정. 폐지에 있어서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일상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보 인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편리성보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정보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소 높아졌지만, 그에 따라 정보 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구조적으로 정보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이상 기후 등이 발생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 위기를 인권과 관련지어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자주 침해받는다.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전히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주위 어른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종속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성인의 인식과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인식은 커다란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여론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출직 정치인/공무원에 대한 불편함으로 측정된 사회적 거리감은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이주민 집단과 성소수자가 크다. 지난 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이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여성과 청년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낮다. 여성의 정치 진출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시 여성 할당제 등의 제도적 장치에 힘입었다. 이해관계의 표출로 생긴 갈등을 조정, 협의하는 것이 정치과정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소수자/약자들이 정치 영역에 진출하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지난 4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대상은 젠더 이슈 뿐만 아니라 연령, 장애, 난민, 종교, 성적 지향, 이주 등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2021년 대비 여성, 남성, 특정 종교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은 감소하였지만, 장애인, 특정 지역 출신 등에 대한 혐오표현은 증가하였다. 쟁점이 되는 항목이나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에 따라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다르게 분포한다.

무엇보다도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무대응하는 경우가 74.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혐오표현에 대해 비판적으로 잘 대응하는 경우는 2020년 24.5%에서 2022년 16.5%까지 감소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굳이 나서서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혐오표현에 대한 무대응의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68.7%로 우세하지만 반대 의견도 31.3%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바탕으로 두고 법적 규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비롯하여 혐오표현과 같은 일을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4) 인권 교육

인권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동시에 인권 침해 시 대처 방안을 모른다고 응답도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2020년 이후 감소(69%→62.7%)함에 비해, ‘모른다’는 응답은 증가(31%→37.4%) 추세에 있다. 또한 2019년에 비하여 인권 침해 시의 ‘대처법을 안다’는 응답이 늘었으나(40.6%→46.5%), 여전히 ‘모른다’의 응답 비중은 절반 이상(59.5%→53.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 교육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하나, 불필요하다는 인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최근 1년 이내의 인권 교육 경험과, 인권 관련 활동 참여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1년 이내의 인권 교육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20년 이후 감소 추세(80.6%→88.2%)이다. 80% 이상의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인권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인권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현재까지 80% 이상으로 나타나지만(83.5%, 82.8%),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에도(91.8%→80.5%), ‘필요없다’는 응답도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8.2%→19.5%)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었고, 주로 민간 기업 중심으로 확대된 경향을 확인하였다.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인권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 ‘민간기업’을 꼽아(40.4%), 인권 교육에서 민간 기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이어서 ‘교육청, 학교’, ‘국가기관’, ‘사회복지단체’,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기타’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시민사회단체’ 교육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11.2%→5.0%)했다. 교육 방식의 변화도 주목할만 하다. 2020년 이후 온라인(사이버) 교육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인권 교육 방식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35.1%→63.5%),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28.7%)한다.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 제고가 요청되는 기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회를 인권 교육이 필요한 주요 기관으로 인식하나, 군대와 교육기관의 교육 필요성 인식은 지속해 늘어나고 있다. 정부, 의회, 사법기관은 여전히 가장 인권 교육이 필요한 기관으로 나타나나, 그 비중은 2019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군대와 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교육청)은 인권 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라는 응답이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교육의 필요 주제는 주로 장애, 혐오차별로 나타나나 성평등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시급한 인권 교육 필요 주제는 인권교육이 필요한 주제는 장애인(31.1%), 노동(30.1%), 혐오/차별예방(29.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성평등(31.6%→17.9%)과 혐오차별(36.9%→29.9%), 노인인권(27%→16.8%)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민(4.6%→10.5%), 집단거주 시설(20.4%→29.6%)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인권 관련 활동 참여 비중은 지속하여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차별피해자 조인 상담’(8.7%→1.8%), ‘사회적 약자 위한 자원 활동’(11.9%→2.5%),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12%→5.1%), ‘인권문제 관련 글, 댓글쓰기’(9%→3.7%), ‘인권 관련 청원, 서명운동’(14.5%→5.2%)은 2019년에 비하여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 교육과 홍보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 관련 법률 마련을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는 효과적인 인권보호, 차별해소 방법으로 인권보호 법률, 제도 마련(54.5%), 인권 침해 행위 적극 조사(43.0%), 인권 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41.7%) 등의 순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존에 주요 방법으로 응답했던 인권 교육 강화(45.7%→35.9%), 인권 캠페인, 홍보(29.8%→20.8%)는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인권 개선 역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동시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으로 응답한다. 인권 보호,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63%→73.3%), 인권침해, 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48.2%→55.6%) 모두 2020년 이후 계속 긍정응답이 증가 추이에 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54.7%)했다. 하지만 정부 등 공공기관이 여전히 과반이나 감소 추세(63.4%→54.7%)이며, 시민단체(5.5%→8.8%), 차별받는 개인과 집단(3.9%→9.9%), 언론(10.5%→16.1%)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5) 코로나19와 인권

2020년 이래 3년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19가 국내 인권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6.4%로 높은 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 문제,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재산권 침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 고립 등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40-50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인구는 경제문제, 재산권 침해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20-30대는 사생활 침해 및 차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은 집단은 여성, 고령층으로 각기 다른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정책 역시 다양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1) 인권 의식 및 인권 교육

조사 결과, 인권 의식은 인권 교육과 중요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고양에 인권 교육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권 교육은 앞으로도 인권 의식 제고와 민감성 제고 등을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 교육 개선 방안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여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교육 정책 설계에서 다방면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인권 교육 경험과 효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연령, 성별, 학력, 직업 등의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해 인권교육 효용감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세대, 성별 등 교육 대상별 특화한 인권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성별과 연령 등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전 연령층 중 여성 고령자가 인권 교육경험이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권을 자신에게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비중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급한 인권 교육 필요 의제에 대해서도 세대, 성별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권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의제를 일상 속에서 발굴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 필요가 제기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표준화된 인권교육 교재의 개발과 병행, 보완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권교육의 주제와 내용, 방법 등 교육의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육표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의 다양한 교육대상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교육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학생, 일반시민, 공무원,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과 인권교육가, 사회복지시설자, 기업 인권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과정의 교육으로 구분해서 각각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준 교안의 개발과 함께 세대, 성별, 직업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배경 요인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성별, 연령 등 주요 배

경요인을 토대로 생애주기와 연계한 인권 교육 어젠다의 발굴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취업자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인권 교육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조사에 이어 2022년 조사에서도 인권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민간 기업,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미취업자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인권 교육 기획을 통해, 인권과 일상의 거리를 좁히고, 인권이 특수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 그리고 자기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육방법의 다각화 모색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2022년 조사결과 인권교육방식을 보면, 온라인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2021년에 이어 절반 이상의 비율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이 점차 일반적인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이 지속되면서 향후 여러 유형의 재난과 사회적 이동 제한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일시적인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시간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참여촉진자(Facilitator)의 참여, 다양한 학습자의 의견을 모아 활용하는 온라인 협업 툴(Padlet)의 활용 등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인권교육이 실제로 수강생의 인권감수성을 증가시켰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10년 국제앰네스티의 Right Education Action Programme(REAP)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권교육의 평가지표에는 인권교육 후의 수강생이 인권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획득했는지, 인권감수성은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모니터링 하고, 강사가 인권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교육자료는 잘 활용했는지, 몇 번의 교육을 했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Tibbitts, 2010: 108-11),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인권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2)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한 예방적 교육, 사후적 보호와 회복 지원

인권침해 및 차별의 경험은 시민들의 인격과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본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비록 지난 1년간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20% 가까이가 별다른 피해나 불이익이 없었다고 응답했지만,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사람들 중에서 69.6%가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올해의 조사와 지난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1년간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의 비율 또한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이 반드시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인권침해나 차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도 채 못 미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년간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73.1%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이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 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는 응답은 16.4%가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침해나 차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별다른 외적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10% 남짓의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만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그보다 더 적은 비중의 민간기관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크게 떨어진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들이 외부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 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 역시도 공권력이나 제도에 의한 보호나 피해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물론 경찰과 법조계에서 회복적 조치에 대한 강조가 늘고 있고, 인권위에서도 주요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피해회복 지원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광범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나 차별의 경험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람들의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이 줄어들었다는 본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이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억울함이 없도록 예방적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침해나 차별의 피해자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정신적, 감정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혹은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인권위에서 다루는 인권침해나 차별의 사건들은 다수가 형사적 처벌이 어렵고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높아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도와 법의 한계 안에서라도 인권침해나 차별 피해자들이 이전의 삶으로 복귀해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신적 피해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지원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인권 취약집단에 대한 체계적 파악과 정책 방안 제시

인권 의식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 인식(awareness), 헌신(commitment), 지지(support), 행동참여(participation)를 구분하여 어떤 특성과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개인의 특성과 배경이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권의식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진 특성과 배경을 가진 집단을 파악하여 인권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인권의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남성, 고연령층, 고학력층, 관리전문직, 사무원서비스 등의 경우에 인권 의식이 높지만, 인권의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여성, 저연령층, 고학력층, 관리전문직 등의 경우에 인권 의식이 높다. 정치적 진보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비교적 일관되게 인권 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때로는 인권 의식을 높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권 의식을 낮추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신이 처한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상반된 의견과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적 태도를 갖출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인권의식이 취약한 집단은 대체로 저학력층, 농림생산직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정치적 무관심층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인권의식이 취약하면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하거나, 혐오표현 등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고학력 또는 관리전문직의 경우에는 인권 상황이 취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또는 주변인의 자원을 동원하거나 구제받을 방법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반면 저학력층, 고령층, 농림생산직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종교 등에 의해 조직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쉽게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원할 자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권의식 취약집단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들이 처한 삶의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식 취약집단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을 인권의식실태조사와 연동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들 조사의 담당자와 인권의식실태조사의 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인권 취약집단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권취약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및 통합적 분석작업을 통해서 관련된 인권통계를 집계하고, 인권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각 인권취약집단 실태조사의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인권취약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취약집단의 삶과 인권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론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와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새로운 분야에서의 인권문제 인식 제고 및 공론화 추동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인권의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정보 인권, 기후 위기, 코로나19 감염 등은 최근에 심각하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 인권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비대면 방식의 접촉이 확산되면서 한편으로는 편리성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남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이상 기후, 지구 온난화 등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것을 인권의 문제로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못하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은 자연재해로만 인식되고 사회적 재난의 차원으로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주요한 목표로 경제 성장을 꾀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고 환경이나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는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기후 위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민주적 참여 등의 움직임을 저조하다.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에 여러 측면에서 인권침해와 차별문제를 제기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를 택한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는데, 그 대신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제한, 집단거주시설의 이용인에 대한 코호트 격리, 코로나19 감염자 추적을 위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직업별로 부정적인 영향이 서로 다르게 드러났으므로,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권의 관점을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인권취약계층은 새롭게 등장한 인권의 문제로 인

해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지만 이에 대한 감수성이나 경각심을 갖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 기후 위기,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 등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인권의식실태조사의 활용 및 향후 발전방향

인권의식실태조사는 2019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를 수행해 오면서 이를 통해 의식과 경험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들이 새로운 인권정책 수립의 방향과 함께 기존 정책의 성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축적해 왔다. 이제 4년 동안의 조사 결과가 축적되면서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효과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및 역할의 하나는 인권상황의 모니터링과 함께 인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인권 관련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제 인권이라는 단어는 국민들에게 낯설거나 무관한 것이 아닌 친숙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주장이 충돌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본 조사의 인권의식 부분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인권을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해 상충하는 주장들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인권의식실태조사는 다양한 인권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한 상충되는 주장들 속에서 현대 사회의 증거기반 정책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인권 통계 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 축적되면서 이를 분석한 결과로 제시된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들이 갈등 조정과 인권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 형성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반대 주장으로 많이 제기되는 것이 무용론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정책적 노력을 해도 결국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식의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무용론의 입장에 대해 인권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인권 정책의 지속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상세하게 인권 상황과 정책의 결과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조사 및 통계자료이다. 인권의식실태조사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계속 발전적으로 활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의식실태조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시작과 함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는 동시에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에 통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이 있지 않고 또한 별도의 연구기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용역의 형태로 조사 및 자료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물론 조사가 지속되면서 조사와 분석을 협력해서 총괄할 조직적 근거가 갖추어져 가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 결과를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조사 자료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토론과 제안을 지속해가려면 인권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학계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에도 매년 조사 종료 시점에서 인권학회와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있지만 이러한 협력이 보다 확대되어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개방하고 학계의 의견을 듣고 논의할 기회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 자료 및 통계 지표의 축적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체계화해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인권 지표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인권정책이 추진해 가야 할 정책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조사 자료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 뿐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정책적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정책적 협력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정책적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자료로써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정우·남윤창·황태희 (2018) “인권감수성 예측모형 구축: 데이터마이닝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 35권 1호 pp. 53-110.
- 김자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6(2): 57-83.
- 류지현·허창영 (2008). “대학생의 인권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
와 인권』8(1): 175-204.
- 이승미 (1999).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6(2): 103-119.
- 정진성·공석기·구정우 (2010).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조건』. 서울대학
교출판문화원.
- Crowson, H. Michael. (2004). "Human Rights Attitudes: Dimentionality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Ethics & Behavior 14(3): 235-253.
- Diaz-Veizades, Jeannette, Keith F. Widaman, Todd D. Little, and Katherine W. Gibbs.
(1995). "The Measurement and Structure of Human Rights Attitud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3): 313-328.
- Donnelly, Jack. (2003).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ornell
University Press.
- Fundamental Rights Survey. (2020). What do Fundamental Rights Mean For People In
the EU?
- Getz, Irene Rose. (1985). Moral reasoning, Religion, and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 Hunt, Lynn. (2008). Inventing Human Rights: A History. W. W. Norton & Company
- Ipsos. (2018). Human Rights in 2018: A Global Advisor Survey. Ipsos Public Affairs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and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339-375.
- Ju, H. G., Lee, K. J., & Kim, H. S. (2013).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program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by

-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3), 169-179.
- Koo, J. W., Cheong, B. E., & Ramirez, F. O. (2015). Who thinks and behaves according to human rights?: Evidence from the Korean National Human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Journal of Human Rights*, 16(3), 261-275
- Koo, Jeong-Woo and Francisco O. Ramirez. (2009). "UNESCO and the Associated Schools Project: Symbolic Affirmation of World Community,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Human Rights." *Sociology of Education* 82: 197-216.
- Koo, Jeong-Woo. (2017). "The construction of human rights actorhood: Findings from the
- Levy, D., & Sznaider, N. (2004).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smopolitan morality: The Holocaust and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3(2), 143-157
- Mcfarland, Sam and Melissa Mathews. (2005a). "Do Americans Care About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4: 305-319.
- Mcfarland, Sam and Melissa Mathews. (2005b). "Who Cares About Human Rights?." *Political Psychology* 26(3): 365-385.
- Michael Humphrey (2013) "Where does human rights consciousness come from? Counterinsurgency, traumatisation and political subjectivity in Argentina, Australian", *Journal of Human Rights*, 19:1, 83-106,
- Rights Survey. *Korea Observer*, 46(1), 53-87.
- Stellmacher, Jost, Gert Sommer, and Elmar Braher. (2005).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Human Rights: Knowledge, Importance, and Commitment." *Peace and Conflict : Journal of Peace Psychology* 11: 267-292.
- Thornhill, Chris. (2013). "State Building,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Norms: Outline for a Sociology of Constitutions." pp.25-61 in Mikael Rask Madsen and Gert Verschraegen (eds.) *Making Human Rights Intelligible: Towards a Sociology of Human Rights*. Oxford : Hart Publishing.
- Tibbits, Felisa (2010). *Impact Assessment of the Right Education Action Programme(REAP)-Final Report*. Anest Internation Norway.

_____ (2002). Understanding what we do: Emerging models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8(3), 159-171.3

Woodiwiss, Anthony. 2005. *Human Rights*. New York: Routledge.

부록

1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문항 3.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조금 좋아지고 있다					비슷하다					조금 나빠지고 있다					많이 나빠지고 있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체	545	0.071	3.610	3.107	4.112	4228	0.030	27.568	25.960	29.175	10026	0.014	59.515	57.865	61.165	1116	0.051	7.501	6.747	8.256	233	0.104	1.807	1.440	2.174
성별																									
남자	286	0.084	2.091	1.746	2.435	2045	0.035	14.266	13.290	15.243	4487	0.019	28.367	27.332	29.402	534	0.062	3.699	3.246	4.152	121	0.127	1.097	0.825	1.370
여자	259	0.086	1.519	1.262	1.777	2183	0.033	13.301	12.439	14.163	5539	0.018	31.148	30.077	32.219	582	0.061	3.802	3.346	4.259	112	0.127	0.710	0.532	0.887
지역																									
도시(동부)	452	0.079	3.104	2.624	3.585	3330	0.035	23.061	21.473	24.649	7472	0.018	47.946	46.275	49.617	903	0.058	6.486	5.747	7.226	185	0.116	1.554	1.201	1.907
농어촌(읍면부)	93	0.165	0.505	0.342	0.668	898	0.072	4.507	3.874	5.139	2554	0.043	11.569	10.605	12.534	213	0.113	1.015	0.790	1.239	48	0.228	0.253	0.140	0.366
연령																									
20대 이하	84	0.139	0.804	0.585	1.023	545	0.058	5.138	4.556	5.720	1176	0.042	9.931	9.108	10.753	137	0.118	1.280	0.983	1.576	24	0.246	0.318	0.164	0.471
30대	67	0.167	0.488	0.327	0.648	630	0.062	4.692	4.118	5.267	1262	0.040	8.587	7.914	9.259	148	0.103	1.140	0.910	1.370	31	0.270	0.268	0.126	0.410
40대	107	0.141	0.752	0.544	0.959	806	0.055	5.347	4.771	5.924	1635	0.034	10.265	9.581	10.949	242	0.089	1.530	1.262	1.797	59	0.170	0.444	0.296	0.593
50대	117	0.127	0.737	0.552	0.921	820	0.051	5.169	4.651	5.686	1992	0.032	11.687	10.961	12.413	225	0.090	1.548	1.276	1.819	45	0.242	0.334	0.175	0.493
60대 이상	170	0.106	0.830	0.658	1.002	1427	0.046	7.221	6.570	7.873	3961	0.029	19.046	17.954	20.138	364	0.080	2.005	1.691	2.319	74	0.176	0.443	0.290	0.595
학력																									
중졸 이하	87	0.151	0.397	0.280	0.515	741	0.062	3.379	2.966	3.792	2630	0.039	11.947	11.032	12.862	240	0.101	1.275	1.021	1.528	43	0.197	0.207	0.127	0.287
고졸 이하	182	0.106	1.258	0.997	1.518	1538	0.041	10.089	9.270	10.908	3740	0.025	23.140	22.004	24.276	394	0.075	2.746	2.344	3.148	84	0.144	0.671	0.482	0.860
대졸 이하	248	0.091	1.819	1.493	2.145	1830	0.044	13.304	12.159	14.449	3506	0.027	23.451	22.228	24.673	441	0.070	3.208	2.766	3.649	93	0.161	0.845	0.579	1.111
대학원졸 이상	28	0.237	0.135	0.072	0.198	119	0.127	0.796	0.598	0.995	150	0.126	0.978	0.737	1.219	41	0.203	0.273	0.164	0.382	13	0.402	0.084	0.018	0.151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7	0.137	0.656	0.480	0.833	376	0.083	2.660	2.227	3.092	569	0.063	4.016	3.517	4.516	130	0.123	0.940	0.714	1.167	38	0.250	0.317	0.161	0.472
사무직	68	0.154	0.502	0.350	0.654	728	0.064	5.571	4.876	6.267	1340	0.044	9.521	8.696	10.347	135	0.123	1.016	0.771	1.261	29	0.236	0.250	0.135	0.366
서비스/판매직	94	0.138	0.557	0.406	0.707	920	0.059	6.539	5.787	7.290	2083	0.031	12.696	11.930	13.463	222	0.091	1.588	1.306	1.871	42	0.225	0.347	0.194	0.501
생산/기술직	36	0.247	0.303	0.156	0.449	344	0.073	2.109	1.807	2.410	840	0.050	5.126	4.626	5.626	109	0.113	0.725	0.565	0.886	21	0.253	0.164	0.083	0.24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	0.276	0.113	0.052	0.174	257	0.126	0.969	0.729	1.208	706	0.079	2.672	2.261	3.083	65	0.217	0.234	0.135	0.333	7	0.614	0.027	0.000	0.060
단순노무직	33	0.215	0.246	0.142	0.350	164	0.098	0.911	0.736	1.086	558	0.064	3.110	2.721	3.499	45	0.193	0.308	0.192	0.425	13	0.344	0.094	0.031	0.158
기타	5	0.570	0.018	0.000	0.039	11	0.724	0.053	0.000	0.128	9	0.524	0.072	0.000	0.147	3	0.754	0.012	0.000	0.031	1	1.000	0.005	0.000	0.015
무직	194	0.104	1.214	0.967	1.462	1428	0.040	8.757	8.069	9.446	3921	0.024	22.301	21.241	23.360	407	0.076	2.677	2.280	3.073	82	0.151	0.602	0.424	0.781

*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 유의사항 : 가구통계 기준 RSE < 25% 구간에서 n≥10인 경우 신뢰도 높음, n<10인 경우 신뢰도 다소 낮음.

25%≤RSE < 50% 구간은 신뢰도 다소 낮음. 50%≤RSE 구간은 신뢰도 낮음

문항 4-1.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체	1539	0.059	9.037	7.995	10.078	12807	0.009	79.367	77.977	80.758	1741	0.048	11.169	10.124	12.213	61	0.191	0.428	0.267	0.588
성별																				
남자	753	0.066	4.613	4.015	5.210	5863	0.013	39.081	38.083	40.079	825	0.056	5.583	4.975	6.191	32	0.238	0.244	0.130	0.357
여자	786	0.067	4.424	3.842	5.006	6944	0.013	40.287	39.253	41.321	916	0.054	5.585	4.995	6.176	29	0.242	0.184	0.097	0.271
지역																				
도시[동부]	1084	0.067	7.021	6.099	7.944	9889	0.013	65.616	63.957	67.274	1325	0.055	9.184	8.187	10.181	44	0.233	0.330	0.179	0.482
농어촌[읍면부]	455	0.123	2.015	1.530	2.500	2918	0.046	13.752	12.508	14.995	416	0.103	1.985	1.584	2.385	17	0.289	0.097	0.042	0.152
연령																				
20대 이하	227	0.094	1.855	1.514	2.196	1539	0.037	13.804	12.813	14.795	192	0.112	1.731	1.352	2.111	8	0.388	0.080	0.019	0.141
30대	206	0.109	1.400	1.102	1.698	1683	0.037	11.888	11.029	12.747	238	0.096	1.782	1.445	2.118	11	0.388	0.105	0.025	0.185
40대	306	0.091	1.898	1.561	2.234	2254	0.029	14.630	13.804	15.456	279	0.077	1.747	1.485	2.010	10	0.339	0.063	0.021	0.105
50대	323	0.087	1.818	1.506	2.130	2486	0.026	15.197	14.416	15.978	378	0.073	2.365	2.024	2.705	12	0.329	0.093	0.033	0.154
60대 이상	477	0.085	2.066	1.723	2.408	4845	0.026	23.849	22.613	25.085	654	0.063	3.544	3.109	3.979	20	0.294	0.086	0.037	0.136
학력																				
중졸 이하	275	0.104	1.093	0.870	1.316	2995	0.037	13.734	12.728	14.740	459	0.076	2.336	1.989	2.684	12	0.447	0.042	0.005	0.078
고졸 이하	560	0.074	3.287	2.809	3.766	4669	0.021	29.927	28.717	31.137	685	0.069	4.502	3.891	5.113	24	0.239	0.188	0.100	0.276
대졸 이하	641	0.074	4.321	3.694	4.949	4874	0.022	33.954	32.508	35.401	578	0.070	4.152	3.580	4.725	25	0.275	0.199	0.091	0.306
대학원졸 이상	63	0.178	0.335	0.218	0.452	269	0.099	1.753	1.411	2.095	19	0.280	0.178	0.080	0.276	0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8	0.114	1.016	0.788	1.244	913	0.058	6.543	5.801	7.284	120	0.142	0.958	0.690	1.225	9	0.417	0.073	0.013	0.133
사무직	251	0.109	1.786	1.405	2.168	1838	0.038	13.606	12.591	14.621	199	0.105	1.365	1.083	1.647	12	0.365	0.105	0.030	0.179
서비스/판매직	306	0.090	1.748	1.441	2.056	2677	0.029	17.176	16.212	18.139	368	0.080	2.719	2.292	3.146	10	0.338	0.084	0.028	0.140
생산/기술직	134	0.130	0.748	0.557	0.939	1067	0.045	6.734	6.136	7.331	146	0.107	0.920	0.728	1.113	3	0.627	0.025	0.000	0.05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13	0.185	0.409	0.261	0.557	831	0.080	3.123	2.634	3.613	114	0.194	0.462	0.286	0.637	5	0.581	0.020	0.000	0.044
단순노무직	70	0.172	0.398	0.263	0.533	602	0.059	3.444	3.045	3.844	140	0.119	0.824	0.632	1.016	1	1.001	0.004	0.000	0.010
기타	9	0.931	0.039	0.000	0.110	20	0.437	0.122	0.017	0.226	0	0
무직	498	0.074	2.892	2.470	3.315	4859	0.022	28.620	27.401	29.839	654	0.059	3.922	3.468	4.375	21	0.275	0.118	0.054	0.181

문항 9-13. 인권의 존중 정도-노동권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체	1874	0.052	11.314	10.164	12.464	9631	0.014	59.061	57.472	60.649	4359	0.028	27.990	26.449	29.532	284	0.105	1.635	1.299	1.971
성별																				
남자	859	0.058	5.603	4.967	6.239	4399	0.018	28.826	27.802	29.851	2072	0.032	14.164	13.267	15.060	143	0.121	0.927	0.706	1.148
여자	1015	0.059	5.711	5.055	6.368	5232	0.018	30.234	29.198	31.271	2287	0.033	13.827	12.932	14.722	141	0.120	0.708	0.541	0.875
지역																				
도시[동부]	1315	0.061	8.805	7.759	9.852	7346	0.017	48.365	46.713	50.016	3463	0.032	23.631	22.131	25.132	218	0.117	1.350	1.040	1.660
농어촌[읍면부]	559	0.103	2.509	2.001	3.016	2285	0.051	10.696	9.635	11.757	896	0.077	4.359	3.703	5.015	66	0.232	0.285	0.156	0.415
연령																				
20대 이하	212	0.092	1.966	1.613	2.319	1138	0.042	10.106	9.282	10.929	577	0.059	5.043	4.457	5.629	39	0.234	0.355	0.192	0.517
30대	233	0.100	1.714	1.376	2.051	1231	0.041	8.526	7.833	9.219	619	0.061	4.601	4.047	5.155	55	0.195	0.334	0.206	0.462
40대	298	0.095	1.929	1.571	2.287	1646	0.035	10.723	9.997	11.449	842	0.047	5.331	4.840	5.822	63	0.170	0.355	0.237	0.473
50대	335	0.086	2.048	1.705	2.392	1893	0.032	11.370	10.662	12.077	920	0.049	5.821	5.266	6.375	51	0.188	0.235	0.148	0.321
60대 이상	796	0.069	3.658	3.163	4.152	3723	0.030	18.337	17.264	19.409	1401	0.044	7.194	6.569	7.820	76	0.176	0.356	0.233	0.479
학력																				
중졸 이하	492	0.085	2.172	1.812	2.533	2397	0.041	10.981	10.091	11.872	806	0.060	3.855	3.400	4.311	46	0.233	0.196	0.106	0.285
고졸 이하	687	0.062	4.179	3.670	4.689	3464	0.025	22.098	21.016	23.179	1671	0.039	10.896	10.067	11.725	116	0.136	0.730	0.535	0.925
대졸 이하	650	0.075	4.705	4.014	5.396	3571	0.026	24.688	23.436	25.939	1781	0.041	12.560	11.552	13.567	116	0.139	0.674	0.490	0.858
대학원졸 이상	45	0.199	0.258	0.157	0.358	199	0.107	1.294	1.022	1.567	101	0.144	0.679	0.488	0.871	6	0.462	0.035	0.003	0.067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3	0.109	0.975	0.767	1.184	637	0.062	4.357	3.827	4.887	396	0.073	3.089	2.649	3.528	24	0.291	0.168	0.072	0.264
사무직	231	0.112	1.801	1.404	2.197	1433	0.042	10.429	9.563	11.296	590	0.062	4.351	3.819	4.882	46	0.219	0.281	0.160	0.401
서비스/판매직	390	0.077	2.498	2.119	2.878	2011	0.033	12.891	12.050	13.733	896	0.048	5.925	5.366	6.485	64	0.168	0.412	0.276	0.548
생산/기술직	177	0.102	1.027	0.822	1.232	746	0.054	4.723	4.225	5.221	401	0.072	2.548	2.189	2.907	26	0.250	0.128	0.065	0.19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7	0.156	0.666	0.462	0.870	665	0.085	2.470	2.057	2.884	208	0.131	0.833	0.619	1.047	13	0.466	0.045	0.004	0.087
단순노무직	86	0.151	0.518	0.364	0.671	480	0.067	2.698	2.342	3.054	234	0.087	1.380	1.145	1.614	13	0.331	0.075	0.026	0.123
기타	7	0.617	0.044	0.000	0.097	16	0.473	0.092	0.007	0.177	5	0.541	0.020	0.000	0.041	1	1.000	0.005	0.000	0.015
무직	663	0.066	3.785	3.293	4.278	3643	0.025	21.400	20.347	22.452	1629	0.040	9.845	9.064	10.627	97	0.160	0.521	0.357	0.685

문항 20-5. 인권 쟁점-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정도

	보장해야 한다					다소 보장해야 한다					다소 제한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체	4566	0.030	28.864	27.154	30.575	6830	0.019	43.305	41.698	44.912	3781	0.036	22.201	20.651	23.751	971	0.057	5.630	5.002	6.258
성별																				
남자	2231	0.034	15.296	14.275	16.317	3155	0.023	21.176	20.220	22.132	1632	0.041	10.169	9.346	10.993	455	0.069	2.878	2.488	3.269
여자	2335	0.035	13.569	12.639	14.498	3675	0.023	22.129	21.122	23.135	2149	0.039	12.032	11.107	12.956	516	0.067	2.751	2.387	3.115
지역																				
도시[동부]	3566	0.035	24.000	22.352	25.647	5174	0.024	35.461	33.828	37.094	2865	0.042	18.131	16.650	19.612	737	0.066	4.560	3.972	5.149
농어촌[읍면부]	1000	0.078	4.865	4.122	5.608	1656	0.056	7.844	6.984	8.704	916	0.067	4.070	3.535	4.605	234	0.116	1.070	0.827	1.313
연령																				
20대 이하	674	0.060	6.042	5.330	6.754	892	0.045	7.938	7.230	8.646	322	0.081	2.814	2.368	3.259	78	0.138	0.676	0.493	0.859
30대	700	0.058	4.928	4.363	5.492	901	0.049	6.603	5.973	7.233	451	0.075	3.098	2.640	3.556	86	0.145	0.546	0.390	0.702
40대	933	0.052	5.991	5.384	6.598	1181	0.039	7.659	7.067	8.251	591	0.060	3.808	3.361	4.255	144	0.115	0.880	0.682	1.078
50대	927	0.051	5.605	5.046	6.163	1380	0.037	8.538	7.924	9.153	697	0.060	4.196	3.701	4.692	195	0.096	1.134	0.921	1.348
60대 이상	1332	0.050	6.299	5.685	6.914	2476	0.038	12.567	11.627	13.506	1720	0.045	8.285	7.549	9.022	468	0.077	2.393	2.032	2.755
학력																				
중졸 이하	780	0.066	3.408	2.967	3.849	1543	0.051	7.189	6.474	7.905	1149	0.053	5.274	4.727	5.822	269	0.096	1.333	1.081	1.584
고졸 이하	1616	0.042	10.215	9.373	11.057	2562	0.030	16.859	15.874	17.843	1361	0.050	8.466	7.630	9.302	399	0.072	2.364	2.030	2.699
대졸 이하	1997	0.040	14.087	12.989	15.186	2609	0.032	18.497	17.338	19.657	1229	0.053	8.220	7.371	9.070	283	0.091	1.821	1.498	2.145
대학원졸 이상	173	0.118	1.154	0.888	1.421	116	0.131	0.760	0.564	0.955	42	0.198	0.241	0.147	0.334	20	0.284	0.111	0.049	0.173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87	0.073	3.502	3.001	4.003	493	0.067	3.614	3.136	4.093	154	0.098	1.065	0.861	1.269	66	0.150	0.408	0.288	0.529
사무직	656	0.064	4.805	4.203	5.407	1037	0.049	7.710	6.966	8.455	516	0.072	3.787	3.254	4.321	91	0.133	0.559	0.413	0.704
서비스/판매직	948	0.050	5.987	5.403	6.572	1410	0.038	9.362	8.665	10.059	810	0.067	5.137	4.459	5.815	193	0.103	1.240	0.989	1.492
생산/기술직	408	0.069	2.530	2.188	2.872	574	0.061	3.664	3.223	4.105	288	0.082	1.708	1.434	1.982	80	0.144	0.525	0.377	0.67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47	0.128	0.929	0.695	1.162	420	0.098	1.543	1.246	1.840	323	0.121	1.236	0.942	1.531	73	0.189	0.307	0.193	0.420
단순노무직	224	0.085	1.312	1.093	1.531	323	0.077	1.911	1.622	2.200	200	0.100	1.097	0.881	1.313	66	0.153	0.350	0.244	0.455
기타	8	0.646	0.045	0.000	0.101	11	0.464	0.070	0.006	0.134	6	0.882	0.026	0.000	0.071	4	1.000	0.020	0.000	0.059
무직	1588	0.043	9.755	8.935	10.575	2562	0.031	15.430	14.494	16.365	1484	0.044	8.145	7.436	8.854	398	0.072	2.222	1.906	2.538

문항 23-1.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체	2874	0.043	16.752	15.330	18.175	9319	0.016	57.587	55.777	59.398	3480	0.039	22.715	20.982	24.448	475	0.098	2.946	2.379	3.513
성별																				
남자	1274	0.048	7.785	7.047	8.524	4320	0.020	28.621	27.503	29.739	1642	0.045	11.530	10.523	12.536	237	0.112	1.584	1.235	1.933
여자	1600	0.049	8.967	8.101	9.833	4999	0.020	28.967	27.847	30.086	1838	0.041	11.185	10.280	12.091	238	0.109	1.362	1.071	1.652
지역																				
도시[동부]	2103	0.050	13.304	11.999	14.609	7175	0.020	47.518	45.665	49.371	2734	0.044	19.026	17.373	20.679	330	0.107	2.304	1.823	2.785
농어촌[읍면부]	771	0.092	3.449	2.827	4.071	2144	0.053	10.069	9.020	11.119	746	0.098	3.689	2.977	4.401	145	0.239	0.642	0.341	0.942
연령																				
20대 이하	286	0.092	2.501	2.049	2.954	1029	0.045	9.149	8.344	9.953	539	0.065	4.878	4.260	5.495	112	0.135	0.943	0.693	1.192
30대	303	0.087	2.203	1.826	2.581	1207	0.043	8.539	7.818	9.260	567	0.067	4.048	3.518	4.578	61	0.177	0.385	0.251	0.519
40대	470	0.071	2.818	2.426	3.210	1594	0.036	10.375	9.640	11.110	705	0.060	4.638	4.094	5.182	80	0.165	0.506	0.343	0.670
50대	540	0.065	3.206	2.797	3.616	1907	0.032	11.777	11.041	12.514	678	0.058	4.098	3.632	4.565	74	0.161	0.391	0.268	0.515
60대 이상	1275	0.057	6.024	5.352	6.695	3582	0.032	17.748	16.645	18.850	991	0.064	5.053	4.420	5.686	148	0.164	0.721	0.489	0.953
학력																				
중졸 이하	885	0.066	3.974	3.456	4.491	2157	0.045	10.036	9.160	10.912	581	0.083	2.716	2.276	3.157	118	0.187	0.478	0.303	0.654
고졸 이하	1021	0.055	6.209	5.536	6.883	3473	0.026	22.140	21.005	23.276	1282	0.049	8.405	7.599	9.210	162	0.134	1.149	0.846	1.452
대졸 이하	915	0.063	6.229	5.463	6.995	3505	0.028	24.309	22.959	25.659	1510	0.053	10.821	9.701	11.941	188	0.120	1.267	0.968	1.565
대학원졸 이상	53	0.178	0.340	0.221	0.459	184	0.106	1.102	0.874	1.330	107	0.141	0.772	0.559	0.986	7	0.548	0.051	0.000	0.107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1	0.103	1.209	0.964	1.454	645	0.061	4.478	3.945	5.012	345	0.079	2.675	2.259	3.092	29	0.249	0.227	0.116	0.338
사무직	324	0.093	2.290	1.873	2.708	1275	0.047	9.469	8.597	10.341	622	0.074	4.587	3.925	5.249	79	0.180	0.515	0.333	0.697
서비스/판매직	599	0.073	3.811	3.268	4.355	1980	0.033	12.841	12.009	13.673	706	0.069	4.565	3.949	5.181	76	0.162	0.510	0.348	0.671
생산/기술직	228	0.099	1.338	1.079	1.598	794	0.050	4.995	4.508	5.481	290	0.089	1.868	1.540	2.196	38	0.254	0.226	0.113	0.33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01	0.147	0.693	0.494	0.892	583	0.095	2.265	1.844	2.686	222	0.153	0.860	0.602	1.119	57	0.323	0.197	0.072	0.321
단순노무직	171	0.114	0.874	0.679	1.069	458	0.067	2.694	2.338	3.050	160	0.098	0.962	0.777	1.147	24	0.326	0.140	0.051	0.230
기타	3	1.000	0.015	0.000	0.043	20	0.421	0.124	0.022	0.227	6	1.000	0.022	0.000	0.064	0
무직	1167	0.055	6.523	5.824	7.222	3564	0.027	20.721	19.624	21.818	1129	0.052	7.176	6.448	7.904	172	0.128	1.132	0.848	1.416

문항 24-1-2.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청년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체	344	0.131	2.213	1.644	2.782	1708	0.049	10.924	9.864	11.983	7531	0.022	46.582	44.592	48.571	6565	0.028	40.282	38.096	42.468
성별																				
남자	153	0.140	1.027	0.745	1.310	814	0.055	5.452	4.861	6.043	3505	0.026	23.131	21.968	24.293	3001	0.032	19.910	18.662	21.158
여자	191	0.145	1.186	0.849	1.523	894	0.058	5.472	4.849	6.094	4026	0.025	23.451	22.289	24.613	3564	0.030	20.372	19.178	21.565
지역																				
도시[동부]	258	0.148	1.908	1.355	2.462	1217	0.058	8.651	7.659	9.643	5774	0.026	38.411	36.446	40.376	5093	0.032	33.181	31.103	35.260
농어촌[읍면부]	86	0.227	0.305	0.169	0.441	491	0.103	2.273	1.815	2.730	1757	0.062	8.171	7.172	9.169	1472	0.067	7.101	6.169	8.032
연령																				
20대 이하	28	0.235	0.279	0.150	0.407	159	0.122	1.503	1.143	1.864	867	0.048	7.863	7.121	8.605	912	0.049	7.826	7.072	8.579
30대	36	0.230	0.271	0.149	0.393	198	0.101	1.609	1.290	1.927	940	0.052	6.515	5.855	7.175	964	0.049	6.780	6.130	7.430
40대	65	0.174	0.426	0.280	0.571	281	0.080	1.823	1.536	2.110	1242	0.043	8.244	7.552	8.935	1261	0.046	7.846	7.137	8.554
50대	63	0.185	0.468	0.298	0.639	368	0.076	2.318	1.974	2.663	1555	0.039	9.517	8.786	10.248	1213	0.046	7.170	6.524	7.816
60대 이상	152	0.176	0.770	0.504	1.036	702	0.068	3.671	3.183	4.159	2927	0.037	14.443	13.402	15.485	2215	0.045	10.661	9.720	11.602
학력																				
중졸 이하	83	0.170	0.359	0.239	0.480	417	0.082	1.981	1.663	2.298	1812	0.048	8.453	7.660	9.246	1429	0.057	6.412	5.695	7.128
고졸 이하	139	0.168	0.957	0.642	1.272	706	0.070	4.618	3.981	5.255	2887	0.032	18.254	17.113	19.395	2206	0.038	14.075	13.024	15.125
대졸 이하	116	0.168	0.858	0.575	1.140	545	0.067	4.037	3.508	4.566	2706	0.035	19.063	17.762	20.363	2751	0.037	18.669	17.321	20.018
대학원졸 이상	6	0.472	0.039	0.003	0.076	40	0.200	0.288	0.175	0.401	126	0.119	0.812	0.622	1.002	179	0.117	1.127	0.868	1.385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6	0.238	0.199	0.106	0.292	153	0.110	1.094	0.857	1.330	493	0.069	3.443	2.978	3.908	528	0.070	3.853	3.325	4.381
사무직	52	0.233	0.442	0.240	0.644	190	0.105	1.529	1.216	1.843	1014	0.053	7.556	6.765	8.347	1044	0.054	7.334	6.562	8.105
서비스/판매직	75	0.216	0.483	0.278	0.687	395	0.084	2.725	2.274	3.175	1645	0.041	10.495	9.656	11.334	1246	0.047	8.025	7.293	8.756
생산/기술직	27	0.327	0.177	0.064	0.291	142	0.112	0.911	0.710	1.111	652	0.059	4.091	3.614	4.569	529	0.066	3.247	2.830	3.66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9	0.271	0.086	0.040	0.132	151	0.159	0.588	0.405	0.772	479	0.099	1.786	1.439	2.133	404	0.114	1.554	1.208	1.900
단순노무직	15	0.300	0.127	0.052	0.201	86	0.188	0.515	0.325	0.705	392	0.071	2.330	2.005	2.656	320	0.078	1.698	1.439	1.956
기타	0	3	0.708	0.013	0.000	0.032	13	0.439	0.091	0.013	0.169	13	0.668	0.057	0.000	0.131
무직	120	0.130	0.699	0.521	0.877	588	0.064	3.549	3.103	3.995	2843	0.032	16.789	15.740	17.838	2481	0.037	14.515	13.462	15.567

문항 25.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정도

	매우 자주 있다					자주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체	290	0.085	2.510	2.091	2.930	2117	0.047	15.634	14.209	17.060	5948	0.026	38.376	36.416	40.335	7793	0.026	43.480	41.271	45.689
성별																				
남자	142	0.104	1.325	1.054	1.596	1100	0.050	8.609	7.765	9.453	2857	0.029	19.587	18.488	20.686	3374	0.030	19.999	18.808	21.191
여자	148	0.107	1.186	0.937	1.435	1017	0.057	7.025	6.245	7.805	3091	0.030	18.789	17.671	19.906	4419	0.028	23.480	22.210	24.751
지역																				
도시[동부]	259	0.089	2.308	1.903	2.714	1760	0.053	13.644	12.234	15.054	4706	0.030	32.030	30.124	33.936	5617	0.031	34.170	32.089	36.250
농어촌[읍면부]	31	0.309	0.202	0.080	0.325	357	0.096	1.991	1.617	2.365	1242	0.078	6.345	5.377	7.313	2176	0.052	9.310	8.363	10.258
연령																				
20대 이하	93	0.134	1.043	0.768	1.317	408	0.074	3.995	3.413	4.578	762	0.054	6.700	5.988	7.412	703	0.055	5.732	5.118	6.345
30대	68	0.159	0.534	0.368	0.701	417	0.071	3.141	2.705	3.576	819	0.055	5.918	5.281	6.556	834	0.060	5.582	4.928	6.236
40대	58	0.164	0.402	0.273	0.531	453	0.069	3.189	2.760	3.617	1101	0.046	7.296	6.632	7.961	1237	0.048	7.451	6.747	8.154
50대	41	0.267	0.326	0.155	0.496	392	0.081	2.659	2.234	3.083	1265	0.044	7.987	7.303	8.670	1501	0.039	8.502	7.846	9.159
60대 이상	30	0.225	0.206	0.115	0.297	447	0.077	2.651	2.253	3.050	2001	0.045	10.474	9.542	11.406	3518	0.036	16.213	15.076	17.351
학력																				
중졸 이하	13	0.319	0.058	0.022	0.094	174	0.116	0.977	0.756	1.199	1106	0.061	5.296	4.663	5.929	2448	0.042	10.873	9.976	11.771
고졸 이하	107	0.129	0.982	0.733	1.230	787	0.063	5.659	4.957	6.360	2310	0.036	15.278	14.196	16.360	2734	0.036	15.985	14.846	17.124
대졸 이하	151	0.117	1.320	1.018	1.621	1074	0.056	8.470	7.537	9.403	2408	0.037	16.960	15.715	18.205	2485	0.042	15.877	14.581	17.174
대학원졸 이상	19	0.297	0.151	0.063	0.240	82	0.142	0.529	0.381	0.676	124	0.148	0.842	0.597	1.087	126	0.129	0.744	0.556	0.932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1	0.178	0.500	0.326	0.674	273	0.088	2.135	1.765	2.506	428	0.077	3.045	2.588	3.503	448	0.071	2.908	2.501	3.316
사무직	52	0.180	0.548	0.354	0.741	408	0.079	3.267	2.761	3.773	937	0.052	6.829	6.128	7.531	903	0.062	6.218	5.460	6.976
서비스/판매직	60	0.178	0.504	0.328	0.681	459	0.075	3.487	2.973	4.001	1306	0.044	8.740	7.993	9.486	1536	0.048	8.996	8.141	9.851
생산/기술직	21	0.247	0.130	0.067	0.193	180	0.117	1.322	1.020	1.625	502	0.069	3.221	2.787	3.654	647	0.058	3.754	3.326	4.18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	1.000	0.007	0.000	0.022	35	0.222	0.163	0.092	0.234	333	0.129	1.378	1.030	1.727	694	0.087	2.466	2.045	2.887
단순노무직	9	0.386	0.053	0.013	0.094	88	0.138	0.602	0.438	0.766	303	0.081	1.808	1.519	2.096	413	0.073	2.207	1.890	2.523
기타	1	1.000	0.005	0.000	0.015	7	0.488	0.025	0.001	0.049	13	0.667	0.080	0.000	0.185	8	0.565	0.051	0.000	0.107
무직	95	0.135	0.763	0.561	0.966	667	0.059	4.633	4.097	5.169	2126	0.038	13.274	12.275	14.274	3144	0.032	16.881	15.829	17.933

문항 28.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체	1133	0.061	7.283	6.405	8.161	8692	0.019	55.352	53.286	57.418	5368	0.033	32.567	30.473	34.660	955	0.075	4.798	4.094	5.502
성별																				
남자	596	0.064	4.082	3.568	4.597	4189	0.022	28.289	27.086	29.492	2330	0.039	15.243	14.074	16.412	358	0.091	1.906	1.567	2.244
여자	537	0.076	3.201	2.724	3.678	4503	0.023	27.063	25.833	28.292	3038	0.033	17.324	16.208	18.440	597	0.078	2.893	2.447	3.338
지역																				
도시[동부]	910	0.068	6.157	5.330	6.985	6947	0.022	46.910	44.856	48.964	3944	0.039	26.018	24.007	28.029	541	0.098	3.066	2.479	3.653
농어촌[읍면부]	223	0.141	1.126	0.813	1.438	1745	0.064	8.442	7.384	9.500	1424	0.072	6.549	5.628	7.470	414	0.114	1.732	1.345	2.119
연령																				
20대 이하	191	0.100	1.727	1.387	2.066	1173	0.044	10.433	9.542	11.323	530	0.069	4.686	4.053	5.320	72	0.171	0.625	0.415	0.834
30대	191	0.113	1.321	1.028	1.614	1241	0.042	8.597	7.884	9.309	645	0.068	4.872	4.222	5.522	61	0.160	0.385	0.264	0.505
40대	258	0.093	1.563	1.277	1.849	1658	0.039	10.744	9.932	11.556	838	0.057	5.495	4.886	6.104	95	0.162	0.536	0.365	0.707
50대	237	0.098	1.413	1.142	1.684	1756	0.036	10.858	10.097	11.620	1035	0.050	6.361	5.737	6.985	171	0.128	0.841	0.629	1.053
60대 이상	256	0.097	1.260	1.020	1.500	2864	0.038	14.720	13.631	15.809	2320	0.041	11.153	10.262	12.044	556	0.079	2.412	2.039	2.784
학력																				
중졸 이하	84	0.170	0.387	0.258	0.516	1605	0.050	7.742	6.986	8.498	1595	0.051	7.173	6.455	7.892	457	0.085	1.902	1.585	2.220
고졸 이하	399	0.080	2.588	2.182	2.993	3234	0.029	21.034	19.839	22.229	1973	0.044	12.450	11.377	13.523	332	0.104	1.832	1.458	2.205
대졸 이하	585	0.075	3.928	3.353	4.504	3610	0.028	24.938	23.564	26.312	1764	0.054	12.737	11.393	14.081	159	0.136	1.023	0.749	1.296
대학원졸 이상	65	0.159	0.380	0.261	0.499	243	0.107	1.638	1.294	1.981	36	0.212	0.207	0.121	0.292	7	0.503	0.042	0.001	0.083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06	0.101	1.342	1.077	1.606	683	0.063	4.984	4.365	5.603	276	0.098	2.049	1.655	2.442	35	0.242	0.215	0.113	0.317
사무직	181	0.108	1.299	1.023	1.575	1383	0.044	10.097	9.220	10.973	670	0.073	5.003	4.285	5.721	66	0.223	0.463	0.261	0.665
서비스/판매직	227	0.105	1.561	1.241	1.881	1840	0.035	11.909	11.085	12.733	1160	0.056	7.543	6.720	8.367	134	0.120	0.714	0.546	0.883
생산/기술직	94	0.136	0.558	0.410	0.707	762	0.053	4.764	4.267	5.260	423	0.073	2.741	2.347	3.135	71	0.180	0.364	0.235	0.49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4	0.280	0.123	0.055	0.190	446	0.110	1.676	1.316	2.037	439	0.115	1.695	1.313	2.076	144	0.197	0.521	0.320	0.723
단순노무직	43	0.199	0.259	0.158	0.360	412	0.075	2.468	2.102	2.833	288	0.078	1.557	1.319	1.794	70	0.171	0.387	0.257	0.516
기타	3	1.000	0.012	0.000	0.035	26	0.447	0.149	0.018	0.279	0	0
무직	345	0.084	2.131	1.782	2.480	3140	0.031	19.306	18.144	20.469	2112	0.040	11.980	11.047	12.913	435	0.077	2.134	1.812	2.457

문항 31.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 없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체	2833	0.038	17.278	16.004	18.551	9897	0.013	63.226	61.563	64.890	2916	0.045	16.957	15.456	18.458	502	0.097	2.540	2.055	3.025
성별																				
남자	1323	0.044	8.536	7.799	9.274	4644	0.017	31.889	30.824	32.953	1297	0.049	7.979	7.217	8.740	209	0.106	1.116	0.884	1.349
여자	1510	0.042	8.741	8.018	9.464	5253	0.018	31.337	30.229	32.446	1619	0.051	8.978	8.085	9.871	293	0.113	1.424	1.107	1.740
지역																				
도시[동부]	2290	0.042	14.739	13.522	15.957	7633	0.018	52.426	50.588	54.265	2086	0.054	13.189	11.805	14.573	333	0.121	1.797	1.370	2.224
농어촌[읍면부]	543	0.090	2.538	2.090	2.987	2264	0.051	10.800	9.717	11.882	830	0.087	3.767	3.124	4.411	169	0.155	0.743	0.517	0.970
연령																				
20대 이하	425	0.067	3.541	3.077	4.005	1205	0.042	11.214	10.284	12.145	292	0.095	2.421	1.971	2.871	44	0.194	0.293	0.182	0.405
30대	431	0.070	2.969	2.562	3.377	1381	0.041	9.967	9.165	10.768	279	0.089	1.954	1.613	2.296	47	0.189	0.284	0.179	0.390
40대	594	0.064	3.583	3.136	4.029	1774	0.032	11.635	10.905	12.365	423	0.075	2.776	2.369	3.184	58	0.182	0.344	0.221	0.467
50대	589	0.065	3.389	2.957	3.822	1948	0.030	12.269	11.550	12.989	576	0.067	3.402	2.952	3.852	86	0.148	0.413	0.293	0.533
60대 이상	794	0.059	3.795	3.354	4.237	3589	0.032	18.141	16.988	19.293	1346	0.054	6.403	5.726	7.080	267	0.120	1.205	0.921	1.490
학력																				
중졸 이하	458	0.081	1.998	1.679	2.317	2157	0.043	10.153	9.298	11.009	918	0.066	4.079	3.555	4.604	208	0.131	0.974	0.723	1.224
고졸 이하	1011	0.052	6.165	5.531	6.800	3624	0.024	23.954	22.807	25.101	1111	0.057	6.809	6.044	7.574	192	0.122	0.976	0.743	1.209
대졸 이하	1252	0.047	8.401	7.619	9.183	3904	0.025	27.714	26.341	29.087	864	0.068	5.935	5.140	6.731	98	0.143	0.576	0.415	0.737
대학원졸 이상	112	0.135	0.714	0.524	0.903	212	0.108	1.405	1.106	1.703	23	0.248	0.133	0.069	0.198	4	0.517	0.015	0.000	0.029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45	0.084	2.378	1.985	2.770	699	0.060	5.171	4.565	5.777	136	0.137	0.946	0.691	1.200	20	0.322	0.094	0.035	0.154
사무직	414	0.070	2.859	2.467	3.250	1501	0.043	11.190	10.247	12.132	340	0.092	2.531	2.074	2.988	45	0.209	0.283	0.167	0.398
서비스/판매직	540	0.063	3.361	2.947	3.775	2106	0.034	13.949	13.024	14.874	629	0.066	3.980	3.469	4.492	86	0.147	0.437	0.311	0.563
생산/기술직	242	0.093	1.410	1.153	1.667	808	0.052	5.271	4.736	5.806	255	0.087	1.511	1.253	1.770	45	0.205	0.235	0.140	0.3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7	0.176	0.494	0.323	0.665	618	0.091	2.301	1.889	2.713	238	0.146	0.940	0.671	1.208	70	0.205	0.280	0.167	0.393
단순노무직	150	0.123	0.826	0.626	1.026	492	0.065	2.926	2.551	3.301	146	0.110	0.771	0.605	0.937	25	0.255	0.147	0.073	0.220
기타	15	0.647	0.066	0.000	0.149	13	0.439	0.092	0.013	0.171	0	1	1.001	0.003	0.000	0.008
무직	990	0.051	5.885	5.291	6.479	3660	0.027	22.327	21.163	23.491	1172	0.054	6.278	5.613	6.943	210	0.129	1.062	0.793	1.331

문항 37.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1)

	정부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언론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체	8968	0.021	54.748	52.546	56.951	1475	0.049	8.810	7.972	9.648	1569	0.053	9.855	8.824	10.887	2492	0.041	16.052	14.759	17.345
성별																				
남자	4152	0.024	27.119	25.835	28.403	682	0.058	4.361	3.868	4.854	732	0.065	5.002	4.363	5.640	1166	0.046	7.862	7.159	8.566
여자	4816	0.023	27.629	26.371	28.888	793	0.057	4.449	3.951	4.947	837	0.056	4.854	4.317	5.390	1326	0.048	8.190	7.425	8.955
지역																				
도시[동부]	6813	0.025	44.763	42.607	46.919	1119	0.053	7.011	6.284	7.738	1176	0.062	8.069	7.093	9.044	1984	0.047	13.597	12.357	14.837
농어촌[읍면부]	2155	0.055	9.986	8.901	11.071	356	0.128	1.799	1.346	2.252	393	0.111	1.786	1.397	2.176	508	0.098	2.455	1.983	2.927
연령																				
20대 이하	1058	0.046	9.334	8.497	10.170	153	0.122	1.465	1.115	1.815	218	0.094	1.829	1.490	2.168	332	0.072	2.975	2.556	3.393
30대	1189	0.045	8.221	7.501	8.941	185	0.105	1.402	1.112	1.692	203	0.098	1.485	1.199	1.772	336	0.078	2.414	2.043	2.784
40대	1574	0.040	9.985	9.201	10.770	273	0.084	1.697	1.417	1.977	263	0.085	1.685	1.402	1.967	459	0.068	3.039	2.634	3.443
50대	1711	0.038	10.420	9.650	11.189	308	0.071	1.719	1.478	1.959	358	0.079	2.174	1.839	2.508	513	0.066	3.138	2.730	3.545
60대 이상	3436	0.035	16.789	15.629	17.949	556	0.073	2.528	2.167	2.889	527	0.075	2.683	2.287	3.079	852	0.057	4.488	3.989	4.988
학력																				
중졸 이하	2247	0.044	10.226	9.352	11.100	323	0.100	1.320	1.061	1.579	333	0.089	1.681	1.387	1.974	453	0.084	2.247	1.878	2.617
고졸 이하	3186	0.029	20.296	19.127	21.466	573	0.068	3.491	3.022	3.959	662	0.065	4.056	3.538	4.573	922	0.057	6.006	5.339	6.673
대졸 이하	3332	0.031	22.823	21.451	24.195	543	0.062	3.784	3.321	4.247	553	0.072	3.996	3.431	4.561	1062	0.054	7.506	6.718	8.295
대학원졸 이상	203	0.123	1.403	1.065	1.741	36	0.215	0.216	0.125	0.307	21	0.273	0.123	0.057	0.189	55	0.176	0.293	0.192	0.395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73	0.065	4.889	4.269	5.509	99	0.139	0.719	0.523	0.916	108	0.130	0.810	0.603	1.016	203	0.102	1.350	1.080	1.619
사무직	1201	0.047	8.575	7.788	9.362	196	0.096	1.470	1.192	1.748	246	0.092	1.744	1.429	2.058	404	0.078	3.083	2.612	3.554
서비스/판매직	1806	0.038	11.491	10.642	12.340	335	0.082	2.103	1.766	2.441	378	0.078	2.425	2.053	2.797	534	0.072	3.570	3.068	4.071
생산/기술직	725	0.055	4.579	4.088	5.070	125	0.119	0.809	0.619	0.998	138	0.128	0.869	0.651	1.088	243	0.085	1.459	1.216	1.70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39	0.092	2.414	1.979	2.848	99	0.200	0.384	0.234	0.535	88	0.193	0.315	0.195	0.435	124	0.172	0.474	0.314	0.634
단순노무직	478	0.070	2.786	2.404	3.169	83	0.139	0.400	0.291	0.508	80	0.141	0.435	0.314	0.556	84	0.149	0.517	0.366	0.668
기타	11	0.564	0.058	0.000	0.122	4	0.710	0.019	0.000	0.045	3	0.790	0.011	0.000	0.028	6	0.631	0.049	0.000	0.109
무직	3435	0.030	19.957	18.800	21.114	534	0.066	2.907	2.533	3.281	528	0.074	3.247	2.773	3.720	894	0.054	5.551	4.963	6.139

[문37]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2)

	교육기관					국제기구					기타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전체	1506	0.045	9.511	8.666	10.357	127	0.192	0.920	0.573	1.267	11	0.465	0.103	0.009	0.197
성별															
남자	668	0.058	4.632	4.106	5.158	66	0.189	0.495	0.311	0.678	7	0.460	0.049	0.005	0.093
여자	838	0.052	4.880	4.378	5.381	61	0.239	0.425	0.226	0.624	4	0.779	0.054	0.000	0.137
지역															
도시[동부]	1135	0.051	7.785	7.008	8.562	108	0.208	0.841	0.497	1.184	7	0.542	0.086	0.000	0.178
농어촌[읍면부]	371	0.116	1.726	1.335	2.118	19	0.346	0.079	0.026	0.133	4	0.613	0.017	0.000	0.037
연령															
20대 이하	188	0.103	1.707	1.361	2.053	15	0.286	0.137	0.060	0.213	2	0.817	0.024	0.000	0.062
30대	195	0.092	1.427	1.169	1.686	26	0.325	0.203	0.074	0.333	4	0.501	0.023	0.000	0.045
40대	258	0.084	1.782	1.488	2.076	22	0.264	0.150	0.072	0.228	0
50대	287	0.082	1.827	1.534	2.120	19	0.305	0.187	0.075	0.298	3	0.583	0.011	0.000	0.023
60대 이상	578	0.064	2.768	2.419	3.116	45	0.280	0.243	0.110	0.377	2	0.911	0.046	0.000	0.127
학력															
중졸 이하	351	0.083	1.574	1.318	1.830	34	0.368	0.157	0.044	0.271	0
고졸 이하	553	0.065	3.701	3.226	4.175	37	0.252	0.319	0.161	0.476	5	0.573	0.036	0.000	0.077
대졸 이하	570	0.064	4.024	3.515	4.533	55	0.227	0.442	0.245	0.638	3	0.811	0.052	0.000	0.134
대학원졸 이상	32	0.201	0.213	0.129	0.297	1	1.000	0.002	0.000	0.007	3	0.596	0.015	0.000	0.033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5	0.126	0.736	0.554	0.918	10	0.371	0.076	0.021	0.131	2	0.743	0.010	0.000	0.025
사무직	227	0.093	1.785	1.458	2.112	25	0.327	0.200	0.072	0.329	1	1.001	0.005	0.000	0.015
서비스/판매직	274	0.079	1.840	1.554	2.125	31	0.232	0.272	0.148	0.395	3	0.760	0.027	0.000	0.067
생산/기술직	107	0.122	0.640	0.487	0.792	11	0.351	0.065	0.020	0.110	1	1.000	0.006	0.000	0.01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7	0.152	0.408	0.286	0.529	6	0.617	0.020	0.000	0.045	0
단순노무직	85	0.138	0.515	0.376	0.653	2	0.801	0.013	0.000	0.033	1	1.001	0.004	0.000	0.013
기타	5	0.650	0.024	0.000	0.055	0	0
무직	596	0.061	3.565	3.136	3.994	42	0.314	0.274	0.105	0.442	3	0.821	0.051	0.000	0.133

부록

2

통계 결과표

차 례

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1
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2
3.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3
4-1.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본인	4
4-2.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사회적 약자/소수자	5
4-3.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우리 사회 전반	6
5-1.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여성	7
5-2.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아동·청소년	8
5-3.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노인	9
5-4.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장애인	10
5-5.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이주민	11
6-1.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12
6-2.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다른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 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13
6-3.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14
7-1.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5
7-2.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16
7-3.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17
7-4.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18
7-5.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인권을 존중해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19
8-a. 인권의 사회적 효용 (1순위)	20
8-b. 인권의 사회적 효용 (1순위+2순위)	21
9-1. 인권의 존중 정도-신체의 자유	22
9-2. 인권의 존중 정도-사상·양심의 자유	23
9-3. 인권의 존중 정도-종교의 자유	24
9-4. 인권의 존중 정도-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25
9-5. 인권의 존중 정도-집회·결사의 자유	26
9-6. 인권의 존중 정도-신속·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27
9-7. 인권의 존중 정도-공공행정·정책에 참여할 권리	28
9-8. 인권의 존중 정도-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29

9-9. 인권의 존중 정도-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30
9-10. 인권의 존중 정도-주거권	31
9-11. 인권의 존중 정도-사회보장권	32
9-12. 인권의 존중 정도-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33
9-13. 인권의 존중 정도-노동권	34
9-14. 인권의 존중 정도-건강권	35
9-15. 인권의 존중 정도-교육권	36
9-16. 인권의 존중 정도-안전권	37
9-17. 인권의 존중 정도-환경권	38
9-18. 인권의 존중 정도-문화권	39
10-a. 인권 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1순위)	40
10-b. 인권 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1순위+2순위)	41
11-a. 인권 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순위)	42
11-b. 인권 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순위+2순위)	43
12.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44
13.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선택)	45
14. 인권 침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선택)	46
15.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불이익 (해당사항 모두 선택)	47
16. 우리나라의 차별 정도에 대한 평가	48
17.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1)	49
17.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2)	50
17.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3)	51
18-1. 차별 경험의 유형(1) 성별 (해당사항 모두 선택)	52
18-1. 차별 경험의 유형(2) 임신/출산 (해당사항 모두 선택)	53
18-1. 차별 경험의 유형(3) 종교 (해당사항 모두 선택)	54
18-1. 차별 경험의 유형(4) 사상·정치적 입장 (해당사항 모두 선택)	55
18-1. 차별 경험의 유형(5) 장애 (해당사항 모두 선택)	56
18-1. 차별 경험의 유형(6) 연령 (해당사항 모두 선택)	57
18-1. 차별 경험의 유형(7) 경제 지위 (해당사항 모두 선택)	58
18-1. 차별 경험의 유형(8) 고용 형태 (해당사항 모두 선택)	59
18-1. 차별 경험의 유형(9) 학력/차별 (해당사항 모두 선택)	60
18-1. 차별 경험의 유형(10) 인종, 출신 국가/민족, 피부색 (해당사항 모두 선택)	61
18-1. 차별 경험의 유형(11) 신체조건 (해당사항 모두 선택)	62
18-1. 차별 경험의 유형(12) 혼인상황 (해당사항 모두 선택)	63

18-1. 차별 경험의 유형(13) 가족상황 (해당사항 모두 선택)	64
18-1. 차별 경험의 유형(14) 질병/병력 (해당사항 모두 선택)	65
18-1. 차별 경험의 유형(15) 출신지역 (해당사항 모두 선택)	66
18-1. 차별 경험의 유형(16) 성적지향 (해당사항 모두 선택)	67
19. 차별로 인한 피해·불이익 (해당사항 모두 선택)	68
19-1a.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1순위) (1)	69
19-1a.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1순위) (2)	70
19-1b.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1순위+2순위) (1)	71
19-1b.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1순위+2순위) (2)	72
19-1-1. 인권 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	73
19-2.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해당사항 모두 선택)	74
19-2a.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 (해당사항 모두 선택)	75
19-2b.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의 도움 정도	76
19-3-1.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 (해당사항 모두 선택)	77
19-3-2.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의 도움 정도	78
19-4.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이유	79
20-1. 인권 쟁점-사형제도의 존폐	80
20-1-2. 인권 쟁점-대체형벌의 도입	81
20-2. 인권 쟁점-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82
20-3. 인권 쟁점-국정원의 사이버 감찰	83
20-4. 인권 쟁점-국가보안법의 존폐	84
20-4a. 인권 쟁점-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안보 사안에 형법 등 다른 법률 적용	85
20-5. 인권 쟁점-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정도	86
20-6. 인권 쟁점-한국에서 난민의 인정	87
20-7. 인권 쟁점-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88
20-8. 인권 쟁점-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89
21. 기후변화 위기	90
21-1. 기후변화 위기가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91
22-1.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할 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	92
22-2.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하다	93
22-3.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다	94
22-4.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마이데이터 제공	95

23-1.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96
23-2.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 갖고 의견 제시 등의 참여할 필요 있다	97
23-3.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초중고교 정규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98
24.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	99
24-1-1.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여성	100
24-1-2.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청년	101
24-1-3.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노인	102
24-1-4.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장애인	103
24-1-5.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결혼이주민	104
24-1-6.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이주노동자	105
24-1-7.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북한이탈주민	106
24-1-8.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성소수자	107
25.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정도	108
25-1.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 (해당사항 모두 선택)	109
25-2.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 (해당사항 모두 선택)	110
25-3.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111
26.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심각성 정도	112
27.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113
28.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114
29. 인권 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115
30.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 받은 경험	116
30-1. 인권교육을 주관한 기관 (해당사항 모두 선택)	117
30-2. 인권교육 방식	118
30-3. 인권교육이 인권 이해에 도움이 된 정도	119
31.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	120
32-a.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	121
32-b.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2순위)	122
33-a.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	123
33-b.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2순위)	124
34-1. 지난 1년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125
34-2.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활동	126
34-3.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127

34-4.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128
34-5.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129
34-6.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130
34-7. 지난 1년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131
35-a.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	132
35-b.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2순위)	133
36-1.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134
36-2.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 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	135
37.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136
38. 인권 상황에 대한 코로나 19의 영향	137
39-a.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	138
39-b.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2순위)	139
40-a.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	140
40-b.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2순위)	141

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단위: %, 점)

	거의 매일 접한다	비교적 자주 접한다	가끔씩 접한다	거의 접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2.9	26.0	51.5	19.6	2.1
 성 별 					
남자	3.3	29.3	51.6	15.8	2.2
여자	2.4	22.7	51.5	23.4	2.0
 지 역 					
도 시[동 부]	3.0	27.2	52.1	17.8	2.2
농어촌[읍면부]	2.4	20.3	49.2	28.0	2.0
 연 령 					
20대 이하	3.1	30.0	53.2	13.8	2.2
30대	3.7	31.4	52.4	12.5	2.3
40대	3.1	31.5	52.7	12.6	2.3
50대	3.3	26.8	54.3	15.7	2.2
60대 이상	1.9	16.8	47.6	33.7	1.9
 학 력 					
중졸 이하	1.2	9.6	43.6	45.5	1.7
고졸 이하	2.4	24.5	54.8	18.3	2.1
대졸 이하	3.6	32.5	52.8	11.1	2.3
대학원졸 이상	8.2	51.2	33.1	7.5	2.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6	39.1	43.2	10.1	2.4
사무직	3.0	33.8	53.4	9.7	2.3
서비스/판매직	1.8	27.1	55.6	15.5	2.2
생산/기술직	2.0	25.9	57.1	15.0	2.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	15.0	43.4	40.4	1.8
단순노무직	2.2	17.7	48.7	31.5	1.9
기타	22.9	33.2	43.9	0.0	2.8
무직	2.7	20.7	50.2	26.4	2.0

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점)

	매우 잘 알고 있다	다소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평균 (4점)
전 체	11.8	50.3	29.0	8.9	2.6
 성 별 					
남자	14.7	53.9	25.7	5.7	2.8
여자	9.0	46.7	32.3	12.0	2.5
 지 역 					
도 시[동 부]	12.4	51.7	28.6	7.4	2.7
농어촌[읍면부]	9.3	43.8	30.9	16.0	2.5
 연 령 					
20대 이하	14.6	56.8	24.2	4.4	2.8
30대	14.1	59.2	22.6	4.0	2.8
40대	15.6	56.9	23.3	4.2	2.8
50대	11.4	53.0	30.0	5.6	2.7
60대 이상	6.9	35.8	38.0	19.2	2.3
 학 력 					
중졸 이하	3.1	25.4	42.3	29.2	2.0
고졸 이하	9.7	51.6	31.9	6.8	2.6
대졸 이하	15.7	59.0	22.3	3.0	2.9
대학원졸 이상	40.1	53.6	5.4	0.9	3.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8.6	52.7	16.5	2.2	3.1
사무직	13.6	60.8	22.5	3.1	2.8
서비스/판매직	9.5	54.3	31.1	5.0	2.7
생산/기술직	10.0	53.0	31.6	5.4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6	28.7	38.5	26.2	2.2
단순노무직	8.3	43.0	33.3	15.4	2.4
기타	45.3	54.7	0.0	0.0	3.5
무직	9.7	44.9	31.7	13.7	2.5

3.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많이 좋아지고 있다	조금 좋아지고 있다	비슷하다	조금 나빠지고 있다	많이 나빠지고 있다	평균 (5점)
전 체	3.6	27.6	59.5	7.5	1.8	3.2
성 별						
남자	4.2	28.8	57.3	7.5	2.2	3.3
여자	3.0	26.3	61.7	7.5	1.4	3.2
지 역						
도 시[동 부]	3.8	28.1	58.4	7.9	1.9	3.2
농어촌[읍면부]	2.8	25.2	64.8	5.7	1.4	3.2
연 령						
20대 이하	4.6	29.4	56.8	7.3	1.8	3.3
30대	3.2	30.9	56.6	7.5	1.8	3.3
40대	4.1	29.2	56.0	8.3	2.4	3.2
50대	3.8	26.5	60.0	7.9	1.7	3.2
60대 이상	2.8	24.4	64.5	6.8	1.5	3.2
학 령						
중졸 이하	2.3	19.6	69.4	7.4	1.2	3.1
고졸 이하	3.3	26.6	61.1	7.2	1.8	3.2
대졸 이하	4.3	31.2	55.0	7.5	2.0	3.3
대학원졸 이상	6.0	35.1	43.1	12.0	3.7	3.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6	31.0	46.8	10.9	3.7	3.3
사무직	3.0	33.0	56.5	6.0	1.5	3.3
서비스/판매직	2.6	30.1	58.4	7.3	1.6	3.2
생산/기술직	3.6	25.0	60.8	8.6	1.9	3.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	24.1	66.6	5.8	0.7	3.2
단순노무직	5.3	19.5	66.6	6.6	2.0	3.2
기타	11.3	32.9	45.0	7.7	3.1	3.4
무직	3.4	24.6	62.7	7.5	1.7	3.2

4-1.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본인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9.0	79.4	11.2	0.4	3.0
 성 별 					
남자	9.3	78.9	11.3	0.5	3.0
여자	8.8	79.8	11.1	0.4	3.0
 지 역 					
도 시[동 부]	8.5	79.9	11.2	0.4	3.0
농어촌[읍면부]	11.3	77.0	11.1	0.5	3.0
 연 령 					
20대 이하	10.6	79.0	9.9	0.5	3.0
30대	9.2	78.3	11.7	0.7	3.0
40대	10.3	79.8	9.5	0.3	3.0
50대	9.3	78.0	12.1	0.5	3.0
60대 이상	7.0	80.7	12.0	0.3	2.9
 학 력 					
중졸 이하	6.4	79.8	13.6	0.2	2.9
고졸 이하	8.7	79.0	11.9	0.5	3.0
대졸 이하	10.1	79.7	9.7	0.5	3.0
대학원졸 이상	14.8	77.4	7.9	0.0	3.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8	76.2	11.1	0.9	3.0
사무직	10.6	80.7	8.1	0.6	3.0
서비스/판매직	8.0	79.1	12.5	0.4	2.9
생산/기술직	8.9	79.9	10.9	0.3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2	77.8	11.5	0.5	3.0
단순노무직	8.5	73.8	17.6	0.1	2.9
기타	24.1	75.9	0.0	0.0	3.2
무직	8.1	80.5	11.0	0.3	3.0

4-2.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사회적 약자/소수자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6.2	46.6	43.6	3.6	2.6
 성 별 					
남자	6.5	46.2	43.5	3.8	2.6
여자	6.0	47.0	43.7	3.4	2.6
 지 역 					
도 시[동 부]	6.3	45.6	44.5	3.5	2.5
농어촌[읍면부]	5.6	51.3	39.3	3.9	2.6
 연 령 					
20대 이하	6.0	46.4	43.0	4.6	2.5
30대	7.0	42.2	46.9	3.9	2.5
40대	7.9	43.2	44.6	4.4	2.5
50대	6.3	44.9	45.0	3.8	2.5
60대 이상	4.8	52.3	40.7	2.1	2.6
 학 력 					
중졸 이하	4.1	54.9	38.9	2.0	2.6
고졸 이하	6.7	46.3	43.1	3.9	2.6
대졸 이하	6.7	43.9	45.6	3.9	2.5
대학원졸 이상	5.6	39.5	50.8	4.1	2.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5	39.4	46.4	6.7	2.5
사무직	8.2	46.1	42.1	3.5	2.6
서비스/판매직	6.9	43.5	46.2	3.4	2.5
생산/기술직	7.2	45.4	43.9	3.5	2.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9	56.8	35.6	2.7	2.6
단순노무직	3.9	46.8	44.9	4.4	2.5
기타	5.0	48.1	46.9	0.0	2.6
무직	4.7	49.6	42.7	3.0	2.6

4-3.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우리 사회 전반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4.7	70.0	24.1	1.2	2.8
 성 별 					
남자	4.8	70.1	23.8	1.3	2.8
여자	4.6	69.9	24.4	1.1	2.8
 지 역 					
도 시[동 부]	4.7	69.7	24.4	1.2	2.8
농어촌[읍면부]	4.9	71.4	22.6	1.1	2.8
 연 령 					
20대 이하	5.3	71.0	22.2	1.5	2.8
30대	4.4	69.1	24.8	1.7	2.8
40대	5.4	68.4	24.7	1.4	2.8
50대	4.7	67.6	26.5	1.2	2.8
60대 이상	4.1	72.5	22.8	0.7	2.8
 학 력 					
중졸 이하	4.0	72.7	22.8	0.4	2.8
고졸 이하	5.1	69.3	24.1	1.5	2.8
대졸 이하	4.7	69.4	24.6	1.3	2.8
대학원졸 이상	3.4	71.8	23.9	1.0	2.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4	62.2	30.8	1.7	2.7
사무직	5.7	72.3	20.6	1.4	2.8
서비스/판매직	4.7	68.5	25.5	1.3	2.8
생산/기술직	5.0	68.6	24.5	1.8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6	74.8	20.3	0.3	2.8
단순노무직	4.5	64.3	29.7	1.5	2.7
기타	3.2	84.4	12.4	0.0	2.9
무직	4.1	72.2	22.9	0.9	2.8

5-1.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여성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0.0	74.6	14.9	0.5	2.1
 성 별 					
남자	12.7	75.5	11.4	0.4	2.0
여자	7.3	73.8	18.4	0.6	2.1
 지 역 					
도 시[동 부]	10.0	74.7	14.8	0.5	2.1
농어촌[읍면부]	10.0	74.1	15.4	0.5	2.1
 연 령 					
20대 이하	14.3	70.6	14.6	0.5	2.0
30대	11.3	71.4	16.6	0.7	2.1
40대	9.9	73.3	16.1	0.6	2.1
50대	8.2	75.5	15.7	0.6	2.1
60대 이상	8.0	78.8	12.9	0.3	2.1
 학 력 					
중졸 이하	8.4	78.4	12.7	0.4	2.1
고졸 이하	9.9	74.0	15.5	0.6	2.1
대졸 이하	10.5	74.0	15.0	0.5	2.1
대학원졸 이상	13.8	67.3	18.5	0.4	2.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2.4	66.5	20.6	0.4	2.1
사무직	11.3	75.3	12.9	0.4	2.0
서비스/판매직	8.2	75.9	15.4	0.6	2.1
생산/기술직	12.4	75.2	11.9	0.6	2.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2	76.9	13.4	0.5	2.1
단순노무직	8.8	73.8	17.0	0.4	2.1
기타	29.6	68.2	2.2	0.0	1.7
무직	9.4	75.2	14.8	0.6	2.1

5-2.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아동·청소년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2.1	69.0	18.0	1.0	2.1
 성 별 					
남자	13.2	69.2	16.6	1.0	2.1
여자	10.9	68.8	19.4	0.9	2.1
 지 역 					
도 시[동 부]	12.3	68.0	18.7	1.0	2.1
농어촌[읍면부]	10.8	73.7	14.8	0.7	2.1
 연 령 					
20대 이하	15.6	64.8	18.5	1.1	2.1
30대	13.2	65.3	20.7	0.9	2.1
40대	12.4	65.9	20.3	1.4	2.1
50대	10.3	70.8	17.8	1.0	2.1
60대 이상	10.4	74.1	15.0	0.6	2.1
 학 력 					
중졸 이하	10.8	76.0	12.8	0.5	2.0
고졸 이하	12.2	67.6	19.3	0.9	2.1
대졸 이하	12.4	67.7	18.7	1.1	2.1
대학원졸 이상	13.1	63.3	22.1	1.5	2.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6	63.5	21.3	1.7	2.1
사무직	12.7	68.2	18.2	0.9	2.1
서비스/판매직	11.7	67.0	20.6	0.7	2.1
생산/기술직	13.4	70.6	15.0	0.9	2.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4	74.8	13.8	1.1	2.1
단순노무직	9.6	71.9	17.6	0.8	2.1
기타	28.2	56.7	4.3	10.8	2.0
무직	11.7	70.5	16.8	0.9	2.1

5-3.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노인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8.4	62.6	26.9	2.1	2.2
 성 별 					
남자	8.8	63.2	26.0	2.0	2.2
여자	8.0	62.1	27.8	2.1	2.2
 지 역 					
도 시[동 부]	8.6	61.6	27.5	2.2	2.2
농어촌[읍면부]	7.3	67.2	24.1	1.5	2.2
 연 령 					
20대 이하	9.2	62.3	26.1	2.4	2.2
30대	8.5	60.0	29.4	2.1	2.3
40대	9.5	60.9	27.2	2.4	2.2
50대	7.9	63.2	26.5	2.4	2.2
60대 이상	7.5	64.9	26.2	1.4	2.2
 학 력 					
중졸 이하	7.9	66.1	25.0	1.0	2.2
고졸 이하	8.2	62.5	26.8	2.4	2.2
대졸 이하	8.6	61.6	27.5	2.3	2.2
대학원졸 이상	9.7	56.7	32.2	1.4	2.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0	56.8	31.4	2.8	2.3
사무직	8.3	63.5	26.3	1.9	2.2
서비스/판매직	8.4	60.9	28.4	2.3	2.2
생산/기술직	8.5	64.5	25.2	1.8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3	70.5	19.2	2.1	2.1
단순노무직	7.4	61.6	28.5	2.5	2.3
기타	10.6	49.2	29.4	10.8	2.4
무직	8.4	63.5	26.3	1.8	2.2

5-4.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장애인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6.4	44.1	43.2	6.4	2.5
 성 별 					
남자	6.6	43.7	43.1	6.5	2.5
여자	6.1	44.4	43.2	6.3	2.5
 지 역 					
도 시[동 부]	6.7	43.3	43.4	6.6	2.5
농어촌[읍면부]	4.7	47.6	42.1	5.6	2.5
 연 령 					
20대 이하	6.6	42.0	43.6	7.8	2.5
30대	6.1	39.7	47.2	7.0	2.6
40대	6.4	41.2	44.1	8.2	2.5
50대	7.1	43.0	43.3	6.6	2.5
60대 이상	5.8	50.0	40.2	4.1	2.4
 학 력 					
중졸 이하	5.6	51.5	38.6	4.3	2.4
고졸 이하	6.5	44.1	42.9	6.4	2.5
대졸 이하	6.6	41.3	44.9	7.2	2.5
대학원졸 이상	5.1	38.3	49.4	7.2	2.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6	38.0	47.2	8.2	2.6
사무직	6.9	43.8	43.2	6.1	2.5
서비스/판매직	6.4	40.6	46.5	6.6	2.5
생산/기술직	6.4	42.0	44.4	7.1	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5	55.7	34.8	6.0	2.4
단순노무직	6.2	47.5	39.3	6.9	2.5
기타	17.2	41.8	41.0	0.0	2.2
무직	6.3	46.5	41.4	5.8	2.5

5-5.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이주민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3.2	33.0	54.5	9.3	2.7
 성 별 					
남자	3.1	32.6	54.4	9.9	2.7
여자	3.2	33.5	54.5	8.8	2.7
 지 역 					
도 시[동 부]	3.0	32.3	55.4	9.3	2.7
농어촌[읍면부]	4.1	36.6	50.2	9.1	2.6
 연 령 					
20대 이하	4.1	30.5	54.8	10.6	2.7
30대	3.7	31.1	55.5	9.6	2.7
40대	3.0	31.2	55.7	10.1	2.7
50대	2.9	32.0	54.4	10.7	2.7
60대 이상	2.7	37.4	53.0	6.9	2.6
 학 력 					
중졸 이하	3.1	38.7	50.9	7.3	2.6
고졸 이하	3.4	34.0	54.1	8.6	2.7
대졸 이하	3.1	30.4	55.9	10.6	2.7
대학원졸 이상	2.7	25.1	60.6	11.6	2.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9	26.6	57.3	12.2	2.8
사무직	3.1	32.3	54.8	9.7	2.7
서비스/판매직	3.1	31.0	56.9	8.9	2.7
생산/기술직	3.8	34.1	50.6	11.5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4	40.9	47.0	7.7	2.6
단순노무직	3.4	35.6	52.7	8.3	2.7
기타	12.5	66.1	21.4	0.0	2.1
무직	2.8	34.6	54.2	8.4	2.7

6-1.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단위: %, 점)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35.0	59.5	5.3	0.3	1.7
 성 별 					
남자	34.9	59.3	5.6	0.2	1.7
여자	35.0	59.6	4.9	0.4	1.7
 지 역 					
도 시[동 부]	34.8	59.6	5.3	0.3	1.7
농어촌[읍면부]	36.0	58.6	5.1	0.2	1.7
 연 령 					
20대 이하	38.4	55.6	5.7	0.2	1.7
30대	36.0	58.1	5.5	0.5	1.7
40대	39.3	55.4	5.2	0.1	1.7
50대	33.9	60.5	5.4	0.2	1.7
60대 이상	30.5	64.2	4.9	0.4	1.8
 학 력 					
중졸 이하	29.8	65.0	4.7	0.6	1.8
고졸 이하	32.0	61.9	5.9	0.3	1.7
대졸 이하	38.4	56.2	5.2	0.2	1.7
대학원졸 이상	59.5	37.4	2.2	0.9	1.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2.9	41.9	5.1	0.1	1.5
사무직	33.8	60.1	6.0	0.1	1.7
서비스/판매직	31.0	62.5	6.1	0.3	1.8
생산/기술직	30.9	63.5	5.5	0.1	1.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8.3	56.2	4.8	0.6	1.7
단순노무직	35.5	60.3	3.8	0.4	1.7
기타	57.7	42.3	0.0	0.0	1.4
무직	34.0	60.9	4.6	0.4	1.7

6-2.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단위: % 점)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5.8	65.4	17.4	1.5	2.0
 성 별 					
남자	16.1	64.6	17.7	1.7	2.0
여자	15.5	66.1	17.1	1.3	2.0
 지 역 					
도 시[동 부]	15.7	65.8	17.0	1.5	2.0
농어촌[읍면부]	16.2	63.4	18.9	1.5	2.1
 연 령 					
20대 이하	15.2	61.9	20.5	2.4	2.1
30대	15.5	63.4	19.0	2.0	2.1
40대	18.3	63.9	16.7	1.2	2.0
50대	15.2	67.4	16.5	0.9	2.0
60대 이상	15.1	68.0	15.7	1.2	2.0
 학 력 					
중졸 이하	13.9	68.3	16.0	1.8	2.1
고졸 이하	15.4	65.1	17.9	1.6	2.1
대졸 이하	16.6	64.7	17.5	1.2	2.0
대학원졸 이상	21.5	60.3	16.9	1.3	2.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0	64.6	15.8	1.6	2.0
사무직	17.6	63.2	18.1	1.0	2.0
서비스/판매직	14.9	65.7	17.9	1.5	2.1
생산/기술직	15.8	66.4	16.3	1.5	2.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8.4	59.0	19.9	2.7	2.1
단순노무직	14.6	67.8	16.5	1.1	2.0
기타	35.5	35.2	27.6	1.7	2.0
무직	14.7	66.6	17.1	1.6	2.1

6-3.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단위: % 점)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1.2	60.8	25.6	2.3	2.2
 성 별 					
남자	11.3	60.4	25.9	2.4	2.2
여자	11.1	61.3	25.4	2.2	2.2
 지 역 					
도 시[동 부]	10.8	60.8	26.1	2.3	2.2
농어촌[읍면부]	13.2	60.9	23.5	2.4	2.2
 연 령 					
20대 이하	12.2	60.4	25.1	2.4	2.2
30대	11.1	60.1	26.3	2.5	2.2
40대	12.6	62.1	23.1	2.2	2.1
50대	10.8	62.0	25.6	1.7	2.2
60대 이상	10.2	59.9	27.2	2.7	2.2
 학 력 					
중졸 이하	10.7	57.5	28.4	3.5	2.2
고졸 이하	10.8	60.6	26.2	2.5	2.2
대졸 이하	11.6	62.6	24.1	1.7	2.2
대학원졸 이상	14.5	58.8	23.8	2.8	2.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2.9	62.0	22.7	2.5	2.1
사무직	11.4	63.5	23.5	1.7	2.2
서비스/판매직	10.6	58.2	28.9	2.3	2.2
생산/기술직	10.7	62.0	25.3	2.1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0	56.3	25.4	2.3	2.1
단순노무직	9.7	64.4	23.5	2.4	2.2
기타	25.6	64.4	10.0	0.0	1.8
무직	10.9	60.7	25.7	2.7	2.2

7-1.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3.1	17.1	40.8	39.0	3.2
 성 별 					
남자	3.0	17.0	40.1	39.9	3.2
여자	3.2	17.2	41.4	38.1	3.1
 지 역 					
도 시[동 부]	3.1	16.8	41.1	39.0	3.2
농어촌[읍면부]	3.0	18.7	39.4	38.9	3.1
 연 령 					
20대 이하	2.7	17.3	40.3	39.7	3.2
30대	2.6	15.5	40.0	41.9	3.2
40대	3.5	17.2	38.7	40.7	3.2
50대	3.2	17.2	41.9	37.6	3.1
60대 이상	3.3	17.7	42.1	36.9	3.1
 학 력 					
중졸 이하	3.0	18.2	42.8	35.9	3.1
고졸 이하	3.4	18.5	41.8	36.4	3.1
대졸 이하	3.0	16.0	39.3	41.7	3.2
대학원졸 이상	1.9	7.1	36.1	54.8	3.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7	11.9	35.1	49.3	3.3
사무직	3.1	19.3	40.9	36.8	3.1
서비스/판매직	3.0	17.7	41.3	38.1	3.1
생산/기술직	4.1	18.2	38.3	39.4	3.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9	18.5	38.7	40.8	3.2
단순노무직	3.6	15.3	43.7	37.4	3.1
기타	2.2	16.0	50.1	31.7	3.1
무직	2.9	16.8	42.2	38.0	3.2

7-2.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4.3	56.5	25.9	3.4	2.2
 성 별 					
남자	14.5	56.1	26.0	3.4	2.2
여자	14.0	56.8	25.8	3.4	2.2
 지 역 					
도 시[동 부]	14.3	56.5	25.8	3.3	2.2
농어촌[읍면부]	13.9	56.3	26.3	3.5	2.2
 연 령 					
20대 이하	15.4	55.4	25.5	3.7	2.2
30대	14.6	55.2	26.9	3.3	2.2
40대	17.6	56.4	22.9	3.2	2.1
50대	14.8	56.8	24.9	3.5	2.2
60대 이상	11.0	57.6	28.2	3.2	2.2
 학 력 					
중졸 이하	10.4	57.6	29.2	2.7	2.2
고졸 이하	14.9	56.7	25.1	3.4	2.2
대졸 이하	15.2	56.4	24.9	3.5	2.2
대학원졸 이상	15.3	45.3	33.3	6.1	2.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7.6	47.6	30.5	4.2	2.2
사무직	16.2	58.0	22.5	3.3	2.1
서비스/판매직	14.4	55.9	26.8	2.9	2.2
생산/기술직	14.1	59.2	23.8	2.9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1.0	59.7	25.9	3.4	2.2
단순노무직	13.5	58.5	24.6	3.3	2.2
기타	17.0	62.6	15.1	5.3	2.1
무직	12.9	56.9	26.6	3.6	2.2

7-3.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8.0	59.3	20.6	2.0	2.1
 성 별 					
남자	18.7	58.4	20.8	2.1	2.1
여자	17.3	60.3	20.4	2.0	2.1
 지 역 					
도 시[동 부]	18.2	59.7	20.1	2.0	2.1
농어촌[읍면부]	17.2	57.8	23.0	2.0	2.1
 연 령 					
20대 이하	19.8	53.6	24.1	2.5	2.1
30대	19.0	60.1	18.8	2.1	2.0
40대	21.3	59.0	17.8	1.9	2.0
50대	19.0	59.1	20.2	1.7	2.0
60대 이상	13.7	62.7	21.5	2.0	2.1
 학 력 					
중졸 이하	12.5	62.5	23.3	1.8	2.1
고졸 이하	18.5	58.4	20.8	2.3	2.1
대졸 이하	19.8	59.0	19.3	1.8	2.0
대학원졸 이상	17.9	57.1	21.7	3.3	2.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4.6	51.8	21.4	2.2	2.0
사무직	19.5	59.9	19.2	1.4	2.0
서비스/판매직	17.5	60.0	20.7	1.7	2.1
생산/기술직	17.1	60.2	20.3	2.4	2.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4	63.1	21.9	1.6	2.1
단순노무직	16.7	61.5	19.1	2.7	2.1
기타	28.3	57.6	14.1	0.0	1.9
무직	16.9	59.6	21.2	2.4	2.1

7-4.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8.9	57.0	30.4	3.7	2.3
 성 별 					
남자	9.3	56.4	30.6	3.7	2.3
여자	8.6	57.6	30.1	3.6	2.3
 지 역 					
도 시[동 부]	9.2	57.6	29.5	3.7	2.3
농어촌[읍면부]	7.6	54.4	34.5	3.5	2.3
 연 령 					
20대 이하	8.4	52.8	33.5	5.4	2.4
30대	8.6	53.1	33.6	4.7	2.3
40대	10.3	57.7	28.8	3.1	2.2
50대	9.4	58.6	29.3	2.8	2.3
60대 이상	8.3	60.1	28.5	3.1	2.3
 학 력 					
중졸 이하	8.2	59.1	29.2	3.5	2.3
고졸 이하	9.2	56.9	30.1	3.8	2.3
대졸 이하	9.0	56.5	31.0	3.5	2.3
대학원졸 이상	8.8	53.3	32.3	5.7	2.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4	49.5	34.1	6.0	2.4
사무직	9.4	56.0	31.4	3.2	2.3
서비스/판매직	8.6	58.4	30.2	2.8	2.3
생산/기술직	9.0	57.6	30.0	3.4	2.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2	54.6	35.1	4.2	2.4
단순노무직	11.0	58.1	26.8	4.1	2.2
기타	22.1	65.8	9.0	3.1	1.9
무직	8.6	58.4	29.2	3.9	2.3

7-5.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7.7	61.6	19.3	1.3	2.0
 성 별 					
남자	18.0	61.6	19.0	1.4	2.0
여자	17.5	61.7	19.6	1.2	2.0
 지 역 					
도 시[동 부]	18.0	61.4	19.2	1.4	2.0
농어촌[읍면부]	16.7	62.8	19.6	0.8	2.0
 연 령 					
20대 이하	20.5	58.3	19.7	1.5	2.0
30대	18.7	62.4	17.8	1.2	2.0
40대	19.4	61.9	17.7	1.1	2.0
50대	17.5	62.4	18.6	1.5	2.0
60대 이상	14.7	62.5	21.4	1.4	2.1
 학 력 					
중졸 이하	13.5	63.1	22.0	1.3	2.1
고졸 이하	19.5	59.5	19.6	1.4	2.0
대졸 이하	17.7	62.4	18.5	1.4	2.0
대학원졸 이상	20.4	70.7	8.5	0.4	1.9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2.2	59.2	17.1	1.5	2.0
사무직	16.5	63.0	19.2	1.3	2.1
서비스/판매직	18.6	60.3	20.0	1.1	2.0
생산/기술직	18.7	59.9	19.6	1.8	2.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1	67.3	19.8	0.8	2.1
단순노무직	18.6	62.5	16.4	2.5	2.0
기타	24.2	73.7	2.2	0.0	1.8
무직	16.9	62.0	19.8	1.2	2.1

8-a. 인권의 사회적 효용 (1순위)

(단위: % 점)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전 체	26.3	31.9	29.9	11.8
 성 별 				
남자	28.1	31.1	29.2	11.6
여자	24.6	32.8	30.7	12.0
 지 역 				
도 시[동 부]	26.0	32.1	30.4	11.5
농어촌[읍면부]	27.7	31.3	27.9	13.1
 연 령 				
20대 이하	29.1	28.7	30.7	11.6
30대	25.5	31.5	31.4	11.7
40대	26.0	31.7	30.6	11.8
50대	25.1	34.5	29.1	11.4
60대 이상	26.2	32.6	28.9	12.3
 학 력 				
중졸 이하	25.2	31.3	30.0	13.5
고졸 이하	26.4	32.5	28.6	12.5
대졸 이하	26.4	32.1	30.9	10.6
대학원졸 이상	33.3	25.0	32.6	9.2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8	29.4	30.5	12.4
사무직	25.5	35.0	30.5	8.9
서비스/판매직	23.9	35.3	29.4	11.5
생산/기술직	26.9	31.4	30.4	11.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3	30.4	28.7	12.6
단순노무직	26.1	31.9	29.4	12.6
기타	56.2	20.4	16.9	6.5
무직	27.4	29.4	30.0	13.1

8-b. 인권의 사회적 효용 (1순위+2순위)

(단위: % 점)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전 체	39.8	56.2	63.3	36.0
 성 별 				
남자	41.7	55.8	62.3	35.6
여자	38.0	56.6	64.3	36.4
 지 역 				
도 시[동 부]	39.9	56.4	64.2	35.7
농어촌[읍면부]	39.5	55.4	59.4	37.1
 연 령 				
20대 이하	42.9	53.3	63.8	36.3
30대	39.7	55.0	67.6	33.0
40대	40.0	54.9	64.0	36.7
50대	39.0	56.4	62.6	37.2
60대 이상	38.6	59.3	60.9	36.1
 학 력 				
중졸 이하	37.5	56.5	61.1	38.9
고졸 이하	40.1	57.0	61.3	36.4
대졸 이하	40.1	55.9	65.7	34.7
대학원졸 이상	49.1	49.1	69.1	31.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1.7	54.3	65.1	34.9
사무직	39.0	57.9	66.5	32.7
서비스/판매직	37.8	57.3	62.9	36.7
생산/기술직	39.8	59.7	61.8	33.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9.5	54.1	60.0	36.1
단순노무직	38.0	54.1	63.2	40.4
기타	61.4	59.0	47.8	31.8
무직	41.3	54.9	62.5	37.5

9-1. 인권의 존중 정도-신체의 자유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6.1	74.8	8.9	0.2	3.1
 성 별 					
남자	16.3	74.5	9.1	0.2	3.1
여자	16.0	75.1	8.7	0.2	3.1
 지 역 					
도 시[동 부]	15.8	75.2	8.8	0.2	3.1
농어촌[읍면부]	17.9	72.7	9.2	0.3	3.1
 연 령 					
20대 이하	20.7	70.4	8.7	0.2	3.1
30대	14.9	75.7	9.1	0.3	3.1
40대	16.1	74.5	9.2	0.2	3.1
50대	14.5	76.0	9.3	0.3	3.0
60대 이상	15.2	76.2	8.4	0.1	3.1
 학 력 					
중졸 이하	16.2	75.8	7.6	0.3	3.1
고졸 이하	15.8	74.5	9.4	0.2	3.1
대졸 이하	16.1	74.6	9.1	0.2	3.1
대학원졸 이상	20.8	73.3	6.0	0.0	3.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9.7	69.7	10.3	0.2	3.1
사무직	15.1	75.6	9.2	0.1	3.1
서비스/판매직	14.5	75.5	9.7	0.2	3.0
생산/기술직	15.6	76.2	8.0	0.2	3.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5	74.9	9.1	0.4	3.1
단순노무직	17.1	73.4	9.2	0.2	3.1
기타	36.9	60.0	3.1	0.0	3.3
무직	16.7	75.0	8.0	0.2	3.1

9-2. 인권의 존중 정도-사상·양심의 자유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7.9	67.0	14.4	0.7	3.0
 성 별 					
남자	18.2	66.2	14.8	0.8	3.0
여자	17.6	67.8	14.0	0.6	3.0
 지 역 					
도 시[동 부]	18.1	66.7	14.6	0.6	3.0
농어촌[읍면부]	17.1	68.3	13.6	1.0	3.0
 연 령 					
20대 이하	20.4	64.1	14.5	1.0	3.0
30대	17.1	65.5	16.8	0.6	3.0
40대	18.5	65.8	15.1	0.6	3.0
50대	15.9	69.0	14.2	0.9	3.0
60대 이상	17.9	68.9	12.8	0.4	3.0
 학 력 					
중졸 이하	17.1	71.1	11.3	0.5	3.0
고졸 이하	18.3	66.0	14.9	0.9	3.0
대졸 이하	17.8	66.6	15.0	0.6	3.0
대학원졸 이상	21.7	58.8	18.5	1.0	3.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5	61.7	18.6	1.2	3.0
사무직	17.6	68.0	14.0	0.4	3.0
서비스/판매직	16.2	66.3	16.6	0.9	3.0
생산/기술직	18.4	67.5	14.0	0.2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8.7	67.4	12.6	1.4	3.0
단순노무직	16.3	69.1	13.8	0.8	3.0
기타	47.7	52.3	0.0	0.0	3.5
무직	18.9	67.9	12.7	0.6	3.1

9-3. 인권의 존중 정도-종교의 자유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35.6	55.4	8.2	0.8	3.3
 성 별 					
남자	36.0	55.0	8.1	0.9	3.3
여자	35.3	55.7	8.4	0.6	3.3
 지 역 					
도 시[동 부]	36.0	55.5	7.8	0.7	3.3
농어촌[읍면부]	33.7	54.8	10.3	1.2	3.2
 연 령 					
20대 이하	36.8	53.4	8.9	1.0	3.3
30대	36.6	53.5	8.8	1.1	3.3
40대	34.4	56.2	8.5	0.9	3.2
50대	34.4	56.3	8.5	0.8	3.2
60대 이상	36.0	56.4	7.2	0.4	3.3
 학 력 					
중졸 이하	35.3	57.1	7.2	0.5	3.3
고졸 이하	34.5	56.6	8.1	0.8	3.2
대졸 이하	36.4	53.6	9.0	0.9	3.3
대학원졸 이상	42.8	54.2	3.0	0.0	3.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9.3	53.1	6.8	0.8	3.3
사무직	34.4	54.6	9.9	1.1	3.2
서비스/판매직	33.8	55.6	9.6	1.1	3.2
생산/기술직	33.1	58.7	7.7	0.4	3.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5.6	55.9	8.1	0.3	3.3
단순노무직	35.0	58.8	6.1	0.1	3.3
기타	70.9	29.1	0.0	0.0	3.7
무직	37.0	55.0	7.5	0.6	3.3

9-4. 인권의 존중 정도-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6.4	67.2	15.6	0.8	3.0
 성 별 					
남자	16.8	66.8	15.6	0.9	3.0
여자	16.1	67.6	15.6	0.7	3.0
 지 역 					
도 시[동 부]	16.1	67.3	15.8	0.8	3.0
농어촌[읍면부]	18.1	66.7	14.6	0.6	3.0
 연 령 					
20대 이하	18.7	64.5	15.7	1.2	3.0
30대	18.0	64.2	16.7	1.1	3.0
40대	15.4	66.8	16.9	0.9	3.0
50대	15.3	68.1	16.0	0.6	3.0
60대 이상	15.6	70.1	13.9	0.4	3.0
 학 령 					
중졸 이하	16.8	70.6	11.8	0.8	3.0
고졸 이하	16.0	67.2	15.9	0.8	3.0
대졸 이하	16.5	66.0	16.7	0.7	3.0
대학원졸 이상	16.9	64.0	18.3	0.8	3.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7	63.9	18.6	0.8	3.0
사무직	15.7	66.4	17.4	0.5	3.0
서비스/판매직	16.3	64.6	17.7	1.4	3.0
생산/기술직	16.6	69.0	13.9	0.5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8.4	68.4	13.2	0.0	3.1
단순노무직	16.8	70.3	12.5	0.3	3.0
기타	26.2	70.8	3.1	0.0	3.2
무직	16.4	69.0	13.9	0.7	3.0

9-5. 인권의 존중 정도-집회·결사의 자유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6.5	64.5	18.0	1.0	3.0
 성 별 					
남자	17.1	63.3	18.4	1.1	3.0
여자	15.9	65.6	17.6	0.9	3.0
 지 역 					
도 시[동 부]	16.4	64.0	18.5	1.1	3.0
농어촌[읍면부]	17.0	66.7	15.7	0.7	3.0
 연 령 					
20대 이하	18.4	63.1	17.1	1.3	3.0
30대	17.2	62.1	19.9	0.8	3.0
40대	14.4	65.6	18.8	1.2	2.9
50대	16.3	63.5	19.1	1.2	2.9
60대 이상	16.6	66.4	16.3	0.8	3.0
 학 력 					
중졸 이하	15.7	68.2	15.3	0.7	3.0
고졸 이하	16.7	63.5	18.7	1.1	3.0
대졸 이하	16.7	63.6	18.7	1.0	3.0
대학원졸 이상	15.8	68.8	13.2	2.2	3.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7.6	63.5	17.6	1.3	3.0
사무직	16.1	62.2	20.7	1.0	2.9
서비스/판매직	14.8	63.8	19.8	1.6	2.9
생산/기술직	15.8	64.8	18.7	0.6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9.8	68.3	11.5	0.4	3.1
단순노무직	16.5	66.2	16.4	0.9	3.0
기타	38.1	45.0	16.9	0.0	3.2
무직	17.2	65.5	16.5	0.8	3.0

9-6. 인권의 존중 정도-신속·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0.6	58.6	28.8	2.0	2.8
 성 별 					
남자	10.8	57.9	29.1	2.2	2.8
여자	10.4	59.4	28.4	1.9	2.8
 지 역 					
도 시[동 부]	10.1	58.3	29.5	2.1	2.8
농어촌[읍면부]	13.0	60.0	25.2	1.8	2.8
 연 령 					
20대 이하	12.3	58.6	26.5	2.6	2.8
30대	10.4	57.9	29.8	1.8	2.8
40대	10.2	56.8	30.3	2.8	2.7
50대	9.9	57.3	30.8	2.0	2.8
60대 이상	10.5	61.0	27.2	1.3	2.8
 학 력 					
중졸 이하	10.2	63.0	25.7	1.2	2.8
고졸 이하	10.9	58.2	28.8	2.0	2.8
대졸 이하	10.6	57.8	29.4	2.3	2.8
대학원졸 이상	9.8	48.7	38.0	3.4	2.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4	49.6	36.8	4.1	2.6
사무직	11.7	59.2	27.8	1.4	2.8
서비스/판매직	10.3	57.9	29.7	2.1	2.8
생산/기술직	11.0	58.8	28.2	2.0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0	62.5	23.5	1.0	2.9
단순노무직	11.0	61.1	25.0	2.9	2.8
기타	33.6	49.7	16.7	0.0	3.2
무직	10.1	60.2	28.0	1.8	2.8

9-7. 인권의 존중 정도-공공행정.정책에 참여할 권리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0.6	60.9	26.5	2.0	2.8
 성 별 					
남자	10.8	60.0	27.2	2.1	2.8
여자	10.4	61.8	25.9	1.9	2.8
 지 역 					
도 시[동 부]	10.0	60.7	27.5	1.8	2.8
농어촌[읍면부]	13.1	62.2	22.1	2.7	2.9
 연 령 					
20대 이하	11.8	62.1	24.4	1.7	2.8
30대	10.6	59.6	27.6	2.1	2.8
40대	10.5	59.0	27.7	2.8	2.8
50대	10.6	59.3	28.1	2.0	2.8
60대 이상	9.9	63.1	25.4	1.6	2.8
 학 력 					
중졸 이하	9.9	64.1	24.1	2.0	2.8
고졸 이하	11.3	60.6	26.0	2.1	2.8
대졸 이하	10.3	60.4	27.4	1.9	2.8
대학원졸 이상	8.9	52.2	36.8	2.1	2.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7	55.6	31.6	3.1	2.7
사무직	10.4	61.1	26.8	1.6	2.8
서비스/판매직	10.4	59.8	27.7	2.1	2.8
생산/기술직	11.6	58.8	27.6	2.0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0	63.1	19.6	3.3	2.9
단순노무직	11.8	60.2	25.8	2.2	2.8
기타	26.0	63.3	10.8	0.0	3.2
무직	10.1	63.2	25.1	1.7	2.8

9-8. 인권의 존중 정도-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2.6	63.8	21.7	1.9	2.9
 성 별 					
남자	12.9	63.5	21.5	2.1	2.9
여자	12.4	64.1	21.8	1.7	2.9
 지 역 					
도 시[동 부]	12.3	63.6	22.2	1.9	2.9
농어촌[읍면부]	14.0	64.9	19.2	1.9	2.9
 연 령 					
20대 이하	13.7	61.4	21.7	3.2	2.9
30대	12.1	62.6	22.4	3.0	2.8
40대	11.8	62.3	24.0	1.9	2.8
50대	11.7	63.3	23.5	1.5	2.9
60대 이상	13.3	67.1	18.6	1.0	2.9
 학 력 					
중졸 이하	13.3	68.5	17.1	1.1	2.9
고졸 이하	13.1	63.1	21.6	2.2	2.9
대졸 이하	12.1	62.9	23.1	2.0	2.9
대학원졸 이상	9.8	56.3	30.9	3.0	2.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4	58.3	28.9	2.4	2.8
사무직	13.9	60.9	22.8	2.4	2.9
서비스/판매직	12.2	63.3	22.4	2.0	2.9
생산/기술직	12.7	64.5	21.5	1.4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5	71.3	14.5	0.7	3.0
단순노무직	12.0	67.6	18.6	1.7	2.9
기타	20.4	68.7	10.8	0.0	3.1
무직	12.7	65.2	20.2	1.8	2.9

9-9. 인권의 존중 정도-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9.9	65.7	22.9	1.4	2.8
 성 별 					
남자	10.3	65.1	22.8	1.7	2.8
여자	9.6	66.3	23.0	1.1	2.8
 지 역 					
도 시[동 부]	9.5	65.7	23.3	1.4	2.8
농어촌[읍면부]	11.8	65.9	20.9	1.3	2.9
 연 령 					
20대 이하	11.6	62.8	23.7	1.9	2.8
30대	9.6	62.7	25.5	2.1	2.8
40대	10.1	64.5	24.0	1.5	2.8
50대	8.8	66.1	23.8	1.3	2.8
60대 이상	9.7	69.6	19.8	0.8	2.9
 학 령 					
중졸 이하	10.1	71.5	17.5	0.9	2.9
고졸 이하	9.8	65.9	22.7	1.6	2.8
대졸 이하	10.1	63.6	24.8	1.4	2.8
대학원졸 이상	8.1	58.4	30.5	3.0	2.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1	57.1	30.6	3.2	2.7
사무직	10.3	64.8	23.9	1.0	2.8
서비스/판매직	9.4	65.6	23.5	1.5	2.8
생산/기술직	11.0	66.4	21.2	1.4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1.2	71.0	17.4	0.4	2.9
단순노무직	10.5	68.3	19.6	1.6	2.9
기타	17.3	69.6	11.4	1.7	3.0
무직	9.8	67.3	21.7	1.3	2.9

9-10. 인권의 존중 정도-주거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3.6	72.7	12.9	0.8	3.0
 성 별 					
남자	13.5	72.3	13.2	1.0	3.0
여자	13.7	73.0	12.6	0.7	3.0
 지 역 					
도 시[동 부]	12.6	73.1	13.5	0.9	3.0
농어촌[읍면부]	18.4	70.6	10.3	0.7	3.1
 연 령 					
20대 이하	14.0	70.4	13.7	1.9	3.0
30대	10.9	74.0	14.0	1.1	2.9
40대	13.5	71.8	14.1	0.7	3.0
50대	13.3	71.9	14.3	0.5	3.0
60대 이상	15.0	74.3	10.3	0.4	3.0
 학 력 					
중졸 이하	15.9	73.9	9.9	0.4	3.1
고졸 이하	13.2	73.3	12.5	1.0	3.0
대졸 이하	13.0	72.0	14.2	0.7	3.0
대학원졸 이상	15.2	64.2	18.3	2.3	2.9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5	67.4	15.9	2.2	2.9
사무직	12.8	73.4	13.1	0.6	3.0
서비스/판매직	11.6	73.3	14.4	0.6	3.0
생산/기술직	12.8	75.2	11.7	0.4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0.6	69.0	9.8	0.5	3.1
단순노무직	15.8	70.7	12.6	0.8	3.0
기타	40.2	50.7	6.0	3.1	3.3
무직	13.9	73.4	11.9	0.9	3.0

9-11. 인권의 존중 정도-사회보장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2.1	59.4	26.8	1.7	2.8
 성 별 					
남자	12.0	59.0	27.0	2.0	2.8
여자	12.2	59.8	26.5	1.4	2.8
 지 역 					
도 시[동 부]	11.5	58.8	28.0	1.7	2.8
농어촌[읍면부]	15.0	62.1	21.1	1.9	2.9
 연 령 					
20대 이하	12.4	58.6	26.5	2.5	2.8
30대	11.5	54.6	31.2	2.7	2.7
40대	11.8	57.7	28.9	1.6	2.8
50대	12.0	61.0	25.4	1.6	2.8
60대 이상	12.5	62.3	24.2	1.0	2.9
 학 력 					
중졸 이하	11.8	63.2	23.7	1.3	2.9
고졸 이하	12.5	60.2	25.4	1.9	2.8
대졸 이하	11.8	57.6	28.8	1.7	2.8
대학원졸 이상	13.2	51.0	33.5	2.3	2.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2	52.5	33.6	2.7	2.7
사무직	13.3	59.6	25.5	1.6	2.8
서비스/판매직	12.0	57.9	28.8	1.3	2.8
생산/기술직	13.6	61.6	23.2	1.5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8	63.8	17.2	2.2	3.0
단순노무직	10.2	59.6	27.5	2.7	2.8
기타	22.0	60.4	14.5	3.1	3.0
무직	11.1	60.9	26.3	1.7	2.8

9-12. 인권의 존중 정도-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7.0	65.7	16.5	0.8	3.0
 성 별 					
남자	16.9	65.4	16.7	0.9	3.0
여자	17.2	65.9	16.3	0.6	3.0
 지 역 					
도 시[동 부]	16.4	65.9	16.9	0.8	3.0
농어촌[읍면부]	20.0	64.8	14.7	0.6	3.0
 연 령 					
20대 이하	15.4	66.5	17.0	1.1	3.0
30대	15.6	64.0	19.2	1.3	2.9
40대	16.7	63.7	19.1	0.5	3.0
50대	17.8	65.7	15.9	0.7	3.0
60대 이상	18.5	67.3	13.7	0.5	3.0
 학 력 					
중졸 이하	19.4	66.6	13.7	0.4	3.1
고졸 이하	16.1	66.1	16.7	1.1	3.0
대졸 이하	17.0	64.7	17.6	0.6	3.0
대학원졸 이상	14.7	70.4	14.5	0.5	3.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3	64.0	18.5	1.1	3.0
사무직	16.3	65.6	17.0	1.0	3.0
서비스/판매직	16.3	65.3	17.8	0.6	3.0
생산/기술직	16.3	66.9	16.1	0.7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5.1	62.5	11.5	0.9	3.1
단순노무직	15.6	66.4	17.2	0.8	3.0
기타	25.9	54.4	19.8	0.0	3.1
무직	17.5	66.3	15.6	0.6	3.0

9-13. 인권의 존중 정도-노동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1.3	59.1	28.0	1.6	2.8
 성 별 					
남자	11.3	58.2	28.6	1.9	2.8
여자	11.3	59.9	27.4	1.4	2.8
 지 역 					
도 시[동 부]	10.7	58.9	28.8	1.6	2.8
농어촌[읍면부]	14.1	59.9	24.4	1.6	2.9
 연 령 					
20대 이하	11.3	57.8	28.9	2.0	2.8
30대	11.3	56.2	30.3	2.2	2.8
40대	10.5	58.5	29.1	1.9	2.8
50대	10.5	58.4	29.9	1.2	2.8
60대 이상	12.4	62.1	24.4	1.2	2.9
 학 력 					
중졸 이하	12.6	63.8	22.4	1.1	2.9
고졸 이하	11.0	58.3	28.7	1.9	2.8
대졸 이하	11.0	57.9	29.5	1.6	2.8
대학원졸 이상	11.4	57.1	30.0	1.5	2.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4	50.7	36.0	2.0	2.7
사무직	10.7	61.9	25.8	1.7	2.8
서비스/판매직	11.5	59.3	27.3	1.9	2.8
생산/기술직	12.2	56.0	30.2	1.5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6	61.5	20.7	1.1	2.9
단순노무직	11.1	57.8	29.5	1.6	2.8
기타	27.3	57.1	12.5	3.1	3.1
무직	10.6	60.2	27.7	1.5	2.8

9-14. 인권의 존중 정도-건강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7.5	67.3	14.3	0.9	3.0
 성 별 					
남자	17.5	67.0	14.6	0.9	3.0
여자	17.4	67.6	14.1	0.9	3.0
 지 역 					
도 시[동 부]	16.7	67.7	14.7	0.9	3.0
농어촌[읍면부]	21.1	65.5	12.7	0.8	3.1
 연 령 					
20대 이하	18.9	66.3	14.1	0.8	3.0
30대	16.7	68.2	14.2	0.9	3.0
40대	17.4	66.4	14.8	1.4	3.0
50대	15.8	67.7	15.7	0.8	3.0
60대 이상	18.1	67.8	13.4	0.7	3.0
 학 령 					
중졸 이하	17.8	68.5	13.3	0.5	3.0
고졸 이하	17.7	66.3	15.0	1.1	3.0
대졸 이하	17.2	67.6	14.2	0.9	3.0
대학원졸 이상	15.5	69.2	14.3	1.0	3.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6	64.8	17.1	1.5	3.0
사무직	17.0	69.2	13.1	0.7	3.0
서비스/판매직	16.5	66.5	15.8	1.2	3.0
생산/기술직	16.9	67.4	15.0	0.8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2.8	65.4	11.4	0.4	3.1
단순노무직	17.9	66.5	14.7	0.9	3.0
기타	34.1	60.4	5.5	0.0	3.3
무직	17.9	67.9	13.5	0.7	3.0

9-15. 인권의 존중 정도-교육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22.1	66.7	10.7	0.5	3.1
 성 별 					
남자	22.3	66.2	10.9	0.5	3.1
여자	21.8	67.1	10.6	0.5	3.1
 지 역 					
도 시[동 부]	21.6	67.2	10.6	0.5	3.1
농어촌[읍면부]	24.4	64.1	11.2	0.4	3.1
 연 령 					
20대 이하	24.0	64.4	11.3	0.3	3.1
30대	21.3	66.2	11.7	0.8	3.1
40대	21.2	64.8	13.1	1.0	3.1
50대	21.3	67.1	11.1	0.4	3.1
60대 이상	22.3	69.1	8.2	0.3	3.1
 학 력 					
중졸 이하	22.5	69.3	7.9	0.4	3.1
고졸 이하	21.9	66.3	11.3	0.5	3.1
대졸 이하	22.0	66.0	11.5	0.5	3.1
대학원졸 이상	22.6	67.0	9.5	0.8	3.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2.2	64.8	12.4	0.7	3.1
사무직	21.9	66.2	11.4	0.5	3.1
서비스/판매직	20.6	66.1	12.5	0.8	3.1
생산/기술직	21.6	66.9	11.1	0.4	3.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6.5	64.4	8.7	0.4	3.2
단순노무직	22.0	68.8	8.7	0.5	3.1
기타	40.8	45.7	13.6	0.0	3.3
무직	22.6	67.7	9.3	0.4	3.1

9-16. 인권의 존중 정도-안전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2.9	64.2	21.3	1.5	2.9
 성 별 					
남자	13.1	65.6	19.7	1.7	2.9
여자	12.8	62.9	22.8	1.4	2.9
 지 역 					
도 시[동 부]	12.5	63.8	22.0	1.8	2.9
농어촌[읍면부]	15.0	66.4	18.0	0.6	3.0
 연 령 					
20대 이하	14.2	61.8	22.2	1.8	2.9
30대	13.5	62.3	21.7	2.5	2.9
40대	12.3	63.6	22.6	1.6	2.9
50대	12.5	64.8	21.4	1.2	2.9
60대 이상	12.6	66.7	19.6	1.1	2.9
 학 령 					
중졸 이하	13.6	68.3	17.1	1.0	2.9
고졸 이하	12.6	63.6	21.8	1.9	2.9
대졸 이하	12.7	63.6	22.3	1.4	2.9
대학원졸 이상	17.1	57.1	23.8	2.1	2.9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6	59.3	24.9	2.2	2.8
사무직	13.0	63.8	21.4	1.8	2.9
서비스/판매직	12.7	62.7	23.2	1.3	2.9
생산/기술직	14.0	64.9	19.6	1.6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1	70.4	13.8	0.7	3.0
단순노무직	13.2	65.6	19.9	1.3	2.9
기타	21.5	62.6	15.9	0.0	3.1
무직	12.3	65.6	20.6	1.5	2.9

9-17. 인권의 존중 정도-환경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1.2	64.7	22.9	1.2	2.9
 성 별 					
남자	11.0	64.5	23.3	1.2	2.9
여자	11.4	64.8	22.6	1.2	2.9
 지 역 					
도 시[동 부]	10.7	64.3	23.8	1.2	2.8
농어촌[읍면부]	13.8	66.2	18.7	1.3	2.9
 연 령 					
20대 이하	11.0	66.5	21.2	1.2	2.9
30대	11.3	61.1	26.3	1.3	2.8
40대	11.3	62.4	24.8	1.5	2.8
50대	10.4	64.5	23.9	1.2	2.8
60대 이상	11.8	66.9	20.4	1.0	2.9
 학 령 					
중졸 이하	12.1	68.8	18.1	1.0	2.9
고졸 이하	11.2	64.1	23.4	1.3	2.9
대졸 이하	10.8	63.7	24.4	1.1	2.8
대학원졸 이상	12.1	61.2	24.0	2.6	2.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8	62.3	24.3	2.7	2.8
사무직	10.8	63.3	25.2	0.7	2.8
서비스/판매직	10.7	62.6	25.4	1.2	2.8
생산/기술직	12.0	65.7	21.2	1.1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8	67.8	16.2	1.2	3.0
단순노무직	11.3	67.7	20.1	1.0	2.9
기타	17.5	65.4	17.0	0.0	3.0
무직	11.2	66.1	21.6	1.1	2.9

9-18. 인권의 존중 정도-문화권

(단위: %, 점)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3.8	68.7	16.5	0.9	3.0
 성 별 					
남자	14.0	67.8	17.3	1.0	2.9
여자	13.6	69.7	15.8	0.9	3.0
 지 역 					
도 시[동 부]	13.5	68.7	17.0	0.8	2.9
농어촌[읍면부]	15.2	69.0	14.5	1.3	3.0
 연 령 					
20대 이하	16.1	67.3	15.5	1.0	3.0
30대	13.9	67.5	17.6	1.0	2.9
40대	13.9	67.6	17.4	1.0	2.9
50대	12.9	68.7	17.7	0.7	2.9
60대 이상	12.9	70.9	15.3	0.9	3.0
 학 력 					
중졸 이하	12.2	71.6	15.0	1.2	2.9
고졸 이하	13.8	68.8	16.3	1.1	3.0
대졸 이하	14.3	67.7	17.3	0.7	3.0
대학원졸 이상	16.1	65.8	17.4	0.7	3.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5	64.4	18.5	1.6	2.9
사무직	14.4	67.3	17.7	0.6	3.0
서비스/판매직	12.3	67.7	19.4	0.6	2.9
생산/기술직	14.6	69.7	14.4	1.3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5	71.5	13.0	1.9	3.0
단순노무직	12.4	73.2	13.9	0.5	3.0
기타	23.4	67.4	9.2	0.0	3.1
무직	14.0	70.0	15.1	0.9	3.0

10-a. 인권 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1순위)

(단위: % 점)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주민	학력/학벌	전과자	성소수자	경제적빈곤	병력	비정규직	기타
전 체	5.1	5.1	10.4	18.9	4.9	9.5	7.9	7.3	5.2	18.3	2.5	4.7	0.2
 성 별 													
남자	3.5	4.8	10.1	18.8	4.8	9.6	8.4	7.1	5.3	19.4	2.5	5.5	0.2
여자	6.6	5.3	10.8	19.0	5.0	9.4	7.3	7.6	5.1	17.2	2.6	4.0	0.1
 지 역 													
도 시[동 부]	4.9	5.1	10.1	18.5	5.1	9.4	8.1	7.3	5.4	18.7	2.5	4.8	0.2
농어촌[읍면부]	6.1	5.1	12.0	20.6	4.2	10.3	7.0	7.4	4.1	16.1	2.8	4.3	0.1
 연 령 													
20대 이하	5.0	6.0	7.1	19.9	5.2	9.3	8.1	6.5	6.7	17.7	2.2	6.1	0.3
30대	7.3	5.4	8.5	21.8	5.2	8.4	7.2	4.7	6.4	17.4	2.3	4.9	0.3
40대	5.8	5.5	8.4	19.1	5.5	9.6	7.8	6.9	6.1	18.3	1.9	4.9	0.2
50대	4.7	4.8	9.9	19.0	4.9	10.1	7.6	8.5	5.0	18.2	2.6	4.8	0.0
60대 이상	3.9	4.3	15.0	16.6	4.3	9.8	8.3	8.7	3.2	19.1	3.2	3.7	0.1
 학 력 													
중졸 이하	4.3	3.4	15.3	16.7	3.6	9.2	8.7	9.5	2.5	20.6	3.3	3.0	0.0
고졸 이하	5.6	5.8	10.3	18.4	4.9	8.9	8.5	7.2	5.0	17.6	2.7	4.9	0.2
대졸 이하	5.1	5.2	8.7	20.0	5.5	10.0	7.0	6.6	6.3	18.0	2.0	5.2	0.2
대학원졸 이상	2.6	3.6	9.4	22.4	2.8	13.4	5.6	5.6	7.0	17.3	3.0	7.2	0.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0	4.1	7.5	23.9	5.1	9.0	6.3	4.6	9.0	17.5	2.0	5.3	0.6
사무직	5.3	5.2	9.1	19.1	6.4	10.4	6.8	7.2	6.2	18.0	1.7	4.5	0.1
서비스/판매직	5.7	6.2	9.5	18.4	5.3	9.6	8.2	6.5	5.4	17.4	2.1	5.4	0.2
생산/기술직	3.3	4.2	9.7	18.9	5.0	10.2	10.0	7.8	5.5	17.0	3.2	5.1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7	4.1	10.3	19.9	3.0	11.9	6.5	10.0	4.0	19.6	3.2	3.9	0.0
단순노무직	4.7	4.7	10.2	16.8	3.8	7.3	11.0	8.5	2.8	19.4	3.5	7.0	0.1
기타	6.3	4.3	11.4	19.3	6.3	6.6	13.9	23.5	2.2	3.8	2.4	0.0	0.0
무직	5.2	4.9	12.5	18.0	4.3	9.0	7.8	8.0	4.0	19.2	3.0	4.0	0.1

10-b. 인권 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1순위+2순위)

(단위: %, 점)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주민	학력/학벌	전과자	성소수자	경제적빈곤	병력	비정규직	기타
전 체	7.0	8.4	16.6	33.7	9.5	20.3	16.6	14.4	12.8	38.2	7.7	11.6	0.3
 성 별 													
남자	4.9	7.8	15.7	34.0	8.9	20.6	17.5	14.1	12.7	39.7	7.9	13.0	0.4
여자	9.1	9.0	17.5	33.4	10.2	19.9	15.8	14.7	12.8	36.7	7.5	10.2	0.1
 지 역 													
도 시[동 부]	6.9	8.4	15.9	33.4	10.0	20.1	16.9	14.5	13.4	38.5	7.9	11.6	0.3
농어촌[읍면부]	7.7	8.2	19.7	34.8	7.4	21.0	15.5	14.1	9.9	36.6	6.8	11.6	0.1
 연 령 													
20대 이하	8.0	9.8	13.1	34.4	9.9	19.9	17.4	11.8	15.8	35.2	7.0	14.4	0.8
30대	9.2	9.4	14.7	37.0	10.5	20.7	15.4	10.9	13.8	37.0	7.2	11.6	0.4
40대	7.7	9.4	13.6	34.5	9.7	21.0	16.2	14.1	14.6	37.7	6.6	12.1	0.3
50대	6.8	8.0	15.7	33.4	9.6	20.7	17.2	15.7	12.7	37.5	7.5	12.1	0.2
60대 이상	5.0	6.7	22.1	31.2	8.8	19.5	16.6	17.1	9.4	41.4	9.2	9.3	0.1
 학 력 													
중졸 이하	5.3	6.0	22.7	31.1	7.3	18.4	17.4	17.8	8.4	44.6	9.7	7.4	0.1
고졸 이하	7.5	9.5	16.5	33.1	9.5	19.4	17.9	14.6	12.6	36.7	7.7	11.9	0.3
대졸 이하	7.4	8.5	14.4	35.2	10.7	21.3	15.4	13.1	14.5	37.0	7.0	12.7	0.3
대학원졸 이상	4.8	6.7	13.8	35.1	6.6	29.2	11.4	10.6	17.9	37.3	6.1	18.0	2.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0	7.4	13.5	37.1	9.3	21.5	15.6	11.1	18.0	37.1	5.0	13.1	0.7
사무직	7.4	8.5	15.4	34.8	11.5	21.7	16.7	13.2	14.4	35.9	6.4	11.4	0.1
서비스/판매직	7.5	10.3	14.8	32.5	10.2	20.4	16.3	13.9	13.0	37.4	7.8	12.5	0.2
생산/기술직	4.3	6.7	14.3	33.6	9.6	21.7	18.5	16.6	12.1	37.1	8.8	12.9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4	6.5	17.2	34.7	6.3	23.0	14.9	18.6	8.8	41.4	7.5	9.2	0.0
단순노무직	7.4	8.3	16.4	29.5	6.3	16.0	20.9	14.6	11.3	41.7	10.4	14.6	0.1
기타	6.3	8.8	18.1	25.0	6.3	14.5	23.1	29.8	22.1	34.6	2.4	5.9	3.1
무직	7.2	8.0	19.5	33.6	9.1	19.2	16.2	15.0	11.3	39.5	8.3	10.4	0.4

11-a. 인권 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순위)

(단위: % 점)

	민원 처리	검·경 조사 수사	병원 치료 입원	재판	대중 교통 이용	재화 용역 이용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	군대	보호 시설	교도소	직장	학교	온라인	기타
전 체	9.7	22.4	7.7	6.8	3.2	4.9	2.7	2.1	7.6	13.9	4.2	10.9	1.3	2.6	0.1
성 별															
남자	9.8	23.4	7.4	6.5	2.8	4.5	2.6	1.4	10.5	12.3	4.0	11.0	1.3	2.5	0.0
여자	9.5	21.5	7.9	7.1	3.7	5.2	2.8	2.8	4.8	15.5	4.4	10.8	1.2	2.6	0.1
지 역															
도 시[동 부]	9.2	22.6	7.5	6.8	3.2	4.8	2.6	2.2	7.6	13.7	4.3	11.2	1.3	2.8	0.1
농어촌[읍면부]	11.6	21.8	8.3	7.0	3.3	5.3	2.8	1.5	7.6	14.8	3.7	9.5	1.1	1.6	0.1
연 령															
20대 이하	7.7	19.6	6.0	6.2	3.3	5.1	2.5	2.4	10.7	10.4	3.9	14.7	2.7	4.9	0.0
30대	9.4	19.4	6.9	6.9	3.5	6.7	2.7	2.3	8.1	12.3	2.4	14.4	1.5	3.3	0.1
40대	10.3	24.6	6.9	7.3	3.5	4.1	2.6	1.9	7.7	12.0	3.8	11.5	1.2	2.5	0.0
50대	9.8	24.8	7.0	6.9	2.6	4.6	3.0	2.2	6.9	14.0	4.5	10.3	1.1	2.1	0.1
60대 이상	10.5	22.8	9.9	6.8	3.2	4.5	2.6	1.9	6.0	17.9	5.4	6.7	0.5	1.2	0.0
학 력															
중졸 이하	10.7	21.2	9.9	6.4	3.3	4.9	3.2	1.8	5.6	19.6	5.0	6.8	0.5	1.0	0.0
고졸 이하	9.6	22.6	7.8	7.0	3.3	4.9	2.8	2.2	7.7	12.7	4.7	10.9	1.4	2.2	0.1
대졸 이하	9.3	22.3	6.8	6.9	3.1	5.0	2.4	2.2	8.3	12.8	3.4	12.5	1.5	3.5	0.0
대학원졸 이상	8.0	31.7	5.7	6.7	2.0	2.6	0.8	0.9	8.3	13.1	5.0	10.9	0.2	3.9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1	24.6	6.2	6.9	2.9	4.6	2.4	1.7	10.5	10.1	2.3	12.2	1.1	5.0	0.2
사무직	10.1	20.7	7.7	7.7	3.9	6.0	3.3	2.5	7.7	11.4	3.2	11.7	1.4	2.7	0.0
서비스/판매직	9.6	22.2	8.5	6.2	2.8	4.9	2.1	2.1	6.4	14.3	3.9	12.4	1.5	3.0	0.1
생산/기술직	8.6	23.8	5.8	6.8	3.6	4.6	3.0	1.5	9.3	11.3	5.7	12.7	1.1	2.2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1	22.3	7.5	9.4	3.7	4.6	2.5	1.9	9.3	15.3	4.3	6.6	0.2	0.4	0.0
단순노무직	11.3	23.1	7.3	7.2	2.5	4.2	3.0	1.1	6.7	15.3	5.3	11.1	0.6	1.0	0.0
기타	13.9	19.6	6.8	20.3	0.0	5.6	0.0	0.0	31.5	0.0	0.0	2.2	0.0	0.0	0.0
무직	9.3	22.5	8.0	6.4	3.2	4.6	2.7	2.3	7.1	16.1	4.8	9.3	1.4	2.2	0.1

11-b. 인권 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순위+2순위)

(단위: % 점)

	민원 처리	검·경 조사 수사	병원 치료 입원	재판	대중 교통 이용	재화 유통 이용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	군대	보호 시설	교도소	직장	학교	온라인	기타
전 체	13.9	34.8	13.8	14.6	6.5	10.6	6.2	4.7	16.3	30.4	11.9	21.4	4.2	6.6	0.1
성 별															
남자	14.2	35.8	13.4	14.5	5.7	9.9	6.0	3.7	20.6	28.0	11.7	21.8	4.2	6.8	0.0
여자	13.6	33.9	14.2	14.8	7.3	11.3	6.3	5.8	12.1	32.7	12.2	21.0	4.3	6.4	0.1
지 역															
도 시[동 부]	13.6	35.0	13.7	14.8	6.5	10.6	6.1	5.0	16.1	29.9	12.2	21.7	4.4	7.1	0.1
농어촌[읍면부]	15.0	34.1	14.0	14.1	6.5	10.4	6.3	3.4	17.0	32.4	10.8	19.8	3.7	4.3	0.2
연 령															
20대 이하	10.8	29.8	11.3	12.4	6.9	10.2	6.0	4.4	22.1	23.4	10.0	29.1	8.5	11.3	0.0
30대	14.3	31.8	13.0	14.2	7.5	13.5	6.2	5.6	17.5	23.9	8.1	26.7	5.8	8.8	0.2
40대	15.2	38.9	13.3	15.7	6.1	9.8	5.7	5.3	15.2	28.0	10.5	22.3	3.8	6.9	0.1
50대	13.8	37.9	13.1	15.6	5.7	9.9	6.7	4.7	15.1	31.4	13.2	20.3	3.1	5.4	0.1
60대 이상	14.7	34.8	16.5	14.9	6.6	10.3	6.2	4.2	13.7	38.6	15.1	14.4	1.9	3.2	0.0
학 력															
중졸 이하	14.4	33.1	17.4	12.9	6.2	10.7	6.8	4.0	13.2	41.8	15.0	14.9	2.0	2.6	0.0
고졸 이하	14.4	34.4	13.9	14.5	6.6	11.0	6.6	5.0	16.1	28.9	12.0	21.5	4.5	6.1	0.2
대졸 이하	13.4	35.3	12.4	15.4	6.6	10.4	5.7	4.9	17.5	27.2	10.6	23.9	5.1	8.3	0.1
대학원졸 이상	10.6	46.5	10.9	15.6	4.9	7.0	1.8	3.0	21.4	28.0	12.6	22.5	2.0	12.3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5	40.4	12.1	19.4	6.2	9.3	4.2	3.4	19.2	23.3	8.2	22.7	4.3	10.5	0.3
사무직	14.4	32.5	13.7	15.2	7.7	12.2	7.0	5.8	17.6	25.7	9.3	23.6	4.9	7.4	0.0
서비스/판매직	14.2	35.1	14.1	12.2	6.6	11.3	6.2	5.4	14.7	29.5	11.3	23.8	4.6	7.4	0.1
생산/기술직	12.3	37.6	11.7	14.3	5.8	9.1	6.6	3.4	18.4	28.8	13.9	23.7	3.0	6.2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1	35.4	13.7	16.8	5.9	9.8	5.7	3.8	20.3	33.6	12.7	15.3	2.3	1.1	0.0
단순노무직	16.2	32.4	13.7	16.8	6.0	8.5	6.9	3.6	14.0	33.9	12.0	24.5	3.1	3.8	0.0
기타	19.4	32.4	6.8	28.0	0.0	8.2	0.0	0.0	37.7	3.1	25.2	33.2	2.9	3.1	0.0
무직	13.5	34.1	14.6	14.2	6.3	10.4	6.1	4.7	15.2	34.5	13.9	18.3	4.4	5.8	0.1

12.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7	33.1	62.1	3.1	2.7
성 별					
남자	1.8	33.0	62.1	3.1	2.7
여자	1.6	33.3	62.1	3.1	2.7
지 역					
도 시[동 부]	1.9	34.0	61.2	2.9	2.7
농어촌[읍면부]	0.7	29.1	66.1	4.1	2.7
연 령					
20대 이하	1.5	35.4	60.4	2.8	2.6
30대	1.3	36.9	59.2	2.6	2.6
40대	2.6	35.6	58.6	3.2	2.6
50대	1.6	34.4	61.1	2.9	2.7
60대 이상	1.5	27.6	67.3	3.6	2.7
학 력					
중졸 이하	1.4	24.8	69.5	4.2	2.8
고졸 이하	1.9	34.5	60.2	3.4	2.7
대졸 이하	1.6	34.9	61.1	2.4	2.6
대학원졸 이상	2.2	40.5	55.7	1.6	2.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4	41.8	52.5	2.3	2.5
사무직	1.6	32.5	63.6	2.3	2.7
서비스/판매직	1.7	34.9	60.9	2.6	2.6
생산/기술직	1.2	34.4	59.7	4.7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3	17.7	77.1	4.9	2.9
단순노무직	1.6	34.1	61.2	3.1	2.7
기타	0.0	37.0	61.3	1.7	2.6
무직	1.6	31.6	63.4	3.4	2.7

13.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	종교 선택 활동 제한	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	집회나 시위 제한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법집행 또는 행정절차에 서의 차별적 대우	경험 없음
전 체	2.3	3.2	2.1	2.8	2.3	2.2	1.8	89.7
성 별								
남자	2.2	2.9	2.0	2.9	2.4	2.2	2.0	89.5
여자	2.4	3.4	2.1	2.7	2.2	2.2	1.6	89.8
지 역								
도 시[동 부]	2.4	3.3	2.2	2.9	2.5	2.2	1.8	89.3
농어촌[읍면부]	2.1	2.4	1.7	2.2	1.6	2.0	1.8	91.7
연 령								
20대 이하	2.4	2.9	2.1	2.3	2.6	2.6	2.1	89.5
30대	2.4	3.4	2.2	3.7	2.0	2.4	1.4	88.7
40대	2.4	3.1	1.8	3.2	2.5	2.3	2.3	88.7
50대	2.1	3.1	2.6	2.9	2.8	2.4	1.7	89.3
60대 이상	2.4	3.2	1.8	2.3	1.9	1.6	1.6	91.1
학 력								
중졸 이하	2.3	2.6	1.5	1.5	1.6	1.1	1.2	92.9
고졸 이하	2.4	3.5	2.1	3.0	2.7	2.7	1.9	88.7
대졸 이하	2.3	3.1	2.3	3.2	2.4	2.3	1.9	89.3
대학원졸 이상	1.5	3.0	1.9	0.9	0.5	1.3	3.1	90.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6	3.7	3.8	4.5	3.9	3.3	4.1	82.6
사무직	2.1	3.2	2.5	3.8	2.3	1.8	1.3	89.9
서비스/판매직	2.7	3.7	2.7	3.3	3.2	2.4	2.0	87.8
생산/기술직	1.8	2.0	1.2	2.7	2.3	1.8	1.0	9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	1.6	1.6	1.8	1.2	1.6	0.9	93.5
단순노무직	3.9	2.2	1.2	1.5	1.9	2.2	1.6	90.8
기타	0.0	10.8	0.0	2.4	0.0	1.7	3.1	82.0
무직	2.2	3.2	1.5	2.0	1.7	2.1	1.7	91.3

14. 인권 침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안전 위협 (질병, 자연재해 제외)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일터(직장)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음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 어려움	편의 시설 부족, 거리가 멀어 문화예술시설 이용 못함	신문, 방송, 인터넷에 사생활 공개	없었음
전 체	2.8	2.7	4.8	6.2	3.5	1.2	85.8
 성 별 							
남자	2.7	2.8	4.9	6.0	3.1	1.1	86.0
여자	2.9	2.5	4.7	6.4	3.8	1.2	85.6
 지 역 							
도 시[동 부]	3.0	2.9	5.3	6.8	3.5	1.2	84.8
농어촌[읍면부]	2.0	1.7	2.7	3.1	3.4	0.9	90.6
 연 령 							
20대 이하	2.8	2.2	5.4	6.5	4.5	1.8	84.3
30대	2.4	2.9	7.1	8.1	3.2	1.3	82.7
40대	3.1	3.1	5.7	7.3	4.2	0.8	83.8
50대	3.0	2.9	4.7	6.6	3.5	1.2	85.1
60대 이상	2.7	2.4	2.7	4.1	2.6	0.9	89.9
 학 력 							
중졸 이하	2.2	2.2	2.1	3.5	1.7	0.3	92.2
고졸 이하	3.1	2.8	5.2	5.8	3.6	1.3	85.2
대졸 이하	2.9	2.8	5.6	7.4	3.8	1.4	84.1
대학원졸 이상	2.1	0.5	4.4	10.5	9.5	1.8	79.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5	3.8	8.0	10.1	6.8	1.9	74.9
사무직	2.4	3.4	5.7	6.7	2.8	0.8	86.0
서비스/판매직	2.9	3.3	6.8	7.3	3.6	1.5	83.3
생산/기술직	2.1	1.7	3.8	4.2	2.3	1.2	89.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4	1.2	1.9	2.5	2.2	0.4	94.2
단순노무직	3.0	2.0	7.3	5.9	1.7	0.7	86.0
기타	0.0	0.0	2.2	12.9	7.0	0.0	77.9
무직	3.0	2.1	2.6	5.2	3.6	1.1	88.1

15.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불이익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피해·불이익 없었다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기타
전 체	34.9	8.4	13.8	11.7	48.0	1.0
 성 별 						
남자	37.8	8.8	14.7	10.7	43.5	1.3
여자	32.1	8.0	12.9	12.5	52.4	0.6
 지 역 						
도 시[동 부]	33.0	8.3	14.2	12.4	49.1	1.1
농어촌[읍면부]	47.4	9.0	11.0	6.3	40.6	0.3
 연 령 						
20대 이하	29.7	9.0	11.5	12.3	57.0	0.2
30대	28.4	7.0	13.9	11.9	53.7	2.4
40대	30.6	8.0	14.1	10.9	51.2	1.1
50대	36.8	8.9	14.8	13.4	43.0	1.3
60대 이상	46.6	8.9	14.3	10.1	37.4	0.0
 학 력 						
중졸 이하	45.6	8.5	12.8	9.0	40.4	0.0
고졸 이하	33.8	8.6	15.8	14.8	45.8	0.7
대졸 이하	33.9	8.7	12.8	9.8	50.4	1.3
대학원졸 이상	26.2	1.8	6.7	8.3	66.8	3.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1	6.8	16.4	15.1	52.9	0.0
사무직	37.2	8.7	11.0	10.6	45.9	0.0
서비스/판매직	35.0	10.0	16.4	11.5	44.2	2.4
생산/기술직	36.6	8.1	15.3	13.0	44.8	1.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5.9	4.0	7.8	2.9	25.9	0.0
단순노무직	31.2	1.6	16.4	7.3	58.0	0.0
기타	19.0	0.0	0.0	39.1	41.9	0.0
무직	35.5	9.1	11.7	11.4	50.8	0.9

16. 우리나라의 차별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2.5	35.1	58.5	3.9	2.6
성 별					
남자	2.6	35.5	58.0	3.9	2.6
여자	2.4	34.7	59.0	3.8	2.6
지 역					
도 시[동 부]	2.7	35.9	57.5	3.8	2.6
농어촌[읍면부]	1.4	31.3	63.1	4.1	2.7
연 령					
20대 이하	3.4	38.9	54.1	3.6	2.6
30대	3.5	37.9	55.1	3.5	2.6
40대	3.0	37.7	56.1	3.2	2.6
50대	2.3	37.1	57.0	3.6	2.6
60대 이상	1.3	28.5	65.4	4.8	2.7
학 력					
중졸 이하	1.4	25.5	67.7	5.4	2.8
고졸 이하	3.4	36.1	56.0	4.5	2.6
대졸 이하	2.2	37.5	57.5	2.8	2.6
대학원졸 이상	2.2	46.5	49.5	1.9	2.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7	45.5	46.1	2.7	2.5
사무직	2.3	34.6	59.7	3.4	2.6
서비스/판매직	2.4	37.2	57.3	3.0	2.6
생산/기술직	1.5	35.2	57.2	6.1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5	20.3	72.8	6.4	2.9
단순노무직	2.8	36.4	56.9	3.9	2.6
기타	2.9	36.9	60.2	0.0	2.6
무직	2.3	33.0	60.6	4.1	2.7

17.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1)

(단위: %, 점)

	성별		임신/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입장		장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5.4	94.6	1.0	99.0	0.8	99.2	1.6	98.4	0.9	99.1
 성 별 										
남자	3.1	96.9	0.0	100.0	0.6	99.4	1.4	98.6	1.0	99.0
여자	7.6	92.4	2.0	98.0	1.0	99.0	1.8	98.2	0.8	99.2
 지 역 										
도 시[동 부]	5.9	94.1	1.1	98.9	0.9	99.1	1.8	98.2	0.9	99.1
농어촌[읍면부]	3.0	97.0	0.7	99.3	0.4	99.6	0.8	99.2	0.7	99.3
 연 령 										
20대 이하	10.4	89.6	0.9	99.1	0.8	99.2	2.0	98.0	1.1	98.9
30대	8.3	91.7	3.0	97.0	1.3	98.7	2.4	97.6	1.2	98.8
40대	4.9	95.1	1.3	98.7	0.9	99.1	2.1	97.9	0.9	99.1
50대	4.0	96.0	0.5	99.5	0.8	99.2	2.1	97.9	1.0	99.0
60대 이상	2.1	97.9	0.2	99.8	0.5	99.5	0.4	99.6	0.6	99.4
 학 령 										
중졸 이하	2.0	98.0	0.4	99.6	0.4	99.6	0.4	99.6	0.9	99.1
고졸 이하	5.5	94.5	0.5	99.5	0.7	99.3	1.5	98.5	1.0	99.0
대졸 이하	6.5	93.5	1.6	98.4	1.0	99.0	2.2	97.8	0.7	99.3
대학원졸 이상	8.9	91.1	1.8	98.2	1.6	98.4	2.6	97.4	2.2	97.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6	89.4	1.6	98.4	2.3	97.7	4.1	95.9	1.8	98.2
사무직	6.6	93.4	1.5	98.5	0.7	99.3	1.5	98.5	0.5	99.5
서비스/판매직	5.8	94.2	0.9	99.1	0.7	99.3	1.9	98.1	0.8	99.2
생산/기술직	2.9	97.1	0.0	100.0	0.3	99.7	0.9	99.1	0.7	99.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	98.3	0.3	99.7	0.4	99.6	0.1	99.9	0.3	99.7
단순노무직	5.2	94.8	0.6	99.4	0.6	99.4	1.7	98.3	2.3	97.7
기타	1.7	98.3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무직	4.3	95.7	1.0	99.0	0.7	99.3	1.2	98.8	0.9	99.1

1) 없다는 비해당 포함

(다음에 계속)

17.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2)

(단위: % 점)

	연령		경제 지위		고용 형태		학력/학벌		인종, 출신 국가/민족, 피부색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5.2	94.8	4.0	96.0	3.2	96.8	2.5	97.5	0.6	99.4
성 별										
남자	4.4	95.6	4.3	95.7	3.0	97.0	2.4	97.6	0.6	99.4
여자	6.0	94.0	3.8	96.2	3.4	96.6	2.5	97.5	0.6	99.4
지 역										
도 시[동 부]	5.9	94.1	4.5	95.5	3.6	96.4	2.8	97.2	0.7	99.3
농어촌[읍면부]	2.0	98.0	2.0	98.0	1.4	98.6	0.8	99.2	0.3	99.7
연 령										
20대 이하	7.0	93.0	4.5	95.5	4.2	95.8	4.2	95.8	0.9	99.1
30대	4.3	95.7	5.5	94.5	4.6	95.4	4.3	95.7	1.0	99.0
40대	4.0	96.0	4.8	95.2	3.9	96.1	2.6	97.4	0.7	99.3
50대	3.9	96.1	4.6	95.4	3.5	96.5	1.9	98.1	0.7	99.3
60대 이상	6.1	93.9	2.2	97.8	1.4	98.6	0.8	99.2	0.2	99.8
학 력										
중졸 이하	5.8	94.2	2.1	97.9	1.4	98.6	1.2	98.8	0.4	99.6
고졸 이하	5.5	94.5	4.0	96.0	3.6	96.4	2.9	97.1	0.7	99.3
대졸 이하	4.6	95.4	4.8	95.2	3.5	96.5	2.6	97.4	0.6	99.4
대학원졸 이상	7.6	92.4	5.0	95.0	5.9	94.1	1.9	98.1	1.5	98.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6	93.4	7.1	92.9	5.2	94.8	4.8	95.2	0.9	99.1
사무직	3.3	96.7	4.3	95.7	2.5	97.5	2.0	98.0	0.4	99.6
서비스/판매직	5.9	94.1	4.8	95.2	4.7	95.3	3.3	96.7	0.7	99.3
생산/기술직	2.3	97.7	3.6	96.4	3.4	96.6	1.9	98.1	0.4	99.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	98.5	1.2	98.8	0.4	99.6	0.6	99.4	0.1	99.9
단순노무직	8.8	91.2	8.7	91.3	8.6	91.4	4.4	95.6	1.3	98.7
기타	1.7	98.3	1.7	98.3	0.0	100.0	1.7	98.3	0.0	100.0
무직	6.0	94.0	2.5	97.5	1.8	98.2	1.7	98.3	0.7	99.3

1) 없다는 비해당 포함

(다음에 계속)

17.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3)

(단위: % 점)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병력		출신지역		성적지향/성 정체성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2.0	98.0	1.0	99.0	0.9	99.1	1.0	99.0	1.2	98.8	0.7	99.3
성 별												
남자	1.7	98.3	0.6	99.4	0.6	99.4	1.0	99.0	1.2	98.8	0.8	99.2
여자	2.2	97.8	1.5	98.5	1.2	98.8	1.0	99.0	1.2	98.8	0.7	99.3
지 역												
도 시[동 부]	2.2	97.8	1.2	98.8	0.9	99.1	1.1	98.9	1.3	98.7	0.8	99.2
농어촌[읍면부]	0.7	99.3	0.4	99.6	0.5	99.5	0.5	99.5	0.8	99.2	0.3	99.7
연 령												
20대 이하	3.9	96.1	0.9	99.1	0.7	99.3	1.1	98.9	1.3	98.7	1.5	98.5
30대	3.0	97.0	2.1	97.9	1.4	98.6	0.9	99.1	1.7	98.3	1.4	98.6
40대	1.9	98.1	1.2	98.8	1.2	98.8	1.2	98.8	1.4	98.6	0.4	99.6
50대	1.6	98.4	1.1	98.9	0.9	99.1	1.1	98.9	1.2	98.8	0.7	99.3
60대 이상	0.5	99.5	0.5	99.5	0.4	99.6	0.7	99.3	0.7	99.3	0.2	99.8
학 력												
중졸 이하	0.4	99.6	0.5	99.5	0.4	99.6	0.7	99.3	0.7	99.3	0.3	99.7
고졸 이하	2.1	97.9	0.9	99.1	1.0	99.0	1.1	98.9	0.8	99.2	0.7	99.3
대졸 이하	2.5	97.5	1.3	98.7	0.9	99.1	1.0	99.0	1.6	98.4	0.9	99.1
대학원졸 이상	1.3	98.7	1.4	98.6	1.6	98.4	0.9	99.1	3.0	97.0	1.1	98.9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9	96.1	1.5	98.5	1.4	98.6	1.4	98.6	2.9	97.1	1.3	98.7
사무직	2.0	98.0	1.4	98.6	0.8	99.2	0.8	99.2	1.0	99.0	0.6	99.4
서비스/판매직	2.5	97.5	1.3	98.7	1.3	98.7	1.0	99.0	1.2	98.8	1.0	99.0
생산/기술직	0.3	99.7	0.4	99.6	0.4	99.6	0.5	99.5	0.4	99.6	0.1	99.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5	99.5	0.0	100.0	0.1	99.9	0.1	99.9	0.7	99.3	0.0	100.0
단순노무직	2.3	97.7	1.6	98.4	1.4	98.6	1.8	98.2	1.7	98.3	1.5	98.5
기타	0.0	100.0	0.0	100.0	0.0	100.0	1.7	98.3	6.3	93.7	0.0	100.0
무직	1.7	98.3	0.8	99.2	0.6	99.4	1.1	98.9	1.0	99.0	0.6	99.4

1) 없다는 비해당 포함

18-1. 차별 경험의 유형(1) 성별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3.0	39.6	35.7	10.7
 성 별 				
남자	30.6	40.3	37.9	11.4
여자	33.9	39.4	34.9	10.5
 지 역 				
도 시[동 부]	33.8	40.6	35.2	11.1
농어촌[읍면부]	25.6	31.3	40.6	7.2
 연 령 				
20대 이하	30.3	40.4	39.4	13.9
30대	31.0	50.3	31.7	9.7
40대	29.5	42.3	33.1	6.2
50대	39.8	37.0	32.8	9.3
60대 이상	41.0	15.2	40.7	12.0
 학 력 				
중졸 이하	51.6	7.6	38.0	13.5
고졸 이하	35.5	33.9	36.7	14.8
대졸 이하	29.0	47.9	34.4	7.6
대학원졸 이상	30.1	38.4	40.9	7.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0.3	45.4	40.0	3.9
사무직	30.7	46.3	36.8	9.0
서비스/판매직	33.7	39.1	32.3	13.5
생산/기술직	13.9	55.6	36.1	1.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2.8	23.8	77.2	0.0
단순노무직	26.3	28.2	40.6	7.6
기타	100.0	100.0	100.0	0.0
무직	40.0	31.7	32.4	16.2

18-1. 차별 경험의 유형(2) 임신/출산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8.6	66.5	25.8	7.1
 성 별 				
남자	0.0	0.0	0.0	0.0
여자	8.6	66.5	25.8	7.1
 지 역 				
도 시[동 부]	8.6	66.3	26.0	7.7
농어촌[읍면부]	8.5	68.3	24.8	2.9
 연 령 				
20대 이하	0.0	39.1	58.8	2.1
30대	10.3	69.5	16.9	9.9
40대	10.5	83.5	19.4	5.8
50대	0.0	70.4	29.5	5.8
60대 이상	30.9	36.9	25.1	7.1
 학 력 				
중졸 이하	12.4	50.3	25.3	32.7
고졸 이하	14.0	47.5	38.6	0.0
대졸 이하	6.0	70.9	24.1	7.2
대학원졸 이상	22.4	100.0	0.0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0	71.6	9.8	11.8
사무직	4.1	75.5	16.9	11.8
서비스/판매직	8.0	63.4	31.8	2.9
생산/기술직	0.0	0.0	0.0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56.8	43.2	0.0
단순노무직	0.0	76.1	23.9	0.0
기타	0.0	0.0	0.0	0.0
무직	12.2	59.6	34.2	5.4

18-1. 차별 경험의 유형(3) 종교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1.6	30.6	28.8	26.3
 성 별 				
남자	19.0	39.8	35.2	19.4
여자	38.5	25.6	25.2	30.0
 지 역 				
도 시[동 부]	34.0	31.6	30.2	23.0
농어촌[읍면부]	5.2	20.2	12.5	62.2
 연 령 				
20대 이하	44.8	15.2	30.0	47.8
30대	35.8	32.0	35.7	20.6
40대	14.1	47.9	17.9	28.1
50대	39.2	19.9	17.4	28.0
60대 이상	25.4	34.9	44.0	8.3
 학 력 				
중졸 이하	3.5	28.3	59.6	8.6
고졸 이하	31.1	32.6	21.4	25.4
대졸 이하	38.1	29.0	28.4	30.2
대학원졸 이상	15.1	37.8	31.2	21.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1.3	44.6	30.9	18.5
사무직	33.0	37.8	14.5	41.7
서비스/판매직	15.9	41.3	36.3	18.7
생산/기술직	27.1	42.3	20.9	22.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0.4	0.0	0.0	19.6
단순노무직	16.7	29.0	17.7	36.6
기타	0.0	0.0	0.0	0.0
무직	48.3	9.6	33.5	29.5

18-1. 차별 경험의 유형(4) 사상·정치적 입장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9.6	23.4	21.8	31.8
 성 별 				
남자	31.4	23.0	22.3	40.5
여자	46.1	23.8	21.4	24.9
 지 역 				
도 시[동 부]	39.9	23.8	22.9	31.1
농어촌[읍면부]	37.4	19.5	9.8	38.3
 연 령 				
20대 이하	49.8	13.2	22.3	45.4
30대	42.3	14.8	32.5	31.3
40대	45.4	37.8	9.2	12.5
50대	30.9	27.0	23.6	36.0
60대 이상	14.3	20.8	22.8	42.2
 학 력 				
중졸 이하	16.7	43.2	8.8	48.0
고졸 이하	47.1	26.0	19.0	34.8
대졸 이하	38.9	20.2	25.3	27.3
대학원졸 이상	12.0	26.2	8.5	53.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2	21.2	23.5	38.0
사무직	42.7	16.1	20.8	42.9
서비스/판매직	38.8	30.9	29.6	29.0
생산/기술직	36.3	31.7	22.8	16.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100.0	0.0	0.0
단순노무직	36.0	45.6	18.4	0.0
기타	0.0	0.0	0.0	0.0
무직	53.5	16.6	14.0	31.3

18-1. 차별 경험의 유형(5) 장애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1.9	28.6	33.4	33.9
 성 별 				
남자	39.5	25.9	29.6	38.5
여자	22.2	32.1	38.2	27.9
 지 역 				
도 시[동 부]	34.4	30.4	32.2	32.8
농어촌[읍면부]	17.1	18.4	40.1	40.3
 연 령 				
20대 이하	45.2	23.4	38.1	22.8
30대	31.2	33.4	36.3	33.8
40대	28.8	23.1	28.3	49.7
50대	24.8	35.7	28.3	35.3
60대 이상	28.2	26.9	35.4	29.0
 학 력 				
중졸 이하	16.0	6.9	59.8	44.4
고졸 이하	43.5	25.3	29.0	32.5
대졸 이하	29.7	37.8	31.5	30.2
대학원졸 이상	0.0	64.7	0.0	35.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8	31.8	21.4	36.6
사무직	58.7	42.6	27.6	35.3
서비스/판매직	41.1	31.9	23.6	44.7
생산/기술직	30.8	0.0	45.3	47.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100.0	0.0
단순노무직	25.4	34.5	23.0	27.1
기타	0.0	0.0	0.0	0.0
무직	30.1	25.5	45.1	27.4

18-1. 차별 경험의 유형(6) 연령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17.7	42.1	32.5	17.3
 성 별 				
남자	21.1	39.9	31.0	18.4
여자	15.3	43.7	33.5	16.5
 지 역 				
도 시[동 부]	17.9	42.2	32.2	17.9
농어촌[읍면부]	16.0	41.2	36.8	9.5
 연 령 				
20대 이하	25.8	39.4	32.5	11.9
30대	19.8	50.2	18.1	15.9
40대	19.8	60.8	18.4	13.2
50대	11.7	54.0	31.8	17.4
60대 이상	13.2	28.4	43.7	23.2
 학 력 				
중졸 이하	16.0	21.0	44.9	29.2
고졸 이하	21.5	38.2	32.1	15.5
대졸 이하	15.3	55.9	27.4	12.5
대학원졸 이상	10.4	54.2	22.9	25.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8	61.4	23.5	11.8
사무직	27.4	51.2	22.8	11.2
서비스/판매직	19.4	55.3	24.3	11.9
생산/기술직	19.8	42.2	34.3	10.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4	37.7	56.1	16.8
단순노무직	18.1	44.0	26.5	16.3
기타	0.0	100.0	0.0	0.0
무직	15.9	26.2	42.8	24.6

18-1. 차별 경험의 유형(7) 경제 지위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3.6	40.6	27.1	21.5
 성 별 				
남자	27.4	39.9	25.4	22.9
여자	19.3	41.3	29.0	19.9
 지 역 				
도 시[동 부]	24.8	40.1	26.9	21.8
농어촌[읍면부]	11.3	45.2	29.6	18.6
 연 령 				
20대 이하	26.6	40.4	22.2	18.7
30대	20.1	48.1	35.2	13.3
40대	25.4	46.5	23.3	20.3
50대	22.4	40.0	20.2	27.2
60대 이상	23.6	24.2	37.1	29.2
 학 력 				
중졸 이하	21.1	24.0	39.3	32.6
고졸 이하	26.6	35.8	21.3	24.9
대졸 이하	23.1	46.2	29.1	16.3
대학원졸 이상	0.0	56.2	29.4	34.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9.1	45.1	25.2	11.1
사무직	16.3	51.3	24.5	20.5
서비스/판매직	23.0	39.5	28.0	23.9
생산/기술직	33.0	48.1	12.7	13.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6.0	30.5	57.9	18.8
단순노무직	26.9	42.9	22.8	16.5
기타	0.0	100.0	0.0	0.0
무직	21.6	26.6	34.8	31.8

18-1. 차별 경험의 유형(8) 고용 형태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0.5	65.1	10.9	13.6
 성 별 				
남자	25.0	61.9	8.8	15.6
여자	16.7	67.8	12.7	11.9
 지 역 				
도 시[동 부]	19.7	67.7	9.5	14.0
농어촌[읍면부]	31.1	33.0	27.4	8.5
 연 령 				
20대 이하	22.5	66.7	7.9	12.4
30대	21.4	65.3	11.4	13.4
40대	14.3	70.6	10.3	16.0
50대	17.4	67.3	10.9	15.0
60대 이상	31.4	48.9	16.3	9.8
 학 력 				
중졸 이하	23.2	35.7	14.9	27.8
고졸 이하	26.4	58.3	12.9	12.0
대졸 이하	16.2	73.7	9.4	12.7
대학원졸 이상	4.0	90.4	0.0	14.2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7.7	82.1	3.4	8.9
사무직	12.9	72.1	9.6	13.3
서비스/판매직	20.7	64.0	12.7	13.5
생산/기술직	22.2	66.7	2.2	2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49.2	50.8	0.0
단순노무직	36.5	50.4	12.4	8.2
기타	0.0	0.0	0.0	0.0
무직	17.1	58.9	16.1	16.8

18-1. 차별 경험의 유형(9) 학력/차별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17.8	62.5	18.4	14.3
 성 별 				
남자	21.3	63.6	15.9	15.7
여자	14.5	61.5	20.9	13.0
 지 역 				
도 시[동 부]	18.3	62.9	17.9	14.1
농어촌[읍면부]	10.0	57.2	27.3	18.0
 연 령 				
20대 이하	19.6	58.2	16.7	14.8
30대	21.9	67.6	13.9	5.8
40대	9.7	70.4	17.6	14.9
50대	17.7	66.8	19.3	16.2
60대 이상	17.5	39.9	36.3	31.7
 학 력 				
중졸 이하	11.6	46.3	35.1	25.1
고졸 이하	20.5	55.1	15.1	17.8
대졸 이하	15.9	72.6	19.4	8.5
대학원졸 이상	29.3	70.7	0.0	20.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9.9	81.4	5.5	4.1
사무직	6.5	68.9	30.7	11.2
서비스/판매직	18.7	65.9	14.3	16.9
생산/기술직	15.1	60.5	9.6	23.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9.3	43.4	43.1	18.0
단순노무직	11.8	63.4	17.5	12.5
기타	0.0	100.0	100.0	0.0
무직	24.0	43.2	26.8	17.9

18-1. 차별 경험의 유형(10) 인증, 출신 국가/민족, 피부색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15.2	43.7	26.0	25.0
 성 별 				
남자	18.4	42.7	15.9	31.4
여자	12.0	44.6	35.9	18.8
 지 역 				
도 시[동 부]	16.5	45.9	22.9	25.4
농어촌[읍면부]	0.0	17.6	62.4	20.0
 연 령 				
20대 이하	21.0	28.5	28.3	22.1
30대	12.1	54.6	24.5	20.5
40대	13.5	54.1	19.4	26.2
50대	15.9	33.6	30.9	31.3
60대 이상	6.6	64.5	26.5	26.8
 학 력 				
중졸 이하	0.0	31.3	31.5	37.2
고졸 이하	22.2	30.9	25.4	26.9
대졸 이하	13.1	56.8	25.1	19.8
대학원졸 이상	0.0	71.5	28.5	26.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0	71.1	26.1	13.6
사무직	26.5	87.9	12.8	12.6
서비스/판매직	9.9	25.6	35.6	33.3
생산/기술직	15.6	23.6	20.0	40.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100.0	0.0	0.0
단순노무직	7.0	65.6	11.6	15.8
기타	0.0	0.0	0.0	0.0
무직	21.2	29.7	28.7	27.7

18-1. 차별 경험의 유형(11) 신체조건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3.7	25.6	37.4	20.8
 성 별 				
남자	34.4	20.4	38.9	24.2
여자	33.1	29.7	36.1	18.2
 지 역 				
도 시[동 부]	33.5	25.1	38.7	21.3
농어촌[읍면부]	35.3	33.6	17.1	14.0
 연 령 				
20대 이하	38.4	18.7	44.5	26.3
30대	40.5	27.1	33.0	10.7
40대	21.0	29.5	23.7	31.1
50대	27.7	32.8	44.3	9.6
60대 이상	33.0	28.2	36.0	26.5
 학 력 				
중졸 이하	8.0	5.6	67.3	35.9
고졸 이하	35.2	21.1	41.8	24.6
대졸 이하	35.3	31.3	31.9	15.5
대학원졸 이상	0.0	0.0	32.1	67.9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8.7	26.2	42.0	13.1
사무직	25.9	32.0	43.0	17.0
서비스/판매직	46.4	27.3	30.7	26.4
생산/기술직	18.3	0.0	58.1	23.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1.9	68.1	0.0	0.0
단순노무직	15.7	34.5	28.2	21.6
기타	0.0	0.0	0.0	0.0
무직	33.0	18.3	39.8	22.6

18-1. 차별 경험의 유형(12) 혼인상황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6.3	36.8	25.6	22.3
 성 별 				
남자	12.4	45.9	26.1	26.7
여자	32.0	33.0	25.3	20.5
 지 역 				
도 시[동 부]	27.9	37.7	24.5	21.3
농어촌[읍면부]	7.3	25.2	38.3	35.2
 연 령 				
20대 이하	15.1	45.1	24.6	15.1
30대	25.1	39.6	23.3	20.8
40대	27.8	50.9	27.2	17.5
50대	32.3	9.4	24.4	38.9
60대 이상	30.2	39.1	31.1	16.9
 학 력 				
중졸 이하	42.2	27.3	18.7	28.2
고졸 이하	24.9	30.4	34.0	22.1
대졸 이하	25.1	39.9	22.8	21.2
대학원졸 이상	19.1	80.9	0.0	28.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0	40.4	23.1	25.9
사무직	33.5	29.0	33.1	21.2
서비스/판매직	29.7	44.6	19.4	18.6
생산/기술직	53.0	14.1	19.0	13.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0.0	0.0
단순노무직	0.0	50.8	12.9	36.3
기타	0.0	0.0	0.0	0.0
무직	22.4	32.8	30.6	22.7

18-1. 차별 경험의 유형(13) 가족상황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0.2	35.2	26.0	31.0
 성 별 				
남자	15.7	27.5	21.8	42.5
여자	22.2	38.9	28.0	25.7
 지 역 				
도 시[동 부]	20.7	34.0	26.5	30.7
농어촌[읍면부]	15.4	46.4	22.4	34.5
 연 령 				
20대 이하	27.0	18.0	16.8	40.9
30대	16.7	43.4	36.9	6.3
40대	21.8	47.7	19.4	28.4
50대	23.0	23.5	20.6	52.0
60대 이상	12.3	31.6	36.3	40.7
 학 력 				
중졸 이하	13.8	11.0	42.0	47.1
고졸 이하	17.6	36.5	26.3	30.3
대졸 이하	25.8	39.8	20.3	29.4
대학원졸 이상	0.0	21.3	53.3	25.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7	28.7	31.7	25.8
사무직	23.8	31.7	50.7	22.8
서비스/판매직	21.0	35.5	18.6	37.8
생산/기술직	17.8	64.5	17.7	1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100.0	0.0	0.0
단순노무직	16.2	59.4	0.0	35.2
기타	0.0	0.0	0.0	0.0
무직	16.9	27.5	26.0	33.4

18-1. 차별 경험의 유형(14) 질병/병력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9.3	30.5	21.8	30.3
 성 별 				
남자	32.4	22.5	20.5	39.9
여자	26.5	37.7	22.9	21.7
 지 역 				
도 시[동 부]	30.3	29.6	21.5	29.8
농어촌[읍면부]	18.2	40.0	24.3	35.7
 연 령 				
20대 이하	54.7	23.2	14.4	29.3
30대	23.7	39.9	15.1	27.9
40대	26.6	41.0	17.5	24.9
50대	17.8	19.8	31.7	32.0
60대 이상	24.0	30.2	27.6	36.7
 학 력 				
중졸 이하	18.4	25.1	29.0	50.0
고졸 이하	42.2	27.7	14.0	28.1
대졸 이하	22.1	34.6	26.0	26.2
대학원졸 이상	0.0	28.7	38.1	44.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6	39.8	40.3	12.0
사무직	14.3	32.3	30.5	36.3
서비스/판매직	52.8	15.6	17.7	32.8
생산/기술직	0.0	0.0	48.3	84.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4.0	0.0	26.0	26.0
단순노무직	18.6	47.4	13.5	20.5
기타	0.0	100.0	0.0	0.0
무직	30.1	35.2	14.6	29.1

18-1. 차별 경험의 유형(15) 출신지역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8.1	31.3	16.0	29.2
 성 별 				
남자	31.2	36.9	9.6	27.6
여자	25.0	25.6	22.4	30.9
 지 역 				
도 시[동 부]	29.6	31.0	13.5	30.0
농어촌[읍면부]	17.0	33.2	34.2	23.7
 연 령 				
20대 이하	41.7	36.0	8.2	14.1
30대	35.9	29.1	16.5	23.8
40대	15.7	31.7	13.9	38.7
50대	18.3	32.8	19.9	35.6
60대 이상	30.1	26.6	22.3	33.8
 학 력 				
중졸 이하	13.9	12.7	43.9	45.2
고졸 이하	22.5	34.3	18.5	29.6
대졸 이하	30.5	35.5	10.6	26.3
대학원졸 이상	55.0	6.8	9.1	29.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7.2	15.9	16.8	21.5
사무직	9.2	49.4	16.7	32.0
서비스/판매직	28.3	48.2	5.5	20.9
생산/기술직	12.5	39.4	9.7	50.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3.6	19.4	34.7	36.1
단순노무직	28.4	32.1	3.9	42.5
기타	0.0	0.0	0.0	100.0
무직	24.8	21.1	25.5	31.9

18-1. 차별 경험의 유형(16) 성적지향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신체적/언어적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0.7	33.0	14.7	37.9
 성 별 				
남자	36.5	27.3	11.8	43.3
여자	23.7	39.9	18.2	31.4
 지 역 				
도 시[동 부]	33.0	32.6	13.0	38.9
농어촌[읍면부]	0.0	38.2	37.4	24.4
 연 령 				
20대 이하	63.1	22.7	8.9	22.0
30대	16.2	45.6	11.1	44.2
40대	11.7	47.1	25.9	41.4
50대	13.1	33.0	16.9	53.8
60대 이상	8.1	16.9	32.2	42.8
 학 력 				
중졸 이하	0.0	6.2	32.1	61.7
고졸 이하	45.9	25.3	10.5	29.7
대졸 이하	26.2	38.0	16.2	40.3
대학원졸 이상	0.0	96.4	0.0	39.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7.7	2.1	17.0	43.2
사무직	17.4	77.1	0.0	27.4
서비스/판매직	48.2	31.5	21.4	38.4
생산/기술직	0.0	0.0	100.0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0.0	0.0
단순노무직	0.0	58.4	6.7	34.9
기타	0.0	0.0	0.0	0.0
무직	26.2	22.3	13.8	41.8

19. 차별로 인한 피해·불이익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피해·불이익 없었다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기타
전 체	20.2	2.8	11.1	7.5	69.6	0.5
성 별						
남자	19.6	3.4	12.8	8.8	68.0	0.5
여자	20.6	2.4	9.8	6.5	71.0	0.5
지 역						
도 시[동 부]	20.0	3.1	11.7	7.8	69.2	0.6
농어촌[읍면부]	22.1	0.2	6.0	5.1	73.4	0.0
연 령						
20대 이하	21.1	0.2	8.4	6.4	71.9	0.5
30대	17.1	2.7	15.4	9.9	69.0	0.8
40대	19.1	3.0	13.5	6.5	70.3	0.5
50대	20.2	4.4	11.5	8.5	68.8	0.2
60대 이상	22.8	4.0	7.7	6.6	68.1	0.5
학 력						
중졸 이하	21.8	2.6	6.3	5.2	72.3	0.0
고졸 이하	21.0	3.7	10.8	7.9	68.0	0.5
대졸 이하	19.6	2.1	12.6	7.5	70.2	0.7
대학원졸 이상	12.1	1.9	13.2	10.9	72.1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9	4.3	19.4	11.8	67.6	0.3
사무직	18.5	3.4	12.0	9.8	68.5	1.4
서비스/판매직	20.7	2.8	11.1	6.7	68.6	0.5
생산/기술직	22.7	3.2	9.2	4.8	72.5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2.5	0.0	4.6	1.4	64.9	0.0
단순노무직	24.3	0.6	6.5	3.0	70.0	0.4
기타	0.0	0.0	0.0	0.0	100.0	0.0
무직	20.2	2.5	8.7	6.9	71.4	0.4

19-1a.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1순위) (1)

(단위: %, 점)

	가족 또는 친인척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가족 이외 친인척	기타	직장 상사, 상급자	이웃, 동호회, 동창회 등	학교 선호배, 친구, 동료	학원 강사, 교사, 교수	기타
전 체	2.5	2.5	1.4	2.8	2.7	0.0	20.9	7.7	6.6	1.2	0.0
 성 별 											
남자	1.7	1.7	1.6	2.3	3.2	0.0	20.9	7.2	7.7	1.1	0.0
여자	3.2	3.1	1.2	3.4	2.3	0.0	20.8	8.0	5.7	1.3	0.1
 지 역 											
도 시[동 부]	2.4	2.2	1.4	2.8	2.5	0.0	21.2	7.8	7.0	1.2	0.1
농어촌[읍면부]	3.4	4.3	1.5	3.0	4.1	0.1	18.4	6.9	3.8	1.0	0.0
 연 령 											
20대 이하	0.1	2.7	1.0	3.4	2.0	0.0	21.9	4.6	11.5	1.4	0.1
30대	1.5	2.2	1.8	2.5	3.0	0.0	29.1	6.3	5.3	2.0	0.0
40대	3.2	2.9	1.7	2.2	3.9	0.0	25.8	5.9	6.3	1.0	0.1
50대	4.9	2.5	0.2	3.7	1.8	0.1	20.0	7.6	6.6	0.8	0.0
60대 이상	2.6	2.2	2.0	2.6	2.9	0.0	10.5	12.7	3.7	0.9	0.0
 학 력 											
중졸 이하	4.1	2.4	2.3	2.8	3.9	0.0	10.1	12.7	3.4	0.3	0.0
고졸 이하	2.5	2.5	1.2	2.3	2.4	0.0	19.8	8.4	7.1	1.9	0.1
대졸 이하	2.1	2.5	1.2	3.4	2.7	0.0	25.1	5.9	6.6	0.9	0.0
대학원졸 이상	1.5	2.5	2.2	2.0	1.6	0.0	17.3	3.3	12.9	0.7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6	3.9	1.9	3.6	1.5	0.0	21.9	5.3	9.5	2.1	0.0
사무직	1.5	1.4	0.5	2.8	2.9	0.0	29.6	6.0	7.9	1.6	0.0
서비스/판매직	2.8	2.9	0.8	2.0	2.3	0.0	26.4	4.8	6.2	0.8	0.0
생산/기술직	0.3	1.4	2.7	3.6	3.7	0.0	25.6	7.1	2.2	0.0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9	7.5	0.0	1.3	3.0	0.0	5.8	11.0	2.4	1.3	0.0
단순노무직	1.5	1.8	0.8	2.6	4.3	0.0	34.6	8.8	3.7	0.5	0.0
기타	0.0	0.0	0.0	0.0	0.0	0.0	65.9	0.0	0.0	0.0	0.0
무직	3.0	2.2	2.0	3.2	3.0	0.0	9.3	11.3	6.7	1.3	0.1

(다음에 계속)

19-1a.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1순위) (2)

(단위: % 점)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상황이나 환경	
	공권력 가진 사람	집 또는 방 상가의 소유주	고객 (소비자/ 손님)	서비스 사업자 및 종사자	거래처 사람 (원청, 하청 관계 등)	면접관, 채용관	길에서 만난 행인	온라인 상으로 만난 사람	기타	자연 환경 (미세먼지, 폭염 등)	주변 생활 환경 (소음, 문화 편의시설 부족 등)
전 체	6.0	1.4	4.6	7.9	2.5	3.6	4.3	3.5	0.0	8.4	9.5
성 별											
남자	7.3	0.7	4.4	7.5	3.6	3.3	3.9	3.5	0.0	8.7	9.5
여자	4.8	1.9	4.7	8.3	1.6	3.9	4.7	3.5	0.0	8.1	9.5
지 역											
도 시[동 부]	5.8	1.3	4.6	8.0	2.5	4.0	4.5	3.6	0.0	8.0	9.2
농어촌[읍면부]	7.4	1.5	4.3	7.8	2.8	1.0	3.0	2.6	0.2	11.1	11.7
연 령											
20대 이하	3.3	1.4	5.1	8.2	2.0	4.7	3.4	7.0	0.0	6.5	9.8
30대	4.6	1.1	4.5	6.7	3.3	5.0	4.6	4.0	0.0	5.7	6.7
40대	7.7	1.2	4.3	5.3	1.0	4.3	3.5	3.5	0.1	7.7	8.5
50대	6.2	2.1	4.2	7.9	3.5	2.4	3.3	2.1	0.0	10.4	9.8
60대 이상	7.7	1.0	4.8	10.8	2.8	2.2	6.4	1.2	0.0	10.9	12.0
학 령											
중졸 이하	5.1	0.6	5.5	13.7	1.3	2.0	6.6	0.4	0.0	11.8	10.7
고졸 이하	5.4	1.8	5.7	7.7	2.1	3.3	4.1	3.8	0.0	9.2	8.7
대졸 이하	6.4	1.1	3.6	6.6	3.3	4.5	4.0	4.1	0.0	6.8	9.3
대학원졸 이상	10.4	2.4	1.5	7.0	2.0	1.5	2.5	3.2	0.0	7.1	18.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0	0.6	4.9	3.5	2.8	2.7	3.9	3.8	0.0	7.0	8.5
사무직	5.3	1.4	2.7	8.0	2.0	3.5	3.6	4.7	0.0	6.5	8.0
서비스/판매직	5.8	1.4	8.1	7.1	3.3	4.2	2.7	2.7	0.0	7.5	8.1
생산/기술직	3.5	0.2	6.5	5.0	4.2	4.6	3.7	2.2	0.3	12.2	10.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8	2.7	1.1	9.5	1.2	3.2	3.0	0.0	0.0	16.3	11.9
단순노무직	2.6	0.5	5.5	7.8	3.7	3.4	3.7	1.8	0.0	4.3	8.2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6.4	27.8
무직	5.6	1.9	2.5	10.8	1.7	3.5	6.3	4.1	0.0	10.0	11.4

19-1b.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1순위+2순위) (1)

(단위: %, 점)

	가족 또는 친인척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가족 이외 친인척	기타	직장 상사, 상급자	이웃 동호회, 동창회 등	학교 선호배, 친구, 동료	학원 강사, 교사, 교수	기타
전 체	2.7	3.5	2.3	4.5	4.0	0.0	25.4	13.5	11.5	2.0	0.0
 성 별 											
남자	1.8	2.1	2.4	4.0	4.1	0.0	25.4	12.8	13.1	2.4	0.0
여자	3.6	4.8	2.2	4.9	3.9	0.0	25.5	14.2	10.0	1.6	0.1
 지 역 											
도 시[동 부]	2.6	3.1	2.1	4.5	3.5	0.0	25.7	14.1	12.0	2.1	0.1
농어촌[읍면부]	3.9	6.0	3.4	4.6	7.4	0.1	23.6	9.8	8.2	1.2	0.0
 연 령 											
20대 이하	0.1	3.0	2.0	4.0	3.2	0.0	27.9	9.7	20.5	2.8	0.1
30대	1.9	4.4	2.7	3.9	3.2	0.0	36.4	12.9	10.2	3.3	0.0
40대	3.7	4.3	2.5	4.3	5.0	0.0	30.5	11.9	10.6	1.2	0.1
50대	5.2	3.3	1.6	5.4	2.5	0.1	24.0	14.0	10.7	1.2	0.0
60대 이상	2.8	2.8	2.7	4.8	5.6	0.0	12.3	18.3	6.3	1.5	0.0
 학 력 											
중졸 이하	4.5	2.8	2.7	5.4	6.5	0.0	11.3	18.3	5.7	0.6	0.0
고졸 이하	2.8	3.5	1.6	3.9	3.5	0.0	23.0	13.8	12.7	3.0	0.1
대졸 이하	2.3	3.7	2.7	4.8	3.9	0.0	31.9	12.0	11.9	1.5	0.0
대학원졸 이상	1.5	2.8	2.6	3.6	2.4	0.0	20.6	13.5	13.7	1.2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	5.6	5.8	5.3	2.2	0.0	27.3	13.7	13.1	2.6	0.0
사무직	1.5	3.1	1.1	4.4	3.4	0.0	37.1	10.9	13.0	2.5	0.0
서비스/판매직	3.0	3.1	1.3	3.4	2.9	0.0	30.8	11.0	12.0	1.1	0.0
생산/기술직	0.7	1.4	3.4	4.4	4.2	0.0	31.4	11.6	7.7	3.4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9	9.8	0.0	3.4	11.8	0.0	9.3	12.0	4.0	1.3	0.0
단순노무직	2.1	3.0	1.1	3.0	4.6	0.0	38.5	12.3	9.2	0.9	0.0
기타	0.0	0.0	0.0	0.0	0.0	0.0	65.9	0.0	9.1	0.0	0.0
무직	3.4	3.3	2.4	5.4	5.3	0.0	12.3	17.5	11.4	2.1	0.1

(다음에 계속)

19-1b.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1순위+2순위) (2)

(단위: % 점)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상황이나 환경	
	공권력 을 가진 사람	집 또는 방의 상가의 소유주	고객 (소비자/ 손님)	서비스 사업자 및 종사자	거래처 사람 (원청, 하 청, 관계 등)	면접관, 채용관	길에서 만난 행인	온라인 상으로 만난 사람	기타	자연 환경 (미세먼지, 폭염 등)	주변 생활 환경 (소음, 문화시설 및 부족 등)
전 체	10.1	3.4	9.1	13.9	6.6	7.1	8.1	6.0	0.0	13.6	20.2
성 별											
남자	12.0	3.2	8.3	12.5	9.7	7.7	7.1	5.7	0.1	13.5	20.1
여자	8.5	3.5	9.8	15.1	3.8	6.5	9.0	6.3	0.0	13.7	20.3
지 역											
도 시[동 부]	9.8	3.5	9.3	14.0	6.6	7.6	8.3	6.2	0.0	13.3	19.8
농어촌[읍면부]	12.3	2.6	7.8	13.3	6.6	2.9	6.7	4.6	0.2	15.7	23.0
연 령											
20대 이하	7.2	3.3	9.8	15.0	4.0	10.0	8.0	12.2	0.0	10.3	19.2
30대	8.2	3.6	9.4	14.4	9.6	9.8	8.0	7.5	0.1	10.2	16.5
40대	12.6	3.4	8.3	10.2	7.2	7.3	6.3	6.3	0.1	12.5	18.5
50대	10.1	3.8	8.7	14.0	6.9	5.2	6.4	3.3	0.0	17.0	21.6
60대 이상	12.0	2.7	9.3	15.6	5.6	3.9	11.3	1.8	0.0	17.0	23.9
학 력											
중졸 이하	8.5	1.5	8.7	17.7	4.6	2.6	12.2	0.4	0.0	16.0	22.4
고졸 이하	9.9	3.6	10.9	14.7	6.4	6.7	7.7	5.5	0.0	14.6	18.6
대졸 이하	10.7	3.6	8.1	12.2	7.4	8.3	7.8	8.1	0.0	11.8	19.8
대학원졸 이상	13.0	3.7	3.4	12.5	4.6	11.4	2.5	5.7	0.4	17.0	36.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3	1.6	9.5	7.7	7.8	6.5	7.2	6.3	0.1	13.7	19.1
사무직	10.0	5.9	7.7	14.4	7.4	6.8	7.6	8.6	0.0	11.1	16.8
서비스/판매직	9.8	3.5	14.7	14.7	8.4	7.9	6.2	5.0	0.0	12.7	17.5
생산/기술직	6.9	2.4	8.3	8.2	11.0	5.9	6.2	4.7	0.3	19.1	23.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1	3.8	1.5	11.6	1.2	4.8	6.0	0.0	0.0	17.9	26.4
단순노무직	5.9	1.4	11.5	13.7	11.2	6.4	8.4	1.8	0.0	6.9	13.4
기타	41.3	0.0	0.0	13.5	0.0	0.0	0.0	14.2	0.0	12.7	34.1
무직	9.7	3.2	5.8	16.8	3.0	7.3	10.7	6.7	0.0	15.3	24.3

19-1-1. 인권 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

(단위: % 점)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잘 모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잘 모름
전 체	50.9	25.4	23.7	3.4	9.8	18.2	28.8	17.9	21.8
성 별									
남자	59.6	18.0	22.3	4.2	8.8	16.1	31.6	17.7	21.6
여자	43.1	32.1	24.8	2.8	10.7	20.2	26.3	18.0	22.0
지 역									
도 시[동 부]	51.4	25.1	23.5	3.7	10.0	18.6	28.9	17.3	21.5
농어촌[읍면부]	47.2	27.7	25.1	1.3	8.5	15.4	28.2	22.4	24.3
연 령									
20대 이하	52.4	22.5	25.2	10.7	17.0	15.8	25.2	10.9	20.4
30대	51.3	25.3	23.4	1.4	10.5	24.7	28.9	11.3	23.2
40대	53.1	25.3	21.5	0.9	6.3	19.9	36.4	14.8	21.7
50대	55.7	24.3	20.0	1.3	6.1	16.6	32.1	24.8	19.1
60대 이상	43.3	29.2	27.5	2.6	8.9	14.9	22.6	26.5	24.5
학 령									
중졸 이하	43.5	31.7	24.9	3.8	9.3	14.7	17.8	25.9	28.5
고졸 이하	51.6	25.3	23.1	5.1	10.6	17.0	29.9	17.8	19.6
대졸 이하	52.1	24.5	23.5	1.7	9.4	20.8	30.8	16.1	21.2
대학원졸 이상	54.0	17.3	28.7	6.6	6.3	9.0	28.8	14.0	35.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7.0	26.4	26.6	2.4	7.0	18.9	31.4	15.0	25.4
사무직	59.1	19.4	21.4	1.6	10.0	23.9	34.0	13.9	16.6
서비스/판매직	51.0	26.9	22.1	2.2	11.2	19.3	32.3	16.5	18.7
생산/기술직	65.8	14.1	20.1	1.5	6.7	18.1	40.2	16.3	17.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6.7	27.7	15.6	4.9	4.9	9.3	21.3	36.3	23.3
단순노무직	63.3	18.7	17.9	4.2	8.2	12.1	38.4	16.3	20.8
기타	85.5	14.5	0.0	7.6	6.1	29.5	48.4	0.0	8.5
무직	42.5	30.3	27.2	6.1	10.9	15.6	18.6	22.1	26.8

19-2.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인터넷/SNS에 알림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민간단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아무런 행동하지 않음
전 체	13.7	10.4	4.8	3.6	2.0	73.1
 성 별 						
남자	12.4	8.6	4.9	4.2	1.6	75.2
여자	15.0	11.9	4.8	3.0	2.4	71.2
 지 역 						
도 시[동 부]	14.1	10.3	5.3	3.5	2.1	72.7
농어촌[읍면부]	11.3	11.0	1.3	4.1	1.6	76.2
 연 령 						
20대 이하	11.0	12.8	5.0	3.3	2.1	73.5
30대	15.3	15.1	6.0	2.7	1.3	69.1
40대	15.0	9.8	5.3	4.5	2.5	72.1
50대	15.7	8.8	5.5	4.3	2.6	71.6
60대 이상	12.1	6.5	2.8	3.1	1.6	77.8
 학 력 						
중졸 이하	8.9	5.5	3.1	1.6	0.3	83.2
고졸 이하	14.1	10.5	4.7	3.4	2.5	73.3
대졸 이하	14.2	11.8	5.7	4.1	2.0	70.5
대학원졸 이상	21.5	6.4	1.3	5.3	2.6	67.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1.2	12.7	6.0	4.2	2.9	62.9
사무직	12.5	15.7	7.9	5.0	2.0	68.4
서비스/판매직	12.8	12.4	6.5	3.7	2.5	72.0
생산/기술직	15.7	5.9	3.4	3.5	0.0	78.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2	5.2	0.0	6.2	0.6	81.5
단순노무직	10.7	5.8	3.1	3.4	2.6	81.6
기타	15.5	6.4	0.0	7.1	0.0	77.4
무직	12.6	7.2	2.5	2.3	1.6	77.3

19-2a.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검찰/경찰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 체	23.2	20.8	36.5	24.4	29.7
 성 별 					
남자	27.5	27.6	35.2	19.6	30.5
여자	17.8	12.2	38.3	30.4	28.8
 지 역 					
도 시[동 부]	26.6	21.5	38.1	24.5	27.9
농어촌[읍면부]	2.7	16.1	27.3	24.1	41.1
 연 령 					
20대 이하	42.1	12.4	23.3	11.0	11.1
30대	22.0	44.0	45.6	9.9	13.0
40대	16.1	16.0	44.3	34.0	32.0
50대	20.3	23.7	39.7	12.5	51.0
60대 이상	18.9	15.9	29.6	47.7	30.3
 학 력 					
중졸 이하	7.0	0.0	19.4	67.5	25.6
고졸 이하	19.7	26.6	37.1	32.2	25.7
대졸 이하	28.7	18.5	41.1	15.6	29.8
대학원졸 이상	9.0	23.5	0.0	9.0	67.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9.7	10.2	43.4	23.6	43.4
사무직	35.9	16.7	40.2	23.1	18.3
서비스/판매직	25.3	33.6	46.6	22.9	25.7
생산/기술직	27.9	46.3	16.7	27.4	28.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30.9	17.3	59.5
단순노무직	32.6	0.0	31.8	0.0	35.6
기타	0.0	0.0	0.0	0.0	100.0
무직	10.3	18.5	24.0	35.0	29.6

19-2b.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의 도움 정도

(단위: %, 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않았다	전혀 도움이 않았다	평균 (4점)
전 체	6.3	44.5	39.8	9.4	2.5
 성 별 					
남자	2.4	45.4	41.1	11.1	2.4
여자	11.1	43.3	38.2	7.4	2.6
 지 역 					
도 시[동 부]	7.4	47.4	38.8	6.5	2.6
농어촌[읍면부]	0.0	26.8	45.9	27.3	2.0
 연 령 					
20대 이하	12.6	43.0	37.7	6.8	2.6
30대	4.9	35.3	53.8	6.0	2.4
40대	0.0	44.2	46.1	9.7	2.3
50대	8.3	53.9	32.3	5.4	2.7
60대 이상	7.1	41.2	33.6	18.2	2.4
 학 력 					
중졸 이하	0.0	37.6	27.1	35.3	2.0
고졸 이하	5.6	37.2	40.7	16.4	2.3
대졸 이하	5.4	48.5	43.9	2.1	2.6
대학원졸 이상	29.6	65.9	0.0	4.4	3.2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6	51.1	29.2	10.0	2.6
사무직	11.8	52.8	32.8	2.6	2.7
서비스/판매직	0.0	40.1	57.7	2.2	2.4
생산/기술직	0.0	49.6	30.0	20.4	2.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38.1	41.5	20.4	2.2
단순노무직	5.5	37.6	35.6	21.3	2.3
기타	0.0	100.0	0.0	0.0	3.0
무직	8.9	36.1	37.5	17.4	2.4

19-3-1.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언론기관
전 체	54.3	26.2	48.8
 성 별 			
남자	38.8	37.4	44.2
여자	63.4	19.6	51.4
 지 역 			
도 시[동 부]	56.1	25.9	50.6
농어촌[읍면부]	38.3	29.0	32.8
 연 령 			
20대 이하	79.9	2.4	51.5
30대	57.2	27.2	48.6
40대	36.3	34.4	68.8
50대	37.6	38.9	54.1
60대 이상	71.1	24.1	11.1
 학 력 			
중졸 이하	67.9	0.0	32.1
고졸 이하	55.9	31.7	46.0
대졸 이하	47.9	23.5	56.9
대학원졸 이상	100.0	0.0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6.4	56.3	56.8
사무직	58.2	18.4	60.5
서비스/판매직	43.9	24.7	58.0
생산/기술직	0.0	0.0	10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0.6	29.4	0.0
단순노무직	60.0	10.8	36.6
기타	29.2	56.4	14.4
무직	44.7	20.2	33.6

19-3-2.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의 도움 정도

(단위: % 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평균 (4점)
전 체	2.9	36.8	51.9	8.4	2.3
 성 별 					
남자	5.1	40.6	41.7	12.6	2.4
여자	1.6	34.6	57.8	6.0	2.3
 지 역 					
도 시[동 부]	3.2	35.0	52.5	9.4	2.3
농어촌[읍면부]	0.0	53.1	46.9	0.0	2.5
 연 령 					
20대 이하	0.0	31.0	61.7	7.4	2.2
30대	9.1	33.8	57.1	0.0	2.5
40대	3.5	23.5	57.9	15.1	2.2
50대	4.0	60.2	23.4	12.4	2.6
60대 이상	0.0	31.7	68.3	0.0	2.3
 학 력 					
중졸 이하	0.0	0.0	100.0	0.0	2.0
고졸 이하	3.8	34.2	50.0	12.0	2.3
대졸 이하	2.2	35.8	56.4	5.6	2.3
대학원졸 이상	0.0	100.0	0.0	0.0	3.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0.0	41.9	41.8	16.3	2.3
사무직	0.0	46.4	43.9	9.7	2.4
서비스/판매직	2.8	27.2	62.1	7.9	2.2
생산/기술직	0.0	0.0	100.0	0.0	2.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7	70.5	14.8	0.0	3.0
단순노무직	3.7	31.0	60.4	5.0	2.3
기타	3.2	39.9	56.9	0.0	2.5
무직					

19-4.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응-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점)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림	가해자 처별이 어려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움	어떻게 대응할지 모름	기타
전 체	27.8	25.8	5.4	19.3	2.3	2.6	16.4	0.3
 성 별 								
남자	26.5	27.3	6.0	20.3	2.1	2.2	15.5	0.2
여자	29.0	24.4	4.8	18.4	2.5	3.0	17.3	0.5
 지 역 								
도 시[동 부]	26.9	25.9	5.6	20.0	2.3	2.7	16.1	0.4
농어촌[읍면부]	33.7	25.4	3.8	14.6	2.4	1.8	18.1	0.1
 연 령 								
20대 이하	27.3	27.3	5.7	21.4	1.5	3.5	13.0	0.2
30대	27.2	21.2	7.2	21.7	3.5	3.2	15.5	0.4
40대	30.4	22.1	3.9	21.4	2.3	1.5	17.5	0.8
50대	30.4	22.6	7.0	19.7	2.4	3.3	14.4	0.1
60대 이상	24.5	33.0	3.9	14.2	2.2	1.8	20.3	0.2
 학 령 								
중졸 이하	26.2	30.1	2.7	11.4	2.6	1.5	25.2	0.2
고졸 이하	27.7	27.9	7.0	18.1	1.6	2.7	14.9	0.1
대졸 이하	28.1	23.2	4.5	22.6	2.9	3.1	15.0	0.5
대학원졸 이상	31.2	15.3	11.1	26.0	2.5	0.0	13.1	0.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5.2	18.6	7.9	25.7	3.7	3.1	15.2	0.5
사무직	29.9	23.4	5.5	19.1	3.1	3.6	15.1	0.3
서비스/판매직	29.6	24.5	6.3	20.2	2.6	3.7	12.6	0.5
생산/기술직	30.3	26.5	6.9	17.9	2.8	0.5	15.1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1	31.1	4.2	15.0	3.1	2.3	15.6	0.5
단순노무직	33.3	20.6	5.5	13.7	4.9	2.9	19.0	0.0
기타	53.4	20.0	0.0	20.0	0.0	0.0	6.6	0.0
무직	24.7	30.6	3.7	18.3	0.8	1.7	19.9	0.3

20-1. 인권 쟁점-사형제도의 존폐

(단위: % 점)

	매우 유지해야 한다	다소 유지해야 한다	다소 폐지해야 한다	매우 폐지해야 한다	평균 (4점)
전 체	54.3	25.3	12.2	8.2	3.3
성 별					
남자	54.4	24.7	12.0	8.9	3.2
여자	54.2	25.9	12.4	7.5	3.3
지 역					
도 시[동 부]	53.0	26.0	12.7	8.4	3.2
농어촌[읍면부]	60.4	22.4	9.9	7.3	3.4
연 령					
20대 이하	48.5	28.4	13.0	10.1	3.2
30대	50.8	27.7	14.8	6.7	3.2
40대	55.2	23.8	12.3	8.6	3.3
50대	55.1	25.3	11.9	7.7	3.3
60대 이상	58.5	23.3	10.4	7.8	3.3
학 력					
중졸 이하	60.4	22.1	10.4	7.0	3.4
고졸 이하	54.4	25.8	11.6	8.1	3.3
대졸 이하	52.1	26.5	13.3	8.2	3.2
대학원졸 이상	49.5	19.6	13.1	17.8	3.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1.2	24.7	12.6	11.5	3.2
사무직	48.2	29.8	14.1	7.9	3.2
서비스/판매직	51.5	27.2	14.1	7.2	3.2
생산/기술직	59.3	23.5	10.6	6.6	3.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4.3	18.6	10.4	6.7	3.4
단순노무직	59.1	23.9	8.7	8.4	3.3
기타	53.5	36.9	7.2	2.4	3.4
무직	56.7	23.6	11.0	8.7	3.3

20-1-2. 인권 쟁점-대체형벌의 도입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14.4	21.1	35.6	28.9	2.2
 성 별 					
남자	14.1	20.6	35.1	30.2	2.2
여자	14.6	21.6	36.1	27.6	2.2
 지 역 					
도 시[동 부]	15.0	21.7	36.0	27.3	2.2
농어촌[읍면부]	11.4	18.5	33.8	36.3	2.0
 연 령 					
20대 이하	16.1	23.1	34.1	26.6	2.3
30대	11.5	23.5	36.6	28.4	2.2
40대	16.0	19.7	35.2	29.1	2.2
50대	15.6	21.3	33.9	29.2	2.2
60대 이상	12.9	19.6	37.4	30.1	2.2
 학 력 					
중졸 이하	11.1	19.0	38.6	31.3	2.1
고졸 이하	14.1	21.9	35.6	28.4	2.2
대졸 이하	15.1	21.5	35.1	28.4	2.2
대학원졸 이상	29.6	17.6	23.1	29.6	2.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2.9	21.6	25.4	30.1	2.4
사무직	13.1	23.6	38.1	25.3	2.2
서비스/판매직	13.1	22.4	37.4	27.1	2.2
생산/기술직	11.0	19.1	38.3	31.6	2.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5	16.5	33.5	42.4	1.9
단순노무직	17.2	20.5	31.5	30.8	2.2
기타	7.4	17.8	32.0	42.8	1.9
무직	14.9	20.2	36.0	28.9	2.2

20-2. 인권 쟁점-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71.9	19.7	6.4	1.9	3.6
성 별					
남자	71.5	20.3	6.3	1.9	3.6
여자	72.4	19.1	6.5	2.0	3.6
지 역					
도 시(동 부)	71.5	19.9	6.6	2.0	3.6
농어촌(읍면부)	73.8	19.0	5.5	1.7	3.6
연 령					
20대 이하	71.9	20.3	5.7	2.1	3.6
30대	69.3	21.3	7.7	1.8	3.6
40대	73.9	17.8	6.4	1.9	3.6
50대	71.8	20.5	5.9	1.8	3.6
60대 이상	72.2	19.2	6.6	2.0	3.6
학 력					
중졸 이하	72.5	19.3	6.1	2.1	3.6
고졸 이하	70.4	20.6	6.6	2.3	3.6
대졸 이하	72.7	19.3	6.4	1.6	3.6
대학원졸 이상	79.4	14.6	5.2	0.8	3.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6.0	18.3	3.9	1.8	3.7
사무직	66.6	23.4	8.6	1.4	3.6
서비스/판매직	67.9	21.8	8.0	2.2	3.6
생산/기술직	73.3	18.6	6.2	1.9	3.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3.4	19.7	4.8	2.2	3.6
단순노무직	75.4	17.5	4.9	2.2	3.7
기타	92.2	7.8	0.0	0.0	3.9
무직	74.9	17.6	5.5	2.0	3.7

20-3. 인권 쟁점-국정원의 사이버 감찰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10.6	23.5	33.6	32.4	2.1
 성 별 					
남자	9.9	22.4	33.5	34.1	2.1
여자	11.2	24.5	33.6	30.7	2.2
 지 역 					
도 시[동 부]	10.6	22.7	33.3	33.4	2.1
농어촌[읍면부]	10.5	27.0	34.7	27.8	2.2
 연 령 					
20대 이하	11.2	20.0	35.9	33.0	2.1
30대	9.3	22.5	34.7	33.5	2.1
40대	10.6	22.6	30.4	36.4	2.1
50대	10.5	24.3	31.8	33.4	2.1
60대 이상	10.8	26.1	34.7	28.3	2.2
 학 력 					
중졸 이하	11.3	27.5	36.8	24.4	2.3
고졸 이하	11.2	23.7	33.0	32.0	2.1
대졸 이하	9.8	22.0	33.2	35.0	2.1
대학원졸 이상	7.5	17.5	24.4	50.6	1.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9	20.9	24.8	44.4	2.0
사무직	7.9	23.9	36.0	32.1	2.1
서비스/판매직	10.0	24.3	34.8	30.9	2.1
생산/기술직	12.4	23.5	33.7	30.4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3	28.7	39.1	21.8	2.3
단순노무직	12.1	20.7	32.6	34.6	2.1
기타	37.3	20.0	28.6	14.1	2.8
무직	11.6	23.2	33.2	32.0	2.1

20-4. 인권 쟁점-국가보안법의 존폐

(단위: %, 점)

	매우 유지해야 한다	다소 유지해야 한다	다소 폐지해야 한다	매우 폐지해야 한다	평균 (4점)
전 체	35.9	35.0	20.1	8.9	3.0
성 별					
남자	35.8	32.6	20.7	11.0	2.9
여자	36.1	37.4	19.6	6.9	3.0
지 역					
도 시[동 부]	34.9	35.1	20.9	9.0	3.0
농어촌[읍면부]	40.6	34.5	16.4	8.6	3.1
연 령					
20대 이하	31.1	36.5	23.4	9.0	2.9
30대	29.2	36.7	25.8	8.3	2.9
40대	31.7	35.2	21.5	11.6	2.9
50대	35.9	34.0	19.8	10.4	3.0
60대 이상	45.0	33.9	14.6	6.5	3.2
학 력					
중졸 이하	45.7	36.0	13.5	4.9	3.2
고졸 이하	37.2	35.3	19.8	7.7	3.0
대졸 이하	31.0	34.6	23.2	11.2	2.9
대학원졸 이상	34.4	30.9	18.0	16.7	2.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2.4	33.0	18.3	16.3	2.8
사무직	25.7	36.0	28.0	10.4	2.8
서비스/판매직	32.2	36.9	22.5	8.4	2.9
생산/기술직	41.7	32.9	16.6	8.7	3.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7.9	39.6	15.9	6.6	3.1
단순노무직	46.4	32.1	14.8	6.6	3.2
기타	52.2	22.5	19.0	6.3	3.2
무직	40.9	34.4	17.4	7.4	3.1

20-4a. 인권 쟁점-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안보 사안에 형법 등 다른 법률 적용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11.6	32.9	39.7	15.7	2.4
 성 별 					
남자	12.8	32.4	38.0	16.8	2.4
여자	10.5	33.4	41.4	14.6	2.4
 지 역 					
도 시[동 부]	12.0	33.2	40.1	14.7	2.4
농어촌[읍면부]	10.0	31.5	38.3	20.2	2.3
 연 령 					
20대 이하	11.8	37.7	38.7	11.7	2.5
30대	10.2	38.0	39.2	12.6	2.5
40대	14.7	34.3	37.3	13.8	2.5
50대	14.2	31.1	37.7	16.9	2.4
60대 이상	8.7	27.9	43.5	19.9	2.3
 학 력 					
중졸 이하	7.7	29.0	43.6	19.7	2.2
고졸 이하	11.5	33.3	39.3	15.8	2.4
대졸 이하	13.1	34.4	38.6	13.9	2.5
대학원졸 이상	16.9	28.3	37.9	17.0	2.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9.6	34.2	30.8	15.4	2.6
사무직	11.1	38.4	40.6	9.9	2.5
서비스/판매직	11.2	33.0	40.7	15.1	2.4
생산/기술직	12.8	29.9	41.0	16.2	2.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0	26.2	40.7	25.0	2.2
단순노무직	11.2	31.8	38.4	18.5	2.4
기타	15.4	26.5	32.4	25.7	2.3
무직	10.4	31.7	40.7	17.3	2.4

20-5. 인권 쟁점-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정도

(단위: % 점)

	보장해야 한다	다소 보장해야 한다	다소 제한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	평균 (4점)
전 체	28.9	43.3	22.2	5.6	3.0
 성 별 					
남자	30.9	42.8	20.5	5.8	3.0
여자	26.9	43.8	23.8	5.5	2.9
 지 역 					
도 시[동 부]	29.2	43.2	22.1	5.6	3.0
농어촌[읍면부]	27.3	43.9	22.8	6.0	2.9
 연 령 					
20대 이하	34.6	45.4	16.1	3.9	3.1
30대	32.5	43.5	20.4	3.6	3.0
40대	32.7	41.8	20.8	4.8	3.0
50대	28.8	43.8	21.5	5.8	3.0
60대 이상	21.3	42.5	28.0	8.1	2.8
 학 력 					
중졸 이하	19.8	41.8	30.7	7.7	2.7
고졸 이하	26.9	44.5	22.3	6.2	2.9
대졸 이하	33.0	43.4	19.3	4.3	3.1
대학원졸 이상	50.9	33.5	10.6	4.9	3.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0.8	42.1	12.4	4.8	3.2
사무직	28.5	45.7	22.5	3.3	3.0
서비스/판매직	27.6	43.1	23.6	5.7	2.9
생산/기술직	30.0	43.5	20.3	6.2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3.1	38.4	30.8	7.6	2.8
단순노무직	28.1	40.9	23.5	7.5	2.9
기타	27.7	43.8	16.1	12.4	2.9
무직	27.4	43.4	22.9	6.2	2.9

20-6. 인권 쟁점-한국에서 난민의 인정

(단위: %, 점)

	가급적 받아들여야 한다	다소 받아들여야 한다	다소 제한해야 한다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	평균 (4점)
전 체	9.6	37.0	37.7	15.7	2.4
성 별					
남자	10.3	37.9	36.6	15.1	2.4
여자	8.8	36.1	38.8	16.3	2.4
지 역					
도 시[동 부]	9.5	36.7	37.7	16.1	2.4
농어촌[읍면부]	9.8	38.6	37.5	14.1	2.4
연 령					
20대 이하	9.5	38.8	35.4	16.3	2.4
30대	7.5	37.4	37.5	17.5	2.3
40대	9.3	38.6	38.0	14.1	2.4
50대	11.1	35.7	36.7	16.5	2.4
60대 이상	9.9	35.6	39.6	14.9	2.4
학 력					
중졸 이하	9.5	33.2	40.2	17.1	2.4
고졸 이하	9.9	37.4	37.3	15.4	2.4
대졸 이하	9.0	38.3	37.4	15.3	2.4
대학원졸 이상	16.5	34.9	31.5	17.1	2.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1	38.3	31.8	15.8	2.5
사무직	7.2	40.8	38.6	13.4	2.4
서비스/판매직	8.4	36.7	38.6	16.3	2.4
생산/기술직	10.8	33.8	39.7	15.7	2.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7	40.6	40.5	12.2	2.4
단순노무직	10.5	33.8	38.8	16.9	2.4
기타	1.3	39.0	42.4	17.3	2.2
무직	10.3	35.8	37.2	16.7	2.4

20-7. 인권 쟁점-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16.8	48.7	25.7	8.7	2.7
성 별					
남자	13.5	45.2	28.8	12.4	2.6
여자	20.1	52.2	22.6	5.1	2.9
지 역					
도 시[동 부]	16.6	48.0	26.4	8.9	2.7
농어촌[읍면부]	17.8	52.0	22.4	7.8	2.8
연 령					
20대 이하	15.2	44.8	26.4	13.6	2.6
30대	16.2	45.1	26.7	12.0	2.7
40대	17.4	48.7	24.9	9.0	2.7
50대	18.7	48.2	25.7	7.4	2.8
60대 이상	16.6	53.3	25.2	4.9	2.8
학 력					
중졸 이하	17.3	55.0	23.2	4.6	2.8
고졸 이하	17.8	47.6	26.0	8.6	2.7
대졸 이하	15.7	47.6	26.5	10.2	2.7
대학원졸 이상	18.8	41.3	25.0	15.0	2.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6	45.3	22.4	15.7	2.6
사무직	15.3	47.8	28.5	8.4	2.7
서비스/판매직	16.1	48.0	26.9	9.0	2.7
생산/기술직	16.1	45.2	29.1	9.7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3	55.7	23.1	3.9	2.9
단순노무직	21.7	46.7	22.2	9.3	2.8
기타	16.1	59.5	2.6	21.8	2.7
무직	17.6	50.7	24.4	7.3	2.8

20-8. 인권 쟁점-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28.8	52.5	16.4	2.4	3.1
 성 별 					
남자	27.5	53.0	16.8	2.8	3.1
여자	30.1	52.0	16.0	2.0	3.1
 지 역 					
도 시[동 부]	28.6	52.2	16.6	2.5	3.1
농어촌[읍면부]	29.8	53.5	15.1	1.6	3.1
 연 령 					
20대 이하	27.5	52.3	17.8	2.5	3.0
30대	26.4	54.5	15.8	3.3	3.0
40대	30.7	50.8	15.7	2.8	3.1
50대	30.8	50.8	16.0	2.5	3.1
60대 이상	28.4	53.6	16.5	1.5	3.1
 학 력 					
중졸 이하	29.1	53.7	15.6	1.6	3.1
고졸 이하	28.2	52.4	16.7	2.6	3.1
대졸 이하	29.0	52.0	16.6	2.4	3.1
대학원졸 이상	34.6	51.6	11.4	2.5	3.2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5.1	49.5	12.4	3.0	3.2
사무직	24.6	55.2	17.5	2.6	3.0
서비스/판매직	26.6	52.2	18.4	2.9	3.0
생산/기술직	27.2	53.4	16.5	2.8	3.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2.3	54.3	12.2	1.2	3.2
단순노무직	32.0	51.6	14.7	1.7	3.1
기타	25.6	64.5	7.7	2.2	3.1
무직	30.3	51.7	16.2	1.9	3.1

21. 기후변화 위기

(단위: %, 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평균 (4점)
전 체	1.1	9.8	30.4	58.7	3.5
성 별					
남자	1.2	10.3	31.7	56.8	3.4
여자	1.0	9.2	29.2	60.5	3.5
지 역					
도 시[동 부]	1.2	10.1	30.7	58.1	3.5
농어촌[읍면부]	0.8	8.5	29.2	61.5	3.5
연 령					
20대 이하	1.1	8.7	30.2	60.0	3.5
30대	0.8	9.7	30.0	59.6	3.5
40대	1.4	9.6	29.2	59.8	3.5
50대	1.2	9.6	29.7	59.5	3.5
60대 이상	1.0	10.6	32.1	56.3	3.4
학 력					
중졸 이하	0.7	10.9	32.7	55.7	3.4
고졸 이하	1.5	10.6	30.5	57.4	3.4
대졸 이하	0.9	8.8	29.9	60.5	3.5
대학원졸 이상	1.0	6.8	21.5	70.8	3.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	9.5	24.8	64.2	3.5
사무직	0.8	10.9	32.0	56.3	3.4
서비스/판매직	1.2	9.6	30.9	58.3	3.5
생산/기술직	1.2	10.0	35.5	53.3	3.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3	8.7	29.9	61.0	3.5
단순노무직	1.1	13.4	29.5	56.0	3.4
기타	0.0	3.6	44.1	52.3	3.5
무직	1.2	9.0	29.6	60.2	3.5

21-1. 기후변화 위기가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점)

	모두에게 똑같이 심각하다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 체	44.4	48.0	7.6
 성 별 			
남자	45.2	47.4	7.4
여자	43.6	48.7	7.8
 지 역 			
도 시[동 부]	43.3	48.8	7.9
농어촌[읍면부]	49.4	44.4	6.2
 연 령 			
20대 이하	45.3	47.5	7.2
30대	44.3	47.2	8.5
40대	43.2	49.1	7.7
50대	43.2	50.2	6.5
60대 이상	45.2	46.7	8.0
 학 력 			
중졸 이하	44.4	48.9	6.7
고졸 이하	43.4	48.3	8.3
대졸 이하	45.2	47.2	7.7
대학원졸 이상	45.2	53.5	1.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4.3	51.9	3.9
사무직	42.2	48.5	9.3
서비스/판매직	42.3	48.4	9.4
생산/기술직	47.4	43.5	9.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8.7	43.8	7.5
단순노무직	40.7	52.4	6.9
기타	34.7	65.3	0.0
무직	46.0	47.6	6.4

22-1.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할 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

(단위: % 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0.8	43.6	35.3	10.3	2.5
 성 별 					
남자	10.9	44.2	35.1	9.8	2.4
여자	10.6	43.1	35.5	10.8	2.5
 지 역 					
도 시[동 부]	10.6	45.6	35.0	8.9	2.4
농어촌[읍면부]	11.3	34.9	36.9	16.9	2.6
 연 령 					
20대 이하	13.3	47.4	30.0	9.3	2.4
30대	12.4	49.5	30.8	7.3	2.3
40대	12.8	46.1	33.7	7.4	2.4
50대	10.4	44.5	36.9	8.2	2.4
60대 이상	7.4	36.3	40.7	15.6	2.6
 학 력 					
중졸 이하	6.6	29.3	42.7	21.4	2.8
고졸 이하	11.4	44.7	35.2	8.7	2.4
대졸 이하	11.7	48.5	32.6	7.2	2.4
대학원졸 이상	14.9	43.8	31.1	10.2	2.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2.5	42.9	35.6	9.0	2.4
사무직	11.7	51.8	30.9	5.6	2.3
서비스/판매직	12.5	45.6	33.7	8.3	2.4
생산/기술직	11.0	46.0	35.1	7.9	2.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2	29.2	44.4	21.2	2.8
단순노무직	8.5	36.9	40.9	13.6	2.6
기타	33.0	35.7	29.2	2.2	2.0
무직	9.6	40.8	36.7	13.0	2.5

22-2.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하다

(단위: % 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26.3	52.7	18.8	2.2	2.0
 성 별 					
남자	26.3	52.1	19.5	2.1	2.0
여자	26.3	53.2	18.1	2.3	2.0
 지 역 					
도 시(동 부)	27.3	53.0	18.2	1.5	1.9
농어촌(읍면부)	21.9	51.2	21.5	5.4	2.1
 연 령 					
20대 이하	26.8	51.8	19.1	2.3	2.0
30대	29.0	52.1	16.8	2.1	1.9
40대	31.0	52.0	16.0	1.0	1.9
50대	26.5	55.9	16.2	1.4	1.9
60대 이상	21.7	51.7	23.0	3.6	2.1
 학 력 					
중졸 이하	19.1	51.2	24.3	5.4	2.2
고졸 이하	25.4	53.5	19.2	1.9	2.0
대졸 이하	29.7	52.4	16.6	1.3	1.9
대학원졸 이상	33.2	54.3	11.1	1.3	1.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1.6	52.3	14.7	1.4	1.9
사무직	28.8	52.9	17.2	1.0	1.9
서비스/판매직	24.8	53.9	19.8	1.4	2.0
생산/기술직	29.3	52.9	16.4	1.4	1.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9.0	50.1	23.5	7.4	2.2
단순노무직	25.6	53.3	19.1	2.1	2.0
기타	34.5	62.6	2.9	0.0	1.7
무직	25.0	52.0	19.9	3.1	2.0

22-3.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다

(단위: % 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6.7	30.8	42.2	20.2	2.8
 성 별 					
남자	6.9	30.9	41.9	20.3	2.8
여자	6.5	30.8	42.5	20.2	2.8
 지 역 					
도 시[동 부]	6.9	30.7	43.4	19.1	2.7
농어촌[읍면부]	5.9	31.6	36.9	25.6	2.8
 연 령 					
20대 이하	7.2	31.1	42.5	19.3	2.7
30대	6.3	28.7	45.8	19.2	2.8
40대	7.6	31.5	41.0	19.9	2.7
50대	6.4	32.6	42.0	19.0	2.7
60대 이상	6.3	30.2	41.1	22.3	2.8
 학 력 					
중졸 이하	6.2	27.8	41.1	24.9	2.8
고졸 이하	6.9	32.0	41.6	19.4	2.7
대졸 이하	6.8	31.4	42.6	19.2	2.7
대학원졸 이상	5.5	23.4	53.1	18.0	2.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9	27.0	44.4	22.7	2.8
사무직	7.2	34.4	43.3	15.2	2.7
서비스/판매직	6.9	31.7	43.0	18.3	2.7
생산/기술직	6.9	32.2	40.1	20.9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5	29.0	34.1	32.3	2.9
단순노무직	5.4	33.0	39.7	22.0	2.8
기타	6.3	28.5	39.1	26.1	2.8
무직	6.9	29.2	42.5	21.4	2.8

22-4.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마이데이터 제공

(단위: % 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므로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개인정보 유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9.2	33.0	41.5	16.3	2.6
성 별					
남자	9.8	32.7	40.5	17.0	2.6
여자	8.7	33.2	42.5	15.6	2.6
지 역					
도 시[동 부]	9.5	33.1	41.9	15.5	2.6
농어촌[읍면부]	8.1	32.5	39.6	19.7	2.7
연 령					
20대 이하	10.9	33.9	38.5	16.7	2.6
30대	7.7	32.3	43.4	16.6	2.7
40대	9.5	30.1	43.6	16.7	2.7
50대	8.9	31.6	42.4	17.1	2.7
60대 이상	9.1	35.4	40.4	15.0	2.6
학 력					
중졸 이하	9.0	35.0	40.2	15.8	2.6
고졸 이하	9.4	32.8	42.3	15.5	2.6
대졸 이하	9.1	32.3	41.7	16.9	2.7
대학원졸 이상	9.7	33.8	34.9	21.6	2.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9	31.9	36.2	20.0	2.6
사무직	7.4	31.3	45.6	15.7	2.7
서비스/판매직	9.4	32.5	42.6	15.4	2.6
생산/기술직	7.1	35.0	42.3	15.6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2	30.6	41.7	22.5	2.8
단순노무직	10.4	32.7	40.3	16.6	2.6
기타	26.8	50.1	15.8	7.4	2.0
무직	10.1	34.1	40.3	15.6	2.6

23-1.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6.8	57.6	22.7	2.9	2.9
 성 별 					
남자	15.7	57.8	23.3	3.2	2.9
여자	17.8	57.4	22.2	2.7	2.9
 지 역 					
도 시(동 부)	16.2	57.8	23.2	2.8	2.9
농어촌(읍면부)	19.3	56.4	20.7	3.6	2.9
 연 령 					
20대 이하	14.3	52.4	27.9	5.4	2.8
30대	14.5	56.3	26.7	2.5	2.8
40대	15.4	56.6	25.3	2.8	2.8
50대	16.5	60.5	21.0	2.0	2.9
60대 이상	20.4	60.1	17.1	2.4	3.0
 학 력 					
중졸 이하	23.1	58.3	15.8	2.8	3.0
고졸 이하	16.4	58.4	22.2	3.0	2.9
대졸 이하	14.6	57.0	25.4	3.0	2.8
대학원졸 이상	15.0	48.6	34.1	2.3	2.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1	52.1	31.1	2.6	2.8
사무직	13.6	56.2	27.2	3.1	2.8
서비스/판매직	17.5	59.1	21.0	2.3	2.9
생산/기술직	15.9	59.3	22.2	2.7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3	56.4	21.4	4.9	2.9
단순노무직	18.7	57.7	20.6	3.0	2.9
기타	9.0	77.5	13.5	0.0	3.0
무직	18.3	58.3	20.2	3.2	2.9

23-2.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 갖고 의견 제시 등의 참여할 필요하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15.6	53.8	25.8	4.7	2.8
 성 별 					
남자	16.1	53.7	25.7	4.5	2.8
여자	15.2	53.9	25.9	5.0	2.8
 지 역 					
도 시(동 부)	16.3	53.9	25.7	4.1	2.8
농어촌(읍면부)	12.4	53.6	26.5	7.5	2.7
 연 령 					
20대 이하	16.3	58.7	21.6	3.4	2.9
30대	17.5	56.5	22.4	3.6	2.9
40대	17.9	56.4	23.0	2.7	2.9
50대	15.5	53.8	26.3	4.3	2.8
60대 이상	12.9	47.9	31.4	7.7	2.7
 학 력 					
중졸 이하	12.8	47.1	31.9	8.2	2.6
고졸 이하	15.3	54.3	25.9	4.5	2.8
대졸 이하	17.3	56.2	23.1	3.5	2.9
대학원졸 이상	12.4	52.6	29.4	5.5	2.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4	56.0	24.2	4.4	2.8
사무직	18.8	57.8	21.5	1.9	2.9
서비스/판매직	15.6	54.5	25.1	4.7	2.8
생산/기술직	17.5	50.3	27.6	4.6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2	55.2	27.6	6.9	2.7
단순노무직	15.5	53.6	25.8	5.1	2.8
기타	37.6	36.3	26.0	0.0	3.1
무직	14.3	51.7	28.0	5.9	2.7

23-3.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초중고교 정규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위: %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4점)
전 체	26.2	61.2	11.5	1.2	3.1
 성 별 					
남자	25.9	61.1	11.9	1.2	3.1
여자	26.5	61.3	11.1	1.1	3.1
 지 역 					
도 시(동 부)	26.7	60.4	11.7	1.2	3.1
농어촌(읍면부)	24.0	64.8	10.4	0.8	3.1
 연 령 					
20대 이하	26.4	59.7	12.4	1.5	3.1
30대	25.3	60.6	12.7	1.5	3.1
40대	28.6	60.3	10.1	0.9	3.2
50대	26.0	60.7	12.1	1.2	3.1
60대 이상	25.2	63.2	10.7	0.9	3.1
 학 력 					
중졸 이하	25.3	63.1	10.4	1.1	3.1
고졸 이하	25.0	61.8	12.0	1.2	3.1
대졸 이하	27.4	60.0	11.5	1.1	3.1
대학원졸 이상	29.7	58.6	9.2	2.5	3.2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9.7	57.8	11.2	1.3	3.2
사무직	24.6	63.5	11.1	0.8	3.1
서비스/판매직	25.3	60.8	12.2	1.7	3.1
생산/기술직	23.9	62.2	12.7	1.2	3.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3.2	68.6	7.1	1.1	3.1
단순노무직	26.5	63.4	9.5	0.6	3.2
기타	37.4	51.7	10.9	0.0	3.3
무직	27.5	59.7	11.7	1.0	3.1

24. 가족, 이웃, 친구 중 관계 유무

(단위: %, 점)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27.8	72.2	9.3	90.7	6.7	93.3	1.6	98.4	2.6	97.4	0.5	99.5
성 별												
남자	26.9	73.1	9.4	90.6	8.3	91.7	1.8	98.2	2.4	97.6	0.6	99.4
여자	28.6	71.4	9.3	90.7	5.1	94.9	1.4	98.6	2.8	97.2	0.4	99.6
지 역												
도 시[동 부]	27.4	72.6	8.0	92.0	5.6	94.4	1.5	98.5	2.7	97.3	0.5	99.5
농어촌[읍면부]	29.4	70.6	15.5	84.5	11.8	88.2	2.0	98.0	2.0	98.0	0.6	99.4
연 령												
20대 이하	23.1	76.9	4.9	95.1	4.1	95.9	1.5	98.5	7.9	92.1	0.5	99.5
30대	22.9	77.1	9.5	90.5	7.6	92.4	1.2	98.8	3.4	96.6	0.4	99.6
40대	27.0	73.0	10.6	89.4	6.9	93.1	2.3	97.7	1.7	98.3	0.4	99.6
50대	30.4	69.6	11.8	88.2	9.3	90.7	2.0	98.0	1.4	98.6	0.7	99.3
60대 이상	31.7	68.3	9.5	90.5	5.8	94.2	1.2	98.8	0.3	99.7	0.5	99.5
학 력												
중졸 이하	33.3	66.7	10.7	89.3	7.0	93.0	1.1	98.9	0.5	99.5	0.6	99.4
고졸 이하	28.1	71.9	9.4	90.6	7.2	92.8	1.4	98.6	2.9	97.1	0.6	99.4
대졸 이하	24.7	75.3	8.4	91.6	6.0	94.0	1.8	98.2	2.9	97.1	0.3	99.7
대학원졸 이상	38.1	61.9	15.1	84.9	8.4	91.6	4.6	95.4	6.4	93.6	1.8	98.2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3.7	66.3	13.0	87.0	9.0	91.0	4.3	95.7	6.3	93.7	0.6	99.4
사무직	21.5	78.5	6.2	93.8	4.9	95.1	1.6	98.4	2.5	97.5	0.5	99.5
서비스/판매직	25.4	74.6	9.1	90.9	6.7	93.3	1.4	98.6	3.1	96.9	0.7	99.3
생산/기술직	26.8	73.2	9.7	90.3	9.8	90.2	0.8	99.2	1.3	98.7	0.6	99.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7.9	72.1	25.8	74.2	20.1	79.9	1.5	98.5	0.5	99.5	0.5	99.5
단순노무직	31.3	68.7	12.7	87.3	10.7	89.3	1.3	98.7	1.2	98.8	0.2	99.8
기타	31.4	68.6	2.2	97.8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무직	30.5	69.5	7.7	92.3	4.2	95.8	1.3	98.7	2.1	97.9	0.4	99.6

24-1-1.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여성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0.9	6.8	45.7	46.6	3.4
 성 별 					
남자	0.9	7.2	47.6	44.3	3.4
여자	0.9	6.4	43.9	48.8	3.4
 지 역 					
도 시[동 부]	0.8	6.6	45.7	47.0	3.4
농어촌[읍면부]	1.3	7.8	45.9	45.0	3.3
 연 령 					
20대 이하	1.0	5.8	43.8	49.3	3.4
30대	0.9	5.2	41.8	52.2	3.5
40대	0.7	6.5	42.9	50.0	3.4
50대	1.1	7.1	48.9	42.9	3.3
60대 이상	0.9	8.2	48.5	42.5	3.3
 학 력 					
중졸 이하	0.7	8.2	48.4	42.7	3.3
고졸 이하	0.8	7.4	48.8	42.9	3.3
대졸 이하	1.1	5.8	42.6	50.5	3.4
대학원졸 이상	0.2	3.8	31.8	64.2	3.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	5.9	39.3	53.2	3.4
사무직	0.8	6.2	43.2	49.8	3.4
서비스/판매직	1.2	7.6	48.1	43.1	3.3
생산/기술직	0.8	7.6	49.1	42.5	3.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5	9.0	47.7	42.7	3.3
단순노무직	1.1	8.6	49.1	41.1	3.3
기타	0.0	2.0	46.9	51.0	3.5
무직	0.6	6.1	45.5	47.7	3.4

24-1-2.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청년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2.2	10.9	46.6	40.3	3.2
 성 별 					
남자	2.1	11.0	46.7	40.2	3.3
여자	2.3	10.8	46.5	40.4	3.2
 지 역 					
도 시[동 부]	2.3	10.5	46.8	40.4	3.3
농어촌[읍면부]	1.7	12.7	45.8	39.8	3.2
 연 령 					
20대 이하	1.6	8.6	45.0	44.8	3.3
30대	1.8	10.6	42.9	44.7	3.3
40대	2.3	9.9	45.0	42.8	3.3
50대	2.4	11.9	48.9	36.8	3.2
60대 이상	2.6	12.4	48.9	36.1	3.2
 학 력 					
중졸 이하	2.1	11.5	49.1	37.3	3.2
고졸 이하	2.5	12.2	48.2	37.1	3.2
대졸 이하	2.0	9.5	44.7	43.8	3.3
대학원졸 이상	1.7	12.7	35.8	49.7	3.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	12.7	40.1	44.9	3.3
사무직	2.6	9.1	44.8	43.5	3.3
서비스/판매직	2.2	12.5	48.3	36.9	3.2
생산/기술직	2.1	10.8	48.6	38.5	3.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2	14.7	44.5	38.7	3.2
단순노무직	2.7	11.0	49.9	36.4	3.2
기타	0.0	8.3	56.5	35.3	3.3
무직	2.0	10.0	47.2	40.8	3.3

24-1-3.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노인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3.8	20.0	47.1	29.1	3.0
성 별					
남자	3.6	18.6	47.3	30.5	3.0
여자	4.0	21.4	46.9	27.7	3.0
지 역					
도 시[동 부]	3.7	19.8	47.7	28.8	3.0
농어촌[읍면부]	4.4	20.9	44.0	30.7	3.0
연 령					
20대 이하	3.1	15.6	47.8	33.5	3.1
30대	2.9	16.1	48.4	32.7	3.1
40대	3.9	19.0	44.9	32.2	3.1
50대	4.1	21.3	48.2	26.5	3.0
60대 이상	4.4	24.4	46.6	24.5	2.9
학 력					
중졸 이하	5.2	25.4	44.8	24.6	2.9
고졸 이하	3.9	20.4	49.2	26.5	3.0
대졸 이하	3.2	17.6	46.4	32.8	3.1
대학원졸 이상	2.1	17.7	40.6	39.6	3.2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8	18.4	42.3	35.5	3.1
사무직	2.2	15.6	49.2	33.0	3.1
서비스/판매직	3.9	20.7	49.2	26.2	3.0
생산/기술직	5.0	19.2	49.5	26.3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9	22.3	41.4	31.4	3.0
단순노무직	4.5	24.4	45.3	25.9	2.9
기타	0.0	8.8	66.4	24.8	3.2
무직	4.0	21.4	46.2	28.4	3.0

24-1-4.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장애인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3.3	18.6	51.5	26.7	3.0
 성 별 					
남자	3.2	18.1	51.0	27.7	3.0
여자	3.3	19.1	51.9	25.7	3.0
 지 역 					
도 시(동 부)	3.1	18.3	51.7	26.8	3.0
농어촌(읍면부)	3.9	19.8	50.2	26.2	3.0
 연 령 					
20대 이하	3.2	14.8	49.1	32.8	3.1
30대	2.3	16.8	49.2	31.7	3.1
40대	3.0	15.4	50.4	31.2	3.1
50대	3.6	18.6	54.3	23.5	3.0
60대 이상	3.7	23.7	52.7	19.8	2.9
 학 력 					
중졸 이하	4.6	24.7	50.6	20.1	2.9
고졸 이하	3.4	18.9	53.2	24.5	3.0
대졸 이하	2.7	16.2	50.5	30.6	3.1
대학원졸 이상	0.9	11.9	46.7	40.6	3.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4	13.3	48.3	36.1	3.2
사무직	2.4	15.0	52.8	29.7	3.1
서비스/판매직	2.9	19.6	52.7	24.8	3.0
생산/기술직	5.0	19.8	50.3	24.9	3.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7	20.4	51.8	23.1	2.9
단순노무직	3.4	22.2	53.1	21.2	2.9
기타	3.1	41.0	29.5	26.4	2.8
무직	3.5	19.9	50.9	25.7	3.0

24-1-5.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결혼이주민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0.7	34.9	39.3	15.2	2.6
 성 별 					
남자	10.4	33.7	39.8	16.2	2.6
여자	11.0	36.0	38.9	14.2	2.6
 지 역 					
도 시[동 부]	10.0	35.1	39.6	15.3	2.6
농어촌[읍면부]	13.8	33.9	37.9	14.5	2.5
 연 령 					
20대 이하	8.4	30.7	40.1	20.8	2.7
30대	9.4	30.8	41.5	18.4	2.7
40대	9.1	32.7	40.5	17.8	2.7
50대	9.5	36.5	40.6	13.3	2.6
60대 이상	14.4	39.7	36.1	9.8	2.4
 학 력 					
중졸 이하	16.9	39.7	33.9	9.5	2.4
고졸 이하	9.7	35.9	40.1	14.3	2.6
대졸 이하	9.1	32.3	41.0	17.7	2.7
대학원졸 이상	9.0	29.2	35.8	26.1	2.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4	27.2	40.0	24.3	2.8
사무직	7.2	31.3	43.8	17.7	2.7
서비스/판매직	9.6	36.0	40.6	13.9	2.6
생산/기술직	11.6	38.6	35.8	13.9	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4	35.9	37.6	11.2	2.4
단순노무직	13.7	37.0	38.5	10.9	2.5
기타	17.3	45.1	32.7	4.9	2.3
무직	12.4	36.4	37.4	13.9	2.5

24-1-6.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이주노동자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5.4	42.5	31.2	10.8	2.4
 성 별 					
남자	14.8	41.5	32.4	11.3	2.4
여자	16.0	43.6	30.0	10.4	2.3
 지 역 					
도 시(동 부)	14.4	42.7	31.8	11.1	2.4
농어촌(읍면부)	20.1	41.7	28.7	9.5	2.3
 연 령 					
20대 이하	12.8	37.5	33.7	16.0	2.5
30대	12.6	38.4	35.5	13.5	2.5
40대	13.1	41.2	33.1	12.6	2.5
50대	15.2	44.2	31.2	9.3	2.3
60대 이상	20.0	47.3	26.3	6.3	2.2
 학 력 					
중졸 이하	22.8	46.9	24.3	5.9	2.1
고졸 이하	14.6	43.7	31.3	10.4	2.4
대졸 이하	13.5	39.9	34.0	12.6	2.5
대학원졸 이상	11.4	38.2	28.9	21.6	2.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2.3	35.0	34.3	18.4	2.6
사무직	10.6	41.0	35.9	12.5	2.5
서비스/판매직	14.0	43.8	31.7	10.5	2.4
생산/기술직	17.8	44.4	28.1	9.6	2.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1.4	44.1	27.7	6.8	2.2
단순노무직	18.2	45.3	28.7	7.9	2.3
기타	26.7	43.6	28.4	1.3	2.0
무직	17.8	43.3	29.4	9.6	2.3

24-1-7.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북한이탈주민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17.7	41.8	30.9	9.5	2.3
 성 별 					
남자	17.0	41.1	31.6	10.3	2.4
여자	18.4	42.5	30.3	8.7	2.3
 지 역 					
도 시[동 부]	16.3	41.7	32.2	9.8	2.4
농어촌[읍면부]	24.2	42.1	25.4	8.4	2.2
 연 령 					
20대 이하	14.8	38.8	32.1	14.4	2.5
30대	13.3	39.6	35.2	11.9	2.5
40대	15.3	40.9	32.1	11.7	2.4
50대	18.0	42.6	32.0	7.4	2.3
60대 이상	23.1	44.7	26.7	5.4	2.1
 학 력 					
중졸 이하	26.3	43.4	24.8	5.4	2.1
고졸 이하	17.0	43.3	30.7	9.0	2.3
대졸 이하	15.3	40.0	33.6	11.1	2.4
대학원졸 이상	11.2	37.5	31.4	19.9	2.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9	33.8	34.8	17.4	2.6
사무직	14.0	39.9	35.0	11.0	2.4
서비스/판매직	15.2	43.2	32.5	9.1	2.4
생산/기술직	19.9	41.8	28.7	9.6	2.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5.2	44.8	23.5	6.5	2.1
단순노무직	22.7	42.7	27.4	7.2	2.2
기타	27.2	49.4	23.4	0.0	2.0
무직	19.9	43.3	29.0	7.8	2.2

24-1-8.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성소수자

(단위: %, 점)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21.6	35.2	31.2	11.9	2.3
 성 별 					
남자	21.4	35.3	30.8	12.5	2.3
여자	21.9	35.2	31.5	11.4	2.3
 지 역 					
도 시[동 부]	20.4	35.2	32.2	12.2	2.4
농어촌[읍면부]	27.3	35.6	26.4	10.7	2.2
 연 령 					
20대 이하	15.8	26.4	36.9	20.8	2.6
30대	16.2	31.5	35.2	17.1	2.5
40대	19.7	34.6	32.0	13.6	2.4
50대	22.8	38.5	30.3	8.5	2.2
60대 이상	28.3	40.6	25.8	5.3	2.1
 학 력 					
중졸 이하	31.1	39.3	23.7	5.9	2.0
고졸 이하	20.5	36.8	31.8	10.8	2.3
대졸 이하	19.0	32.5	33.8	14.7	2.4
대학원졸 이상	19.1	30.1	26.7	24.1	2.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0.0	28.8	30.9	20.3	2.5
사무직	16.5	31.8	36.9	14.8	2.5
서비스/판매직	18.5	36.0	34.2	11.3	2.4
생산/기술직	22.7	38.2	28.1	10.9	2.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9	40.0	24.3	6.8	2.1
단순노무직	28.8	36.5	25.6	9.1	2.1
기타	55.1	20.3	21.1	3.5	1.7
무직	24.2	36.6	28.9	10.2	2.3

25.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정도

(단위: %, 점)

	매우 자주 있다	자주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평균 (4점)
전 체	2.5	15.6	38.4	43.5	3.2
성 별					
남자	2.7	17.4	39.6	40.4	3.2
여자	2.3	13.9	37.2	46.5	3.3
지 역					
도 시[동 부]	2.8	16.6	39.0	41.6	3.2
농어촌[읍면부]	1.1	11.2	35.6	52.2	3.4
연 령					
20대 이하	6.0	22.9	38.4	32.8	3.0
30대	3.5	20.7	39.0	36.8	3.1
40대	2.2	17.4	39.8	40.6	3.2
50대	1.7	13.7	41.0	43.7	3.3
60대 이상	0.7	9.0	35.5	54.9	3.4
학 력					
중졸 이하	0.3	5.7	30.8	63.2	3.6
고졸 이하	2.6	14.9	40.3	42.2	3.2
대졸 이하	3.1	19.9	39.8	37.2	3.1
대학원졸 이상	6.7	23.3	37.2	32.8	3.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8	24.9	35.5	33.9	3.0
사무직	3.2	19.4	40.5	36.9	3.1
서비스/판매직	2.3	16.0	40.2	41.4	3.2
생산/기술직	1.5	15.7	38.2	44.5	3.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2	4.1	34.3	61.4	3.6
단순노무직	1.1	12.9	38.7	47.3	3.3
기타	3.1	15.6	49.9	31.5	3.1
무직	2.1	13.0	37.3	47.5	3.3

25-1.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친구/가족/ 지인	온라인 포털/카페	메신저 서비스	SNS	TV/라디오	인터넷 방송	캠페인 거리집회	기타
전 체	18.9	31.8	16.6	17.3	46.7	39.7	13.6	0.5
 성 별 								
남자	19.1	33.7	16.9	16.9	44.9	41.0	14.1	0.4
여자	18.6	29.7	16.2	17.7	48.5	38.3	13.2	0.6
 지 역 								
도 시[동 부]	19.7	33.5	17.8	17.9	45.4	40.3	14.5	0.5
농어촌[읍면부]	14.4	22.3	9.8	13.9	53.5	36.5	8.7	0.7
 연 령 								
20대 이하	17.7	48.1	24.6	32.0	31.0	53.4	13.3	0.6
30대	17.1	43.2	21.2	23.2	35.2	45.1	12.5	0.6
40대	17.0	35.2	16.4	15.3	46.4	46.1	12.6	0.3
50대	17.7	25.4	14.1	12.0	50.4	36.6	15.1	0.4
60대 이상	23.8	11.7	8.4	6.0	65.7	21.0	14.4	0.5
 학 령 								
중졸 이하	25.5	5.5	5.4	3.3	68.4	15.7	12.7	0.0
고졸 이하	21.6	28.3	16.2	16.2	47.9	39.7	13.3	0.5
대졸 이하	15.6	39.0	19.5	20.8	41.4	44.9	13.9	0.6
대학원졸 이상	10.4	64.1	17.4	29.5	31.3	47.6	16.6	0.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1	50.9	18.2	24.2	34.6	46.8	16.0	1.1
사무직	18.2	39.4	21.9	22.4	39.7	43.4	13.5	0.6
서비스/판매직	19.3	28.9	18.0	20.0	44.0	43.6	15.6	0.4
생산/기술직	21.3	24.9	13.4	9.5	46.4	41.5	10.3	0.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5	14.4	6.9	8.4	71.4	19.1	5.2	0.5
단순노무직	27.7	22.0	9.6	8.8	51.6	26.4	14.0	0.5
기타	30.3	46.0	35.6	13.3	49.2	40.9	0.0	0.0
무직	18.7	28.0	14.5	14.3	53.4	35.8	13.3	0.4

25-2.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여성	남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난민	성소수자	특정종교인	노숙자	특정지역출신인	정치인	연예인	기타
전 체	25.7	18.1	10.7	16.6	24.0	15.4	7.3	10.9	26.5	22.0	10.0	17.7	44.1	20.7	0.5
 성 별 															
남자	24.6	19.2	9.9	17.1	23.8	16.3	7.3	11.1	26.8	23.5	9.6	19.4	46.0	19.8	0.4
여자	26.9	16.8	11.6	16.1	24.1	14.4	7.4	10.6	26.1	20.4	10.4	15.9	42.0	21.7	0.6
 지 역 															
도 시[동 부]	26.6	18.4	10.8	16.9	24.6	15.2	7.6	10.4	27.0	21.3	9.7	17.5	43.9	20.7	0.5
농어촌[읍면부]	20.9	16.4	10.3	15.2	20.7	16.3	5.9	13.6	23.8	26.1	11.6	19.0	45.4	20.8	0.4
 연 령 															
20대 이하	37.9	26.4	16.2	19.5	29.7	16.9	7.5	12.5	34.4	23.2	10.3	20.3	41.6	26.8	0.7
30대	32.2	21.5	13.8	16.4	23.3	16.7	6.9	13.0	29.8	22.5	8.0	18.6	42.5	22.7	1.0
40대	25.9	17.1	9.3	15.5	24.4	17.2	8.5	12.4	27.9	24.4	10.5	17.1	45.2	21.8	0.4
50대	20.7	15.5	7.6	15.4	23.5	14.0	7.8	10.9	22.8	20.4	10.5	16.8	44.5	18.6	0.2
60대 이상	14.2	11.3	7.3	16.2	19.5	12.7	6.1	6.6	19.1	20.0	10.3	16.1	46.2	14.7	0.4
 학 력 															
중졸 이하	14.5	12.0	6.8	16.4	18.2	10.5	4.7	6.3	18.4	20.7	10.8	14.2	42.2	15.3	0.1
고졸 이하	24.5	19.3	10.9	16.8	23.9	14.9	7.2	10.4	24.3	20.3	10.1	17.5	43.2	21.1	0.7
대졸 이하	28.8	18.1	11.4	16.4	25.2	16.4	7.7	11.8	29.3	23.6	9.5	18.3	44.9	21.3	0.6
대학원졸 이상	36.2	25.5	12.2	20.4	27.6	24.1	13.4	19.0	42.8	23.4	13.7	25.2	50.8	27.1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0.7	19.4	11.2	18.2	28.9	20.4	11.9	14.0	36.7	27.9	9.4	21.3	46.4	22.5	0.7
사무직	29.2	18.0	12.5	15.5	24.9	17.0	7.8	13.7	29.3	23.4	10.7	18.2	42.8	22.8	0.5
서비스/판매직	24.0	17.4	11.2	16.5	24.2	14.5	7.9	10.3	26.5	20.5	9.6	17.1	41.9	21.5	0.4
생산/기술직	22.1	19.0	7.3	15.4	20.7	13.7	4.5	8.9	17.1	17.4	7.9	17.0	45.9	18.7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8	11.5	10.0	15.9	22.4	17.4	8.0	10.1	22.8	26.0	14.4	16.9	44.1	14.4	0.4
단순노무직	20.1	18.1	8.8	18.6	22.5	10.4	3.5	4.9	22.2	17.2	10.1	15.1	38.0	20.4	1.1
기타	21.0	13.7	3.2	44.8	38.2	7.7	7.7	15.2	33.5	39.8	28.6	11.1	30.3	7.7	0.0
무직	25.9	18.5	10.4	16.9	22.8	14.4	6.4	10.0	25.0	21.8	10.1	17.4	46.1	19.5	0.6

25-3.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단위: %, 점)

	적극 동조하는 의견과 행동을 취했다	다소 동조하는 의견과 행동을 취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다소 반대하는 의견, 시정을 요구했다	적극 반대하는 의견, 시정을 요구했다	평균 (5점)
전 체	0.8	7.9	74.6	14.2	2.4	2.9
 성 별 						
남자	0.9	8.6	74.0	13.9	2.6	2.9
여자	0.7	7.2	75.4	14.4	2.3	2.9
 지 역 						
도 시[동 부]	0.9	7.7	74.4	14.5	2.5	2.9
농어촌[읍면부]	0.6	9.4	75.9	12.2	1.9	2.9
 연 령 						
20대 이하	0.5	8.0	73.7	15.4	2.4	2.9
30대	0.9	7.5	73.4	15.4	2.8	2.9
40대	1.3	7.9	74.4	13.9	2.5	2.9
50대	0.7	7.9	74.3	15.0	2.1	2.9
60대 이상	0.7	8.3	76.9	11.7	2.4	2.9
 학 력 						
중졸 이하	0.8	8.7	80.0	9.0	1.5	3.0
고졸 이하	0.8	8.1	75.0	14.1	2.0	2.9
대졸 이하	0.8	7.9	73.3	15.2	2.8	2.9
대학원졸 이상	2.5	3.3	70.2	17.6	6.4	2.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9	8.7	65.2	19.7	4.5	2.8
사무직	0.5	8.1	73.6	15.4	2.4	2.9
서비스/판매직	0.9	8.3	74.8	13.2	2.8	2.9
생산/기술직	0.7	6.3	79.2	13.0	0.8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6.9	80.5	11.4	1.2	2.9
단순노무직	0.4	7.9	78.0	11.7	1.9	2.9
기타	0.0	27.4	64.6	8.0	0.0	3.2
무직	0.8	7.8	76.0	13.3	2.2	2.9

26.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심각성 정도

(단위: %, 점)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9.5	40.0	46.4	4.1	2.5
성 별					
남자	9.6	41.3	45.1	3.9	2.4
여자	9.3	38.7	47.6	4.4	2.5
지 역					
도 시(동 부)	9.9	40.6	45.9	3.6	2.4
농어촌(읍면부)	7.5	37.2	48.6	6.7	2.5
연 령					
20대 이하	15.8	42.2	39.6	2.4	2.3
30대	12.6	40.8	44.2	2.4	2.4
40대	10.2	42.5	44.0	3.3	2.4
50대	7.6	40.5	47.6	4.3	2.5
60대 이상	4.9	36.4	52.2	6.6	2.6
학 력					
중졸 이하	3.2	32.8	55.5	8.5	2.7
고졸 이하	9.8	40.2	46.0	4.0	2.4
대졸 이하	11.3	42.1	44.0	2.6	2.4
대학원졸 이상	17.9	53.0	26.4	2.7	2.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8	48.5	32.9	1.8	2.2
사무직	9.8	40.7	47.0	2.5	2.4
서비스/판매직	8.7	40.7	47.0	3.7	2.5
생산/기술직	5.9	39.7	49.7	4.7	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0	30.4	56.9	10.7	2.8
단순노무직	9.2	36.9	48.6	5.3	2.5
기타	13.4	41.7	32.4	12.5	2.4
무직	9.8	38.7	46.8	4.7	2.5

27.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단위: %, 점)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평균 (4점)
전 체	17.7	51.0	27.4	3.9	2.8
성 별					
남자	17.0	50.6	28.3	4.1	2.8
여자	18.4	51.4	26.5	3.7	2.8
지 역					
도 시[동 부]	17.7	51.0	27.6	3.7	2.8
농어촌[읍면부]	17.8	50.8	26.5	5.0	2.8
연 령					
20대 이하	18.7	51.1	25.4	4.7	2.8
30대	17.4	51.6	26.8	4.3	2.8
40대	19.2	51.1	26.1	3.6	2.9
50대	18.0	51.7	26.7	3.6	2.8
60대 이상	16.2	50.1	30.1	3.6	2.8
학 력					
중졸 이하	15.6	49.6	30.0	4.7	2.8
고졸 이하	17.0	51.6	27.7	3.7	2.8
대졸 이하	19.0	51.1	26.2	3.7	2.9
대학원졸 이상	21.8	48.1	24.6	5.6	2.9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5.0	46.6	22.7	5.7	2.9
사무직	15.0	52.5	29.6	2.9	2.8
서비스/판매직	17.1	52.2	27.1	3.6	2.8
생산/기술직	15.5	51.9	29.0	3.6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0	56.4	25.0	6.6	2.7
단순노무직	19.6	49.5	26.3	4.6	2.8
기타	15.0	65.0	18.2	1.7	2.9
무직	18.6	49.9	27.8	3.8	2.8

28.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점)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평균 (4점)
전 체	7.3	55.4	32.6	4.8	2.7
 성 별 					
남자	8.2	57.1	30.8	3.8	2.7
여자	6.3	53.6	34.3	5.7	2.6
 지 역 					
도 시[동 부]	7.5	57.1	31.7	3.7	2.7
농어촌[읍면부]	6.3	47.3	36.7	9.7	2.5
 연 령 					
20대 이하	9.9	59.7	26.8	3.6	2.8
30대	8.7	56.7	32.1	2.5	2.7
40대	8.5	58.6	30.0	2.9	2.7
50대	7.3	55.8	32.7	4.3	2.7
60대 이상	4.3	49.8	37.8	8.2	2.5
 학 력 					
중졸 이하	2.3	45.0	41.7	11.1	2.4
고졸 이하	6.8	55.5	32.8	4.8	2.6
대졸 이하	9.2	58.5	29.9	2.4	2.7
대학원졸 이상	16.8	72.3	9.1	1.8	3.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6	58.0	23.9	2.5	2.9
사무직	7.7	59.9	29.7	2.7	2.7
서비스/판매직	7.2	54.8	34.7	3.3	2.7
생산/기술직	6.6	56.5	32.5	4.3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1	41.8	42.2	13.0	2.3
단순노무직	5.5	52.8	33.3	8.3	2.6
기타	7.4	92.6	0.0	0.0	3.1
무직	6.0	54.3	33.7	6.0	2.6

29. 인권 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점)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평균 (4점)
전 체	4.6	41.9	46.6	7.0	2.4
 성 별 					
남자	5.7	45.4	43.2	5.7	2.5
여자	3.5	38.4	49.9	8.3	2.4
 지 역 					
도 시[동 부]	4.4	43.4	46.2	5.9	2.5
농어촌[읍면부]	5.1	34.7	48.2	12.0	2.3
 연 령 					
20대 이하	7.0	48.7	39.6	4.6	2.6
30대	5.3	46.0	44.6	4.1	2.5
40대	5.1	45.9	45.0	4.0	2.5
50대	4.7	44.5	45.2	5.7	2.5
60대 이상	2.3	31.5	53.6	12.6	2.2
 학 력 					
중졸 이하	1.1	23.6	58.0	17.3	2.1
고졸 이하	4.5	42.6	46.4	6.4	2.5
대졸 이하	5.6	47.5	43.3	3.6	2.6
대학원졸 이상	10.9	62.3	24.8	2.0	2.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3	46.1	39.9	4.7	2.6
사무직	5.6	51.1	40.2	3.1	2.6
서비스/판매직	4.1	43.5	47.9	4.5	2.5
생산/기술직	4.8	44.7	45.0	5.5	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	21.4	57.5	19.5	2.1
단순노무직	3.5	36.6	47.2	12.7	2.3
기타	27.4	63.4	9.2	0.0	3.2
무직	3.5	37.7	49.7	9.1	2.4

30.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 받은 경험

(단위: %, 점)

	없다	있다
전 체	88.2	11.8
 성 별 		
남자	86.4	13.6
여자	90.1	9.9
 지 역 		
도 시·동 부	87.6	12.4
농어촌(읍면부)	91.1	8.9
 연 령 		
20대 이하	81.5	18.5
30대	83.5	16.5
40대	85.3	14.7
50대	88.2	11.8
60대 이상	96.5	3.5
 학 력 		
중졸 이하	97.6	2.4
고졸 이하	91.0	9.0
대졸 이하	83.4	16.6
대학원졸 이상	61.5	38.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8.8	31.2
사무직	79.8	20.2
서비스/판매직	90.3	9.7
생산/기술직	89.4	10.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8.5	1.5
단순노무직	93.0	7.0
기타	40.1	59.9
무직	93.8	6.2

30-1. 인권교육을 주관한 기관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점)

	국가인권 위원회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교육기관	시민사회 단체	민간기업/ 사업체	사회복지 단체	기타
전 체	6.3	21.1	27.9	5.0	40.4	10.7	0.2
성 별							
남자	7.3	22.9	22.6	4.7	47.5	5.8	0.2
여자	5.0	18.6	35.0	5.4	31.0	17.4	0.3
지 역							
도 시[동 부]	6.3	21.0	27.2	4.7	41.1	10.8	0.2
농어촌[읍면부]	6.4	21.7	32.4	7.2	36.4	10.6	0.7
연 령							
20대 이하	5.1	17.2	51.5	2.3	27.4	5.4	0.3
30대	7.3	21.1	17.6	4.0	52.8	9.6	0.4
40대	6.4	25.6	17.5	8.0	45.3	8.5	0.2
50대	6.8	20.0	21.0	4.5	46.4	13.5	0.0
60대 이상	6.5	23.6	21.6	9.1	25.3	29.5	0.0
학 력							
중졸 이하	7.0	27.8	21.8	5.2	22.4	34.0	0.0
고졸 이하	6.4	17.6	44.0	6.0	25.6	12.2	0.3
대졸 이하	6.3	21.9	19.4	4.4	49.9	9.0	0.2
대학원졸 이상	6.2	24.9	37.2	5.8	30.0	8.4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7	21.5	31.5	4.9	40.9	7.6	0.0
사무직	7.2	23.9	10.6	3.3	59.6	6.8	0.1
서비스/판매직	7.7	15.0	30.1	7.2	35.3	15.0	0.0
생산/기술직	8.0	20.0	4.5	4.9	65.5	9.4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2	25.6	9.7	8.5	10.3	46.0	0.0
단순노무직	1.6	27.4	26.6	8.6	26.9	18.2	0.0
기타	13.1	93.0	3.4	0.0	0.0	0.0	0.0
무직	5.3	18.2	59.2	5.4	9.5	15.6	1.0

30-2. 인권교육 방식

(단위: %, 점)

	내부강사의 집합교육	외부강사의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시청각 교육	기타
전 체	18.7	28.7	63.5	10.5	0.2
 성 별 					
남자	20.4	31.3	59.1	11.6	0.2
여자	16.5	25.1	69.4	9.1	0.2
 지 역 					
도 시[동 부]	17.9	28.2	64.6	11.1	0.1
농어촌[읍면부]	23.8	31.8	56.5	6.7	0.6
 연 령 					
20대 이하	16.6	26.2	70.0	11.5	0.0
30대	21.6	29.4	60.3	12.4	0.2
40대	15.4	25.4	67.0	10.7	0.3
50대	20.3	30.6	63.4	7.6	0.4
60대 이상	23.5	38.9	41.9	9.1	0.0
 학 력 					
중졸 이하	23.4	53.4	26.3	10.8	0.0
고졸 이하	22.4	31.5	59.0	13.1	0.5
대졸 이하	17.4	26.5	66.0	10.0	0.1
대학원졸 이상	13.2	23.0	78.0	5.1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5	23.0	73.0	8.2	0.3
사무직	17.7	27.0	65.1	8.3	0.0
서비스/판매직	20.0	31.0	61.9	11.3	0.0
생산/기술직	21.8	40.4	51.6	8.3	1.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3.3	50.6	15.8	21.0	0.0
단순노무직	25.3	17.8	51.1	18.4	0.0
기타	47.7	24.3	80.2	11.5	0.0
무직	19.2	32.3	58.2	15.6	0.2

30-3. 인권교육이 인권 이해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 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않았다	전혀 도움이 않았다	평균 (4점)
전 체	19.9	62.9	15.3	1.9	2.0
성 별					
남자	20.5	61.8	15.6	2.0	2.0
여자	19.1	64.4	14.8	1.6	2.0
지 역					
도 시[동 부]	20.3	62.6	15.3	1.8	2.0
농어촌[읍면부]	17.9	64.9	14.8	2.5	2.0
연 령					
20대 이하	14.6	62.6	18.9	3.9	2.1
30대	20.6	60.0	17.8	1.6	2.0
40대	19.2	65.5	14.6	0.7	2.0
50대	25.1	64.8	9.5	0.6	1.9
60대 이상	25.8	60.0	12.2	2.0	1.9
학 력					
중졸 이하	17.7	68.9	8.6	4.8	2.0
고졸 이하	20.8	62.3	13.7	3.2	2.0
대졸 이하	19.6	63.2	16.3	1.0	2.0
대학원졸 이상	20.6	60.5	16.3	2.6	2.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4	57.6	16.1	2.9	2.0
사무직	19.8	64.6	15.3	0.3	2.0
서비스/판매직	14.4	67.5	17.4	0.7	2.0
생산/기술직	25.4	64.0	10.2	0.5	1.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2	74.5	10.3	0.0	2.0
단순노무직	11.6	63.8	22.4	2.2	2.2
기타	55.8	44.2	0.0	0.0	1.4
무직	18.9	62.3	13.9	4.9	2.0

31.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

(단위: % 점)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 없다	평균 (4점)
전 체	17.3	63.2	17.0	2.5	3.0
성 별					
남자	17.2	64.4	16.1	2.3	3.0
여자	17.3	62.1	17.8	2.8	2.9
지 역					
도 시[동 부]	17.9	63.8	16.1	2.2	3.0
농어촌[읍면부]	14.2	60.5	21.1	4.2	2.8
연 령					
20대 이하	20.3	64.2	13.9	1.7	3.0
30대	19.6	65.7	12.9	1.9	3.0
40대	19.5	63.4	15.1	1.9	3.0
50대	17.4	63.0	17.5	2.1	3.0
60대 이상	12.8	61.4	21.7	4.1	2.8
학 력					
중졸 이하	11.6	59.0	23.7	5.7	2.8
고졸 이하	16.3	63.2	18.0	2.6	2.9
대졸 이하	19.7	65.0	13.9	1.4	3.0
대학원졸 이상	31.5	62.0	5.9	0.6	3.2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7	60.2	11.0	1.1	3.1
사무직	17.0	66.4	15.0	1.7	3.0
서비스/판매직	15.5	64.2	18.3	2.0	2.9
생산/기술직	16.7	62.6	17.9	2.8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3	57.3	23.4	7.0	2.7
단순노무직	17.7	62.7	16.5	3.1	2.9
기타	41.0	57.2	0.0	1.7	3.4
무직	16.6	62.8	17.7	3.0	2.9

32-a.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

(단위: %, 점)

	국가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검찰/ 경찰/ 법원	국회/ 지방 의회	군대	교육청/ 교육 기관	대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기업/ 사업자	시민 사회 단체	언론 매체	복지 기관	종교 단체	기타
전 체	21.8	15.9	11.1	8.5	14.1	1.6	5.3	5.2	1.8	5.3	8.9	0.4	0.0
 성 별 													
남자	21.5	16.9	11.1	9.9	13.5	1.6	4.5	5.9	1.9	5.1	7.8	0.4	0.0
여자	22.2	15.0	11.0	7.0	14.8	1.6	6.1	4.5	1.7	5.6	10.0	0.5	0.1
 지 역 													
도 시[동 부]	21.7	15.6	11.1	8.2	14.0	1.6	5.6	5.4	1.7	5.5	9.0	0.4	0.1
농어촌[읍면부]	22.3	17.4	11.0	9.6	14.9	1.7	3.7	4.1	2.0	4.5	8.4	0.5	0.0
 연 령 													
20대 이하	18.7	12.2	9.8	12.4	17.2	3.1	5.8	5.9	1.5	6.6	6.3	0.5	0.0
30대	20.0	15.3	11.0	9.8	14.0	1.4	5.8	6.1	1.8	6.5	7.8	0.4	0.2
40대	23.5	18.2	10.2	7.6	13.5	1.2	5.4	5.9	2.0	4.8	7.2	0.4	0.0
50대	21.2	17.7	12.4	7.4	12.3	1.5	4.8	5.3	2.2	5.4	9.5	0.4	0.0
60대 이상	24.0	15.9	11.5	6.7	14.0	1.1	5.0	3.7	1.6	4.3	11.6	0.5	0.0
 학 력 													
중졸 이하	25.5	14.1	10.2	5.8	14.1	1.2	5.8	3.6	1.6	4.8	12.9	0.3	0.1
고졸 이하	21.1	16.0	11.3	9.2	15.2	1.7	5.0	4.7	1.8	4.8	8.8	0.5	0.0
대졸 이하	21.0	16.6	11.2	8.8	13.1	1.7	5.4	6.3	1.8	6.1	7.4	0.4	0.1
대학원졸 이상	20.6	16.5	11.4	9.1	16.0	1.2	5.7	4.3	3.0	4.5	6.8	0.9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1.6	21.4	10.2	9.4	11.9	1.2	5.7	5.1	1.9	5.1	5.4	1.0	0.1
사무직	21.1	14.4	12.2	9.6	12.7	2.2	5.5	6.6	2.0	6.3	7.2	0.1	0.0
서비스/판매직	20.4	17.6	11.7	8.5	13.9	1.4	6.0	5.9	1.6	4.7	7.7	0.4	0.0
생산/기술직	18.9	16.9	11.1	8.9	14.2	1.0	3.8	8.7	2.2	6.3	7.9	0.3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1.5	17.2	12.2	8.5	16.2	1.5	3.7	3.7	1.6	3.2	10.1	0.6	0.0
단순노무직	24.4	17.8	8.3	7.0	15.2	0.6	5.4	5.7	1.3	4.7	9.2	0.5	0.0
기타	23.0	7.4	16.5	14.6	4.4	4.0	0.0	5.7	2.2	2.9	19.3	0.0	0.0
무직	23.4	13.7	10.6	7.7	15.2	1.8	5.3	3.4	1.7	5.4	11.3	0.5	0.1

32-b.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2순위)

(단위: %, 점)

	국가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검찰/ 경찰/ 법원	국회/ 지방 의회	군대	교육청/ 교육 기관	대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기업/ 사업자	시민 사회 단체	언론 매체	복지 기관	종교 단체	기타
전 체	31.0	28.0	21.1	14.9	26.5	4.6	13.4	12.8	5.0	14.7	19.3	1.9	0.1
 성 별 													
남자	30.7	29.1	21.7	17.0	25.3	4.8	12.1	13.9	5.0	14.2	17.7	2.0	0.1
여자	31.3	26.9	20.4	12.9	27.7	4.5	14.7	11.8	5.0	15.2	20.9	1.8	0.1
 지 역 													
도 시[동 부]	30.9	27.8	20.9	14.8	26.6	4.7	14.3	13.4	4.9	15.0	19.2	1.8	0.1
농어촌[읍면부]	31.5	29.2	21.9	15.4	25.9	4.2	9.6	10.0	5.5	13.7	19.7	2.1	0.1
 연 령 													
20대 이하	27.8	22.4	17.3	20.2	31.1	8.2	13.7	14.4	4.4	18.1	15.9	1.5	0.0
30대	28.4	28.2	19.8	16.0	27.0	4.7	14.5	15.5	4.9	15.6	17.4	1.4	0.3
40대	32.0	31.3	21.3	14.4	25.1	3.5	13.6	13.8	5.3	14.5	17.2	2.0	0.1
50대	30.5	29.2	24.2	13.6	24.6	3.9	12.6	12.9	6.2	14.7	19.1	2.2	0.1
60대 이상	33.9	28.4	21.7	12.5	25.7	3.7	13.1	9.9	4.5	12.5	23.8	2.0	0.0
 학 력 													
중졸 이하	34.6	26.5	20.0	11.5	25.4	3.3	14.1	9.6	4.5	12.4	26.3	2.2	0.1
고졸 이하	31.0	27.3	21.4	15.7	28.2	4.8	13.0	12.6	4.9	13.6	18.5	1.9	0.0
대졸 이하	29.6	29.3	21.2	15.6	25.3	4.9	13.6	14.6	5.3	16.3	17.5	1.5	0.1
대학원졸 이상	28.1	27.5	20.3	14.5	28.3	7.2	12.1	9.0	6.4	21.0	14.4	6.2	0.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9.2	35.1	21.9	16.2	24.7	4.1	13.1	11.4	5.0	17.7	14.1	2.7	0.1
사무직	29.1	27.5	22.6	15.8	25.0	5.7	14.0	16.0	5.5	16.2	16.4	1.2	0.0
서비스/판매직	31.0	29.2	21.4	15.3	26.3	4.6	13.6	14.8	4.8	13.3	17.7	1.5	0.1
생산/기술직	27.4	29.9	20.5	15.5	27.2	4.0	10.7	16.9	6.4	13.2	18.0	2.5	0.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9.4	29.2	24.4	14.8	26.0	3.4	11.0	9.6	4.7	10.4	22.0	1.7	0.0
단순노무직	35.6	29.3	19.7	12.4	26.0	2.6	11.1	13.6	5.4	13.1	21.1	1.3	0.0
기타	25.2	20.8	27.3	26.6	10.1	7.5	16.9	14.3	11.3	14.8	22.1	3.1	0.0
무직	32.8	25.1	19.8	14.1	27.8	4.8	14.3	9.8	4.6	15.2	22.7	2.1	0.1

33-a.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

(단위: %, 점)

	성평등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아동/ 청소년 인권	집단거 주시설 생활인 인권	노동 인권	노인 인권	성소수 자 인권	북한 이탈 주민 인권	혐오/ 차별 예방	기타
전 체	12.6	18.8	5.4	9.0	15.8	14.4	5.7	2.3	0.9	15.1	0.1
성 별											
남자	11.0	18.8	5.4	8.4	15.8	16.4	5.6	2.2	0.9	15.3	0.2
여자	14.1	18.7	5.5	9.7	15.7	12.4	5.7	2.4	0.9	14.8	0.1
지 역											
도 시[동 부]	13.0	18.9	5.3	8.9	15.0	14.7	5.6	2.5	0.9	15.1	0.1
농어촌[읍면부]	10.3	18.4	6.1	9.8	19.2	12.7	6.1	1.4	1.1	14.6	0.2
연 령											
20대 이하	16.8	16.8	5.1	8.8	12.3	16.1	2.8	1.9	1.0	17.9	0.5
30대	13.9	19.7	5.5	10.5	12.7	14.9	3.2	2.8	0.6	16.2	0.1
40대	13.2	19.1	5.7	9.8	14.2	15.1	3.8	3.2	1.0	14.6	0.1
50대	12.2	19.0	6.0	8.6	16.2	15.4	5.6	2.3	0.9	13.9	0.1
60대 이상	9.2	19.1	5.1	8.2	20.1	12.0	9.8	1.7	1.0	13.8	0.0
학 력											
중졸 이하	8.3	20.7	4.4	7.6	21.3	10.7	11.5	1.3	0.9	13.3	0.1
고졸 이하	13.0	18.5	5.5	9.0	16.1	15.0	4.9	2.5	0.9	14.4	0.1
대졸 이하	13.5	18.3	5.8	9.7	13.5	15.4	4.1	2.6	1.0	16.0	0.2
대학원졸 이상	19.4	18.8	4.2	7.9	11.5	12.4	3.0	0.6	0.6	21.8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4	20.8	4.8	8.9	9.8	15.5	4.1	2.6	0.9	16.7	0.3
사무직	13.8	18.8	5.7	9.1	15.4	14.7	3.7	2.8	1.1	14.8	0.1
서비스/판매직	11.8	19.3	7.0	9.6	16.0	14.5	3.9	2.6	0.7	14.4	0.2
생산/기술직	10.2	18.3	5.7	7.7	17.2	21.0	4.8	2.7	0.8	11.6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8	18.2	5.1	11.0	23.6	11.2	7.8	1.2	1.2	12.9	0.0
단순노무직	9.9	17.1	3.8	8.8	16.6	17.6	7.0	1.6	1.4	16.0	0.3
기타	5.6	8.5	10.9	7.3	12.4	22.4	12.1	0.0	0.0	20.8	0.0
무직	13.2	18.4	4.6	8.8	15.9	12.1	7.8	2.0	0.9	16.1	0.1

33-b.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2순위)

(단위: % 점)

	성평등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아동/ 청소년 인권	집단거 주시설 생활인 인권	노동 인권	노인 인권	성소수 자 인권	북한 이탈 주민 인권	혐오/ 차별 예방	기타
전 체	17.9	31.1	10.5	19.3	29.6	30.1	16.8	6.5	2.6	29.9	0.3
성 별											
남자	16.1	30.5	10.7	18.2	29.5	33.0	16.1	6.5	2.8	31.0	0.4
여자	19.8	31.7	10.3	20.5	29.8	27.3	17.5	6.5	2.4	28.8	0.2
지 역											
도 시[동 부]	18.7	31.1	10.3	19.2	29.0	30.7	16.3	6.8	2.5	30.3	0.3
농어촌[읍면부]	14.7	31.3	11.1	19.9	32.5	27.4	19.0	4.9	3.1	27.9	0.6
연 령											
20대 이하	24.2	29.5	10.2	19.0	23.4	32.3	11.4	7.1	2.3	35.0	1.0
30대	19.9	32.7	9.6	22.9	24.9	32.3	11.0	7.1	2.3	31.3	0.5
40대	19.0	32.4	11.2	21.2	28.0	30.7	13.1	8.0	2.5	28.7	0.2
50대	17.4	31.5	12.0	18.4	30.8	31.0	15.3	6.7	2.8	28.7	0.1
60대 이상	13.0	30.1	9.6	17.1	36.0	26.7	26.3	4.8	2.9	27.6	0.1
학 력											
중졸 이하	11.7	32.8	9.4	16.1	37.6	24.7	29.2	3.5	2.7	25.7	0.1
고졸 이하	18.5	30.0	10.8	19.4	29.8	30.7	15.5	6.8	2.8	28.9	0.5
대졸 이하	19.7	31.0	10.6	20.6	26.7	32.0	13.3	7.3	2.5	31.8	0.3
대학원졸 이상	23.0	37.8	9.1	17.6	22.2	26.6	10.0	8.3	1.6	41.2	0.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2.1	35.2	8.1	19.5	22.3	29.5	12.4	7.6	2.5	35.4	0.5
사무직	20.8	31.2	11.6	20.1	27.8	32.4	13.2	7.8	2.8	28.3	0.1
서비스/판매직	17.2	31.0	12.2	20.5	30.5	30.9	13.6	6.7	2.1	28.9	0.2
생산/기술직	14.8	29.5	11.7	16.6	31.7	36.1	15.9	7.2	2.6	26.7	0.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5	32.9	11.9	20.0	38.2	24.0	21.7	3.1	2.3	25.6	0.0
단순노무직	13.8	28.4	9.1	19.6	30.5	34.9	21.2	4.3	2.3	30.3	0.6
기타	15.9	8.5	10.9	20.3	33.4	52.7	19.4	0.0	4.0	32.8	2.2
무직	18.2	30.8	9.1	18.7	30.2	27.2	20.6	6.0	2.9	31.1	0.4

34-1. 지난 1년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단위: % 점)

	있다	없다
전 체	1.8	98.2
 성 별 		
남자	1.9	98.1
여자	1.7	98.3
 지 역 		
도 시[동 부]	1.9	98.1
농어촌[읍면부]	1.6	98.4
 연 령 		
20대 이하	1.9	98.1
30대	1.6	98.4
40대	2.6	97.4
50대	2.1	97.9
60대 이상	1.2	98.8
 학 력 		
중졸 이하	0.9	99.1
고졸 이하	1.5	98.5
대졸 이하	2.3	97.7
대학원졸 이상	6.1	93.9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2	94.8
사무직	1.6	98.4
서비스/판매직	2.1	97.9
생산/기술직	2.0	98.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7	99.3
단순노무직	0.8	99.2
기타	13.8	86.2
무직	1.1	98.9

34-2.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활동

(단위: % 점)

	있다	없다
전 체	2.5	97.5
성 별		
남자	2.5	97.5
여자	2.4	97.6
지 역		
도 시[동 부]	2.7	97.3
농어촌[읍면부]	1.2	98.8
연 령		
20대 이하	2.6	97.4
30대	2.2	97.8
40대	3.0	97.0
50대	3.5	96.5
60대 이상	1.5	98.5
학 력		
중졸 이하	1.0	99.0
고졸 이하	2.3	97.7
대졸 이하	2.9	97.1
대학원졸 이상	8.4	91.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0	92.0
사무직	2.0	98.0
서비스/판매직	2.3	97.7
생산/기술직	2.0	98.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5	99.5
단순노무직	1.0	99.0
기타	0.0	100.0
무직	2.0	98.0

34-3.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단위: % 점)

	있다	없다
전 체	5.1	94.9
 성 별 		
남자	4.9	95.1
여자	5.3	94.7
 지 역 		
도 시[동 부]	5.5	94.5
농어촌[읍면부]	3.2	96.8
 연 령 		
20대 이하	6.2	93.8
30대	7.0	93.0
40대	7.0	93.0
50대	5.6	94.4
60대 이상	2.1	97.9
 학 력 		
중졸 이하	1.2	98.8
고졸 이하	4.4	95.6
대졸 이하	6.8	93.2
대학원졸 이상	15.3	84.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4	86.6
사무직	5.5	94.5
서비스/판매직	4.9	95.1
생산/기술직	4.1	95.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	98.4
단순노무직	2.4	97.6
기타	5.5	94.5
무직	4.1	95.9

34-4.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단위: % 점)

	있다	없다
전 체	1.0	99.0
 성 별 		
남자	1.1	98.9
여자	0.9	99.1
 지 역 		
도 시[동 부]	1.0	99.0
농어촌[읍면부]	0.6	99.4
 연 령 		
20대 이하	0.8	99.2
30대	0.9	99.1
40대	1.3	98.7
50대	1.4	98.6
60대 이상	0.5	99.5
 학 력 		
중졸 이하	0.3	99.7
고졸 이하	0.9	99.1
대졸 이하	1.1	98.9
대학원졸 이상	3.5	96.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	97.3
사무직	1.0	99.0
서비스/판매직	1.3	98.7
생산/기술직	1.1	98.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4	99.6
단순노무직	0.3	99.7
기타	2.4	97.6
무직	0.5	99.5

34-5.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단위: % 점)

	있다	없다
전 체	3.7	96.3
성 별		
남자	3.9	96.1
여자	3.6	96.4
지 역		
도 시[동 부]	4.1	95.9
농어촌[읍면부]	2.3	97.7
연 령		
20대 이하	6.0	94.0
30대	5.5	94.5
40대	5.0	95.0
50대	3.3	96.7
60대 이상	1.1	98.9
학 력		
중졸 이하	0.6	99.4
고졸 이하	3.1	96.9
대졸 이하	5.3	94.7
대학원졸 이상	8.6	91.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0	91.0
사무직	5.2	94.8
서비스/판매직	3.2	96.8
생산/기술직	2.2	97.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0	98.0
단순노무직	1.4	98.6
기타	23.4	76.6
무직	2.9	97.1

34-6.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단위: % 점)

	있다	없다
전 체	5.2	94.8
성 별		
남자	4.8	95.2
여자	5.5	94.5
지 역		
도 시[동 부]	5.6	94.4
농어촌[읍면부]	3.2	96.8
연 령		
20대 이하	8.2	91.8
30대	6.5	93.5
40대	6.4	93.6
50대	5.7	94.3
60대 이상	1.5	98.5
학 력		
중졸 이하	0.6	99.4
고졸 이하	4.1	95.9
대졸 이하	7.4	92.6
대학원졸 이상	16.2	83.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9	85.1
사무직	6.4	93.6
서비스/판매직	5.0	95.0
생산/기술직	3.4	96.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	98.3
단순노무직	2.8	97.2
기타	0.0	100.0
무직	3.4	96.6

34-7. 지난 1년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단위: % 점)

	있다	없다
전 체	1.2	98.8
 성 별 		
남자	1.2	98.8
여자	1.1	98.9
 지 역 		
도 시[동 부]	1.3	98.7
농어촌[읍면부]	0.6	99.4
 연 령 		
20대 이하	1.2	98.8
30대	1.0	99.0
40대	1.5	98.5
50대	1.8	98.2
60대 이상	0.6	99.4
 학 력 		
중졸 이하	0.4	99.6
고졸 이하	1.0	99.0
대졸 이하	1.4	98.6
대학원졸 이상	4.7	95.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2	96.8
사무직	1.0	99.0
서비스/판매직	1.6	98.4
생산/기술직	1.0	99.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1	99.9
단순노무직	0.5	99.5
기타	0.0	100.0
무직	0.7	99.3

35-a.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

(단위: % 점)

	각 개인의 노력	법률/제도 마련	인권 침해/차별 조사대응	인권교육 강화	캠페인 홍보 활동	기타
전 체	26.3	28.8	18.1	17.7	9.2	0.1
 성 별 						
남자	27.1	28.4	18.0	17.7	8.9	0.0
여자	25.5	29.2	18.1	17.6	9.5	0.1
 지 역 						
도 시[동 부]	26.3	29.2	18.0	17.4	9.1	0.1
농어촌[읍면부]	26.0	26.9	18.6	18.9	9.6	0.1
 연 령 						
20대 이하	27.8	29.5	17.7	16.3	8.6	0.1
30대	24.9	31.1	18.6	17.0	8.3	0.1
40대	24.7	29.7	18.0	17.6	10.0	0.0
50대	25.0	29.6	18.0	18.0	9.4	0.0
60대 이상	27.8	26.0	18.2	18.6	9.3	0.1
 학 력 						
중졸 이하	28.9	24.6	18.6	18.4	9.3	0.2
고졸 이하	26.5	29.1	18.4	16.6	9.3	0.0
대졸 이하	25.0	30.0	17.5	18.2	9.1	0.1
대학원졸 이상	24.9	31.7	18.2	18.2	7.0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2.7	32.7	16.4	18.1	9.9	0.3
사무직	24.5	30.9	18.7	17.0	8.8	0.0
서비스/판매직	27.0	28.0	17.5	18.3	9.1	0.1
생산/기술직	27.2	27.1	18.5	17.6	9.6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3.6	26.8	21.2	18.9	9.5	0.0
단순노무직	29.9	28.7	17.8	14.5	9.2	0.0
기타	20.8	48.1	2.1	28.9	0.0	0.0
무직	27.1	27.8	18.1	17.7	9.2	0.1

35-b.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2순위)

(단위: %, 점)

	각 개인의 노력	법률/제도 마련	인권 침해/차별 조사대응	인권교육 강화	캠페인 홍보 활동	기타
전 체	41.7	54.5	43.0	35.9	20.8	0.1
 성 별 						
남자	41.8	55.4	42.4	36.0	20.3	0.0
여자	41.6	53.7	43.6	35.8	21.3	0.1
 지 역 						
도 시[동 부]	41.8	54.7	43.0	36.4	21.0	0.1
농어촌[읍면부]	41.3	53.8	42.9	33.9	19.9	0.1
 연 령 						
20대 이하	43.7	56.3	44.4	34.0	17.4	0.1
30대	40.7	58.2	42.5	35.3	19.8	0.2
40대	40.6	54.5	43.0	36.3	22.4	0.0
50대	39.5	54.7	42.4	37.0	22.6	0.0
60대 이상	43.2	51.5	42.8	36.3	21.1	0.1
 학 력 						
중졸 이하	44.6	52.0	43.6	33.6	20.3	0.2
고졸 이하	41.5	54.8	43.2	35.7	21.0	0.0
대졸 이하	40.7	55.2	42.7	37.1	20.8	0.1
대학원졸 이상	42.3	57.5	42.3	35.0	20.3	0.2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8.6	58.5	40.8	38.0	20.1	0.3
사무직	39.4	57.0	44.6	36.0	19.4	0.0
서비스/판매직	41.9	52.9	42.6	36.4	22.1	0.1
생산/기술직	43.8	55.1	40.9	35.0	21.4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8.3	50.9	47.6	32.7	20.9	0.0
단순노무직	44.9	56.1	42.1	31.9	21.2	0.0
기타	55.7	68.4	25.3	43.3	7.4	0.0
무직	42.8	53.4	43.2	36.1	20.7	0.1

36-1.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단위: %, 점)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3.3	70.0	24.9	1.7	2.7
 성 별 					
남자	3.3	70.6	24.4	1.7	2.8
여자	3.4	69.5	25.5	1.7	2.7
 지 역 					
도 시[동 부]	2.9	69.6	25.7	1.8	2.7
농어촌[읍면부]	5.2	71.8	21.6	1.4	2.8
 연 령 					
20대 이하	3.2	67.4	27.6	1.8	2.7
30대	2.9	66.5	27.7	3.0	2.7
40대	3.3	69.8	24.9	2.1	2.7
50대	3.0	69.9	25.9	1.2	2.7
60대 이상	3.9	73.6	21.4	1.1	2.8
 학 력 					
중졸 이하	3.5	74.6	20.9	1.0	2.8
고졸 이하	3.3	69.1	25.8	1.8	2.7
대졸 이하	3.2	69.3	25.6	1.9	2.7
대학원졸 이상	4.5	64.9	28.6	2.0	2.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2	60.8	33.3	2.7	2.6
사무직	3.0	73.4	22.1	1.6	2.8
서비스/판매직	2.8	69.3	26.1	1.8	2.7
생산/기술직	3.2	70.7	25.5	0.6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4	74.4	19.5	1.6	2.8
단순노무직	3.0	67.8	27.0	2.3	2.7
기타	25.0	67.3	7.7	0.0	3.2
무직	3.7	70.8	23.9	1.6	2.8

36-2.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 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

(단위: %, 점)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전 체	5.1	50.5	40.6	3.8	2.6
 성 별 					
남자	5.0	49.7	41.5	3.8	2.6
여자	5.2	51.3	39.8	3.8	2.6
 지 역 					
도 시[동 부]	5.3	49.9	41.0	3.8	2.6
농어촌[읍면부]	4.2	53.0	39.0	3.8	2.6
 연 령 					
20대 이하	4.6	48.9	41.7	4.9	2.5
30대	5.4	46.7	43.4	4.5	2.5
40대	5.6	46.2	43.9	4.3	2.5
50대	4.9	50.7	41.1	3.4	2.6
60대 이상	5.1	55.9	36.2	2.7	2.6
 학 력 					
중졸 이하	4.4	58.0	34.6	3.0	2.6
고졸 이하	5.3	50.9	40.0	3.8	2.6
대졸 이하	5.3	47.6	43.1	3.9	2.5
대학원졸 이상	3.1	40.4	50.2	6.3	2.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7	41.2	49.3	5.9	2.4
사무직	6.4	51.2	39.3	3.1	2.6
서비스/판매직	5.0	50.1	41.1	3.8	2.6
생산/기술직	6.0	49.5	41.8	2.6	2.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4	53.6	38.1	3.9	2.6
단순노무직	3.5	50.6	40.7	5.2	2.5
기타	16.7	63.3	20.1	0.0	3.0
무직	4.9	52.4	39.0	3.7	2.6

37.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단위: % 점)

	정부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차별받는 개인/집단	언론	교육기관	국제기구	기타
전 체	54.7	8.8	9.9	16.1	9.5	0.9	0.1
 성 별 							
남자	54.8	8.8	10.1	15.9	9.4	1.0	0.1
여자	54.7	8.8	9.6	16.2	9.7	0.8	0.1
 지 역 							
도 시[동 부]	54.5	8.5	9.8	16.6	9.5	1.0	0.1
농어촌[읍면부]	55.9	10.1	10.0	13.8	9.7	0.4	0.1
 연 령 							
20대 이하	53.4	8.4	10.5	17.0	9.8	0.8	0.1
30대	54.2	9.2	9.8	15.9	9.4	1.3	0.2
40대	54.5	9.3	9.2	16.6	9.7	0.8	0.0
50대	53.5	8.8	11.2	16.1	9.4	1.0	0.1
60대 이상	56.8	8.6	9.1	15.2	9.4	0.8	0.2
 학 력 							
중졸 이하	59.4	7.7	9.8	13.1	9.1	0.9	0.0
고졸 이하	53.5	9.2	10.7	15.8	9.8	0.8	0.1
대졸 이하	53.5	8.9	9.4	17.6	9.4	1.0	0.1
대학원졸 이상	61.9	9.5	5.4	12.9	9.4	0.1	0.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6.9	8.4	9.4	15.7	8.6	0.9	0.1
사무직	50.9	8.7	10.3	18.3	10.6	1.2	0.0
서비스/판매직	52.9	9.7	11.2	16.4	8.5	1.3	0.1
생산/기술직	54.3	9.6	10.3	17.3	7.6	0.8	0.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0.1	9.6	7.8	11.8	10.2	0.5	0.0
단순노무직	59.7	8.6	9.3	11.1	11.0	0.3	0.1
기타	36.1	11.6	6.9	30.4	15.0	0.0	0.0
무직	56.1	8.2	9.1	15.6	10.0	0.8	0.1

38. 인권 상황에 대한 코로나 19의 영향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4점)
전 체	6.4	37.2	49.4	7.0	2.6
 성 별 					
남자	6.7	37.5	48.8	7.0	2.6
여자	6.1	37.0	50.0	6.9	2.6
 지 역 					
도 시[동 부]	6.2	37.0	49.8	6.9	2.6
농어촌[읍면부]	7.1	38.2	47.4	7.3	2.5
 연 령 					
20대 이하	6.0	34.9	50.6	8.5	2.6
30대	5.2	34.8	52.2	7.8	2.6
40대	6.8	35.6	50.4	7.2	2.6
50대	6.1	38.4	48.4	7.1	2.6
60대 이상	7.1	40.2	47.3	5.4	2.5
 학 력 					
중졸 이하	8.2	40.0	46.3	5.5	2.5
고졸 이하	6.2	36.9	49.7	7.1	2.6
대졸 이하	5.9	36.4	50.4	7.2	2.6
대학원졸 이상	3.4	37.1	48.4	11.1	2.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4	33.5	48.9	10.3	2.6
사무직	4.3	37.7	51.8	6.2	2.6
서비스/판매직	5.6	37.0	50.4	7.0	2.6
생산/기술직	7.0	35.9	49.8	7.2	2.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1.6	41.1	42.2	5.1	2.4
단순노무직	6.9	40.4	46.3	6.4	2.5
기타	4.3	20.0	49.4	26.2	3.0
무직	6.8	37.6	48.9	6.6	2.6

39-a.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

(단위: %, 점)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	편의시설· 문화 예술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 감	백신 및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정 신적 후유증	기타
전 체	14.0	23.9	20.2	5.0	4.9	12.1	10.7	9.0	0.3
 성 별 									
남자	14.9	24.3	20.7	4.5	4.4	12.4	9.9	8.7	0.3
여자	13.1	23.5	19.7	5.5	5.3	11.8	11.5	9.3	0.3
 지 역 									
도 시(동 부)	14.2	23.7	20.5	5.1	4.7	11.9	10.6	8.9	0.3
농어촌(읍면부)	12.8	24.5	18.6	4.3	5.6	13.1	11.0	9.9	0.2
 연 령 									
20대 이하	17.8	22.6	17.8	4.6	2.8	16.7	9.7	7.8	0.1
30대	13.2	23.7	20.4	8.0	7.2	12.0	7.9	7.3	0.2
40대	13.8	25.6	18.7	8.2	6.7	10.5	8.6	7.9	0.1
50대	14.3	28.7	19.2	3.5	3.9	11.3	9.7	9.1	0.4
60대 이상	12.0	20.5	23.0	2.7	4.5	10.9	14.6	11.3	0.4
 학 력 									
중졸 이하	11.7	19.5	21.9	1.9	4.3	11.4	16.5	12.4	0.4
고졸 이하	15.7	26.4	19.6	4.9	4.2	11.5	8.9	8.6	0.2
대졸 이하	13.5	23.6	20.0	6.3	5.4	12.7	10.1	8.1	0.3
대학원졸 이상	11.4	19.9	20.4	4.7	10.8	15.5	8.3	8.5	0.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6	25.6	18.8	5.1	8.5	11.1	10.6	8.1	0.5
사무직	13.0	23.5	21.1	6.6	5.6	13.8	8.6	7.5	0.2
서비스/판매직	15.2	32.6	17.3	5.0	4.1	11.0	7.3	7.1	0.3
생산/기술직	18.1	24.0	21.2	4.2	2.9	11.6	8.8	9.2	0.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1.2	18.6	21.1	3.1	6.9	14.0	13.9	11.1	0.2
단순노무직	20.9	22.8	17.4	4.2	4.2	10.0	10.1	9.3	1.1
기타	7.0	16.0	27.0	5.0	0.0	11.9	29.9	3.1	0.0
무직	12.7	19.1	21.8	4.7	4.5	12.3	13.8	10.9	0.3

39-b.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2순위)

(단위: %, 점)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	편의시설· 문화 예술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 감	백신 및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정 신적 후유증	기타
전 체	19.9	37.6	33.9	10.1	13.0	31.1	28.0	20.5	0.3
 성 별 									
남자	21.7	38.9	33.8	9.3	12.2	31.4	26.5	20.1	0.3
여자	18.2	36.4	33.9	10.8	13.8	30.8	29.5	20.9	0.3
 지 역 									
도 시[동 부]	20.4	37.6	34.6	10.3	13.1	30.3	28.0	20.3	0.4
농어촌[읍면부]	17.7	37.9	30.7	9.2	12.9	34.5	28.3	21.2	0.2
 연 령 									
20대 이하	25.2	38.1	29.9	8.5	7.7	40.9	26.9	19.0	0.2
30대	18.7	36.6	32.9	15.2	18.5	31.4	23.4	18.4	0.3
40대	20.4	40.5	31.7	16.4	17.8	28.6	22.5	17.7	0.2
50대	20.8	43.5	33.9	8.3	11.3	28.0	27.1	20.8	0.5
60대 이상	16.6	32.3	38.0	5.7	11.6	28.7	35.1	24.0	0.5
 학 력 									
중졸 이하	15.8	31.5	36.7	4.6	10.0	28.6	38.4	26.0	0.4
고졸 이하	22.4	41.7	33.8	9.6	12.1	29.6	25.4	19.1	0.2
대졸 이하	19.7	36.8	32.9	12.6	14.6	33.2	26.2	19.3	0.4
대학원졸 이상	14.4	32.1	31.5	12.4	22.2	34.0	27.7	22.0	0.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7.0	37.0	30.2	12.2	18.6	32.0	27.4	18.3	0.6
사무직	19.2	35.2	34.7	13.5	15.1	35.4	25.2	18.1	0.2
서비스/판매직	23.4	48.5	31.1	10.6	12.4	29.1	22.4	16.8	0.3
생산/기술직	24.0	43.5	34.5	7.6	9.8	28.6	24.2	21.4	0.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9	29.8	34.0	6.7	12.3	35.6	34.1	23.3	0.2
단순노무직	27.7	40.3	29.2	9.1	10.5	22.9	28.9	22.0	1.1
기타	7.0	18.1	34.6	5.0	6.0	36.2	43.4	49.6	0.0
무직	17.6	31.5	36.5	8.7	12.3	31.1	33.0	23.5	0.3

40-a.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

(단위: %, 점)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의 고립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제한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	기타
전 체	17.7	10.9	26.3	12.2	20.6	8.4	3.8	0.1
성 별								
남자	18.4	11.4	24.2	12.5	21.1	8.2	3.9	0.2
여자	17.0	10.4	28.3	11.8	20.1	8.5	3.6	0.1
지 역								
도 시[동 부]	18.1	10.9	26.3	12.2	21.0	7.7	3.6	0.2
농어촌[읍면부]	15.9	10.7	26.4	12.1	18.9	11.2	4.7	0.0
연 령								
20대 이하	21.3	11.2	22.8	12.4	20.4	7.2	4.6	0.0
30대	17.1	9.8	28.1	13.8	20.0	7.2	3.9	0.1
40대	17.4	10.4	27.1	12.1	22.0	6.3	4.6	0.0
50대	17.9	12.2	24.7	12.2	21.8	8.1	3.1	0.1
60대 이상	16.0	10.7	28.0	11.2	19.4	11.1	3.1	0.3
학 력								
중졸 이하	15.1	9.6	28.0	11.0	18.7	13.5	3.8	0.3
고졸 이하	18.4	12.0	24.7	12.1	21.5	7.5	3.7	0.1
대졸 이하	18.1	10.6	26.9	12.8	20.6	7.2	3.8	0.1
대학원졸 이상	18.8	8.7	30.1	10.9	21.0	6.3	3.7	0.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1	8.9	30.2	12.9	19.5	6.1	4.1	0.2
사무직	18.4	11.5	25.7	12.7	21.4	6.8	3.4	0.0
서비스/판매직	16.1	12.0	24.1	11.6	25.2	8.0	3.0	0.1
생산/기술직	17.9	12.2	24.1	11.5	21.2	8.5	4.3	0.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8	11.6	29.4	11.2	18.1	11.6	4.2	0.0
단순노무직	19.2	10.4	25.2	11.0	21.3	8.5	3.6	0.8
기타	28.4	20.2	22.1	23.2	3.1	0.0	3.1	0.0
무직	18.4	10.0	27.3	12.5	17.9	9.5	4.2	0.1

40-b.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2순위)

(단위: %, 점)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의 고립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제한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	기타
전 체	25.7	18.5	43.5	28.2	44.3	23.9	10.7	0.1
성 별								
남자	26.7	19.3	41.0	28.7	44.8	22.9	11.2	0.2
여자	24.7	17.7	45.9	27.7	43.8	24.9	10.2	0.1
지 역								
도 시[동 부]	26.3	18.6	43.7	28.4	44.8	23.0	10.5	0.2
농어촌[읍면부]	22.7	17.8	42.5	27.1	42.2	28.3	11.4	0.0
연 령								
20대 이하	30.3	18.7	37.9	30.6	44.8	21.7	12.0	0.0
30대	24.8	17.3	46.2	31.0	44.5	18.6	12.0	0.1
40대	26.7	18.0	45.0	27.8	44.4	21.1	12.2	0.0
50대	25.2	19.8	41.8	27.4	45.5	24.9	10.3	0.1
60대 이상	23.1	18.4	45.6	26.1	43.0	29.1	8.5	0.3
학 력								
중졸 이하	22.0	17.1	46.3	24.9	41.7	32.3	9.1	0.3
고졸 이하	26.3	20.1	41.7	28.7	44.2	23.0	10.1	0.1
대졸 이하	26.6	17.8	43.7	29.2	45.3	21.6	11.7	0.1
대학원졸 이상	25.9	15.8	47.8	26.4	46.2	20.6	13.7	0.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5.1	14.5	46.2	27.9	43.9	22.0	14.4	0.2
사무직	26.7	20.4	42.8	30.4	45.4	20.3	10.8	0.0
서비스/판매직	25.0	19.8	41.1	27.3	50.7	21.9	9.0	0.1
생산/기술직	26.6	20.2	40.4	27.8	45.2	21.7	11.5	0.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9.6	18.3	44.3	25.4	40.4	32.1	10.7	0.0
단순노무직	25.5	18.8	43.9	26.5	40.3	27.2	10.8	0.8
기타	56.4	23.7	22.1	46.2	28.0	11.2	12.4	0.0
무직	26.1	17.4	45.3	28.3	40.8	26.6	10.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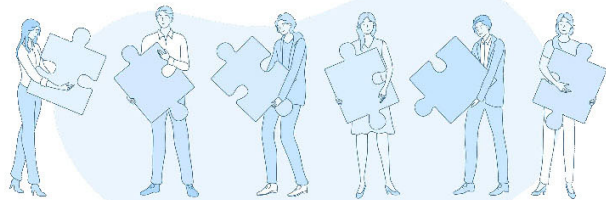
부록

3

『인권의식실태조사』 조사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느끼거나 경험한 인권과 관련된 평소 생각과 평가, 그리고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려면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조사기간(2022.7. ~ 2022. 9.)에 조사원이 귀택을 방문하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른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승인 통계입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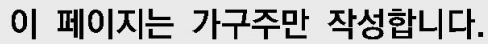
Hankook Research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유승아 차장 02-3014-1051
(주)한국리서치 자료조사부 이희영 팀장 02-3014-0145

♣ 아래 표는 조사원이 적어 넣습니다.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로(길)			
	_____동 _____호 (_____동 _____아파트(APT))			
관리 사항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담당사무소	구분	인원(명)
조사원 성명	전체 가구원 수	
조사원 ID	조사 대상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 완료	
조사표 작성 방법	불응, 불능	
	비대상 (만 18세 미만)	



조사표 쓰는 요령

- ◆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 한 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건너뛰는 표시(→)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응답하세요.
- ◆ 항목 중 지난 1년은 2021.7.1.~2022.6.30.을 말합니다.



I 인권 인식

인권*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여쭙보겠습니다. 평소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1

귀하는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접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접한다
- ② 비교적 자주 접한다
- ③ 가끔 접한다
- ④ 거의 접하지 않는다

2

귀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다소 알고 있다
- ③ 잘 모르고 있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3

귀하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좋아지고 있다
- ② 조금 좋아지고 있다
- ③ 비슷하다
- ④ 조금 나빠지고 있다
- ⑤ 많이 나빠지고 있다

4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본인의 인권	①	②	③	④
2)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①	②	③	④

5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여성	①	②	③	④
2) 아동·청소년	①	②	③	④
3) 노인	①	②	③	④
4) 장애인	①	②	③	④
5)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①	②	③	④

6

귀하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①	②	③	④
3)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①	②	③	④

7

귀하는 인권과 관련된 아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8

귀하는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 ②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
- ③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 ④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II 인권침해와 차별

9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신체의 자유 (불법적인 불심검문, 연행, 구금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2) 사상·양심의 자유	①	②	③	④
3) 종교의 자유	①	②	③	④
4)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①	②	③	④
5) 집회·결사의 자유	①	②	③	④
6)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7)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②	③	④
8)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9)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0) 주거권(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①	②	③	④
11) 사회보장권(빈곤 해결, 소득 보장)	①	②	③	④
12)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돌봄, 요양보호, 활동 지원 등)	①	②	③	④
13) 노동권(일할 권리,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①	②	③	④
14) 건강권(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큰 경제적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할 권리)	①	②	③	④
15) 교육권(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6) 안전권(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7) 환경권(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②	③	④
18) 문화권(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①	②	③	④

10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① 여성 | ② 아동/청소년 |
| ③ 노인 | ④ 장애인 |
| ⑤ 한부모가족 | ⑥ 결혼이주민(가족 포함)/이주노동자 |
| ⑦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 | ⑧ 전과자 |
| ⑨ 성소수자 | ⑩ 경제적 빈곤층 |
| ⑪ 병력(질병)이 있는 사람 | ⑫ 비정규직 |
| ⑬ 기타(적을 것 : _____) | |

11

귀하는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공무원과 업무 처리할 때
- ②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 ③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 중일 때
- ④ 재판받을 때
- 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⑥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 ⑦ 가정에서 생활할 때
- ⑧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생활할 때
- ⑨ 군대 생활할 때
- ⑩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생활할 때
- ⑪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 ⑫ 직장 생활할 때(구직/취업 포함)
- ⑬ 학교에서 생활할 때(입학 포함)
- ⑭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할 때
- ⑮ 기타(적을 것 : _____)

※ 다음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귀하의 경험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12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
|--------------|--------------|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다소 심각하다 |
|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 ②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 등
- ③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 ④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 제한
- ⑤ 집회나 시위의 자유 제한
- ⑥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 ⑦ 법집행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적 대우
-
- ⑩ 없음

1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권침해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안전의 위험(질병·감염병 및 자연재해 제외)
- ②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 ③ 일터(직장)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음
- ④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소음, 악취, 빛 공해, 일조량, 대기 등)
- ⑤ 편의 시설 부족 또는 거리가 멀어서 문화예술 시설(영화관, 공연장 등) 이용 못 함
- ⑥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 공개나 모욕적 대우를 받음
-
- ⑩ 없음

※ 13, 14 모두 '⑩ 없음' → 16 으로 이동

15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귀하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신체적 상해
- ② 재산/금전상 손해
- ③ 사회적 명예 실추
- ④ 정신적/감정적 피해(모욕, 분노, 울분 등)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 ⑩ 없었음

16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다소 심각하다
-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었다면, 어떤 차별인지 아래의 보기를 참조하여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별 유형

- ①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 : 폭행, 위협, 놀림이나 조롱, 폭언, 인격적 모욕, 무시
- ②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 차별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정년, 퇴직, 해고 등의 불이익
- ③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당하는 차별 :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당하는 거절이나 불이익
- ④ 따돌림이나 배제 : 결혼, 친구 관계의 회피,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구 분	문17-1. 차별 경험		문17-1. 차별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없다 (해당없음)	있다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 언어적 폭력	채용 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 차별	일상적 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당하는 차별	따돌림 이나 배제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2)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3) 종교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4) 사상 또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①	②	①	②	③	④
5) 장애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6)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7)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8)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9)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1) 키, 몸무게,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2) 미혼(비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3) 한부모, 미혼(비혼) 모/부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4) 질병 및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5) 출신지역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6)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
'②'
있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 17-1 1) ~ 16) 모두 '① 없다' → 19 로 이동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받았을 때 귀하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신체적 상해
- ② 재산/금전상 손해
- ③ 사회적 명예 실추
- ④ 정신적/감정적 피해(모욕, 분노, 울분 등)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⑥ 없었음

19

귀하는 13, 14, 17 에서 하나라도 '있다'에 응답했습니까?

① 그렇지 않다 → 20 으로 이동

① 그렇다

19-1

귀하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을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가족 또는 친인척

- ① 배우자
 ②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③ (손)자녀/배우자의 (손)자녀
 ④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가족 외의 친인척(손윗사람)
 ⑥ 기타(적을 것 : _____)

(2)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 ⑦ 직장 상사나 상급자
 ⑧ 이웃 또는 동호회, 동창회 등 내가 속한 집단 사람
 ⑨ 학교 선후배, 친구, 동료
 ⑩ 학원 강사, 학교 교사, 대학교수
 ⑪ 기타(적을 것 : _____)

(3)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 ⑫ 공권력을 가진 사람(경찰, 검찰, 공무원 등)
 ⑬ 집 또는 방, 상가의 소유주
 ⑭ 고객(소비자/손님)
 ⑮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⑯ 거래처 사람(원청·하청 관계 등)
 ⑰ 면접관, 채용관
 ⑱ 길에서 만난 행인
 ⑲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
 ⑳ 기타(적을 것 : _____)

(4) 상황이나 환경

- ㉑ 자연환경(미세먼지, 폭염 등)
 ㉒ 주변 생활환경(소음,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㉓ 기타(적을 것 : _____)

※ 19-1 의 1순위와 2순위 응답이 모두 ㉑~㉓일 경우는 → 19-2 로 이동

19-1-1

지난 1년간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③ 잘 모름

(2) 연령대

-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⑥ 잘 모름

19-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 ②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③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 ④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 19-2-1로 이동
- ⑤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19-3-1로 이동
- ⑥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 19-4로 이동

19-2-1

귀하가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국가인권위원회
- ② 청와대
- ③ 검찰, 경찰
- ④ 기타 국가기관
- ⑤ 지방자치단체

19-2-2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19-2-1, 19-2-2 응답 후 → 20으로 이동

19-3-1

도움을 요청한 민간단체/전문가는 무엇입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시민사회단체
- ② 법률가
- ③ 언론기관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19-3-2

도움을 요청한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19-3-1, 19-3-2 응답 후 → 20으로 이동

19-4

귀하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 ②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③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 ④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가해자 처벌 어려움 등)
- 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 ⑥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 ⑦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19-4 응답 후 → 20으로 이동



III 인권 관련 의견

20

귀하는 다음의 상반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 사형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 폐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0-1-1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종신형 등)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2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3 국가정보기관이 인터넷, 스마트폰의 개인 간 대화 내용과 통신 기록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에

찬성한다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4 국가보안법은

유지해야 한다 ←-----→ 폐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0-4-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는 형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5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0-6

한국에서 난민은

되도록
받아들여야
한다

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0-7

성평등을 위해 여성에게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하는 것에
대해

-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고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당제,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8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1

귀하는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21-1

귀하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진다면 개인 삶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두에게 똑같이 심각하다
- ②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다
- ③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22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할 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나의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3)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다	①	②	③	④

22-1

개인의 금융, 건강 관련 정보를 가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23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4

귀하의 가족, 이웃, 친구 중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1) 장애인	①	②
2) 결혼이주민	①	②
3) 이주노동자	①	②
4) 북한이탈주민	①	②
5) 성소수자	①	②
6) 난민	①	②

24-1

다음의 사람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1) 여성	①	②	③	④
2) 청년	①	②	③	④
3) 노인	①	②	③	④
4) 장애인	①	②	③	④
5) 결혼이주민	①	②	③	④
6) 이주노동자	①	②	③	④
7)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8)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 다음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귀하의 경험을 여쭙보고자 합니다.

혐오 표현이란 성별, 장애, 나이, 지역,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 무시, 모욕, 위협,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말이나 표현을 의미합니다.

2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 26 으로 이동

25-1

귀하가 혐오 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친구/가족/지인

②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③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 밴드, 라인, 위챗 등)

④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⑤ TV/라디오

⑥ 인터넷 방송(유튜브, 아프리카TV 등)

⑦ 캠페인, 거리 집회

⑧ 기타(적을 것 : _____)

25-2

혐오 표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여성

② 남성

③ 아동 · 청소년

④ 노인

⑤ 장애인

⑥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⑦ 북한이탈주민

⑧ 난민

⑨ 성소수자

⑩ 특정 종교인

⑪ 노숙자

⑫ 특정 지역 출신인

⑬ 정치인

⑭ 연예인

⑮ 기타(적을 것 : _____)

25-3

귀하는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조하는
의견이나 행동을
취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했다

①

②

③

④

⑤

2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7

귀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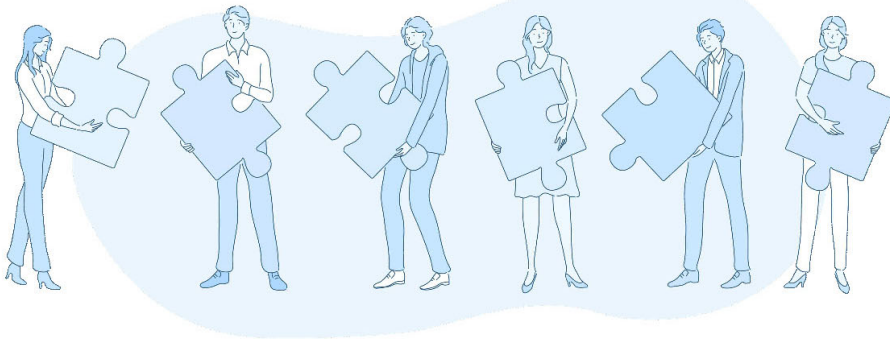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IV 인권 교육 및 개선

귀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안다 ② 아는 편이다
③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귀하는 본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안다 ② 아는 편이다
③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교육이란 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인지를 교육하는 것으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① 없다 → 31로 이동

귀하는 어디에서 인권교육을 받았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③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④ 시민사회단체
⑤ 민간기업·사업체 ⑥ 사회복지 관련 단체
⑦ 기타(적을 것 : _____)

귀하는 인권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내부 강사/교사에 의한 집합교육 ②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③ 온라인(사이버)교육 ④ 시청각 교육
⑤ 기타(적을 것 : _____)

귀하가 받은 인권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귀하는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다음 중 인권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1)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연·상담	①	②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①	②
3)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①	②
4)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①	②
5)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①	②
6)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①	②
7)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①	②

35

귀하는 인권 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
③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
⑤ 인권 캠페인, 홍보 활동

- ②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
④ 인권교육 강화
⑥ 기타(적을 것 : _____)

36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다음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7

귀하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어느 집단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등 공공기관
③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⑤ 교육기관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② 시민사회단체
④ 언론
⑥ 국제기구



V 코로나19와 인권

38

귀하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대체로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39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
- ②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
- ③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
- ④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
- ⑤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
- ⑥ 편의시설 · 문화 예술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
- ⑦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 · 고립감
- ⑧ 백신 및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후유증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40

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방역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 ②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 ③ 돌봄 공백으로 인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의 고립
- ④ 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 ⑤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 ⑥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제한
- ⑦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증가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VI 개인 및 가구 관련 사항

배문1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비혼
- ②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 ③ 사별
- ④ 이혼(별거 포함)

배문2

귀하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① 안 받았음

→ 배문3으로 이동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대학(교)(4년제 미만)
- ⑤ 대학교(4년제 이상)
- ⑥ 대학원 석사 과정
- ⑦ 대학원 박사 과정

- ① 졸업
- ② 재학
- ③ 수료
- ④ 휴학
- ⑤ 중퇴

배문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종교 없음

- ① 개신교
- ② 불교
- ③ 천주교(가톨릭)
- ④ 원불교
- ⑤ 유교
- ⑥ 천도교
- ⑦ 기타 종교(적을 것 : _____)

배문4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일했음'과 '일시휴직'

- 일했음 : ①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했거나
②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 등에서 보수 없이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일시휴직 : 자신이나 가족의 병, 사고, 휴가(연가), 교육, 노사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으나 복귀가 가능한 경우

① 일했음(일시 휴직 포함)

② 일하지 않았음

→ **배문5** 로 이동

배문4-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군인 |

배문4-2

직장(일)에서 귀하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용 : 1년 이상, 임시 :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 : 1개월 미만).

① 임금근로자

-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④ 무급 가족 종사자
- ⑤ 기타 종사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근로자
- ③ 일용근로자

배문5

귀하는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경제 성장
- ② 국가 안보 강화
- ③ 참여와 권리 보장
- ④ 환경 및 생태계 보호

배문6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배문7**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 ②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 ③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배문8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수적
- ② 중도
- ③ 진보적
- ④ 관심 없음

※ 가구원은 설문을 종료합니다. 가구주는 **배문9** 로 이동





이 페이지는 가구주만 응답합니다.

배문9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다세대 주택
- ④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 ⑤ 오피스텔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배문10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기 집
- ② 전세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 ⑤ 무상(회사, 학교, 친인척, 친구 등이 제공)

배문11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세금 공제 전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기재해 주십시오.)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⑩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⑪ 1,000만원 이상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더 있을 경우에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 인쇄일 | 2022년 11월 30일

| 발행일 | 2022년 11월 30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02)2125-9822

| F A X | 02)2125-0918

ISBN : 978-89-6114-933-4 93310 비매품